

함께 만든 192가지 변화들

변화사전



함께 만든 변화를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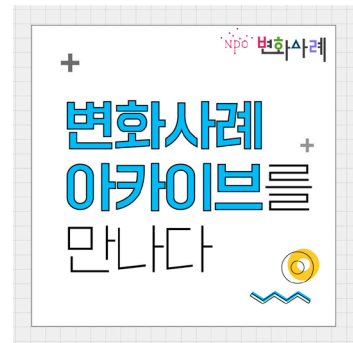
변화사전 NPO Pedia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요? 온라인 시대에도 여전히 사전은 답을 찾는 과정의 기본 역할을 합니다.

NPO Pedia는 법·제도·정책 개선과 시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함께 만든 일상과 사회의 변화를 18개 분야 192개의 이야기로 구성한 사전입니다. 시민사회 활동이 한국 사회 흐름 전반과 맞닿아 있고, 이렇게 내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니 하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소개합니다

여러 활동가가 작성한 '변화사례'를 요약형 콘텐츠로 재가공하여 각 운동의 시작과 경과, 의미와 과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만 5년에 걸쳐 수집한 원고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볼 때는 수집 시기에 따라 경과와 과제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원문과 필진, 함께한 이들의 더 많은 이야기는 <변화사례 아카이브>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환경, 복지, 농업, 건강, 교육, 여성, 노동, 인권, 행정, 정치, 경제, 사회, 평화, 국제개발, 지역, 주택, 코로나19, 문화예술 총 18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 현상과 운동 양식을 하나의 분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19는 변화사례를 처음 수집하던 2017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슈 분류였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공간은 매일의 사건으로 가득하고 시민사회는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많은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이 시민의 삶에 이롭게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에 참여할 때 함께 만드는 변화가 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현장 활동으로, 활동을 기록으로, 기록을 콘텐츠로, 콘텐츠를 일상의 실천으로 함께한 '변화사레' 필진, 아카이브 기획위원, 캠페인 작업자, 권가영 장한빛 김근경 프로젝트 매니저와 이 사전을 읽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화사전에 담긴 정보와 지식이 활동과 일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 정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동물과 자연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위해,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해결을 위해 오늘도 각각의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서로를 응원합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레 아카이브> 전체 기록을 보고 싶다면



<변화사레 아카이브> 기획위원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 모임 들파 (2017~2019)	김재우	민주주의기술학교 (2018~2022)
신권화정	(사)시민 (2018~2019)	이계정	참여연대 (2018~2022)
이승훈	시민사회연대회의 (2018~2022)	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음 (2018~2019)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2017)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2020~2022)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최위환	인친녹색연합 (2020~2022)

차례

[환경]

1	돌고래의 고향은 드넓은 바다입니다	12	14	시민운동이 땀을 백지화시켰다고?!	34
2	동물실험 안 하는 착한 화장품을 찾아라	14	15	20년 동안 끈질기게 목소리를 냈다, 땀을 백지화했다	36
3	응답에 얽힌 잔혹사, 사육곰을 보호하라	15	16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싸우다	38
4	1회용품 감량,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한 여정	17	17	파란 하늘을 보기 위해,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	40
5	편리함이 부른 1회용 봉투 사용 증가, 더는 안 된다	19	18	대기오염에 더 취약한 어린이,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	42
6	바다를 잠식한 미세플라스틱, 즐거운 불편을 향하여	21	19	성대골 주민들의 에너지 전환 실험, 전국으로 확산하다	43
7	쓰레기 원천감량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시키다	23	20	자원 재순환과 나눔 문화, 아름다운가게가 만든 획기적 변화	45
8	디지털 시대의 골칫거리, 누가 책임지나?	24	21	개구리가 죽고 주민들이 두통에 시달리는 마을을 구하라	47
9	안전하게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6	22	안방에서 벌어진 비극, 기업의 잘못은 어떻게 밝혀졌나	48
10	아이들은 어떻게 숲으로 등교할 수 있었나	28	23	죽거나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 황유미의 죽음이 남긴 씨앗	50
11	시민이 함께 만든 공원, 함께 운영하는 공원으로	29	24	커피 한 잔 여유의 대가, 쓰레기 대란의 주범 1회용 컵	52
12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에 반대한다	31	25	화장품 때문에 아픈 바다, 일상 속 미세플라스틱을 줄이자	54
13	설악산을 위협하는 케이블카 사업, 국민행동은 어떻게 막아냈나	32	26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좋은 길, 속도를 줄여주세요, 생태계를 위해	56
			27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모두와 나눌 수 있도록	58

28 위기에 빠진 한남공원, 시민의 참여로 지켜냈다	60
29 월성 1호기를 둘러싼 긴 싸움, 탈원전 운동은 아직 진행형	62
30 모두가 다 함께 책임진다, 핵폐기물 위험 없는 세상을 위해	64
31 수원시민이 움직였다, 물고기가 보낸 위험신호 때문에	66
3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을 확실히 줄인다	67
33 공공급식 앞에서 좌절하는 채식인, 채식선택권을 권리의 문제로	69
34 우리는 쓰레기 없는 배달을 원한다, 배달 앱도 함께 책임지자	71
35 눈 깜빡할 새의 죽음, 비극을 막기 위한 새친구 캠페인	73

[복지]

1 에너지를 차별 없이 공급받을 권리, 복지 사각지대를 좁혀라	77
2 아동의 교육권을 위한 공부법 법제화, 빈민운동의 성과	79
3 더 나은 아동의 삶을 위한 발걸음, 보편적 복지의 한 장면	81
4 시민사회 손으로 만든 한국경제 선진화,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83
5 인간다운 삶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	84
6 빈곤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투쟁의 여정	87
7 복지를 넘어 식량 주권으로, 별난 은행의 탄생	88
8 가난이 형벌이 되는 세상, 근로능력평가의 맹점과 대안은?	90
9 베트남 노인 자조모임이 드러낸 함께함의 위력과 잠재력	92

[농업]

1 밀 지급률 제로에서 1%가 되기까지, 멸종위기 우리 밀을 살려라.	96
2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투쟁, 끝없는 논란의 중심 GMO	97
3 토종 종자 보존, 우리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일	99

[건강]

1 어린이의 건강을 지켜라, 뽀뽀하고 노골적인 광고로부터	102
2 시민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우리는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104
3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의약분업	106
4 돈보다는 생명, 환자들이 거리로 나오다	108
5 시혜에서 권리로, 낙인에서 차별 철폐로	110
6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모두를 위한 의료를	112
7 동네의 건강은 시민이 지킨다, 지방자치 제대로 이용하기	114
8 가슴기살균제 사건 후 10년, 말뚝인 사과 말고 재발 방지 대안을	116
9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 주민자치 건강권 확보 운동이 던진 질문	118
10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 안전 상비약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120

[교육]

- 1 제도 개선에서 학교문화 혁신까지,
교육 민주화를 향하여 124
- 2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검은 마음,
춘지가 뇌물이라는 당연한 사실 126
- 3 고등교육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 128
- 4 생각이 확장되는 대안교과서,
잠자는 교실은 이제 그만 130
- 5 엄마들이 움직였다,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131
- 6 엄마들이 나서서 낸 목소리,
유치원 비리에 맞서 법을 만들어내다 134

[여성]

- 1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호주제는 위헌이다 138
- 2 만연한 차별을 견어찬다,
여전한 불평등에 저항한다 139
- 3 끝까지 말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141
- 4 수요일의 외침,
일본 정부는 사과하라! 143
- 5 범죄가 아닌 기본권으로,
여성들의 이야기가 변화를 만든다 145
- 6 아이를 대상으로 한 허위 광고에 맞서
양질의 영양을 공급해야 147
- 7 미의 기준 바로잡기,
성차별적 미인대회 폐지로부터 148
- 8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위해,
여성 개발자들이 나섰다 150
- 9 불법촬영과 온라인 성착취,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끝장낸다 152
- 10 일상을 침범하는 스토킹 범죄,
낮선 개념을 법으로 제정하기까지 154

- 11 68년의 배제를 넘어,
가사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됐다 156
- 12 터부와 침묵을 깨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위해 158
- 13 지속가능한 여성농민 공동체,
실질적인 대안 먹거리 운동이 되다 160
- 14 엄마의 성·본 쓰기 운동,
모두가 존중받는 새로운 가족상을 향해 162

[노동]

- 1 이주노동자 창립 10주년,
합법화로 나아가는 길 166
- 2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다,
알바도 노동자고 사람이다 167
- 3 카메라 뒤의 더 소외된 이들,
미디어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170
- 4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그만,
위험의 외주화가 범인이다 171
- 5 갑질 감수성을 높여라,
일터의 관행과 구조를 바꾸는 여정 174
- 6 쓸 수 있는 권리,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176
- 7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178
- 8 특성화고 고졸 차별 멈춰!
졸업생 스스로 운동의 중심이 되다 180
- 9 노동조합이 생소했던 그들,
대법원에서 승소하다 182
- 10 화물노동자 부담은 덜고,
기업의 책임은 키우고 183
- 11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권리를 찾기 위한 그들의 싸움 185
- 12 계속되는 최악의 산재사고,
시민들의 요구가 만들어 낸 중대재해법 187

[인권]

- 1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도' 존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191
- 2 국가폭력에 의해 간첩으로 몰린 사람들의 진실을 규명해내야 합니다 193
- 3 인권을 보호할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활동가들의 요구가 실현됐다 195
- 4 축제하라, 변화를 향해!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가시화 197
- 5 장애인 차별에 저항하라,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199
- 6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201
- 7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다. 난민법을 제정하기까지의 긴 여정 203
- 8 난민심사 시 영상 녹화 의무화는 어떻게 가능했나? 204
- 9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의 가치, 참여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생명윤리 206
- 10 통제에서 자율로의 변화, 핸드폰 허용은 혁신의 한 부분일 뿐 208
- 11 주민등록증 전자화에 대한 논쟁,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요구하다 209
- 1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 여정,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 211
- 13 철창 없는 수용자 면회, 서로를 알아줄 수 있는 접견실을 향해 214
- 14 복지와 시혜의 대상을 넘어, 장애인이 인권의 주체가 되기까지 216
- 15 장애인의 시설 밖 자립,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 218

- 16 모두에게 문턱 없는 이동을 위한 지도 220
- 17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야만의 세월을 되돌리는 한 걸음 222
- 18 난민법 제정 이후, 변화를 만들어 낸 판례들 224
- 19 기후위기와 코로나 앞에서 수용자의 향상을 외치다 227

[행정]

- 1 국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강제적인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230
- 2 우리에게서 알 권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무기는 정보공개 231
- 3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주민이 직접 목소리 내고 결정하겠습니다 233
- 4 시민참여로 꿈꾸는 마을 만들기, 감시-참여-권한의 삼박자로 234
- 5 최악의 예산 낭비를 달성하면 불명예스러운 상을 드립니다 235
- 6 나라 살림살이 세는 곳이 없나, 판공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37
- 7 검찰 권력에 맞선 연대의 힘, 시민이 외치고 국회가 응답하다 239
- 8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주민투표로 한 발짝 더 가까이 240
- 9 감시의 사각지대 국회 예산, 잘못 쓰인 국민 세금을 찾아라. 242
- 10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 정부 정책에 '젠더 렌즈'를! 244

[정치]

- 1 고질적 정치 구태를 바로잡다,
몹 없는 이들의 몫을 위해 247
- 2 의정 감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뽀지 말아야 할 사람을 낙선시킨다 248
- 3 투표가 끝나도
주인으로 살고 싶다 249
- 4 법관이 가진 정당성의 한계,
주권자 국민의 참여로 보완한다 251
- 5 청와대와 검찰의 공생관계,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일깨우다 253
- 6 악법에 이의 있습니다,
법은 사라져도 제도는 그대로 254
- 7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256
- 8 청소년도 정치해야 한다,
청소년 인권의 시작, 선거권 하향 258
- 9 사회의 안정과 시민의 삶,
부패 방지법으로 지켜낸다 259
- 10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시민이 중심되는 주권 운동 261
- 11 고위공직자를 검증한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262
- 12 우리 동네 후보의 정보,
3분이면 빠짐없이 알 수 있도록 264
- 13 유권자 올리는 선거법 독소조항,
헌재를 넘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 266
- 14 공론장으로
문제와 대안을 나누자 267

[경제]

- 1 시민사회가 일궈낸 경제정의,
시민사회가 띄운 여론 정부가 받아내다 271
- 2 작은 권리를 위해 싸우다,
부당하게 낸 천 원 때문에 272
- 3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274
- 4 부도덕하고 과도한 이자 폭리,
'이자제한법-대부업법'으로 해결한다 275
- 5 소액주주, 기업의 반칙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싸우다 277
- 6 연대하고 협력해서 만든 변화,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극복한다 279
- 7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래,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만든 변화 280
- 8 바른 먹거리의 사회 확산,
자연과 인간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282
- 9 사회적 토양을 다지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284
- 10 한 번쯤 고민해본 '면접 정장',
관심이 변화를 만들었다 286
- 11 행복한 물림 교복 은행,
오고 가는 교복 속에 지속되는 관계 287
- 12 공인인증서 없는 삶,
시민사회가 만들어 낸 값진 성과 289

[사회]

- 1 지역상권 회복과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규제 도입이 이끌 효과 **293**
- 2 모두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
무연고, 저소득층을 위한 장례 **294**
- 3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이들,
소비자주권운동으로 해결한다 **296**
- 4 태안을 살려낸 빛나는 시민정신,
이제는 책임 규명에도 관심을 **298**
- 5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학교 앞 화상경마장이 웬 말이냐! **299**
- 6 막힘없이 안전하게 걸을 권리,
시민의 힘으로 보행권을 회복하다 **301**
- 7 대학교 입학금을 폐지하라,
평범한 대학생들이 쓰아올린 작은 공 **303**
- 8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점의 전환 **305**
- 9 헬조선의 근원을 찾아서,
기록과 질문이 만들 더 나은 미래 **307**
- 10 진실을 말하는 자를 지켜라,
제보자 보호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 **308**
- 11 베일에 싸인 그곳 법원,
판결문을 함께 읽으며 견제하자 **310**
- 12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시민의 힘으로 권력의 역사를 저지하다 **312**
- 13 정부에게 기업의 책임을 묻다,
한국 NCP의 황당 운영을 막아라 **313**
- 14 일본의 노골적인 역사왜곡,
동아시아 역사연대로 대처하다 **315**
- 15 침묵과 왜곡의 시대를 넘어
제주 4.3, 진실을 기억하는 시대로 **317**

- 16 권리보장에서 사회변화로,
청년의 또 다른 가능성 **318**
- 17 500원에 팔린 개인정보,
1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320**
- 18 아이들의 이름과 맞바꾼 법안,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를 위해 **322**
- 19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는다,
이해충돌방지법 **324**
- 20 학교로부터 해방된 속옷의 자유,
개성을 실천할 권리를 보장하라. **326**
- 21 자원봉사의 실천이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327**
- 22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 **329**

[평화]

- 1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333**
- 2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린다,
국제연대를 위한 캠페인 활동 **334**
- 3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 병역거부,
우리 모두의 문제로 **336**
- 4 인도적 차원의 움직임,
북한 식량 위기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라 **338**
- 5 흔들리지 않는 대북 인도주의로,
정부 통제로부터의 독립 **339**

[국제개발]

- 1 34,900원
행방찾기 프로젝트 343
- 2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시민사회가 만든 변화 344
- 3 낮은 의료접근성의 대안,
안(眼) 보건 체계 강화 사업 346
- 4 몽골, 영양개선사업으로
변화가 시작됐다 348

[지역]

- 1 은어가 돌아오는 안양천,
은 시민과 함께한 연대의 경험 351
- 2 도로가 두 동강 난 마을,
문화마을 만들기 운동이 지켜낸다 352

[주택]

- 1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산다,
삶의 방식과 돌봄 문화를 함께 만든다 356
- 2 조물주 위에 건물주?
사회적 부조리에 맞서는 연대의 힘 358
- 3 누구나 맘 편히 살고 싶다,
그래서 31년 만에 법을 바꿨다 359

[코로나19, 시민사회_N개의 대응]

- 1 코로나19
사회적 가이드라인 363
- 2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 본부 365
- 3 강서 주민들의
상호 돌봄 및 연대 366
- 4 대구 사례가 보여준
시민의 힘 368
- 5 재난 상황에서
정보인권을 묻다 369
- 6 이주민 차별,
당연하게 일어나다 372
- 7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노동의 민낯 373
- 8 재난대응,
자원봉사가 해결한 방법 375
- 9 사회적 경제, 코로나19 앞에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뭉치다 377

[문화예술]

- 1 예술가의 가난은 선택?
예술노동을 넘어 삶의 보장으로 380
- 2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하여,
예술인 권리보장법 382
- 3 안전한 공연장에서
마음 놓고 공연할 수 있도록 383

CHAPTER
01

환경



[환경 ①] 돌고래의 고향은 드넓은 바다입니다

“불법 포획되어 착취당하는 돌고래를 방류하라”

**[시작 : ‘돌고래 해방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1년 핫핑크돌핀스를 만든 환경활동가 황현진 씨는 그해 여름, 제주도의 한 돌고래 쇼장에서 지난 20년간 돌고래들을 불법으로 포획해서 이용해 오다가 적발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돌고래를 비롯한 고래류는 대부분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과 수출 역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호종인데 무단으로 포획되고 있었던 것이죠. 황현진 씨는 곧바로 제주도로 이동해서, 퍼시픽랜드 앞에서 ‘납치된 돌고래를 바다로’라는 피켓을 들어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 순간, 매표소로 향하던 차가 다시 돌아 나왔고, 차 안의 아이가 외쳤어요.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자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우리 가족은 돌고래 쇼를 보지 않기로 했어요!”

**[경과 : 그 뒤로 돌고래들은 어떻게 되었
을까요?]** 2012년 2월 퍼시픽랜드가 돌고래 불법 포획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들의 몰수와 야생 방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몇천 명의 서명을 모아 재판부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이 재판은 한국에서는 처음 열린 ‘돌고래 재판’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공연업체의 불법 포획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그렇다면 돌고래들을 몰수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인가, 몰수하게 된다면 살아 있는 돌고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린 모든 공판에 찾아가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그렇게 1심 판결이 나고, 항소심을 거쳐 마침내 2013년 3월 28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게 됩니다. 각 심의 판결은 같았습니다. “돌고래들을 불법 포획한 퍼시픽랜드의 대표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다. 그리고 돌고래들을 몰수한다!”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핫핑크돌핀스는 법원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돌고래 재판이 드디어 승리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의미 : 돌고래 야생 방류, 성공하다] 한국 사회 최초로 시작된 수족관 돌고래들

의 야생 바다 적응훈련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냉동 생선을 받아먹도록 길들여졌던 돌고래들이 살아있는 활어를 사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고래들은 요란한 박수 소리가 울리며 청각을 헤치는 실내 수조가 아니라 갈매기 소리와 짠 내, 높은 파도와 세찬 바다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돌이, 춘삼이, 복순이, 태산이 모두 바다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제돌이 방류에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것이 잘한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제돌이 방류 1주년 기념으로 2014년 7월 열린 제돌이 포럼에서 '제돌이 방류 경제성 및 홍보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유승훈 교수는 "제돌이 야생방류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92.3배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경제적 가치보다 돌고래 방류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사육 시설에서 기존의 돌고래쇼가 '돌고래 생태설명회'로 변경된 것이 중요한 변화인데요, 조련사들이 돌고래들을 밟거나 올라타는 등의 서커스 적인 요소는 대부분 사라지고, 자연 상태에서 하지 않는 인위적인 동작을 돌고래들에게 시키는 동물학대적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참여 : 아직도 자유롭게 못한 고래들에

게 자유를] 일곱 마리 남방큰돌고래가 제주 바다로 자연 방류되었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은 새로운 고래 수족관을 개장, 운영하고 있어요. 2020년 10월, 한국 수족관 시설에 감금되어있는 사육 고래류는 총 7개 시설, 29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28일에는 제주도의 돌고래쇼장 마린파크에서 큰돌고래 '안덕이'가 폐사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어요. 2019년 4월 핫핑크돌핀스 현장 조사에서 이미 징후가 예견되어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공분을 사고 있어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핫핑크돌핀스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내수면 일대에 '돌고래 바다쉼터'를 조성하여, 수족관에서 사육 중인 큰돌고래들의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야생 방류, 동물 학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금지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한국 사범 역사상 검찰이 살아있는 생물을 몰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좁고 갑갑한 수조에서 마침내 풀려난 돌고래들이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돌고래들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고자 전문가, 공무원, 사육 담당자 그리고 동물보호단체들은 1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돌고래 방류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장소를 논의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과정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2013년 6월과 7월 삼팔이와 춘삼이, 그리고 제돌이(제주 바다에서 무단으로 포획되어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쇼를 해왔던 돌고래)가 고향인 제주 바다로 방류되었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야생 방류가 미뤄졌던 복순이와 태산이도 2015년 7월에는 자유를 찾았다고 해요.

【환경 ②】 동물실험 안 하는 착한 화장품을 찾아라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동물실험에 반대한다”

【시작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아직은 화장품 동물실험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던 2011년, 동물보호시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카라)의 활동가는 ‘나처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해외는 다양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뤄진 동물실험 여부나 동물성 원료 첨가 유무에 대한 구분이 쉬운 편이에요. 반면 한국은 윤리적 소비를 하고 싶어도 신뢰할

수 있는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했죠. 카라 활동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장품을 선택할 때 동물 실험 여부가 중요한 요인인지,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 정보를 제공하면 이용할 생각이 있는지 수요조사에 착수했어요.

【경과 : 수요조사 후에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정보에 목말라 하는 이들은 의외로 많았다고 해요.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 여부 확인은 쉬웠는데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여부는 확인이 어려웠어요. 하나의 화장품에도 여러 가지 원료가 쓰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공수되기 때문에, 원료 하나하나에 대한 동물실험 여부 확인은 회사로서도 긴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고맙게도 카라의 캠페인 취지에 공감한 몇몇 회사들이 공을 들여 개별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주었고, 2012년 4월 24일, 카라의 ‘착한 회사’ 목록이 출시됩니다.

【의미 : 인식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때】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사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의 의식이 ‘착한 회사’ 캠페인을 가능하게 했어요. 회사들은 소비자가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죠. 2013년 카라는 HSI(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

내셔널)와 파트너십을 맺고, 화장품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국제적 캠페인 'Be Cruelty Free'를 확장해 화장품 동물실험 시민 의식조사, 동물실험이 왜 불필요한지에 대한 세미나 등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2015년 12월에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7년 2월 본격 시행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원료나 완제품 단계에서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은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참여 : 아직도 고통받으며 죽는 동물들에게 자유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예요. 유럽연합은 2009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서 더 나아가 2013년 3월 이후 새로운 동물실험을 거쳐야 하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에 대한 판매까지도 금지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는 다르게 아직 다양한 영역에서는 동물실험이 번번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2019년 5월 9일 복제 실험견 메이의 처참한 죽음이 공개되면서 비윤리적 동물실험 사태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한국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은 2017년부터 제도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예외 조항이 살아 있기에 완전히 금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2013년 5월 동물실험을 안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등 국내 다수의 화장품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추세로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실험을 완전히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더 많은 희생을 낳고 있는 동물실험에 대한 제재가 과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환경 ③】 응답에 얽힌 잔혹사, 사육곰을 보호하라

“우리(cage) 안의 사육곰에게 자유를”

[시작 : ‘사육곰 구출 캠페인’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80년대 정부는 농가들에게 반달곰을 수입해 기를 것을 장려합니다. 응답을 빼서 수출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동물보호 여론이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응답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응답을 찾는 시민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수익이 줄어들자 농가들은 죽지 않을 만큼의 사료만 주면서 곰들을 방치하다시

피 기르게 됩니다. 철창 안의 곰들은 아프고 병들어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녹슨 철창, 부서진 콘크리트로 된 우리 안에서 비쩍 마른 곰들이 배설물 밟을 뒹굴었습니다. 좁은 사육장 안에서 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왔다 갔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철창을 마구 흔들어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고 녹색연합이 가장 먼저 한 활동은 사육곰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웅담 채취를 위해 좁은 철창 안에서 고통받는 반달가슴곰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2005년 첫 번째 ‘곰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두 번째 ‘곰의 날’ 캠페인에는 1,400마리 사육곰을 위해 시민 1,400명에게 서명을 받았고, 환경부 장관에게 곰 사육 정책 폐지 탄원서 쓰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콘서트 형식의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2009년에는 여행정보 전문잡지와 협업하여 아시아나항공 수하물표에 곰 상품 밀반입 행위는 불법이며 국내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 서명을 요청하는 캠페인 광고를 게재하고, 서울 110곳 시내버스 정류장에도 캠페인 광고를 실었습니다. 2010년에는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사육곰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2012년에는



일러스트: 신주옥(LPW)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열리는 제주에서 곰 사육 금지 결의안 채택을 희망하는 서명을 받았습니.

[경과 :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녹색연합은 사육곰 증식을 금지하고 국가가 사육곰을 전량 매수하여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하려고 했어요.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해 특별법안 발의에 직접 관여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죠.

더 이상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녹색연합은 새끼 곰 출산을 통한 증식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사육곰의 증식화가 완료되었죠. 2000년대 중반 1,400마리까지 늘어난 사육곰은 2019년 500마리로 줄어들었고 이는 사육곰 반대 운동의 큰 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이에요.

녹색연합은 보담이 구출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2018년 12월 7일 다섯 살의 어린 곰 세 마리(반이, 달이, 곰이)를 구출했어요. 이후 2019년 9월 24일 어린 곰(들이)까지도 구출하게 되었죠. 이 곰들에게 온 가장 큰 변화는 이제 10살이 되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미 : 인식 변화와 참여의 결과물] 녹색연합의 다양한 활동 결과, 많은 시민이 곰 사육 산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지지하게 되었죠. 사육곰을 구출하는 과정은 녹리지 않았지만, 온라인 모금에 참여한 3,639명의 시민이 4천만 원이 넘는 구출 비용을 마련해주었고, 청주와 전주에 있는 동물원에서 곰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어요.

[참여 : 우리에게 간혀있는 사육곰들에게 자유를] 2020년에도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3마리가 폐사되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증식된 반달가슴곰들을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잇따른 죽음을 맞이하였고, 2016년부터 총 7마리나 세상을 떠났어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증식된 반달가슴곰은 36마리에 이릅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불법 증식 개체 몰수 보호시설 예산을 수립한다고 해요. 녹색연합은 앞으로도 시민, 국제사회와 함께 '몰수

보호시설 예산'의 국회 통과와 추가적인 불법 증식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 개정을 요구해나갈 거예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곰 사육 역사가 30여 년이 지나면서 농가의 사육시설은 많이 낡았습니다. 시설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곰 탈출과 같은 사고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정부는 곰 사육 농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 보완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수의 곰이 응답 채취용 사육곰에서 관람 용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여전히 간혀있는 많은 수의 사육곰뿐만 아니라 전시 관람용 곰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 ④] 1회용품 감량, 곰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한 여정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의식적 실천”

[시작 :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4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는 매립지 쓰레기증량제가 시행되면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패스트푸드 매장 중에는 일일이 분리 배출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1회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곳들이 많았어요.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은 확산하고 있는 시기였지만, 소비자들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는 1회용품은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죠.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1999년에 신종 업체로 증가하고 있었던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어요. 이러한 노력으로 환경부와 패스트푸드점 업체, 테이크아웃 업체들은 일정 규모 이상 매장의 경우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고, 1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을 부담하게 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경과 : 협약을 통해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을까] 협약 체결 업체에서는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1회용 컵에는 50원~1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였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 이후 1회용 종이컵 수량 대비 환불 비율은 2003년 23.8%에서 2006년 38.9%로 증가하였고,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의 양도 상

당히 감소하는 추세였어요. 소비자들은 보증금을 내고 다시 환불받는 것에 대해 번거로움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홍보활동으로 참여도는 꾸준히 증가했어요. 그런데 2008년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미 환불금의 사용 용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협약은 폐지되었죠.

폐지 이후에도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모니터링을 지속했어요. 2010년부터 협약 업체들의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했고, 2013년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 협약을 해지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를 강화해 나갔죠. 그리고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를 꾸준히 요구했어요.

[의미 : 문제의 인식이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업체들이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않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알렸어요. 또한 환경부, 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발적 협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기했죠.

그 결과 2011년 1월, 스타벅스는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와 함께 1회용 컵 없는 매장 50개를 지정하여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 다회용 컵을 제공하게 되었고, 3월에는 110개로 확대, 6월에는 전 매장으로 확대합니다. 2011년 7월에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할리스커피, 카페베네, 엔제리너스커피에서 전국 900여 매장을 1회용 컵 없는 매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했고, 2011년 시범 참여 후 2012년까지 매장 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참여 : 1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하다]

2020년 5월 20일,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년 넘게 계류되었던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이에 녹색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는 5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2022년 6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시행될 때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2019년 11월 22일 환경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을 줄일’ 계획을 발표했어요. 비단 1회용 컵뿐만 아니라 1회용 종이컵, 비닐봉지, 쇼핑백, 배달음식 용기,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우산 비닐, 응원용품 등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1회용품이 폐기물로 발생하고 있죠. 이에 자원순환연대는 ‘1회용품의 지속적

인 관리와 대체제 개발 등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1회용품의 사용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1회용 컵 감량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발적 협약을 폐지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협약을 폐지하고 법률을 적용한다면 매장 면적 150m² 이상일 경우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거든요. 150m² 이하인 경우엔 매장 내에서 사용한 1회용품을 90% 이상 회수한 후 회수·재활용업체에 인계해야 하는 법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 및 분리배출 관리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죠. 물론 법률을 적용하는 대신 자발적 협약을 통해 업체 스스로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환경을 위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계속 실천해야 합니다.

[환경 ⑤] 편리함이 부른 1회용 봉투 사용 증가, 더는 안 된다

“장 보러 갈 때는 다회용 장바구니를”

[시작 : '1회용 비닐봉지 판매 금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원래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백화점, 쇼핑백, 대형 할인 유통매장 등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편의를 위해 무심코 사용했던 봉지들이 해양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쓰레기 문제이자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1회용 비닐봉지 유상 판매가 법으로 제정되기 이전인 1998년도에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광주지역의 유통 업체인 빅마트와 협약을 체결했어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1회용 비닐봉지가 필요할 경우 50원에 사도록 한 것이죠. 봉지를 산 소비자들이 나중에 1회용 비닐봉지를 되가져왔을 때 구입비용을 환불해 주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2년 5월에는 42개 업체 404개 매장이 환경부와 '자율실천선언'을 체결했어요. 1회용 비닐봉지 가격을 50원으로 정하고, 판매대금은 보증금 환부에 쓰거나 환경보전 및 단체를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죠.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바구니 들기 캠페인도 지속해서 전개했는데, 참여한 소비자는 현금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 2002년 소비자 1,000명당 봉지 구매 인원 비율이 48.6%에서 2006년 20.7%로 감소하

는 성과를 가져왔어요.

[순탄치 않은 과정, 또 다른 시도] 협약에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일부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1회용 쇼핑백 미 반환금을 환원하지 않고 본사에서 일괄 사용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대형할인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 시범 운영을 제안했어요. 2009년 3월 이마트 양재점과 남양주점을 시작으로, 6월에는 이마트 전국 주요 도시 25개 매장으로 확대되었죠.

2010년에는 5개의 대형 할인 유통매장(이마트,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메가마트) 358개 매장에서 1회용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를 선언했고, 2012년에는 5개 기업형 슈퍼마켓(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 슈퍼마켓, 김스클럽, 이마트 에브리데이) 827개 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지 판매를 중단했어요. 2013년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제빵업체 1회용 비닐 쇼핑백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만 봉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은 급격히 감소했어요.

[의미 : 문제의 인식이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 1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이

많은 대형할인매장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판매 및 대여제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빈 상자 제공 확대 등의 대체 수단을 마련하였어요. 이를 통해 1회용 비닐 사용 줄이기 문화가 확산하고, 소비자들이 장바구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게 되었죠.

[참여 :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1회용 비닐을 줄여봅시다]

2019년 1월부터 165m² 이상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계도기간 이후 서울 소재 슈퍼마켓 62곳을 대상으로 정책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책에 대한 대비가 잘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나 플라스틱이나 트레이, 비닐 등을 이용한 불필요한 소포장 판매 제품이 많으며, 기준 면적보다 작은 일반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약국, 전통시장 등에서는 아직도 1회용 비닐봉지를 다량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우리가 버린 1회용 비닐봉지는 어디로 갈까요? 썩지 않고 잘게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생태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 몸속으로 축적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1회용 비닐 사용 줄이기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⑥] 바다를 잠식한 미세플라스틱, 즐거운 불편을 향하여

“영원히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플라스틱, 어떻게 하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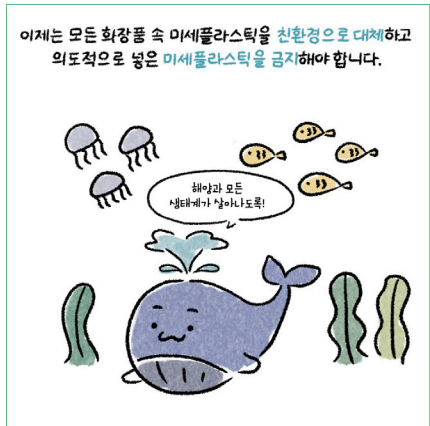
[시작 : ‘플라스틱 없는 일상 만들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0년 여성환경연대는 ‘With a cup’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컵’과 함께하는 일상의 대안 문화를 제시했어요. 편리와 풍요를 향해 고속 질주하는 우리를 돌아보며 삶의 속도를 한 박자 천천히 늦추고자 함이었어요. ‘With a cup’ 캠페인은 시민에게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 공을 들였어요. 유명인이 화보에 참여해 홍보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텀블러를 빌려주고 반납하는 ‘움직이는 컵’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죠. 보증금 제도 폐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모니터링, 서명운동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도 이어나갔어요. 여성환경연대는 플라스틱 없는 카페에 대한 실험을 위해 ‘플라스틱없다방’을 열어 소비자들에게 종이 빨대와 대안생활용품의 존재를 알리기도 했죠.

[경과 : 미세플라스틱, 당신은 누구신가요] 자기 컵 사용 캠페인을 진행하던

여성환경연대는 환경 이슈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미세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0.001~5mm 이하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생태계에는 아주 큰 위험 요인이죠. 바다로 흘러간 미세플라스틱은 영원히 썩지 않고 스펀지처럼 유해 물질을 흡수하며 떠다녀요. 미세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한 플랑크톤을 통해, 다시 물고기를 통해 결국 미세플라스틱은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결을 위해 문제의 원인을 찾다] 여성환경연대는 화장품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집중했어요. 9,000여 개의 화장품을 분석한 결과, 406개의 화장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발견했죠.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의 국정감사를 통해 마침내 2017년 1월 식약처의 화장품법 개정 고시안이 발표되었어요. 각질 제거제, 세정제, 스크럽 등 '씻어내는 종류의 화장품'과 치약, 구강청결제 등 의약외품에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의미 : 문제의 인식이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 개인의 실천과 대안용품 사용을 촉구함과 동시에 법을 개정하는 활동을 통해서 플라스틱 없는 일상 환경이



일러스트: 오지현(오지구요)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플라스틱은 다양한 분야 곳곳에 산적해 있는 문제인 만큼 일상에서 사용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함께 더해진 결과물인 거죠.

[참여 :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줄여봅시다] 씻어내는 용도의 화장품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성환경연대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사용 금지와 더불어 미세플라스틱을 유해화학물질로 저장해 관리해야 함을 주장했으나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았어요. 또한 화장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전반에 두루 쓰이는 미세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2008년 1

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폐지는 With a cup 캠페인을 만드는 데에 배경이 되었어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그에 대한 보증금을 부담하고 매장에 컵을 반납할 경우, 다시 환불해 주는 것이었는데요, 1회용 컵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감을 지적하고, 회수를 통해 분리수거와 1회용 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미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환경보호 기금으로 쓰였어요. 그러나 당시 기업 규제 완화의 일환이자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폐지에 이르렀습니다. With a cup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 제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지구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하지 알릴 수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환경 ⑦] 쓰레기 원천감량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시키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특단의 조치”

[시작 : ‘쓰레기 종량제 시행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2년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1.8kg으로 이 중 7.5%만이 재활용되었어요. 쓰레기 처리 비용만 보더라도 7,400억 원이었으며 전국적으로 매립장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었

죠. 이에 환경단체들은 쓰레기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에 쓰레기 종량제를 제안하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환경단체들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 원인 자부담 원칙, 사전 예방 원칙, 자원 재활용 원칙’하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어요. 정부는 환경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1993년 2월부터 8월, 6개월 동안 관계 부처,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계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수차례 거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정착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1994년 4월 1일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어요.

[경과 :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의 시작]

1994년 4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종량제 시범사업 민간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했어요. 평가단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종량제를 평가, 진단하기 위해 시민 여론을 모으고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되는 과정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를 위해 전국 33개 시범사업지역에서 각각 한 개의 읍·면·동을 선정하여 지역 책임자 1명과 모니터 요원 4명을 배치하고 모니터링과 설문 조사 활동을 전개했어요. 5월부터 8월까지 4차례의 조사 결

과를 기반으로 주민들과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세미나, 워크숍, 공청회, 지역 평가회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올바른 발전 방향을 나누는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한 민간평가단 활동이 있었기에 종량제는 큰 무리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었죠.

[의미 :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성공적인 과정을 만들다] 민간평가단 활동은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했어요. 시범사업 단계에서 종량제를 객관적으로 평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량제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 기반 시설 확충을 제시하였죠. 또한 소비자 의식 개선은 물론이고 정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기업의 생산 및 유통 형태에 대한 반성 등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쓰레기 종량제를 국가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고 해요. 재활용 확대를 위해 분리배출 정책을 추진하고, 1회용품 사용 금지 및 규제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어요. 국민에게 전가되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품목과 양도 확대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시행하고 있죠.

[참여 : 쓰레기 감량을 위한 특단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한국의 쓰레기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나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등 배송 문화 발달에 따른 복합재질 포장은 쓰레기의 가파른 증가를 부추기고 있죠.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매립장 및 소각장의 과부하로 처리할 곳이 부족해 지역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포장 없는 제품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 생산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고 있으며,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분리 배출되지 않은 상태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환경 인식은 90% 이상으로 높았으나, 실천 참여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라며 포장재, 1회용품의 사용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 분리배출 참여는 미비하다고 설명했어요. 이번 기회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⑧] 디지털 시대의
골칫거리, 누가 책임지나?**

“전자폐기물의 책임, 소비자에서 생산자에게로”

[시작 : ‘전자폐기물 생산자책임 재활용 도입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국제폐기물 협회에 따르면 2015년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은 연간 668만 1,000여 톤, 일본은 223만 2,000여 톤, 한국은 83만 1,000여 톤, 인도네시아는 81만 2,000여 톤 전자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러한 전자폐기물 증가 속도는 IT 산업 발전과 더불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간 전자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자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고 있고, 한국의 주요 전자제품 중 11개 품목에서 2019년 연간 전자폐기물 64만 8천여 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경과 : 시민단체, 전자폐기물 처리 흐름을 바꾸다]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환경단체는 전자폐기물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여 생산자가 전자폐기물 재활용과 안전 처리 비용을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도입하게 됐어요. 2003년부터 시행된 폐전기전자제품 EPR 제도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으로 제한하여 운영하

였고, 매년 품목 확대와 재활용 의무량을 확대하라는 환경단체의 요구와 압력을 통해 EPR 제도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핸드폰 등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어요. 2008년부터는 환경성 보장제를 도입하여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쉽도록 관리 강화할 것을 제안 및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폐기물이 덜 나오게끔 하는 것] 또, 소비자가 전자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불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거해가도록 하는 제도를 확산시켜, ‘폐가전 문전수거(Door To Door)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매년 전자폐기물 수거 재활용 중 약 10%에 달하는 양이에요. 환경단체는 전자폐기물의 재활용량 확대를 위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추적했어요. 2013년부터는 전자폐기물 재활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국민 1인당 전기전자제품 장기 재활용 목표량을 제시, 재활용 목표 관리를 시행하고 있어요.

[의미 : 소비자 책임이던 전자폐기물, 생산자 책임으로 전환되다] 폐가전 문전수거 서비스를 통해 무거운 전자폐기물을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나 도서지역 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소형 폐기물은 지자체 분리수거함에 배출 합니다.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와 활동으로 시민에게 편리해진 정책 도입.
이 결과에 함께하는 방법은, 분리배출을 잘 하는 것!



일러스트: 오지현(오지구요)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요. 또한 소비자가 쓰레기 비용을 지불하고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처리하는 비용을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편리와 권리가 높아지게 되었어요.

[참여 : 인식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개발도상국으로 불법 수출되어 오히려 재활용품이 모자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형 전자제품이라도 지자체 분리배출함에 배출하는 시민들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새로운 제품 개발, 제품 교체 주기 단축 등으로 전기·전자폐기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폐기물이 개

발도상국 등으로 수출되어 부적절하게 처리되면서 주변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래 삶을 파괴하는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전자폐기물 생산자책임 재활용 도입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⑨] 안전하게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자원순환 사회로의 온전한 전환으로”

**[시작 :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0년대에 들어 국민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은 많아지고, 매립 및 소각 문제가 점차 나타나게 되었어요. 정부에서는 1991년 분리 배출제 도입, 1993년 폐기물 예치금제 도입,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량 노력을 했죠. 하지만 최종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소비자들과 지자체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생산자들은 제품 판매만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

에 재활용이 어렵거나 유해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에 제품 생산자들이 제품 판매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사용 후 회수, 재활용 단계까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품을 만들 때 재활용이 쉬운 소재를 선택한 후 디자인을 개선하고, 폐기 시 재활용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원순환사회연대는 EPR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과정을 기획했어요. ERP 제도는 처음 2개 제품군,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미 분리배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목록화되었기 때문에 생산과 폐기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ERP에서 제외된 품목들이 많았어요.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러한 품목들을 꼼꼼히 파악하고, EPR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죠.

[경과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까지] 자원순환사회연대는 2000년 이전부터 폐휴대전화가 EPR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법률 제정을 꾸준히 요구한 끝에 2003년 목록에 포함하는 성과를 냈어요. 알칼리 망간 전지도 시행 초반에는 제외되었지만, 모니

터링 등을 통해 공론화가 되면서 2008년부터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어요. 형광등과 종이팩의 경우는 EPR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있지만, 분리배출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어요.

2013년도에 들어서는 재활용 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 이용하여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점차 요구되었어요.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발의 법안을 검토한 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폐기물만 순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꾸준히 발전시켜 나갔어요. 마침내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의미 : 자원순환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리다] 제품 생산자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넘어 회수와 재활용 단계까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참여 : 인식이 실천이 되는 과정에 동참해주세요] EPR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업체 등 각 주체별로 역할이 제대로 실행되어야 해

요. 또한 소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품목들(종이팩, 필름류)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이 활성화되기 위한 수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최종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제품 생산자들이 판매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사용 후 회수, 재활용 단계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안전한 사회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원순환기본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⑩] 아이들은 어떻게 숲으로 등교할 수 있겠나

“학교에는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공간이 필요하다”

[시작 : ‘학교숲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9년, 서울 시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는 아이들이 건강한 심성을 양성하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요. 생명의숲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는 학교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욱 많은 학교들이 현재의 환경을 개선해 ‘숲이 있는 학교’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1995년 유한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시작되었던 학교숲 조성 활동은 1999년 생명의숲과 함께 수도권 10개 학교에 숲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학교숲 운동으로 확산하였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의숲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육부 등의 지원으로 유사한 형태의 학교숲 조성사업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 곳곳에서 이루어지면서 2016년까지 전국에는 약 3,650개의 학교숲이 만들어졌어요. 건강한 학교숲의 모습을 위해, 인공 시설물보다는 자생수목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숲 조성에 방점을 두고 학교의 녹지공간을 늘려가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또한 학교숲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중요한 원칙으로 가져가고 있죠. 이를 위해 공간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애정을 가질 수 있는 학교숲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의미 : 자연과 함께하는 학교] 매우 생소한 용어였던 ‘학교숲’이 사회적 공감대 형

성과 가치가 확산하면서 이제는 보통명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 환경 전반을 개선해 나가므로써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참여 : 사라지고 있는 학교숲을 지켜주세요] 그러나 학교에 조성했던 숲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 가지나 나무가 무분별하게 베어지기도 해요. 또한 만들 때의 노력만큼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관리가 되지 않아 학생들이 기피하는 공간으로 변한 곳들도 있다고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평일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환경에 따라 아이들은 매우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번 기회에 ‘학교숲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⑪] 시민이 함께 만든 공원, 함께 운영하는 공원으로

**“도시의 생태적 회복,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이룬다”**

[시작 : ‘그린트러스트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서울그린트러스트는 2003년 서울에 도시숲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도시숲 공사현장에서 생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활동가를 양성했어요. 2005년 서울숲이 개원되기 몇 달 전부터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서울숲 사랑모임을 조직하고 상근활동가를 선별하여 준비했죠.

시민이 주인이 되어 경영하는 공원의 형태를 바랐던 그린트러스트의 운동은 이후 연간 5천 명, 5만 시간에 달하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만들고 공원 자원봉사의 메카로 성장했어요. 상근활동가와 핵심 자원활동가 그리고 사회봉사자로 이어지는 운영조직은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경과 :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05년 6월 18일 서울숲 개장 후 10년여간 다양한 성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매년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서울숲을 운영한 지 만 3년이 되던 2009년, 한 단체가 3년 이상 사업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 민간위탁 제도에 따라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 시기 서울숲의 시작부터 함께해 온 자원활동가들은 자율성을 상실한 서울숲 사랑모임에 실망하고 유급 숲해설가 활동 등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시민이 함께 만들고
가꾸는 공원,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시민 참여 공원의 시작,
서울숲공원



무너진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시스템을 복원하다 2012년 서울시에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발생했어요. 서울숲의 시민 참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시장이 당선되면서, 시민들이 서울숲을 총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었어요. 2014년, 서울 그린트러스트는 10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서울숲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더 큰 역할을 맡아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세웠어요.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 위탁을 넘어서 서울숲의 유지 관리는 물론 공원 운영 전반을 시민이 주도하는 전면 위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 시기에 상근활동가의 60%가 기존의 직무와 업무를 중단하고 서울숲 전면 위탁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세우는 데 전력을 다했어요. 1년 동안의 계획 수립 기간 이후 2016년 11월 그린트러스트는 민간위탁으로 선정되었어요.

[의미 :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도시공원]

2003년에 트러스트 운동을 시작하여, 2016년 서울숲 운영까지 13년 만에 만들어낸 유의미한 변화들과 함께 '도시의 공공성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 과정에 참여한 이들이 행동으로 답을 보여주었어요.

[시민이 주인이 되어 경영하는 공원의 모델을 만들다]

2016년 11월 서울숲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그린트러스트가 선정되면서, 서울숲 운영을 전담하는 서울숲컨서번시를 조직했어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녹지시설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 경영지원)된 30여 명의 매니저가 상근하고 계절에 따라 15~50명의 스태프가 근무했어요. 2017년 상반기에는 6,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서울숲 운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17년 서울 그린트러스트는 자원봉사의 메카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공원 경영의 메카가 되어가고자 준비하고 있어요.

[참여 : 그린트러스트 운동에 관심을]

우리 도시에 도시공원 운영에 대한 시민참여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원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역사가 짧아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행정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린트러스트는 시민이 직접 경영하는 서울숲을 모델로 전국 도시공원의 시민 참여와 시민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원의 친구들'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공원 시민참여 운동이 활발하게 조직되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도시공원 운영의 시민참여 활성화가 발전한 것은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그린트러스트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⑫]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에 반대한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난개발에 반대한다!”

[시작 : '그린벨트 지정 청원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00년에 환경정의는 용인 대지산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지정 청원 운동을 펼쳤어요. 2000년 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택지가 개발되던 시기였고, 그중 대지산을 포함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

108만 평도 산이 없어지고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세워질 운명에 처해 있었죠.

환경정의는 2000년 6월 2일, 공영개발을 내세운 택지 개발 지구 지정 사업의 불평등성에 항의하는 동시에 용인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조직해요. 이후 전문가와 함께 식생조사를 진행하고 주민 대상 이용 실태 및 인식조사, 등산객 대상 홍보와 서명 활동 등을 전개했어요. 그린벨트 지정 청원 운동은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존재와 정당성을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주민들은 “택지로 수용당하느니 차라리 그린벨트로 지정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라며 청원에 참여했죠. 시민들은 성금을 모아 '대지산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어요.

[경과 : 그 뒤로 대지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국 곳곳 총 256명의 시민이 참여한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통해 대지산 정상부 100평을 매입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공사는 대지산을 강제 수용하여 곧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었죠.

환경정의는 시민들과 함께 '대지산 살리기 시민 행동의 날'을 선포했어요. 미국의 여성 환경운동가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이

900년 된 고목을 베어내려는 목재회사에 맞서 높이 52m 나무 위에 올라 그 나무를 지켜냈다는 것에 착안하여, 2001년 4월 29일 나무 위 시위를 진행했죠. 서명과 모금 활동, 나무 오르기 체험, 새끼 꼬기까지 산의 소중함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움직임이 지속되었어요.

시민들의 열띤 참여와 환경정의의 나무 위 시위는 당시 정부의 개발 의지를 꺾었어요. 토지 공사는 2001년 5월 10일 대지산 일대를 녹지로 지정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5월 15일, 나무 위 활동가는 시민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으며 17일 만에 나무에서 내려와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했죠. 환경정의의 대지산 살리기 운동은 용인 수지 지역의 녹지 보전과 시민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어요. 이를 계기로 2003년 1월 5일 용인환경정의가 만들어져 시민들과 함께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활동을 펼치고, 난개발에 맞서 시민감시, 현장 조사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했어요.

[의미 : 변화를 위한 운동, 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다] 대지산 살리기 운동은 당시 정부의 주택 개발 정책이 난개발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리고, 무분별한 개발의 원인이었던 준농림지 제도를 개선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도 대지산 정상부에 가면 당시

대지산 땅 한 평 사기 운동에 참여했던 256명 시민의 이름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참여 : 아직도 어딘가에서는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난개발에 대응한 환경정의의 활동으로는 김포 신도시 건설 저지 운동(2003), 팔당 상수원 난개발 저지 운동(2004), 기업도시 저지 운동(2004), 1가구 1주택 운동(2007), 김포 환경 피해 대응(2014~현재) 등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토지 이용에 있어 여러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피해를 주는지를 판단 근거로 둘 수 있겠죠. 이번 기회에 '그린벨트 지정 청원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⑬] 설악산을 위협하는 케이블카 사업, 국민행동은 어떻게 막아냈나

“설악산은 개발이 아닌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시작 :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5년 8월 28일, 정부 과천청사 일대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켜 보전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설악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에 따라 개발을 원한다'는 이들로 들썩여었어요. 논란이 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에 이르는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어요. 국립공원위원회는 앞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모두 케이블카 설치를 불허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와 법령 개정으로 여론이 들썩이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설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는 상태였어요.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일곱 개의 부대조건을 내걸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허가하게 됩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탐방로 회피 대책이 부족하다',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이 없다', '시설 안전대책이 부족하다',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 '상부 정류장 주변의 식물보호 대책이 없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뜻과 같아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불허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부대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이후 4년간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결정 직후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기존의 대응 단위('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확대하고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 내려면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죠. 종교계, 대학, 산악연맹, 산악인의 연대체, 동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만들어졌어요.

국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에 대응했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1만인 서명 캠페인, 비박 농성과 원주지방환경청 고공 퍼포먼스를 기획했어요. 20대 총선에서는 설악산을 망친 주역들을 꼬마 낙천낙선 운동까지 진행하게 되었죠. 결국 2019년 9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환경부)은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부대조건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한다고 발표했어요.

[의미 : 환경을 지키는 일,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이후 설악산 생태 경관조사와 무인 카메라를 통한 설악산 모니터링을 지속해왔어요. 이 과정에서 현지 조사표 조작 및 허위 기재를 적발하고,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유령 전문가와 밀렵꾼이 참여한 정황,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편법을 쓴 점, 산양 스트레스 호르몬 조사 결과 및 중간보고서 누락을 고발, 입증해냈죠.

[참여 :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현재 진행형] 이명박 정부 때 바뀐 자연공원법으로 인해 국립공원의 산 정상까지 이르는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됐어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2019년 부결되었지만, 앞으로도 언제든 설악산에, 또 다른 산에 케이블카를 놓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관광개발 위주의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산을 온전히 지키기 위

한 관심이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산을 오르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수려한 경치와 맑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가 클 텐데요. 케이블카와 수용인원을 넘는 탐방객들로 인해 훼손된 자연경관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이킬 수 없겠죠. 이번 기회에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⑭] 시민운동이 댐을 백지화시켰다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공생할 수 있도록”

[시작 : ‘동강댐 백지화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7년 8월 우이령보존회와 환경운동연합이 동강 현장을 조사한 시점부터 동강댐 백지화 운동은 본격화되었어요. 당시 환경운동연합 조사국장 김혜정(현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동강을 다녀오기만 하면, 동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라며 “그만큼 사람들이 동강 경관에 감탄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수려한 동강의 경치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댐 건설이 연쇄적으

로 발생시키는 문제도 적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이미 댐 개발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지 대부분에 댐 건설을 완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내 개발부처는 댐 개발을 계속 추진했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1990년대부터 주민들의 운동이 본격화되었어요.

댐은 전력 생산, 용수 공급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항민을 발생시키거나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수질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환경운동단체는 새로운 댐이 필요해서라기보다 개발부처 등 토건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신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전국적인 댐 반대 운동을 펼쳐나갔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회를 통해 대형 댐 중심의 수자원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동강 시민 답사를 조직하고 1998년부터는 “동강댐 반대”라는 구호 대신 “동강을 지키자”는 구호를 사용했어요. 이 시기 “동강은 흐른다”는 표현이 동강댐 백지화 운동의 상징적인 구호가 되었죠.

1998년 4월 ‘동강댐 백지화 3개군 투쟁 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2월에는 서울 한

강에서 동강 지키기 뗏목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어요. 또한 1999년 2~3월 환경운동연합이 벌인 33일 밤샘 농성, 거리서명운동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죠. 이후 1999년 3월 방영된 KBS 환경스페셜 ‘동강’ 편은 국민 여론을 댐 건설반대로 기울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어요. 나아가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가 제공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실제로 크고 작은 동굴 200여 개와 각종 희귀종의 식생이 누락된 것을 밝혀냈어요.

1999년 3월, 연내 댐 강행 입장을 고수해오던 건교부 장관이 댐 건설을 다음 해로 연기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이어 8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동강댐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이후 댐 건설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는 민관 공동조사단이 총리실 소속 수질개선 기획단 산하에 구성되었죠. 마침내 2000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선언해요.

[의미 : 시민들의 힘으로 자연을 보호하다] 동강댐 백지화는 시민 스스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실천이 있어 가능한 결과였어요. 동강댐 백지화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생해야 한다는 환경 의식을 확산시키고 공급 위주의 자원 정책을 수요관리 측

면에서 재검토한 상징적 사례로 꼽혀요.

[참여 : 동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현재 진행형] 댐 건설이 백지화된 이후 동강은 2001년 12월 '자연휴식지'로 지정되었고, 2002년 8월에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철 폭우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건교부와 당시 집권 여당은 동강 댐 재추진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언론은 홍수 피해가 댐을 못 짓게 한 환경단체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동강댐이 0순위로 추진되리라 전망했어요. 하지만 "동강댐의 홍수조절 효과는 미미한 반면, 생태계 훼손과 지하 동굴 누수 및 단층대 등으로 위험하다"는 내용의 국무총리실 '영월댐 건설 타당 보고서(2000년 5월 작성)'가 공개되면서 일단락되었죠. 그 이후에도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 당시 동강에 200만 톤 규모의 취수 전용 미니 댐 추진 계획이 언급된 바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동강댐 백지화 운동은 국민이 환경의 사용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를 우선시했기에 성공한 사례로 기존의 개발 위주 수자원 정책을 성찰하게 했다는 점에서 환경사적으로 중요해요. 댐 건설은 막아냈지만, 이 흐름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강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죠. 이번 기회에 '동강댐 개발 백지화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⑮] 20년 동안 끈질기게 목소리를 냈다, 댐을 백지화했다

“각계각층의 연대로 문정을 지키다”

[시작 :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1년 경남 산청에 대규모의 양수발전소 건립 계획이 세워지면서 아름다웠던 '고운동'은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었습니다. 댐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국가적 이익이 소수의 권익을 억누를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금방 묵살되었어요.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였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기 위한 이들의 목소리도 컸고, 여러 이유로 인해 3년 만에 착공하게 되었죠.

1998년 산청 양수발전소가 거의 완공될 무렵, 정부는 '문정댐' 건설 계획을 추가 발표했어요.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지리산 북부 하천 엄천강을 최대 높이 141미터, 길이 896미터의 초대형 댐

으로 막겠다는 계획이었죠. 지리산 칠선계곡, 백무동 계곡 초입을 호수로 만들어 버리는 무지막지한 발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소수만이 '문정'의 댐 건설을 반대했지만, 점점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더하며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죠. 1999년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댐 백지화를 위해 댐 건설 예정지 주민들을 만나고 반대 목소리를 수집했어요. 그 이후 지역공동체,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가 함께 지리산댐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은 주민들의 댐 건설 반대 목소리를 지리산 밖으로 꾸준히 전달했어요. 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 연대는 활동에 물심양면 힘을 보탬요. 지리산댐 건설 계획이 일시 중단되었던 2002년,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 연대'의 결합으로 '지리산생명연대'가 탄생했어요.

지난 15년여의 세월 동안, 지리산생명연대를 중심으로 각지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한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 협의회'는 지리산 문화제 등을 통해 댐 건설을 비롯한 각종 지리산권 현안을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죠. 시민사회와 더불어 지역공동체, 학계, 종교계도 각자의 방식으로 지리산 댐 백지화를 위한 목소

리를 냈어요.

지역공동체 : 20년 동안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에 앞장섰던 선시영 지리산댐 백지화함양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지리산댐 건설 계획의 허점을 찾아내고, 스스로 정보를 찾고 공부를 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어요.

학계 :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박현건 교수와 인제대학교의 박재현 교수는 전문성 있는 자료와 분석으로 백지화 운동에 참여했어요. 홍수 피해라고는 전혀 없는 지역에 왜 홍수 조절용 댐을 짓는 것인지 의심했던 주민들은 박현건 교수의 분석을 통해 지리산댐이 남강과 낙동강 유역 전체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어요. 박재현 교수는 수자원공사가 지리산댐 건설 계획의 근거로 삼았던 여러 데이터를 지속해서 감시해왔고, 남강댐 홍수 조절 대책과 부산 및 동부 경남지역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구체화했죠.

종교계 : 1998년 용유담을 예정지로 한 다목적댐에서 천년고찰 실상사까지 수물 범위에 포함하는 바람에 불교계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반대 여론이 형성됐어요. 하지만 실상사가 수물 예정지에서 제외되면서 대중의 관심은 금방 식어갔죠. 여전히 남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고심하던 불교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리산담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화쟁위원회의 이름으로 8차례 중재했어요.

2018년 9월 18일, 지리산 담은 20년 만에 환경부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결국 백지화가 되었어요.

[의미 : 중요한 가치를 되찾아야 할 때] 지리산담 백지화와 함께 담 건설 장기 계획상의 12개 담 계획 모두가 사실상 폐기되었어요. 또한 유역 단위 물 관리 정책 수립, 담 법 개정 등 지리산담 백지화 운동에서 출발하여 제기된 문제들이 가시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죠. 국가를 두려워하던 이들의 소수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힘을 더해 준 시민사회, 소신을 따르는 학자와 선의를 실천한 종교인들에 의해 지리산담 백지화 운동은 가능했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소수의견은 더 많은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해왔고, 다수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꾼 주체가 되었죠.

[참여 : 개발계획이 휩쓸고 간 자리,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한 때] 오랜 세월 국가에 맞서 오면서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안, 주민 공동체는 분열과 갈등, 배제의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오랜 유대의 역사가 끊어지는

동안, 국가는 분열을 부추길 뿐 봉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 국가의 무분별한 개발 속에 다치는 공동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지리산담으로 인해 사라지거나 파괴될 위기에 처했던 지역이 각종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었어요. 이 또한 소중한 것을 20년 동안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뿌리내린 씨앗이라 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지리산담 백지화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⑬]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싸우다

“안일한 환경 의식과 비윤리적인 기업 경영의 증거를 찾아서”

[시작 : '낙동강 페놀사건 기업 불매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1년 3월 14일 밤 10시부터 3월 15일 새벽 6시까지 8시간 동안, 250만 대구 시민들이 페놀 원액 30톤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돗물 페놀오염대책 시민협의회'

는 두산그룹 박영곤 회장과 환경처 장관을 직무 유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어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산전자가 1990년 10월 21일부터 1991년 3월 20일까지 무려 5개월 동안 1일 평균 1.7톤의 폐놀 폐수를 방류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일로 두산전자는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유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20일 만인 4월 9일 조업 재개가 허용되었어요. 하지만 2주 뒤인 4월 22일 두산그룹은 추가로 폐놀을 유출했어요. 유해 물질인 폐놀 방류로 인해 대구 지역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거나 피부질환을 앓았고, 유산까지 겪어야 했어요.

대구시는 '폐놀 농도가 음용수 기준치 이하로, 악취는 나지만 인체에 무해한 수도물'이라며 무해성을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3월 18일 이학노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은 클로로페놀은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며, 환경처 장관 역시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폐놀은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대구 시민 160여만 명이 다양한 폐놀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음에도 관계 기관은 폐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변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요? 1991년 3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YMCA·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해추방운동연합(현 환경운동연합)·녹색의전화·주부클럽 연합회·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은 서울YMCA에 모여 '수돗물 폐놀오염대책 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단체협의회)'를 구성했어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수도로 납부 거부 운동도 함께 진행되었죠.

3월 29일에는 두산빌딩 앞에서 'OB맥주 쏟아버리기 대회'를 하고, 3월 30일에는 파고다공원에서 '폐놀 불법 방류 규탄 및 수돗물 살리기 시민대회'를 열어가 두 행진을 했으며, 현지에 파견된 낙동강 수질오염 실태조사연구팀의 결과도 발표했어요.

시민단체협의회는 4월 30일까지 폐놀 방류로 인한 피해를 접수받았어요. 총 1,617건이나 되는 피해사례의 유형으로는 임산부 664건(유산 255건), 신체적 피해 205건, 물질적 피해 591건, 기타 157건으로 신체적 피해가 53.8%에 달했어요. 이 사건으로 대구지방 환경청 공무원 7명과 두산전자 관계자 6명이 구속되고, 관계 공무원 11명이 징계 조치되는 등 환경 사고로는 유례없는 문책 인사가 뒤따랐어요. 국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고, 두산은 기업의 이익만 앞세워 공공시설인 상수원을 오염시킨 부도덕한

재벌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았어요.

[의미 : 환경문제를 인식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다] 한 기업이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채 독극물인 폐놀을 낙동강에 쏟아부은 이 사건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국민 등 우리 사회 모든 주체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두산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두산그룹이 큰 타격을 입었고,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각인시켜주었죠. 나아가 폐놀사건은 대기업 전반의 산업폐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국민 스스로도 자신이 버리는 생활하수가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끔 했어요.

[참여 : 폐놀 유출은 끝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두산 폐놀 유출 사건 이후로도 2008년 낙동강 유역의 코오롱 유화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폐놀이 유출된 사건, 2013년 강릉 포스코 폐놀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유출 이후 피해 규모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있어 문제 해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불매 운동은 유해 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같이 비윤리적인 경영으로 피해를 입히는

기업들에게 소비자들이 책임을 부과하는 한 가지 방법이죠. 이번 기회에 ‘낙동강 폐놀 기업 불매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⑰] 파란 하늘을 보기 위해,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최고, 바로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작 : ‘대기질 개선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대기오염은 특히 호흡이 어려운 어린이와 노약자, 환경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국민 전체적으로도 호흡기계 환자 수와 폐암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사망 및 각종 질환으로 매년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 1천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와 매년 최대 10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더 이상 대기오염 수준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2001년 환경정의는 ‘Blue Sky 운동’을 시작했어요. 국내 대기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부의 정책만

으로는 대기오염의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환경정의는 더욱 심각해질 도시 및 공단지역의 대기질을 감시하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원료, 유해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검토했어요. 또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관련 기업들의 자체 관리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3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경유차 공대위)'를 구성하고 경유차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어요. 당시 우리나라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은 세계적으로 엄격한 편이었는데 이로 인해 국내 경유차가 생산 중단에 처하게 됐다면서 자동차 회사와 지식경제부가 배출기준을 낮추려 했기 때문이죠.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다] 2004년 7월 1일 버스, 트럭 등 대형 상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었지만, 강화 시기를 2개월 유예하기로 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어요. 이미 3년 6개월 전에 공고되었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해 기한 내에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또 해

당 기준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자동차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어요. 대책위는 이러한 흐름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라는 사실을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죠.

[의미 :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 2011년 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현 한국환경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진 수도권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2005~14년)의 일환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2010년까지 약 58만 대의 경유차가 매연여과 장치를 부착했고, LPG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의 사업으로 기존 $60\mu\text{g}/\text{m}^3$ 중후반대이던 미세먼지 수치가 2010년 말에는 $50\mu\text{g}/\text{m}^3$ 초반대까지 개선되었어요.

[참여 :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과정은 현재 진행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지 올해로 1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경유 승용차와 노후 경유차로 이루어진 어린이 통학 차량이 돌아다니고, 공사과 발전소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죠. 2016년 5월 감사원은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서 2024년까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

경관리 기본계획'의 사업들이 부실하게 계획되고 추진됐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OECD 환경성과평가에 따르면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개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60년 한국의 조기 사망률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와 또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대기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기질 개선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⑱] 대기오염에 더 취약한 어린이,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

“나쁜 공기를 마시는 아이들의 등교 환경을 개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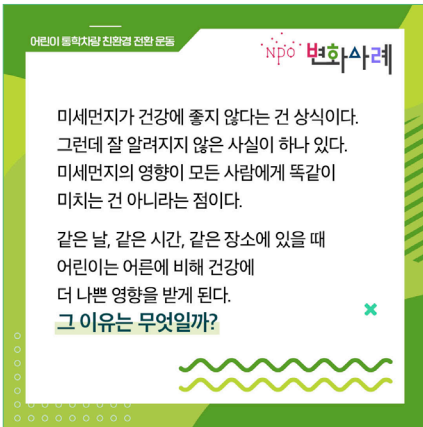
[시작 : '어린이 통학 차량 친환경 전환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도로를 쉴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도시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예요. 오염된 공기는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에게 해롭지만, 특히 어린이에게 더 해로워요. 성인보다 자동차 배출구에 더 가까이 위치해 걷게 되고, 호흡량도 많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들

이마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환경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정의는 2000년대부터 어린이의 활동 반경에서 두드러지는 대기오염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쳤어요.

환경정의는 가장 먼저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도로 인접도와 환경성질환의 연관성 연구를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질 환경 보건 지표를 제안했어요. 2016년에는 실제로 어린이가 미세먼지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 세 군데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대기오염 정도를 직접 측정했죠. 놀랍게도 세 학교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가 에어코리아 기준 '나쁨'(80 $\mu\text{g}/\text{m}^3$)을 훌쩍 넘겨 각각 110.19 $\mu\text{g}/\text{m}^3$, 86.94 $\mu\text{g}/\text{m}^3$, 127 $\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고 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환경정의는 어린이들이 주로 '어린이 통학 버스'를 타고 등교하거나 승용차와 통학 버스가 오가는 통학로를 걸어서 등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2017년 환경정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가 직접 이용하는 통학 차량의 97%가 경유차이고, 이 중 36.5%가 노후 경유차로 나타났죠.

어린이 통학 공간의 미세먼지 노출 문제



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여론에 대응해 2017년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노출 저감 대책을 발표했어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15인승 이하(소형) 노후 경유 차량의 친환경 전환 제도를 마련한 것이죠. 또한 환경부는 하반기 추경예산을 통해 서울시에 800대의 차량 전환 시범 사업을 지원했어요. 2018년에는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 지자체에 총 1,800대를 지원했습니다.

[의미 :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다] 당장 미세먼지 배출 발생원을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어린이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통학로의 통학 차량에 주목하여, 시도할 수 있는 변화를 제안했죠. 장기적으로는 어린이 통학 차량

의 친환경 자동차 사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로의 전환까지 유도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어냈어요.

[참여 : 어린이의 생활 환경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통학로는 어린이가 생활하는 도시 공간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세계적으로 연간 170만 명의 어린이가 환경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는 만큼, 더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통학 차량의 배기가스 관리는 통학로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시작일 뿐이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을 운행하는 통학자, 주택가 밀집 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 등 생활공간 주변을 운행하는 '생활형 차량'의 배기가스 관리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미세먼지는 모든 사람에게 해롭지만, 특히나 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어린이 통학 차량 친환경 전환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⑬] 성대골 주민들의 에너지 전환 실험, 전국으로 확산하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험적인 전환”

[시작 : ‘성대골 에너지 전환 실험’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1년 11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성대골(서울시 동작구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우리 마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워크숍을 열고 ‘절전소’를 기획했어요. 성대골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던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자는 움직임을 시작했죠.

2012년 4월 18일 성대골에는 마을학교가 생겼어요. 창고로 쓰던 공간을 임대했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이 고민이었고, 주민들은 회의를 거쳐 단열 개선사업을 시작했죠.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통해 단열, 조명, 난방 등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단열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요.

이에 마을 주민들은 ‘에너지 절약’을 파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기획하고 2013년 11월 12일 마을기업 ‘마을닷살림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전기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

고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신청을 돕는 등 에너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요.

[경과 : 마을 실험실, 리빙랩을 시작하다] 성대골에서 리빙랩에 대한 고민은 2015년 2월 처음으로 시작되었어요. 성대골 활동가들은 ‘주민(사용자) 주도형 혁신 플랫폼’이라는 리빙랩 개념이 성대골 에너지 활동의 강점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성대골 리빙랩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분야(기술, 금융, 교육·홍보)에서 가설적인 해결방안을 세우고 ‘전환 실험’을 진행했어요.

리빙랩에 참여할 마을 연구원을 모집하기 위해 3~4개월간 주민워크숍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가지기도 했죠. 이 기간 동안 총 7번 열린 주민워크숍에 179명의 주민이 참석했고, 이 중 49명이 마을 연구원을 자원했어요.

첫 번째 전환 실험은 미니 태양광의 기술적 문제를 보완하는 해결책이었어요. 마을 연구원들이 직접 미니 태양광을 조립, 설치해보는 과정을 거치며 사용자 입장에서 기술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죠. 지역 친화형 금융기관인 동작신협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니 태양광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의미 : 마을의 주체로 활동하는 재미를 나누다] 2016년 리빙랩 활동을 통해 주민주도의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어요. 이 과정에서 마을 연구원들이 마을 활동에 재미와 가치를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고, 잠재적 역량을 끌어내기도 했죠. 현장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의견은 성대골 에너지 운동에 매우 소중하고 큰 의미가 있었기에, 마을 연구원들이 지속해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그 덕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태양광 확산, 마을 연구원 지원, 그룹별 활동 확대 등 리빙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되었어요.

[참여 :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리빙랩,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 리빙랩은 현장의 주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집중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지원할 외부 자원을 연결하는 작업이죠.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탐색해 본 후에 리빙랩이 과연 적합한 수단인지 충분한 논의를 먼저 거쳐야 해요. 리빙랩이라는 프로젝트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주민 의견이 성공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주민들이 적극성과 주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도 폭넓게 수용하여 함께 논의하고 실행해야 하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성대골 주민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감으로써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성대골 에너지 전환 실험'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20] 자원 재순환과 나눔 문화, 아름다운가게가 만든 획기적 변화

“다시 쓰고 바꿔 쓰는 과정을 통해 환경과 나눔의 인식을 만들어 나간다”

[시작 : '재사용 나눔가게'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1년 서울 중구 신당동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알뜰가게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알뜰가게는 환경보호와 검소한 생활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재사용 나눔가게예요. 1980년대 저금리 고속 성장은 우리 사회에 풍요를 준 반면, 과소비 문화와 신상품 선호 문화를 낳았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사람이 쓴 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 역시 팽배했죠.

경실련이 재사용 나눔가게의 효시가 되었다면,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 오늘날

의 재사용 나눔가게 모델로 정착시킨 단체는 YMCA예요. 1990년대 초 서울 YMCA가 소비자 참여 운동의 일환으로 재사용 운동을 제안했죠. 1996년 경기도 과천시에 재사용 나눔가게 개설을 시작으로, 1997년부터는 '녹색가게'라는 이름으로 전국 확대를 꾀하기 시작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0년대 들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재사용 가게로 활용하는 등 재사용 운동이 일상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녹색가게 모델을 확산시키고자 2005년에는 YMCA, 환경·시민사회단체, 풀뿌리 지역단체, 복지관,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이 협력하여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아름다운가게'의 도약] 2002년 시작한 아름다운가게는 경실련, YMCA가 열어놓은 장을 기반으로 재사용 나눔가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며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어요. 참여연대 대안사업팀에서 시작한 아름다운가게는 안국역 앞 행상으로 시작해 2002년 1호점을 열게 되었어요. 현재는 전국 16개 도시에 11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있고 해외에도 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름다운가게는 2003년부터 문화지원, 경매, 어린이, 헌책 등의 특화 매장을 개설하여 고객지향적인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갔어요.

같은 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20만 명이 모이는 지상 최대 규모의 베품시장을 만들기도 했죠. 2007년부터는 물품을 새로운 모습으로 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운동의 일환으로 전문 브랜드를 론칭하기도 했어요.

[의미 : 인식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를 이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자신이 쓴 물건을 기증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구입하는 문화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소비 물품을 교환하고 순환시켜 자원의 수명을 연장하는 대안적 생활양식이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고 있죠. 나아가 환경·나눔·공동체 등의 이슈와 결합하면서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시민 활동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참여 : 나눔 문화의 확산은 계속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무려 55톤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나눔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죠. 각자 가지고 있는 물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하게 된다면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또한 기업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친환경 의류업체 파타고니아는 '제품을 사지 말자'는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매장마다 수선 코너를 두어 제품을 고쳐 입도록 권장한 거죠. 재사용

나눔가게의 궁극적 목표가 적절한 생산, 바람직한 소비인 만큼 소비자의 변화 외에도 기업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자원의 수명을 연장하는 생활은 대안적이고 친환경적인 문화로 인식되고 있죠. 이번 기회에 '재사용 나눔가게'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②] 개구리가 죽고 주민들이 두통에 시달리는 마을을 구하라

“반복되는 환경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시작 : ‘환경정의 입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3년 환경정의를 한 시민으로부터 집 주위에 뽀뽀하게 들어선 공장들이 내뿜는 연기와 먼지, 유해 물질들로 인해 너무 괴롭다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제보된 지역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마을로 1990년대까지는 농촌 마을이었는데 이후 150명의 주민이 150개 공

장에 둘러싸여 사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공장 인근의 주민들은 암에 걸리거나, 중금속에 노출되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등 질병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 이익 때문에 혹은 거대 권력에 의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기거나 불합리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불평등한 일이에요. 김포 거물대리의 사례는 정부와 경제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주민들이 거주 환경은 물론 건강까지 빼앗길 위험에 놓인, ‘환경 부정’ 그 자체였죠. 환경정의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크숍과 토론회를 열고, 김포시청, 김포시의회와 함께 지역문제를 논의하는 ‘민관공동대책위’를 구성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환경정의를 환경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심각함을 외부에 알렸어요. 그러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그사이 김포 거물대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전국 곳곳에 늘어만 가게 되었죠.

참담한 현실이 이어지던 차에 2015년 유엔 특별보고관이 유해 물질 및 폐기물 피해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러 한국에 방문했어요. 환경정의를 바쉬쿠트 툰작 보고관의 김포 거물대리 방문을 추진했고, 그는 거물대리 문제에 심각한 유

감을 표하며, 주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듬해 201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환경성과 평가를 받아야 했어요.

[환경정의 개념 최초 현행법 반영되다]

2017년 9월, OECD 권고사항과 환경정의가 그간 발표해온 제안 내용을 반영한 환경정의 5법('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이 발의됐어요. 이 법들은 환경정의 개념을 명시하고 해당 개념을 환경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서형수 의원실이 협력해 추진했어요. 2018년 12월, 환경정의 5법 중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현행법에 반영된 거죠. 2019년 8월에는 국토 관리 원칙에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한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의미 : 환경정의를 명시한 법이 생기다]

현행법에 첫 번째로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참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가 명시되어 있어요. 환경 부정의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했

다면 적절한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거죠.

[참여 : 앞으로도 통과될 법들이 남아 있다]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면, 환경 부정의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아요. 김포 거물대리 문제 역시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환경정의 5법 중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3개나 있어요. 환경정의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권리이죠. 이번 기회에 '환경정의 입법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②] 안방에서 벌어진 비극, 기업의 잘못은 어떻게 밝혀졌나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문제를 제기하다”

[시작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공식화'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가습기살균제는 정부의 안전 관리 항목에서 일반 공산품

으로 분류되어 누구라도 만들어 팔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제품을 사는 누구도 제품 개발 단계에서 노출 안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지 못했죠. 2011년 7명의 산모가 한꺼번에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이중 절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슴기살균제 참사는 수면 위로 공식화되었어요.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도 정부는 피해 사례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았고, 분노한 피해자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요구했죠. 2017년 12월 8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는 5,941명이었는데 이중 무려 21.6%인 1,284명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2016년 환경부가 전문가에 의뢰해 진행한 정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품을 사용한 인구가 350만 명~400만 명 정도로 실제 피해자 규모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돼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11년 8월 31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출발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폐 질환을 환경에 의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며 “가슴기살균제품과 유사제품명을 공개하고 제품 회수조치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긴급성명서를 냈어요.

이후 계속해서 피해 신고자를 찾아내고 2016년 6월 20일에는 더 많은 시민단체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단체 함께 등이 연대하는 ‘가슴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꾸렸어요.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대규모 불매운동을 추진했어요. 2016년 4월 25일 ‘최악의 가해 기업 옥시 상품 불매 선언’을 시작으로 ‘가슴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로 조직된 소비자단체와 환경운동단체 등 수백 개의 단체가 소비자 운동에 참여했죠.

[의미 : 기업의 사과와 진상규명] 가슴기살균제 참사 피해를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결국 기업들의 사과와 제품 판매 중단을 끌어냈어요. 2015년 이후 환경보건센터는 옥시 영국 본사 항의 방문 등을 통해 가슴기살균제 기업 처벌을 요구해 나갔어요.

해당 기업에 투자한 국민연금에 책임을 묻고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지속했고, 2017년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가슴기 살균제와 416세월호 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 대책 마련, 재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만들어냈죠.

[참여 : 참사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0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가슴기살균제 피해 사망자는 1,577명, 건강피해자는 49~56만 명 정도에 이르러요.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9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기업 처벌과 피해 보상 과정 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2020년 9월 15일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가슴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제품 하자가 아닌 기업의 과실이자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정부 기관의 문제로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받았고, 생존자들은 평생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며 삶을 견뎌야 했죠. 이번 기회에 ‘가슴기살균제 참사 피해 공식화’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23] 죽거나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 황유미의 죽음이 남긴 씨앗

“노동자가 위험을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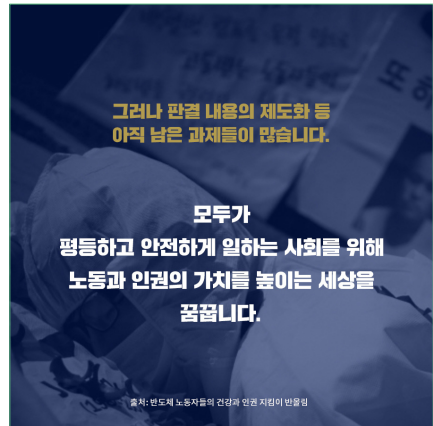
[시작 : ‘반도체 직업병 산재 인정’에 대해 알고 있나요?] 故 황유미 씨는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원판 재료인 웨이퍼를 화학약품에 담갔다 빼는 작업을 진행하다 백혈병을 얻게 됐어요. 골수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백혈병이 재발했고 5,000만 원의 산재 처리를 요청했으나 끝끝내 500만 원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후 황유미 씨는 2007년 3월 6일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아버지의 택시 뒷좌석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죠. 2인 1조로 함께 일했던 故 이숙영 씨도 같은 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2007년 11월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황상기 아버님의 노력으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이하 반올림)’가 결성되었어요.

직업병을 인정받는 건 쉽지 않았어요. 반도체 전자산업의 유해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고, 현 제도에서는 직업병 인과 관계를 피해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기업과 정부는 ‘영업 비밀’을 핑계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죠. 반올림을 비롯해 산재 인정을 요

구하는 연대 단체의 부당한 요구로 첫 산재 신청 후 7년 뒤인 2014년 여름, 故 황유미 씨는 직업병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게 되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직업병 인정을 위해 학자, 의사,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 노력과 활동가 및 시민들의 연대가 시작되었어요. 故 황유미 씨의 죽음을 진상 규명하기 위한 대책위로 출발한 반올림은 2008년 첫 집단산재 신청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7일까지 150명에 대한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죠. 2017년 12월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은 질병은 10가지에 이르러요. 백혈병 외에도 재생불량성 빈혈, 비호지킨 림프종, 유방암, 뇌종양, 폐암, 난소암, 불임, 다발성 신경병증, 다발성 경화증 같은 질병들이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2017년 대법원은 직업병을 인정하며,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했어요. 희소 질환이라서 혹은 첨단산업의 특성 때문에 연구가 충분치 않아 질병과 작업환경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곤란할 때, 이를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죠. 특정 사업장이나 특정 산업에서 발병률이 높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실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고, 노출 기준 이하에서도 질병을 일으킬 가능



성과 복합 노출에 의한 상승작용의 가능성도 인정했죠.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가 독립적인 보상 체계를 갖추고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게끔 하는 변화도 끌어냈어요.

[의미 : 대법원에서 직업병 인정을 끌어내다] 대법원 판결은 사례 깊은 법리 적용을 통해 산재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도록 강조했어요. 산재 위험을 노동자 일방이 아닌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기반을 만들어낸 거죠. 기업의 협조 거부나 정부의 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지연이 있을 때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산재 신청 과정 전반에서 알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고려했어요.

[참여 : 책임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삼성이 변화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습니다. 2014년 영화 <또 하나의 약속>과 <탐

육의 제국> 개봉을 앞두고 삼성의 제안으로 반올림과 삼성의 대화가 진행되어요. 삼성은 전체 피해 가족이 아닌 “교섭단에 포함된 가족들의 보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자”라고 했고 이에 동의한 피해 가족 일부가 반올림과 분리하여 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 가족들이 분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2015년 7월 “삼성엔 천억 원 기금을 조성하여 독립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보상과 예방을 실시하라”는 조정권고안이 나왔지만, 삼성은 자의적으로 선별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비밀 유지 조건을 내걸고 자체 보상을 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피해를 본 노동자가 산재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꿔나가는 것, 또 노동자가 위험을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이번 기회에 ‘반도체 직업병 산재 인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24] 커피 한 잔 여유의 대가, 쓰레기 대란의 주범 1회용 컵

“한 해에 쓰이는 1회용 컵이 무려 294억 개에 달한다”

**[시작 :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알고
있나요?]** 1회용 컵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환경부는 39개 브랜드, 3,500여 개의 패스트푸드점 및 커피전문점과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어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한 뒤 반납 시 보증금을 환불하는 제도예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1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고, 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으로 1회용 컵 한 개에 50-100원의 보증금을 반환했고, 이후 1회용 종이컵 환불률은 23.8%(2003년), 31.6%(2004년), 33.6%(2005년), 38.9%(2006년)로 매년 2~5% 포인트 증가했어요. 그러나 업주의 미 환불금 사용 용도의 부당성 논란, 자발적 협약의 법적 근거 논란 등이 계속되다가 결국 2008년 3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폐지됐어요. 게다가 2008년 6월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이컵이 일회용품에서 제외되었어요. 이에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가 완화되고, 종

이컵 사용량 역시 크게 늘어났어요. 종이 컵은 지금까지 1회용품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1회용 컵 사용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1회용 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어요. 2017년 환경단체들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 및 컵 소재 단일화 요구' 서명을 진행하고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담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어요. 2019년에는 시민들과 함께 직접 거리에서 버려진 1회용 컵을 줍는 활동 '컵줍깅 캠페인'을 하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왜 필요한지 알리기도 했어요. '컵 보증금제 부활 긴급 48시간 온라인 액션' 등 온라인 행동도 진행했어요.

2020년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녹색연합을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고 심의될 때마다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성명과 기자회견,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어요. 이 개정안의 통과로 2022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드디어 도입돼요.

[의미 :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기존 보증금 제도

에서 문제로 지적된 보증금의 투명한 집행과 낮은 수거율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었어요. 먼저 수거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 용기를 지정하도록 했어요.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가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등에 관한 업무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어요. 보증금 등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등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되었어요.

[참여 :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요]

개정안은 통과되었지만, 아직 여러 과제가 남아 있어요. 연간 1회용 컵 사용량은 294억 개에 달하는데 보증금제의 적용을 받는 컵은 84억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전문점 등 가맹사업자들이 표준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자원순환 정책은 다시 기로에 서있어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일부 지자체들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고, 카페에서는 일시적으로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중단했고,

1회용 포장재의 부과금을 일시 중단한 곳도 있어요. 플라스틱 제조사들은 아예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되돌리기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대요. 전 세계가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상황에 처해있어 중단되었던 1회용 컵 사용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되돌아왔어요.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전히 숙제로 남았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환경단체들과 시민의 힘으로 2022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부활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1회용 컵 보증금제'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②5] 화장품 때문에 아픈 바다, 일상 속 미세플라스틱을 줄이자

“우리는 매일 아침 미세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

[시작 :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없애



일러스트: 오지현(오지꾸요)

[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치약, 클렌징, 바디워시 등 이 화장품에 들어있는 작은 알갱이의 정체는 바로 미세플라스틱이에요.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은 크기는 작지만 양은 절대 작지 않아요. 클렌징 제품 한 개에 미세플라스틱이 약 350,000개 포함되어 있는데 1L짜리 페트병 무려 28개를 바다에 버리는 양과 같다고 해요.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은 탓에 하수 정화 장치를 유유히 통과해 바다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간 미세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한 동물들은 물리적인 상처와 장폐색, 산화 스트레스, 섭식 행동 장애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켜 결국 고통 속에 죽게 돼요.

[미세플라스틱 너는 누구니?] 0.001~5mm 크기의 깨알 같은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 미세플라스틱은 처음 제작 당시 크기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생산

단계부터 작게 제조된 1차 미세플라스틱, 큰 플라스틱이었지만 풍화작용을 거쳐 작게 부서진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나뉘지요.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은 이 중 1차 미세플라스틱에 속합니다. 씻어내는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의 정확한 이름은 마이크로 비즈(Microbead)로 직경이 5mm 이하인 고체 가공 플라스틱 입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이해를 돕기 위해 명칭을 미세플라스틱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2016년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5개의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여 무작위로 10개의 제품을 골라, 각 제품의 전 성분 표시를 보고 플라스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아봤어요. 조사 결과 총 40개의 제품 중 26개의 제품에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 14개 중 3개는 확인 불가했어요. 그리고 UNEP(유엔환경계획)에서 발표한 미세플라스틱 의심 성분 21종을 참고하여 씻어내는 화장품 속에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도 조사했어요. 327개의 제품을 브랜드와 종류별로 나누어 전 성분표시를 확인하고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발견되면 각 회사에 연락하고, 대한화장품협회에 의뢰해 얻은 결과를 캠페인 페이지에 공개했어요.

기업에 미세플라스틱 금지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규제가 필요했어요.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을 촉구하기 위해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30차레 이상 미세플라스틱 교실을 열고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 서명도 진행했구요.

[의미 : 씻어내는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퇴출] 2015년부터 시작된 미세플라스틱 캠페인 'Face to Fish 캠페인'이 드디어 좋은 결실을 낳았어요. 2017년 7월부터 씻어내는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2018년부터는 판매 행위도 모두 중단되었어요. 이는 미국이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 화장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이 관련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보다 한발 앞선 조치라고 하네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그런데 화장품 앞에 '씻어내는' 수식어가 따라 붙은 이유가 있어요. 아직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2015년 대한화장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96% 이상의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습니다. 기초화장품, 마스크라와 펄 등 색조 화장품에 말이죠.

화장품법 개정은 큰 승리지만, 여전히 많

은 미세플라스틱이 일반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어요. 더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의심 성분이 든 제품 목록을 파악하고,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 목록을 공개하려고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2016년 ‘씻어내는 용도’의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법적 규제를 이루어냈어요. 씻어내는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을 금지한 경험으로 이제 모든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을 친환경으로 대체, 의도적으로 넣은 미세플라스틱을 금지할 때까지 활동을 이어 나가려고 해요. 이번 기회에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없애기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②6]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좋은 길. 속도를 줄여주세요, 생태계를 위해

“도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동안 다니던 길이 아니다”

[시작 : ‘굿로드(Good Road) 캠페인’에 대해 알고 있나요?]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핵심 생태축이에요. 그런데 도로

는 생태축을 단절하여 야생동물이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로드킬(동물 교통사고 사망)’의 위협에 처하게 만드어요. 우리나라는 면적에 비해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야생동물의 행동반경을 고려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도로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연간 우리나라 도로에서 고라니 6만 마리, 고양이 10만 마리 등 200만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한다고 해요. 이제 야생동물의 천적은 도로와 자동차가 되었어요.

녹색연합은 백두대간 보전 활동,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서 이러한 생태축 단절의 문제를 꾸준히 모니터링했고,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도로 중복건설에 대한 문제 제기와 도로로 인한 생태계 단절, 로드킬의 문제점을 알려왔어요. 2015년부터는 섬진강 유역 두꺼비 로드킬에 대응해왔고 서울 인근의 남한산성과 한강 일대, 검단산을 잇는 도로를 중심으로 로드킬 사고 모니터링을 진행했어요. 2016년도에는 남한산성 일대의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남한산성면과의 업무협약을 맺어 ‘로드킬 없는 남한산성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녹색연합은 남한산성면 일대에서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이 지역을 로드킬 제로 구간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

굿로드 캠페인은 누가 진행했을까요?

시작

로드킬 현황

2016.6: 녹색연합 남한산성 내 국도
모니터링 15회, 24마리
대부분의 로드킬 사체 훼손 심각

모순! 생명으로서의 삶에 대한 허탈함
공존! 생명으로서 살아 있다는 안도감

도로건설로 단절되는 생태계

- 우리나라는 국도 면적 대비 도로비율 높음
- 연간 200만 마리 이상 야생동물 로드킬
- 도로·자동차 = 야생동물의 천적

녹색연합

- 도로중복건설 문제 제기
- 생태계 단절, 로드킬 문제점 알림
- 2015: 로드킬 저감운동 기획, 로드킬 사고 모니터링
- 2016: '로드킬 없는 남한산성 만들기' 캠페인 시작

성과

속도를 줄여주세요

· 유네스코 문화유산 남한산성
자연과 동물을 지키는
지역 만들기

· 남한산성 명사무소 딱독한관심
↳ '로드킬 제로구간' 업무협약서

· 2017.4: 표지판 설치
'로드킬 다발구간'

쉽게 기록할 수 있었어

남한산성 명사무소 환경미화원
(50~60대) 굿로드 활용 시작

로드킬 사고 기록 사용이 쉬워 민중

- 축적된 데이터 분석
- 지역에 맞는 대책 세우기
- 단계적 정책 제안 계획 수립

성과

굿로드 신고 서비스

· 2017년 기준 고속도로 4%,
국도 14%만 로드킬 집계

· 로드킬 사고 데이터
필요성 인지

· 소액이노베이션 캠프 3회
참가 '굿로드' 개발
→ 6개월 후 서비스 오픈

함께 손잡다

· 환경부: 굿로드 활용,
로드킬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

· 녹색연합-환경부 협력,
굿로드 앱 시스템 변경

· 2018.5: 환경부-국토부
'동물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 시행'

· 국토부: 로드킬 데이터 수집
· 국립생태원: 사체처리, 자료분석
→ 다발구간 선정

현황·과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좋은 길

· 시민으로부터 시작된 활동
→ 정부기관의 협의체 조직
→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임

· 국립생태원: 다발 1-5등급 507구간 선정
· 유도물타리, LED표지판, 과속카메라 설치

· 시민사회의 캠페인 진행 여성

꾸준한 협력

· 환경부 + 국토부
매년 공동대책 수립

· 시민사회의 후원·참여

· 지자체의 협력

· 정부기관의 의지

그래픽 서머리: 정진호

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남한산성면의 동네 주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마침내 2017년 4월 12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43번 도로에 '로드킬 다발구간' 문구가 적힌 로드킬 저감 표지판이 설치되었어요. 15회 모니터링에서 4마리 사체가 발견된 곳이었어요. 물론 표지판 하나로 로드킬 사고가 현저히 줄 수는 없지만,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로드킬 저감 활동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어요.

[굿로드 신고 서비스와 캠페인] 로드킬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로드킬이

빈번한 곳의 생태 특성을 이해하고, 어떤 종들이 주로 사고를 당하는지 파악해야 해요. 그런데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고속도로의 4%, 국도의 14% 정도만 로드킬이 집계되고 있었고 지방도나 시·군·도에서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에 녹색연합은 전국의 로드킬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로드킬 신고 지도 서비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이 아이디어는 이후 '굿로드 서비스'로 이어졌어요. '굿로드'는 앱으로 로드킬 사고를 촬영·기록하면, 사진과 위치가 온라인 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되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의미 : 국토부, 환경부, 국립생태원, 녹색연합이 손잡다] 2018년 5월 28일부터 환경부와 국토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사고를 저감하고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잡고 ‘동물 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시행했어요. 국토부는 산하 도로 관리기관의 도로 조사원이 ‘굿로드’ 앱을 이용해 로드킬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물 찾길사고(로드킬) 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지침을 시행했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국립생태원은 야생동물의 종류와 활용 가능성 등을 판별하여 사체 폐기 및 이관 절차를 밟고, 자료를 분석하고 정밀조사하여 다발구간을 선정하도록 협의했어요. 민관이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한 최초의 순간이었어요. 이후 녹색연합, 환경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 경찰청은 함께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좋은 길, 굿로드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참여 : 함께 바뀌 나가야 할 것들] 녹색연합이 계획했던 로드킬 저감 활동이 정부를 통해 안착되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어요. ‘동물 찾길사고(로드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도에 수집된 로드킬 건수는 21,397건이에요. 아직 모든 도로 조사원들이 앱을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기에 로드킬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국립생태원은 수집된 21,397건을 통해 다

발 1~5등급의 국도 50구간을 선정했어요. 각 구간에 맞는 저감 대책으로 유도 울타리 설치, LED 동물 찾길 사고 주의 표지판 설치, 구간·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앞으로 환경부와 국토부는 매년 공동대책을 수립하며 시민사회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꾸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참여, 지자체의 협력 그리고 정부 기관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길을 건너는 동물도, 길을 이용하는 당신도 모두 안전한 도로가 되길 바라며 ‘굿로드 캠페인’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27]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모두와 나눌 수 있도록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시작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행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6년에 한 신문에 서울 대모산 자연공원 내 일부 토지의 소유주가 자기 소유의 땅에 대한 시민들의 출입과 이용을 금지해 파문이 일고 있다

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어요. 이 소유주는 대모산공원 부지 70만 평 중 27만 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와 강남구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자신의 토지를 장기간 매수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97년도에 승소해요. 1999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매입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언을 내렸어요.

이에 2000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후 20년 이상 시설을 조성하지 않으면(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날부터 지정 내용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이 생겨요. 이 규정으로 인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토지를 지정해놓고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입하지 않거나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어요. '도시공원일몰제'는 이처럼 유예기간 동안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일제히 사라지게 한 제도를 일컫는 말이에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2013년 생명의숲은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 방안 연구'에 이

어, 2014년 '도시공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 인식조사 및 역할 연구'를 진행했고, 이 연구 결과는 도시공원일몰제를 위한 조직 구성, 시민사회 요구, 캠페인 등 활동에 발판이 되었어요. 2017년에는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전국의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 수립을 요구하며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을 발족했어요.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총리실 시민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국공유지 실효의 원칙적 10년 유예 정책, 지자체 지방채 발행 시 이자 지원 70%로 상향 조정, 220억 원의 예산 편성이라는 변화를 끌어 냈어요.

[도시공원일몰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행동] 전국시민행동은 국회에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예외 없는 영구 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50% 및 상속세 80% 감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매입비 50% 국고지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 상환기간 20년 연장 ▲중앙정부의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환경 에너지세 개편 ▲종합적인 입법 및 예산 수립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일몰 시점 3년 유예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하도록 요청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국공유지 1회에 한

해 10년 유예하되 국공유지라도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만을 의결했어요. 이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됐고요.

[의미 : 도시공원일몰제가 울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2020년 6월 29일, 서울시는 “한 평의 공원 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 투자와 도시 계획적 관리 방안을 총동원했다”는 발표를 해요. 생명의숲에서 도시공원일몰 대응 활동을 시작한 지 7년, 전국행동 3년 만이었어요. 도시공원일몰제를 막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국공유지 10년 유예와 서울시의 “한 평의 공원도 해제되지 않는다”는 발표로 결실을 보았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2020년 7월 1일이 지났다고 도시공원 해제 위기가 끝난 건 아니에요. 2025년까지 추가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164km²에 달하며, 해제 시일에서 10년 유예된 국공유지도 현행대로라면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는 해제될 거예요. 도시공원, 숲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입법 사항이 상정되도록 국회에 요구해야 해요. 그리고 도시공원, 숲이 훼손되지 않고 시민들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이어가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2020년 7월 1일이 지나도 도시공원이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가 변한 것은 없어요.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도시공원으로 지켜졌던 숲은 난개발의 위협 앞에 서고, ‘출입 금지’ 표지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일시에 수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도시공원이 처한 상황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환경 28] 위기에 빠진 한남공원, 시민의 참여로 지켜냈다

“도시공원일몰제의 위기를 이겨내고 주민들이 지켜낸 한남공원”

[시작 : ‘한남공원 터 지키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40년, 조선총독부는 한남공원을 고시 제208호를 통해 도시 계획적 관리공원으로 지정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리공원 중 하나였죠. 하지만 당시 함께 지정되었던 삼청공원이나 효창공원, 인왕공원 등의 공원들은 이미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한남공원은 지정 80년이 지나도록 방치 상태에 머물렀어요.

왜일까요? 바로 용산에 주둔 중인 주한 미군 때문이었는데요, 한남공원 부지는 처음 공원으로 지정될 때부터 일제의 기마부대가 주둔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 광활한 평지에는 해방 이후 미군의 미사일 부대가 들어섰고, 이후 긴 시간 동안 미군부대의 부대시설로 전략하고 말아요. 공원용지 지정 뒤 20년이 지나도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그렇게 한남공원은 사라지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경과 : 목마른 주민들이 직접 우물을 팠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남근린공원 터의 절반은 민간으로 소유권이 옮겨가고 급 주택으로 개발됐고, 나머지 절반은 2014년 1,200억 원에 부영주택으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게다가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그곳이 공원 터라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았죠. 부지 매입비는 3천억 원이 넘어서 서울시나 용산구 모두 난처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남동 주민과 용산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을 결성합니다. 그들은 이곳에 공원 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부터 시작했어요.

시민모임은 거리 캠페인뿐만 아니라 토

론회, 문화제 등을 열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물론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을 찾아가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들은 용산구청과 구의회, 서울시청, 서울시의회를 찾아가 공원 실시계획을 인가해 시간을 벌어서 재원 마련 방법을 찾자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2020년 4월 23일, 서울시보 제3580호를 통해 한남근린공원의 공원을 서울시 주도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고가 올라왔어요. 같은 해 6월,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확정하면서, 공원일몰제로 인해 한남공원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비로소 한남공원을 지킬 수 있었어요. 시민모임의 적극적인 활동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미 : 주민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 낸 변화]

"구가 돈이 없으면 우리가 내겠다!" 한남공원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한 주민 참석자가 했던 말이라고 해요.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용산구가 50%를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그 돈이 무려 1,900억 원이었어요. 물론 오롯이 주민들의 힘으로만 그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한 말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용산 주민들은 이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인 건지도 몰라요. 토박이도 모르

던 공원의 존재가 알려지고 나자 그만큼 애정을 갖고 문제해결에 참여한 거예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기로 확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여요. 해당 부지에 공원을 짓기 위해서는 땅 주인인 부영주택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하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책정된 토지보상가는 46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결국 토지매입비를 용산구와 분담하는 대신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서울시의 고민이 커 보여요. 게다가 부영 측은 그 자리에 고급 주택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원 조성계획이 발표되자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서울시에 소송을 걸었어요. 이 법적 공방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도시공원 일몰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무책임하게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공원을 시민의 품에 돌아오게 하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남공원 터 지키기 운동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공유재가 되어야 할 공원 부지가 특정 집단을 위한 사유재산이 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래서 그 공원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상상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과 시민모임의 활약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 29] 월성1호기를 둘러싼 긴 싸움, 탈원전 운동은 아직 진행형

“2017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끌어내다”

[시작 : ‘탈원전(탈핵)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핵발전소가 대부분 폐쇄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2017년 6월에 고리1호기, 2019년 12월에 월성1호기 단 2기만이 영구 정지되어 폐쇄 과정에 들어갔어요. 여전히 한국에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4기가 건설 중이에요. 지금 정부가 세운 탈원전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80년대가 되어야 한국은 핵발전소 제로 시점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폐쇄에 들어간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해 30년 수명을 마쳤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2월에 수명연장을 허가했어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최신 기술기준 대신 30년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장치 보강 없이 심사가 진행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고요. 실제 월성1호기를 한국에 수출한 캐나다는 수명연장 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 설비 등을 보장하거나 평가해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이 외에도 허가 절차상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해 왔어요.

[경과 : 월성1호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1심 승리와 계속되는 싸움] 소송은 1심에만 20여 개월이 걸렸어요. 12번의 변론 기일은 긴 싸움이었고요. 2017년 2월 7일, 마침내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 변경 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 변경 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들었어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은 원고로 참여한 2,166명의 시민과 지역주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증인 신문과 자문에 함께 한 전문가들, 소송을 대리하며 이끈 변호사들이 있어 가능했어요. 무엇보다 안전과 절차를 무시한 핵발전소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어요. 시민들과 대리인단은 다시 길고 긴 싸움을 시작해야 했어요.

[의미 : 월성 1호기 완전히 멈추다] 1심보다 길어진 3년여 시간 동안 2심이 진행됐어요.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시점보다 조기에 폐쇄해 대선공약을 지키겠다고 발표했어요. 이후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하고,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승인했어요. 이에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항소심을 기각했구요. 그 바람에 재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월성1호기 폐쇄가 결정됐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일부 찬핵 입장의 정당과 원자력 학계, 보수

언론 등은 멀쩡한 핵발전소의 문을 닫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압력관 등 설비를 최신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차로 치면 새 차나 다름없다는 것이예요.

하지만 이들은 안전의 문제나 둘 곳조차 없어 포화상태로 쌓여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원장이 폐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결정의 의미를 무시한 채 안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감사 과정에서 제기되기도 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월성1호기가 문을 닫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월성1호기 소송을 통해 우리는 배운 게 있어요.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정책 결정은 반드시 바로 잡힌다는 것어요. 이번 기회에 ‘탈원전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③0] 모두가 다 함께 책임진다, 핵폐기물 위험 없는 세상을 위해

“유독한 핵폐기물을 길이길이 남긴 무책임한 시대로 기록되지 않도록”

[시작 : ‘탈핵(탈원전)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8년 처음 가동을 시작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운전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2017년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후 2019년에는 월성 1호기도 운전을 멈추기로 결정됐는데, 이후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핵발전소 폐쇄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어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자연 재난과 핵발전소를 둘러싼 각종 비리나 고장 사고들을 고려하면 노후한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핵발전소만큼이나 심각한 핵폐기물 문제가 있어요.

핵폐기장과 핵폐기물의 문제가 부각되고 이것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게 된 시점은 80년대 후반부터예요. 정부의 일방적인 처분장 설립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하면 정부는 계획을 철회하고, 또 어디선가는 정부가 폐기장을 건설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2004년에는 부안군민들이 민간 주도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투표율과 반대율을 통해 핵폐기장 유치를 백지화시키는 등 새로운 민주주의 방식을 실험해나

가기도 했어요.

[경과 : 잘못된 공론화 과정을 바로 잡기 위해] 소위 '부안 사태'는 종결되었지만,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었어요.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차기 정권으로 떠넘기기에 바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2013년 시민들과 공론화하여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출범했지만, 핵발전소로 고통받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고, 그렇게 핵발전소 계속 가동을 전제로 한 졸속 권고안만 덩그러니 남게 됐어요. 탈핵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위가 최초의 케이스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으면서도 잘못된 공론화가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임을 지적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어요. 실제로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과제로 포함되기도 했죠. 하지만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약속과는 달리, 건설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며 시민들에게 결정을 미루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탈핵시민사회는 지역주민, 원자력계, 갈등관리 전문

가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2018년 5월 출범시켰어요. 준비단은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미 : 정책 결정 시스템으로서의 공론화]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자는 탈핵시민사회의 요구로 인해 '공론화'라는 형식의 정책 결정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는 탈핵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일부 정책결정권자와 전문가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사회가 지속해서 요구하고 싸워온 결실인 셈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도 분명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결국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면서 탈핵 사회로 나아가겠다고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사실상 산산조각이 났어요. 고준위 핵폐기물의 재검토를 통해 책임 있는 관리정책을 만들겠다고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서 책임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는 지역주민들과 탈핵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아요. 핵쓰레기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시급한 문

제임을 인식하는 게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문제에 있어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어요. 이 가치를 위한 결정은 누구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해온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는 셈이죠.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이제 쉬운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고작 몇 개월간의 숙의 과정으로 쉽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깨닫게 된 것이죠.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 추진이 반복된다면,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직접행동으로 맞서 보일 거예요.

[환경 ③] 수원시민이 움직였다, 물고기가 보낸 위험신호 때문에

“죽은 물고기가 시민의 알 권리로 돌아왔다”

[시작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물고기 집단 폐사’라고 검색하면, 전국 각지에서 집단으로 물고기가 죽는 사고에 대한 보도를

접할 수 있어요. 그만큼 집단폐사는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원인은 보통 집중호우로 인해 도시를 뒤덮고 있는 먼지와 독성물질들이 섞인 빗물이 모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래요. 물론 비오는 틈을 타서 폐수를 몰래 버리는 암체 업체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고는 성격이 좀 달랐어요. 원천리천은 삼성전자 본사와 연구 단지에 바로 접해 있었는데, 중수도 처리 시설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던 기간에 소독 중이던 독성 폐수 30여 톤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포름(마취제) 등의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어요. 수원시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설치공사 업체의 실수였다면서 삼성을 제외한 하청업체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합니다. 그러나 수원시 시민·환경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철저한 원인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대책을 수원시에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형사고발하기에 이릅니다.

[경과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대책위는 포괄적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경위에 나타난 많은 오류의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후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의 책임과 사고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민관대책단을 구성해요. 대책단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하천오염 사고 대응매뉴얼과 화학사고 대응 조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냅니다. 2015년 1월 새롭게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과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조례를 기반으로 조례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민관대책단은 화학물질 알 권리 실현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화학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드는 데에 집중했어요. 이를 위해 민관거버넌스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016년 3월 21일,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 알권리 조례'가 수원시의 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의미 : 안전한 도시를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건 누구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민사회의 리더십, 행정의 전환적 자세, 전문가들의 협동과정이 모여서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대책단은 보여줬어요. 주요 내용들을 법률과 지방조례에 명

시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담당자와 예산을 배치하는 등의 전 과정을 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의 주요 골자입니다.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대책단은 많은 변화를 끌어냈지만, 정작 법적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창기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어요. 삼성전자는 사고 현장 조사를 거부했고, 감리사와 시공사 담당자 인터뷰도 거절당했다고 해요. 당연히 초기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죠. 대책단이 최종적으로 남긴 것은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건강하고 민주적인 지역사회의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해요. 특히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수준과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사고가 안 일어나게 예방하는 게 최선이지만, 더욱 중요한 건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원천리천 사고는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대책을 세우면서 사고의 성격을 '화학사고'로 합의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사례로 남았어요. 결국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여 알리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정치의 역할이 아닐까요?

[환경 ③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을 확실히 줄인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식품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시작 :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 캠페인’에 대해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모든 식품은 생산, 유통,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지구촌 전체로 보면 생산된 식품의 1/3이 버려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할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국가인 셈입니다.

‘소비자기후행동(소기행)’은 이처럼 엄청나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와 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소비기한 표시제(use-by date)’에 주목했어요. 소비기한을 표기하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언제까지 소비할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폐기되는 음식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한 것입니다.

[경과 : 유통기한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꿔라] 2020년 7월 강병원의원이 대표 발의(‘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했으나 국회 계류 중인 ‘소비기한 표시제’를 입법화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앵그리푸드 캠페인’은 유통기한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활동이었어요. 5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소비기한 표시제에 지지와 응원을 표현했고, 이렇게 형성된 여론은 소비자의 의지를 입법 기관에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소기행은 식약처 간담회에 참여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이 소비자 관점의 표기법이며, 2050년 탄소 중립 실현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시기가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임을 피력했어요. 또, 실질적으로 입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소비기한 표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앵그리푸드 캠페인을 제안하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의미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 소기행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화, 팩스, 이메일 보

내기 등 전국 긴급 행동을 진행하고 보건 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하루 앞둔 6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결과 2021년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1년 7월 23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설계해야 하며 소기행은 이 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예정입니다. 우유는 8년의 유통기간을 두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예 품목이 더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가 감독해 나갈 거예요.

관련 업체들은 냉장 유통 시스템을 정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식약처는 행정 주체로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1985년부터 적용해온 유통기한 제도인 만큼,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대체되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정부가 소비 인식개선 및 올바른 식습관 지원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해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소수의 사람이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보다 완벽하

지 않아도 다수의 사람이 함께 실천하는 것이 변화의 지름길이라는 것.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 캠페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위기의 시대를 사는 소비자들의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이 캠페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의제를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을 확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부터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을 78억 인구가 한다면 우리의 윤택한 삶은 지속가능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미래가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환경 33] 공공급식 앞에서 좌절하는 채식인, 채식선택권을 권리의 문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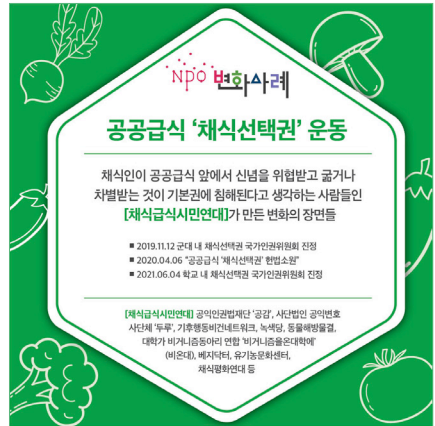
**“오늘 점심 메뉴는 맨밥에 간장, 청포도
한 줌. 채식인에게 이것은 일상입니다”**

[시작 :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확보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밥상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삶을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신념에 의해 먹지 않기로 다짐하여 더 이상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매 끼니 식판에 놓인다면? 그렇게 차려진 급식을 먹지 않았을 때 불편한 시선과 폭언을 듣게 된다면 그 일상은 권

창을까요? 이에, 채식인이 공공급식 앞에서 신념을 위협받고 굶거나 차별받는 것이 기본권에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육식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지향하는 움직임을 공공급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공공의 영역을 정의롭게 간섭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닐까요? 그렇게 녹색당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경과 : 채식선택권은 생존의 문제다]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준비 모임>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였어요. 수많은 채식인 장병들이 군대 급식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죠.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채식인들은 사실상 육식을 강요당하는 군대에서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고 해요. 2019년 11월 12일,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준비모임은 입대를 앞둔 '비건(고기는 물론 유제품과 알 등의 동물성 식품을 모두 배제하는 채식의 유형) 채식인'들과 함께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어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권위 진정에는 "'채식선택권'이 없는 군대 내 식단이 채식주의자에게 양심과 신념을 위협받게 해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2020년, 인권위 진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채식주의자 등 소수 장병을 위한 급식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듬해에 급식 방침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채식주의자 장병이 식사에 어려움을 느낄 때 부대 여건을 고려해 밥과 김, 채소, 과일, 두부 등 대체 품목을 매끼 제공하고, 우유 대신 두유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규정에 담겼어요. 이들은 이렇게 '채식선택권'에 사회적 응답이 있음을 확인했어요. 이에, 함께하는 활동가들은 '채식선택권'을 주장하는 영역을 공공급식으로 확장하고 본래 계획이었던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학교급식에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소원은 두 달 만에 각하 처리되고 말았어요. 쉽게 말해 헌법재판관들이 찬반을 따지기도 전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학교의 식단작성과 급식은 학교장의 재량이고, 교내에 '채식선택권'이 없는 것은 법률에 따라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했던 이들은 '채식급식시민연대'라는 이름을 짓고 다시 국가인권위원회로 향했어요. 헌법재판소가 학교급식 내 '채식선택권'을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하니, 인권위가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의미 : 채식선택권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학교의 채식 급식 시행이 생태전환교육에 포함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교육청 차원의 작은 변화들이 줄지어 생겨나고 있어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2021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통해 '상시 채식 선택 급식'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한 편, 서울시교육청 역시 2020년 6월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채식선택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어요. "채식을 선택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교급식은 육식 위주라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었죠.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육식 중심 문화에서 짜이던 식단표를 어떻게 채식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머

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일이 필요해요. 특히 공공급식을 바꿀 의지가 있는 결정권자들은 이들에게 손만 내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채식급식시민연대의 역할일 것입니다. 또한, 레시피 개발뿐 아니라, 새로 개발된 채식 식단에 맞추어 실제로 음식을 준비하는 급식노동자들의 처우 또한 개선되어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공공급식은 학교를 포함한 관공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군대, 교도소 등의 공공부문에 서 제공하는 급식을 모두 포괄해요. 국가기구 혹은 기관에서는 공공을 위해 정의로운 먹거리를 구매하고 배식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공급식은 먹거리 인권을 정책화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런 공공급식에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군대와 더불어 '채식선택권'이 가장 취약한 곳 중 하나가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육식 위주의 급식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건 기본이고, 신념에 의한 채식을 '편식'으로 평가절하당하는 것이 일상인 셈입니다.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 모두 함께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환경 34] 우리는 쓰레기 없는 배달을 원한다, 배달 앱도 함께 책임지자

“우리는 쓰레기 없는 배달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작 : ‘배달어택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팬데믹 시기에 식당은 문을 닫고, 이동 제한을 받으니 어쩔 수 없이 포장·배달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어요. 정부 또한 포장·배달을 권고했고, 비대면 외식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녹색연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4명 중 3명은 배달 쓰레기를 버릴 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요.

응답자 2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주문이 늘었고 응답자의 15%는 주문 횟수가 2배 이상 늘었어요. 이렇게 배달 음식 주문은 일상에서 익숙해지고 있지만, 시민들은 배달 쓰레기를 버릴 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먹고 버릴 때는 편하지만 늘어가는 쓰레기를 보니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늘어난 배달 쓰레기만큼 많아지고 있어요. 죄책감에 배달을 끊었다는 댓글도 많은 상황, 배달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나쁜 일일까요?

[경과 : 배달앱도 같이 책임지자] 배달 쓰

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 배달 산업의 영향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어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사가 96%에 이른다고 합니다. 배달 용기 사용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배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어요. 2021년 3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대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다회용기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어요.

2021년 9월 ‘배달어택’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1만 명의 시민들은 쓰레기 없는 배달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배달앱에 다회용기 서비스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해요. 배달앱을 사용할 때 시민들은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배달앱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가맹점들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또한, 더욱 많은 가맹사업자들이 다회용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배달앱의 역할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 : 일회용품을 거부할 권리] 배달 앱 3사가 배달 주문 시 일회용 수저가 필요할 때만 신청하도록 기본값을 바꾼 결과 일회용 수저 안 받기 비율이 10%대에서 70%대로 증가했어요. 매출액으로 환산한 결과 한 달 동안 6,500만 개의 일회용 수저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2021년 6월 자료를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일회용 수저 안 받기' 선택 비율은 급격히 증가했어요(주문량 대비 선택 비율). 배달의민족은 15.8%에서 71.3%로 증가, 요기요는 13%에서 62%, 쿠팡이츠는 21%에서 76%로 확인됐어요. 이는 배달플랫폼의 시스템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값 변경이 소비자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일회용 수저 안 받기를 선택할 수 있듯이 일회용 배달 용기 안 받기, 즉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현재 일회용 배달 용기는 한번 쓰고 버려지지만 1회용품 규제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요. '자원재활용법'에서는 비닐, 쇼핑봉투 등의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제공 금지를 통해 규제하지만,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은 예외적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회용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

화되어야 하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의 비율이 73%에 이르는 만큼, 1회용품 감량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달 용기에 대한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팬데믹 이전부터 배달 음식 주문은 일상에 스며 들고 있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사용의 편리성, 1인 가구의 증가로 우리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배달 서비스 플랫폼도 다양화된 것이죠. 또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확산 우려로 비대면 활동들이 많아졌고, 온라인 쇼핑 거래를 통한 1회용품의 사용은 급증했어요. 배달시장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배달플랫폼들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 35] 눈 깜빡할 새의 죽음, 비극을 막기 위한 새친구 캠페인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할 때마다 새 한 마리가 우리 벽에 부딪혀 죽어갑니다”

[시작 : '새친구 캠페인'에 대해 알고 싶나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2018년도에 발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

류 폐사 방지 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투명 유리창에 부딪히는 새가 한 해 800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만여 마리의 새가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인 유리창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눈을 깜박이는 횟수가 2만여 번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눈 한번 깜빡할 때마다 새들이 한 마리씩 죽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또한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상은 더 많은 생명이 우리의 유리 건축물로 인해 말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과 : 충돌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찾자] 아름답고 실용적인, 우리가 선호하는 유리 건축물로 인해 이렇게나 많은 수의 새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충돌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찾자는 목표를 갖고 2019년, 녹색연합 '새친구 캠페인'이 시작됐어요. 녹색연합이 제일 먼저 한 활동은 우리 주변의 새 충돌 사례를 모아보는 것이었어요.

많은 시민이 주변에서 발생한 새 충돌 사례를 제보해 주었습니다. 가까운 아파트나 학교 방음벽, 자주 다니는 도로의 방음벽, 도심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유리 건물들, 유리로 된 지하철 입구 등 많은 곳에서 박새, 멧비둘기, 물까치, 참새, 오색딱따구리 심지어 천연기념물인

참매와 새매 등 다양한 종류의 새 충돌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 충돌 문제에 관심 있는, 함께 대안을 찾고 싶은 시민들을 모았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바로 녹색연합의 '새친구'들입니다. 녹색연합 새친구들은 2019년 4월에 첫 활동을 시작해서 2기, 3기, 4기를 거쳐 2021년 10월에는 5기 새친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됐는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 새 충돌 현황을 파악하고, 새 충돌 사례를 모으는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 두 번째로 각자의 삶터에서 새 충돌 사례를 찾고 기록하는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충돌이 잦은 유리창에 충돌 저감 스티커를 붙이는 현장 활동이 그것입니다.

[의미 : 저감조치의 실질적인 효과 입증] 2019년 1월~2021년 8월 서산 649번 지방도(창리~부석간) 총 11곳의 투명방음벽 새 충돌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한 눈에 보기에 붉은 선으로 표시된 충돌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충돌 사례가 많은 구간부터 차례로 저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충돌하는 수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렇듯 실제 저감조치를 진행한 유리 방음벽에서의 저감 성과가 확인되면서, 이

지역 외에도 많은 충돌 장소에서 다양한 단체와 시민이 충돌 방지 저감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확산하는 중입니다. 철도 공사와 수원시 등 자체 예산을 들여 저감 조치를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무엇보다 반가운 일은 649번 지방도를 관리하는 충남 종합건설사무소 역시 자체 예산을 들여 미부착된 나머지 구간의 유리 방음벽에 저감 스티커를 붙일 것을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들의 노력이 점차 확산하고 있음을 3년여의 캠페인을 통해 확인했지만, 새친구들이 전국의 모든 유리 방음벽과 유리 건물 모두에 저감 스티커를 붙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미 시공된 유리 건축물에 이런 저감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새가 충돌하지 않도록 저감조치를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완공된 이후에 참여하는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새들만 볼 수 있는 자외선 스펙트럼을 유리에 시도할 수 있고, 처음부터 다양한 문양을 넣어 제작한 유리

를 사용해 건축물을 만들면 안타까운 죽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 충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새 충돌 저감 시설을 의무화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지자체 조례의 효력을 높이고, 건축물 투명창 새 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서둘러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녹색연합은 서울시와 제주도에서도 새 충돌 저감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모니터링과 현장활동, 정책제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새 충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법제도 개선으로 근본적인 충돌 저감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새 충돌 방지 새친구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복지 ①] 에너지를 차별 없이 공급받을 권리, 복지 사각지대를 좁혀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권리, 에너지”

[시작 : ‘에너지 기본권 실현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사회 양극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한 기본권 보장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예요. 전기료를 납부할 여력조차 없어 극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의 주요한 폐해로 꼽히고 있죠.

2003년 8월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취약계층의 수도·전기 요금 연체자에 대한 강제 단전·단수 조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2003년 9월 아름다운재단은 단전·단수된 저소득 가정을 위한 ‘빛 한 줄기 희망 기금’을 설치·운영하였어요. 또한 2005년 4월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국회의원은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안’을 발의했죠.

한편, 2004년 2월 전남의 장애인 부부 사망 사고에 이어 2005년 7월 경기도

광주의 여중생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전기료 연체 때문에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 봉연을 당한 ‘서러운 죽음’이 잇따라 발생한 것이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인권운동사랑방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기획의 일환으로 산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죽음을 기록하면서 촛불 화재 사망사건을 다뤘어요. 에너지 정치센터와 공공운수노조는 노원지역의 단전·단가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국가·지자체·노조·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기본권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환경정의, 지역자활센터, 두꺼비하우징, 에너지 나눔과 평화 등의 단체들도 취약계층 주거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한 에너지 기본권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에너지 복지법 등 정책 대안을 연구·제시했어요.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법이 만들어지다] 2005년 7월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전 대상이 된 가구에 소전류 제한장치를 부착했어요. 20와트짜리 형광등 3개와 14인치 텔레비전 한 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고, 흑서기(7~9월)와 흑한기(12~2월)에 단전을 유예하는 조치를 함께 발표했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에너지를 차별없이 공급받을 권리가 만들어졌을까요?

시작

춧불이 삼긴 모습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
 [사회양극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문제
 서러운 죽음: 전기료 영세 → 단전
 → 촛불 켜고 수면 → 화재



단전권의 사회적 획득

- 2004. 2: 전보 폭포 강제인 부부
- 2005. 7: 경기 광주 여중생 사망
 무허가 건물 → 전기 파열에
 난방의존 → 전기료 누진
 복지 체계 허점 드러남
- 단전, 단수, 단가스=공모 빈곤 지표로 주목
- 주거 기본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 보장까지 확장

성과



주위에 많지 않은 권리

- 2004년 한해 156만 명 단전을 경험, 100명당 3~4명
- 2003년 8월: 함께하는 시민행동
 취약 계층의 강제 단전-단수 조처는
 국민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서」 제출
- 2003년 9월: 아름다운재단
 단전-단수된 저소득 가정을 위한
 「빛 한줄기 희망기금」 설치 운영
- 2005년 4월: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에너지 기본법안」 발의
- 2005년 7월: 정부 - 3개월 이상 체납 단전대상가구
 소관료 제한장치 부화
 (20W 형광등 x 3, 14인치 TV 사용 가능)
 흑서기 (7-9), 흑한기 (12-2월) 단전유예
- 2006년 2월: 국회 - 「에너지 기본법」:
 국가·지자체·에너지 공급사의 보편적 공급 의무화
- 2006년 12월: 「한국에너지재단」 설립-사회적 약자 대상
 에너지 복지의 거국적 확충
- 200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 관련 법령의 개정-시행 권고

현황·과제

에너지 기본권 실현 주장 단체들:
 - 에너지 빈곤 실태조사
 - 정부와 기업에게 「에너지 복지 정책」 도입 촉구
 - 에너지 기본권을 위한 실천사업 진행
 - 에너지 복지법 등 정책대안 연구 제시

요하네스버그 선언: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빈곤층에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필수 과제

여전히 비극적인 반복

· 사회 취약자의 생존권은 시장의 논리에
 가려 위협받고 있음

· 「에너지 기본권」=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

↓

시민사회단체의
 해성정책형 과제

그래픽 서머리: 정진호

국회는 2006년 2월 국가·지자체·에너지 공급사가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의무화하는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12월에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를 지속해서 확대해나가기 위한 한국에너지재단을 설립하였어요.

[의미: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다] 단전·단수 조치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만들어 나갔던 활동을 통해 주거기본권의 개념을 에너지기본권까지 확장했어요. 또한 인권·환경·에너지·일자리 창출에서 두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소득층 거주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얻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냈어요.

[참여: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기초수급자의 죽음] 한전의 흑서기와 흑한기 단전 유예 조치, 에너지재단 등의 긴급구호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전기료를 못 내 단전된 기초수급자가 촛불을 켜고 자다 중태에 빠지거나, 2012년 11월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사망한 할머니와 외손자 사건처럼 여전히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전기료 체납 외에도 재개

발 등 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위해 단전하는 사례가 어지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사회적 취약 계층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준의 에너지는 공급돼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에너지 기본권 실현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복지 ②] 아동의 교육권을 위한 공부방 법제화, 빈민운동의 성과

“학교 밖에서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시작 : ‘공부방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공부방 제도화에 대한 최초의 움직임은 1990년대 중반 서울지역 공부방 협의회, 가톨릭 공부방 협의회, 부스러기 선교회, 개신교 공부방연합회가 전국 공부방 연대모임을 결성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이 시기의 공부방은 지역주민을 만나는 유일한 창구이자 아동보호를 통해 부모의 생계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의 공간이었어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항의조차 어려운 주민들을 조직하는 통로이자, 가난으로 인해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공간이었죠.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철거지역 재개발로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개별화되었고, 극빈한 사람들은 지하 셋방으로 흩어지면서 빈민운동을 조직하기 어려워졌어요.

공부방이 위치한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부방의 존립과 방향성, 활동에 대한 실무 교사들의 고민은 깊어져 갔어요. 공부방을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로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성인 중심의 빈민운동 흐름에서 나아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체로 한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사회교육운동을 본격화하였어요.

[경과 : 그 뒤로 공부방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00년 집계에 의하면 전국의 공부방은 약 250여 개, 2003년에는 300여 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나 개별 공부방은 운영 및 실무자 총원의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난으로 인해 공부방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도 이어졌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부방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지원과 법제화가 더욱 절실해졌어요.

[지역아동센터로의 도약] 공부방이 아동을 보호하고 주민 운동까지 지원하는 지역의 거점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

러내기 위해 법제화에 참여하는 공부방 들은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2002년에는 '법제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전국모임'을 결성하고, 이 모임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적극 홍보했어요. 국회의원실에 지역아동센터 활동 근거 마련을 위한 호소문과 당시 전국에 있던 공부방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 보고서를 메일로 발송하는 등 법제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어요.

[법제화를 통한 정부 지원 확보] 2003년에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협의회'를 발족하였어요.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기존의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지요. 2003년 정부로부터 지역아동센터의 공식 명칭 및 아동복지법 재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이후 설치 기준안과 재정립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어요. 그 결과 2004년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고지원이 실시되었고, 2004년 1월 29일 마침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었죠.

[의미 : 한 명의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1997년 IMF 이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가족 해체가 증가하면서 그 영향은 사회적 약자인 아이

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어요. 외환위기 이후 18만 결식아동의 존재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역할로서의 공부방이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위기아동·학대아동·결식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증가했지만,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노동·청년·시민 단체와 사회복지관, 종교기관 등 민간 차원의 공부방이 확대되었어요. 지역아동센터 법제화는 기존에 시민사회와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던 아동의 교육권 보장 노력을 정부가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어요.

[참여 :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법제화는 민간운동에서 시작하여 법제화를 이룩한 획기적인 사례예요.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지 십여 년이 지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4천여 곳이 넘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에요.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월 기본운영비는 465만 원(2017년 기준 평균)으로, 시설장과 교사의 월 급여를 각각 148만 원, 131만 원(2015년 복지부 실태조사)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도화 이후 양적 성장은 이뤄냈지만, 최저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도 등 아직도 현장은 열악한 상태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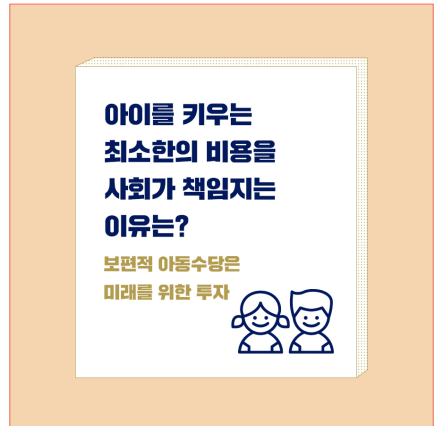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돌봄 사각지

대에 방치된 빈곤아동의 안전망 구실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공부방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복지 ③] 더 나은 아동의 삶을 위한 발걸음, 보편적 복지의 한 장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시작 : '아동수당 도입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빈곤아동은 결식·학대 등 대부분 방임 상태에 처해 있고, 이 아동들을 방치할 때 향후 빈곤의 구조화가 심각해지면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요. 가정해체가 급증하고 사회가 점점 더 계급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빈곤아동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2003년 10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잇달아 발생하는 빈곤 계층의 자살 등 심각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어요. 그중 하나가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에요.



참여연대는 대안 중 하나로 아동의 양육에 따른 추가적 지출과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는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어요.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예요. 전 세계에서 90개국 이상이 시행하고 있죠. 국가별로 지원 대상이나 방식은 다르지만, 아동이 있는 유자녀 가족에 수당을 지급하여 지출을 보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06년 7월 16일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둘째 아이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방안에 '단계적 도입을 감안하더라도 첫 단추로는 너무 적은 규모'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어요. 아동수당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을 위해 국가가 양육 책임을 분담하고 가계의 추가적인 지출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아동수당 도입은 구체적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더욱 난항을 겪게 되었어요. 2009년에는 이낙연 의원의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내용 개선은 여전히 미진했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했어요. 참여연대는 2010년 5월 12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곽정숙 의원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보편적 복지를 위한 아동수당 도입 적극 찬성'이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어요.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정책 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2017년 4월 12일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19대 대통령 선거 보육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를 위한 여러 요구 사항 중 하나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촉구하였죠.

이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2017년 12월 국회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상위 10% 소득 가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후퇴되었고, 이에 참여연대가 비판하는 성명을 여러 차례 내고 대응하였으나 2018년 9월부터 선별적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상위 10% 가구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제도 시행의 혼란만 발생하는 등 여러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어요. 2019년 4월 드디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하며 한국에 보편적 아동수당이 자리잡게 되었어요.

[의미 :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끌어내다]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에 따른 가구 부담을 완화하고 유자녀 가족과 아동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이 생존하고 발달하는 것을 국가가 최소한의 권리로 보장, 지원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아동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참여 : 아동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더 많은 상상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동수당의 도입 또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늦게 이루어졌죠. 정치권이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이나 생존권에 대한 논의보다는 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구로 다뤄진 점도 아쉬운 부분이죠.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빈곤 아동의 생존권과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아동수당은 아동의 생존을 가족의 책임으로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사회적 양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아동수당 도입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복지 ④] 시민사회 손으로 만든 한국경제 선진화,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 제도를 통해 모두가 누려야 할 사회권”

[시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IMF 사태 이후 한국경제와 사회는 질곡의 연속이었어요. 경제 전반이 후퇴했고 사회적 혼란도 가중되었

죠. 이에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 실패가 낳은 부정적 여파가 컸고 제도적 장치를 통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시장의 실패를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 온 거예요. 1998년 7월 참여연대 사회보장위원회는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청원을 제기하였어요. 1999년 3월 총 64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간사 단체로 활동하며 입법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민생과 복지가 강조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죠. 이러한 소극적 분위기를 타개한 결정적 계기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었어요. 당시 정국은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등으로 돌아선 민심을 잡아야 했고, 이때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 입법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죠.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률 제10507호로 제정되면서 시민사회의 노력도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되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과 '자립 지원 제도로써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타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법률 개정과 지침 개정이 필수적이었죠.

IMF 이후 두드러진 우리나라 빈곤 문제의 특징은 빈곤층의 유입과 이탈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도입하는 초기 단계에서 선정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의미 : 일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운동과 입법 활동이 없었다면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한 제도였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사회권으로 규정하고, 경제활동 가능 능력과 무관하게 빈곤층에게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 연계 복지를 실시했다는 점에 있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역사에 있어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참여 :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사회권'으로 인식해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생활보호법(生活保護

法)'(1961년 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공적부조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한편에서는 '탈수급의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수급을 받는 빈곤층이 복지 혜택에 안주하여 독립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에요. 하지만 이는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자 몫으로 축소하고, 사회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일부의 의견이에요.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로서 '사회권'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나와 이웃이 빈곤에 처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빈곤층의 감소는 경제 성장으로, 빈곤층의 증가는 저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빈곤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죠. 이번 기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복지 ⑤] 인간다운 삶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작 : ‘생활임금 도입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고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늘 최소한의 금액으로 환산되고 있었어요. 정부조차 자신이 고용했거나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2012년 11월, 참여연대의 제안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성북구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민간기업에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해 낸 거죠.

참여연대는 2007년 런던에서 도입된 ‘Living Wage’ 제도에 주목했어요. 런던 하계올림픽(2012)을 준비하던 조직위원회가 민간업체와의 계약 조건으로 ‘Living Wage’ 수준의 임금 지급을 내건 것이죠. 올림픽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담보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니, 막대한 기업의 수익을 노동자에게도 배분하라는 거였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12년 봄 참여연대는 생활임금

제도의 열개와 해외 사례, 취지와 기대효과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성북구에 소개했어요. ‘생활이 가능한 임금의 수준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함이었죠. 참여연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과 별개로 정책적 목표를 위해 설정되어야 하는 생활임금의 수준을 고민했어요. 먼저 여러 가지 정책목표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여 로드맵을 그려보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생활임금의 수준을 계산하게 되었죠. 2012년 11월 15일 노원구와 성북구 그리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생활임금의 우선 적용 방안을 발표했어요.

[어디에나 반대는 있기 마련] 생활임금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제도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엄밀하게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쳤어요.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는 임금이 오르는데 다른 노동자는 임금이 오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기존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보니 기존선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는 실질적 인상이 없어 소외감을 느꼈던 거죠.

[의미 :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도입을 이끌다]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

도 도입 이후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월 20여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한 소득의 50%는 순 소비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고무적인 면은, “소득이 올라 갈수록(194만 원 이상) 교육비, 문화·취미활동비가 각각 13.9%, 1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지요.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생존이 아닌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죠.

[생활임금 어떻게 확장되었을까] 도입된 지 5년째 되는 2018년, 광역 및 기초 단위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100개에 육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2019년 확정된 생활임금 수준을 보면 시급 기준 1만 원을 넘어서고 있죠. 이제는 생활임금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보다 이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참여 : 아직도 법정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있다니] 생활임금은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강제하기에는 권한상의 한계가 있어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시도가 되려면 조례의 제·개정, 지방의회의 입법권,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법정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업장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현실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는 업장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현재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와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하여 노동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그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에서 더 나아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정부 사무의 민간위탁, 기관 공사의 발주·입찰 등 조달,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지역 내 민간기업 전반에 제도가 확산하여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생활임금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대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비정규직

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생활임금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다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이번 기획에 '생활임금 도입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복지 ⑥] 빈곤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투쟁의 여정

“빈곤의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시작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기존에 시행되던 생활보호법과 달리 전 국민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낸 기초생활보장제도였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엄청난 규모의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동시에 그들의 부양의무자에게 사회의 책임을 전가하죠. 최저임금 정도의 수급액을 받는 부양의무자들에게 부양을 강제하는 상황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족한 수급 금액 등으로 인해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국

민이 약 94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되었죠.

2001년 12월, 뇌병변 1급 장애여성 최옥란 씨가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액 26만 원을 국무총리에게 반환하고 '이 돈으로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며 명동성당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장애여성이었던 그는 이혼 후 생계가 막막해 수급자가 되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언젠가는 아들에게 짐이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하에 수급자로 사는 것은 희망 없는 삶이라 외쳤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02년 최옥란 씨는 절망 속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외친 구호는 세상 곳곳에 남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운동을 위한 씨앗이 되었어요. 2010년에는 조계사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농성이 있었고, 2012년 8월 21일에는 광화문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이 시작됐어요. 2017년 9월 5일까지 1,842일이라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단체와 빈곤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크게 외쳤죠.

농성을 해산한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민관 협의체'가 꾸려졌어요. 단체 4인, 전문가 6인, 보건복지부 3인으로 꾸려진

이 협의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죠. 또한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모든 주요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성장에 방문해 다시 한번 폐지 이행을 약속했어요.

[의미 : 제도의 사각지대를 좁혀가는 과정]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어요. 2015년 7월 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두 번째 급여별 폐지였죠.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2019년 1월부터 일부 수급 가구에 확대되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운동은 죽음이 아닌 목소리로 제도의 문제점을 사회에 알리고, 함께 싸우며 세상을 바꿔나가는 과정이었어요. 2021년 5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급여에 관련해 부양의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어요.

[참여 : 가족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세상]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더 이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요. 2020년 8월 정부는 '2차 기초생

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어요. 다가오는 2022년 생계급여에 관한 기준부터 폐지될 예정이에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부양의무를 지닌 가족이 있더라도 우리는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각자의 인권과 복지제도를 누릴 수 있어야 해요. 이번 기회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복지 ⑦] 복지를 넘어 식량 주권으로, 별난 은행의 탄생

“식품을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기탁해 주세요”

[시작 : '푸드뱅크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67년 미국의 자원봉사자 John Van Hangel이 주도한 '푸드뱅크'는 “Don't dump Food, Bank!”라는 구호에서 이름을 따와 시작됐어요. 미국은 국제적 규모의 대기업들과 다국적 식품기업들이 쏟아내는 막대한 잉여식품이 발생하는 동시에 그 식품을 필요로 하는 복지 사각지대 역시 넘쳐났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복지의 주체 역할을 맡아 식량 지원에 나선 것이죠.

이 운동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파된 걸까요? IMF 관리 체제로 들어섰던 1997년 말, 국내에 처음으로 민간 푸드뱅크가 도입되었어요. 외환위기 한파 속에 빈곤가정과 지역사회가 해체되고 기업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실업자와 노숙인이 거리마다 넘쳐나고 사회적 결식 문제도 대두되었어요. 민간 영역에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나 독거노인, 무연고 노숙자, 쪽방 및 미인가 소형 시설 거주자 등 국내 결식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지원을 시작했어요.

성공회는 민간 차원의 푸드뱅크 도입을 계획하고 YMCA, YWCA,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장로회, 부스러기선교회와 함께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를 조직했어요. 이후 복지부에 민관협력사업의 형태로 푸드뱅크 추진을 요청했으나 1998년 가을, 복지부는 푸드뱅크를 직영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어요. 이후 민간협의체 내부에서도 사업의 공동 추진에 이견이 나타나면서 민간 푸드뱅크 사업은 성공회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요?] 1999년 성공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푸드뱅크 사업은 정부 주도 정책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이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적기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최소한의 사업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은 어려움 또한 겪어야 했죠. 그럼에도 성공회푸드뱅크는 중앙 본부 및 전국 22개 지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약 12,000명의 이웃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성공회푸드뱅크는 그간 학교, 공공기관, 대기업 직영식당 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조리된 음식물들을 기탁받아왔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구내식당들이 대부분 외주화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조리식품의 기탁량이 줄어 지역 내 단체식 제공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죠.

[필요한 제도를 상상하다] 성공회푸드뱅크는 안정적인 급식을 위해 군수물자, 재해 물자, 수급 조절 물자 등 정부가 각종 목적과 이유로 비축하고 있는 물자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미국의 경우 여러 법안을 통해 먹거리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잉여자원이 적재적소에 기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쌀과 김치처럼 시민들의 식탁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 정부 차원의 수급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식품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내 판매되지 않아 폐기

되는 생필품 역시 폭넓게 기탁받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의미 : 인식의 변화로 생활의 변화를 만듦] 푸드뱅크는 식품 자원의 무분별한 사장을 막고, 식품 폐기로 인한 오염을 줄이면서 가난한 이웃도 돕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여 : 식품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푸드뱅크의 가용 식품 자원은 크게 식자재, 가공식품, 조리식품으로 나눌 수 있어요. 농수축산 생산 현장에서도 각종 식자재가 버려지거나 폐기되고, 이 양은 수입 먹거리들이 늘어남에 따라 더욱 늘어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가공식품과 즉석식품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 잉여 가공식품의 활용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한편 뷔페, 예식장, 학교, 호텔 등 조리된 후 소비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도 상당량에 이르고 있어요. 이런 음식물 쓰레기는 간이 배어있어 매립, 건조 후 소각 등 특수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발생량 자체를 적극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환경오염의 부담을 안게 돼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음식을 나누는 일은 본질적으로 마음과 생명을 나누는 일이에요. 사회 구성원의 '먹을 권

리'는 복지의 영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식량주권과 경제 정의를 위해서도 확보되어야 해요. 이번 기회에 '푸드뱅크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복지 ⑧] 가난이 형벌이 되는 세상, 근로능력평가의 맹점과 대안은?

**“애매하게 가난한 건 쓸데가 없네요.
- <여중생 A> 중에서”**

[시작 :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알고 있나요?]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던 故 최인기님은 2005년 건강검진에서 심장혈관에 이상을 발견했어요. 두 차례의 수술로 대동맥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이전의 건강을 회복할 수는 없었어요. 모아두었던 재산은 모두 병원비로 빠져나갔어요. 당연히 이전과 같이 노동할 수 없었고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서 일반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근로능력평가 업무가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이관되면서 8년 만에 느닷없이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동주민센터에 항의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그달부터 수급비의 60%가 삭감되었어요.

가족들과 근로능력평가의 피해자들은 故 최인기 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빈곤사회연대 등 단체들과 함께 나섰어요. 인조혈관 치환이라는 대수술로 인해 과거의 건강 상태로 돌아갈 수 없었고, 노인의 나이로 진입하던 고인이 대체 왜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아야만 했는지, 왜 노동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강제노동에 내몰렸어야 하는지, 왜 사망하게 되었는지. 복지부와 담당 지자체인 수원시 권선구청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어요. 이에 2014년 10월, 故 최인기 님 사망에 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진정을 기각했어요.

[경과 :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고인의 3주기이자 국가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2017년 8월 28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활동에 함께 하는 변호사와 활동가가 모여 대리인단을 구성,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이라는 이름의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故 최인기 님의 죽음이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내용과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소장을 접수한 후 2017년 8월 30일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해당 소송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 인증샷 캠페인이 시작됐어요. 인증샷 캠페인에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켄 로치 감독과 제작진도 참여했다고 해요. 소송제기로부터 2년이 더 지난 2019년 10월, 1차 변론기일 당일 법원 앞에서 故 최인기 님의 배우자를 비롯한 대리인단과 사회단체,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509명의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소송제기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 20일, 드디어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고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故 최인기 님의 죽음에 대한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하게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고인의 죽음으로부터 장장 5년 4개월 만에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에요.

[의미 : 근로능력평가에 의한 강제근로는 위법이다] 조건부 수급은 노동할 의지가 있으나 일반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취

업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정책이에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회복하기도 해요. 하지만 근로능력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강제로 노동을 강요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故 최인기 님처럼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이 자활사업에 배치되어 있거나,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이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아 수급권을 포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근로능력평가에 의한 조건부수급은 이렇게 노동할 수 없는 사람에게 노동을 강제하며 가난한 사람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 왔어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근로능력평가에 의한 강제 근로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참여 : 항소심 승리를 위하여]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2차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해당 판결이 있은 뒤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 모두에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곧 시작될 2차전 항소심에서 이기고 더 나아가 ‘근로능력평가’를 폐지하기 위해 아직 더 많은 걸음이 남아있어요. 또한 조건부 수급자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더 많이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그동안 노

동할 수 없는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들이 근로능력평가로 강제 노동에 내몰리면서 죽음을 맞는 비극이 발생해왔어요. 실제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과 노동 의지가 있는 사람들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근로능력평가 폐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복지 ⑨] 베트남 노인 자조모임이 드러낸 함께함의 위력과 잠재력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나이가 왜 문제가 되죠?”

[시작 : ‘노인자조모임’에 대해 알고 있나요?] ‘노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힘없고 무기력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미지가 연상되지는 않나요? 우리 뇌리에 확 박혀 있는 이런 모습과는 달리, 베트남에서는 어르신들이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끔 한 데에는 ‘노인자조모임’이 있었어요.

베트남에 노인자조모임이 생겨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헬프에이지의 역할이 컸어요. 2003년 10월부터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홈케어 모델을 베트남에 전수하는 사업을 했거든요. 베트남 정부의 열악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인해 베트남의 빈곤 노인들이 기초생계유지와 건강 문제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목격한 한국헬프에이지는 노인들의 소득증대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게 됐어요.

[경과 : 노인자조모임 모델 구축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노인자조모임은 노인들 스스로 자치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뜻해요. 한국헬프에이지는 2007년 5월 베트남 현장 방문에서 노인 중심의 자조모임 구성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의 활성화와 보건위생서비스 증진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노인자조모임 모델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목적을 두고 노인에 대한 보호와 참여를 동시에 끌어내는 혁신적인 지역기반 모델 사례로 성장했어요. 2016년 8월에는 베트남 총리가 2020년까지 노인자조모임 3,200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정부 정책을 승인하기에 이르렀죠.

2020년 7월 29일, 유엔경제사회이사는 한국은 베트남의 노인자조모임 모델을 지

속가능개발목표(SDGs) 우수 이행사례로 선정하는 한편, 이를 뒤인 7월 31일에는 일본 정부의 아시아 건강 및 웰빙 이니셔티브(AHWIN)가 후원하고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 연구소(ERIA)와 일본국제교류센터(JCIE)가 주관한 제1회 아시아의 혁신을 위한 건강하게 나이들기 우수사례 공모(Healthy Aging Prize for Asian Innovation)의 지역 기반 이니셔티브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의미 : 함께함의 위력] 노인자조모임은 회원의 70% 이상이 노인, 여성,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한 1개 모임 당 약 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집행부를 선출하여 모임을 운영 및 관리합니다.

총 8가지 활동이 수행되는데, 시중은행 대출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빈곤 노인에게 무담보 저리 소액 대출을 제공하거나 사업계획수립부터 실제 소득 창출까지 돕는 소득증대 활동, 어르신들의 체중과 혈압을 매월 체크하고 이동식 건강검진을 하여 필요시 무료로 약품을 공급하는 건강증진 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지만 한 것은 아니에요. 모임 내에서 봉사자들을 선발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연극 및 춤 등을 공연하는 문화공연 활동

등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베트남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또 많은 젊은이가 진학과 취업의 이유로 도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는 주로 노인과 아이만 남게 될 거예요. 왠지 한국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적절한 준비와 대응이 없다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현상, 노인 부양에 따른 청장년층의 재정 부담 증가, 노인 빈곤 및 소외 문제, 도농 간 경제적 격차 심화 현상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먼 미래의 문제라고 제쳐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평소 가난과 질병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지역의 어르신들이 모임을 조직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가 제공되어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대부분 회원은 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 활동을 통해 얻게 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노인의 자율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CHAPTER
03

농업



[농업 ①] 밀 자급률 제로에서 1%가 되기까지, 멸종위기 우리 밀을 살려라.

“우리 밀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

[시작 : ‘우리 밀 살리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 한 때 밀은 특별한 날에 국수로만 먹을 만큼 귀한 작물이었어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잉여농산물이던 밀가루가 무상원조로 제공되었지만, 밀소비가 기대만큼 확산하지 않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혼·분식 장려 운동’을 시작했어요. 한식은 열등하고 양식은 우월하다는 의식을 퍼뜨린 결과 몇 년 새 밀 소비량이 두 배 이상 늘고, 수입 밀 의존도가 심화되었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정부의 외면 속에 씨가 마를 뻔했던 우리 밀이지만 가톨릭농민회와 한살림 덕분에 1989년 성공적으로 227가마를 수확했어요. 수확량은 전부 한살림에서 구매해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공급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의 시작이 되었죠. 이후 16만 명의 국민에게서 36억 원의 성금이 모여져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였어요.

[자급률을 끌어올리다] 우리 밀을 농가에 공급하고 생산량을 늘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 가공과 판로개척이라는 난관이 남아있었죠. 생산된 밀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빻는 제분 과정이 필수였어요. 초기에는 찧기 부족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호응받지 못했지만, 시행착오를 거쳐 제분과 가공공장에 설비투자를 갖추고 품종개량과 가공 기술, 레시피 개발을 통해 소비자 입맛을 어느 정도 따라잡는데 성공하게 되었죠. 그 결과 2011년 우리 밀의 생산량은 4만 3,677톤, 자급률 2%를 달성하게 되었어요.

[의미 : 우리의 씨앗은 우리가 지킨다] 1967년부터 1977년까지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행정명령에서는 보리쌀이나 면류를 25% 이상 혼합해서 팔게 했어요. 또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이러한 정부의 ‘혼·분식 장려 운동’과 더불어 밀수입 자율화로 인해 우리 밀은 아예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뻔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밀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이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과 그 가치에 공감해 값비싼 우리 밀과 국수를 기꺼이 구매해주었던 소비자들 덕분이에요.

[참여 : 우리 밀 자급률 10% 달성을 위하여] 1990년 0.05%에서 시작한 우리 밀 살리기는 2011년 생산량 4만 3,677

톤, 자급률 2%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생산량은 3만 7,014톤으로 줄었고, 2013년 이후 다시 2만 톤 대를 넘지 못하고 있죠. 우리 소비자들의 우리 밀 소비량이 3만 톤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농림부는 2006년 당시 2020년까지 밀 자급률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목표치 자체를 5%로 슬그머니 낮추었죠. 2020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달성하겠다고 밝혔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높인다는 건, 식량 복지나 주권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기획에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농업 ②]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투쟁, 끝없는 논란의 중심 GMO

“다양한 파괴 종결자 GMO, 우리는 알고 선택해서 먹을 권리가 있다”

[시작 : ‘GMO 표시 운동’에 대해 알

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섭취 목적의 GMO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약 210만 톤이 넘는 식용 GMO를 수입하고 있죠. 사료용을 포함하면 약 1천만 톤의 GMO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어요. 그러나 영성한 제도 때문에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 어디에도 GMO 표시는 없었어요. 정부와 기업은 늘 ‘안전하다’는 논리만 펼칠 뿐이었죠.

이에 201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GMO 식품에 대해 유전자 변형 기술 이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GMO는 주로 제초제와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식품으로, 방울토마토나 오이고추처럼 전통적인 교배 방식과는 대비돼요. 그래서 농민단체, 생협, 환경단체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GMO 개발과 재배, 수입 인증과 유통·관리, 표시제도, 안정성과 생태계 파괴, 종자 독점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경실련은 반GMO 운동의 선구자인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초대 센터장으로 소비자정의센터를 만들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당시는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식용 GMO를 누가 수입하는지 조

차 알 수 없었어요. 2016년 9월 경실련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었어요. 공개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CJ 제일제당이 전체 수입량의 32%에 해당하는 341만 톤을 수입했고, 그다음으로는 대상이 235톤, 사조해표가 177만 톤, 삼양사가 172만 톤, 인그리디언 코리아가 140만 톤 등이 잇따랐어요. 전체 식용 GMO 농산물의 99.99%를 5대 식품 대기업에서 수입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공식품 580개 제품 중 GMO가 표시된 제품은 2014년 기준 수입 가공품 1건에 불과했어요. 5대 식품 대기업이 생산하는 가공식품 중에는 단 1건도 GMO 표시가 없었던 거죠. 2017년 조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걸까]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고시에 적힌 다수의 예외 조항이 이를 가능하게 한 거죠. 해당 규정에서는 농산물의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혼입률 3% 이하면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요. 또한 식용유나 간장, 당류 형태 등으로 가공해 사용할 때도 GMO 표시가 의무가 아니에요. 현재 국회에는 5개의 의원 입법안과 1개의 시민단체 청원안 등 GMO 완전표시제가 발

의되어 있어요. 발의안 모두 '의도치 않은 혼입률' 기준을 현행 3%에서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강화하고, 예외 조항 없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의미 : 우리의 알 권리를 지키는 과정]

경실련은 GMO를 어떤 기업에서 얼마만큼 수입하고 있는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가공식품에 GMO 표시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하게 먹을 권리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 나갔어요.

[참여 : 멀고도 먼 GMO 완전 표시제 촉구]

2019년 9월 17일 오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과 사회적 협의체 중단에 대한 경과보고가 진행되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약속했죠. 2018년 12월에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되어있는지 알고 싶다"는 청원에 힘입어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었어요.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기업은 GMO완전표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보였고, 결국 논의를 중단하게 되었어요. 시민단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했던 과정을 바탕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원료 기반의 GMO완전표

시제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우리에게
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권리와 선택
할 권리가 있어요. GMO는 장기적으
로 종자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식량 다
양성까지 파괴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GMO 표시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
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농업 ③] 토종 종자 보존, 우리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일

“토종 씨앗을 지키는 것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일”

[시작 : ‘토종 종자 보존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전통적으로 토종 씨앗은 농민의 손에서 채종되고 육종·보호되었지만, 단 한 번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흔쾌히 나누어지고 공유되어 왔어요. 헌신적인 토종 농부들이 순수한 열정으로 씨앗을 지켜온 것은 배타적 독점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통 지식을 만들고 계승해 온 것도 농부요, 논밭의 생물다양성을 지켜온 것도 농부입니다.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실천적 지혜를 찾아내 지속성과 다양성을 지키

는 일, 이 땅의 토종 씨앗을 지키고 전통 지식을 계승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경과 : 토종씨드림의 등장과 활동] 토종 씨드림은 2008년 4월 결성된 비영리 단체로 전 국민의 밥상에 현지 보전된 토종 씨앗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씨앗 받는 농사를 통해 ‘지혜로운 농부’ 또는 ‘자립하는 농부’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어요. 2008년에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제주 여성 농민과 함께 1차 토종 씨앗 조사를 수행한 이래 2021년 무주까지 30개 지역에서 180가지 작물 8,304점을 수집하였으며 21년 11월 현재 순창지역과 경기도 안산, 오산, 평택 지역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토종 씨앗 수집 및 보급, 토종학교 등을 통한 토종 씨앗 교육, 최종연구로 및 토종농민회 운영 등을 통해 농민이 우리의 종자를 이용하고 지키며 밥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토종 씨앗을 지역별 단위로 보급을 하는데 45개 지역 및 단체가 함께 하고 있으며 45개 지역별 채종포가 있다고 합니다. 토종씨드림은 중앙단위의 사무국과 지역단위로 토종 씨앗 보급과 활성화를 풀뿌리와 토종 씨앗이 갖는 지역별 특성화를 꾀하고 있어요.

[의미 : 토종 종자 보존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든다] 양평, 거창, 광주의 사례는 토종 종자 보존 운동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관협력 모델로 토종자원의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거나(양평군) 지역의 여성농민회와 토종씨드림 지역모임이 함께 채종포를 운영하며 로컬푸드, 토종작물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거창군). 또한 광주에서는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여 귀농인과 도시농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귀농교육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더 나아가, 전통적 지식과 씨앗에 관한 정보공유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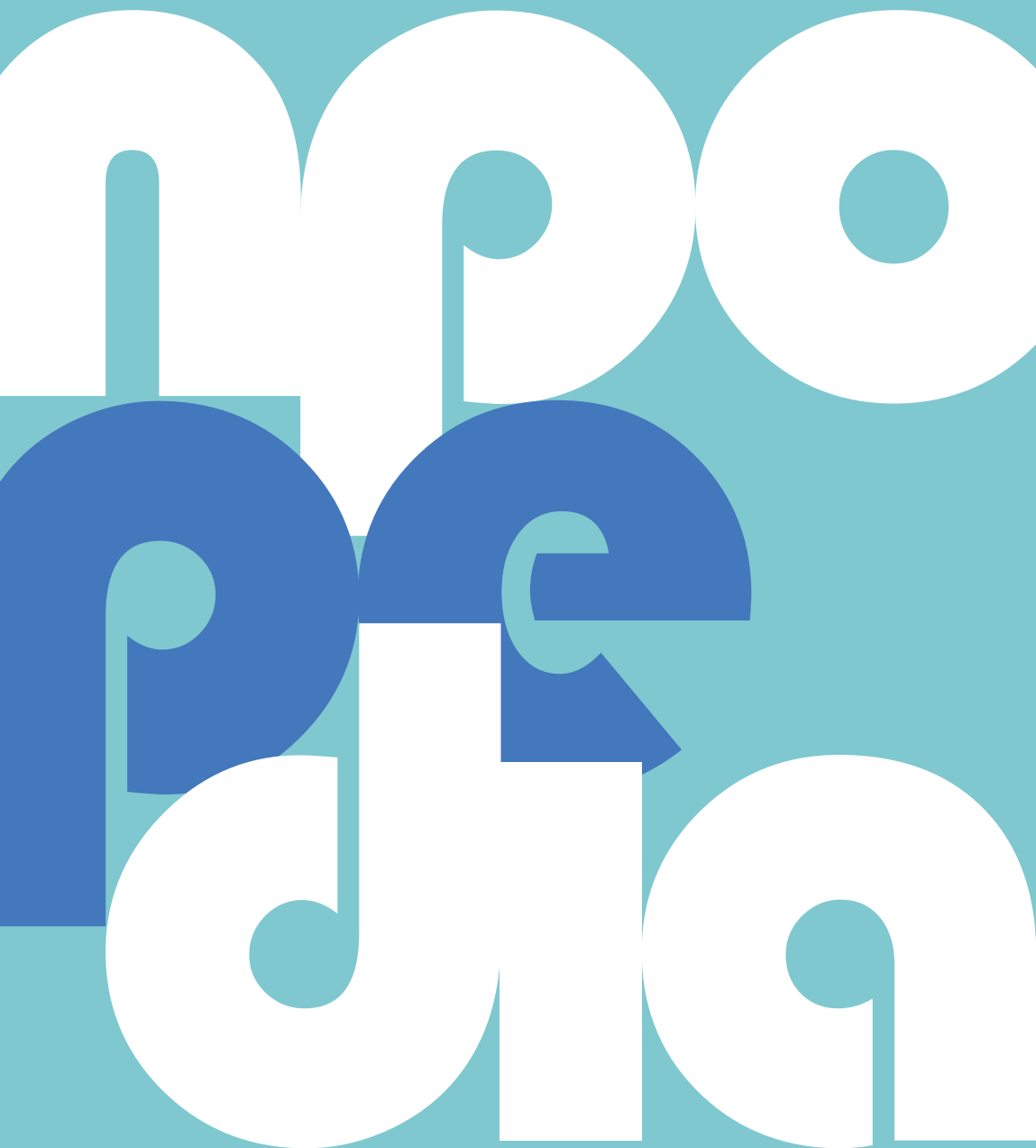
[참여 : 씨앗에 대한 주권을 지켜라] 정부는 2006년 9월 '종자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 농민들의 씨앗 로열티 지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생명공학 육종을 집중 지원해 세계 5위권의 품종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는 여전히 '다수확' 종자

와 관행적 농업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짝'하고 사라져가는 특용이나, 과수 등 식량과는 거리가 먼 농가 지원 및 경작지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은 국민의 식량과 생명권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현재 지자체에서는 토종작물 육성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토종종자 보존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으로는 결코 성사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직 자립적 농업체계가 '씨앗>재배>유통>건강한 음식>살림'의 건강한 순환을 이룰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민이 자유롭게 종자를 저장, 사용, 교환,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농민은 식량과 종자를 책임지고 자립을 도모할 것이며, 나아가 생물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생태환경의 지속성을 강화해나갈 거예요.

CHAPTER
04

건강



[건강 ①] 어린이의 건강을 지켜라, 뽀뽀하고 노골적인 광고로부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작 : ‘안전한 먹거리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02년 환경정의는 대기업들이 막대한 물량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광고가 아이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건강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안전장치가 미흡한 어린이 대상 식품 광고를 집중 적으로 분석하는 모니터링단 ‘참말해’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또한 1981년 세계보건기구가 분유와 이유식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식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광고되던 6개월 이상 영유아용 분유도 문제 삼았어요.

나아가 분유 광고의 전면 금지와 모유 수유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촉구하였죠. 2003년에는 환경호르몬 등 유해 성분이 들어있지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를 출연시킨 방향제 및 살충제 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해당 제품군 광고에 어린이 출연을 중단시킬 것과 아토피 및 천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청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환경정의는 2004년을 ‘안티 패스트푸드 운동의 해’로 선정하면서 어린이 방송 시간대 패스트푸드 광고 금지 운동을 활발히 진행했어요. 당시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의 광고는 환상과 재미로 가득한 애니메이션 형태가 주류였고, 온 가족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연출 등이 쏟아져 나와 어린이를 유혹하였죠. 이에 환경정의는 2004년과 2005년 EBS 프로그램 전후에 방송되는 패스트푸드 광고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했어요.

환경정의는 2005년 12월 5일 어린이 TV 시청 시간대 광고 금지 법안 마련을 위하여 민병두, 박찬숙, 천영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어린이 청소년 대상 광고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하였어요. 이후 방송광고 심의 규정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실현 가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미끼 상품 광고 금지,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 햄버거, 피자, 치킨 등 패스트푸드의 광고 금지 조항 신설이었죠.

2002년부터 진행하였던 광고 모니터링

활동을 바탕으로 환경정의는 2006년도에 반환경적인 나쁜 광고상 9편을 선정하여 발표했어요. 선정 기준은 어린이와 자연을 등장시켜 기업의 이미지를 포장한 광고, 반환경적인 제품의 이미지를 왜곡시켜 과장 혹은 미화한 광고, 어린이 정서와 품성 및 가치관 조성을 방해하는 광고,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마케팅 수단으로 부수 상품을 이용해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로서 휴대폰, 자동차, 살충제, 방향제, 탈취제, 페인트, 원자력 홍보, 패스트푸드 어린이 세트 광고 등이 해당하였죠. 이 중 패스트푸드 어린이 세트 광고는 “어린이 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안 된다”는 방송광고 심의 규정 24조를 지키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을 패스트푸드 본사에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의미 :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주기 위한 노력, 결실을 보다] 광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TV 광고에선 패스트푸드 어린이 세트 광고는 자취를 감추었고 사은품 끼워 팔기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죠. 이러한 환경은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엄마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린이 프로그램 전후 광고 파악을 위해 해당 시간 TV 독차지는 물론 비디오 녹화한 광고를 가

지고 분석, 토론하며 보고서를 작성했던 일들이 녹록지 않았기에 더욱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참여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운동 이후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멀티태스킹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어 광고 모니터링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휴대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는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언제든지 접할 수 있어 동시 다매체 이용자로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매체와 광고에 노출되어 있죠. 예전에는 TV나 비디오테이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던 프로그램들도 이제는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는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대상 광고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현대 생활을 하면서 광고는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단순히 어린이의 소비 촉진을 위해 행해지는 무분별한 마케팅 환경에는 제재가 필요하죠. 이번 기회에 ‘안전한 먹거리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건강 ②] 시민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우리는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잘 피 흘리기 위해”

[시작 : ‘안전한 생리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자유와 편리함을 내세운 일회용 생리대는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생산되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월경 용품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1인당 평생 쓰는 일회용 생리대 개수는 1만 개 이상이라고 해요.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써온 물건이지만 제대로 된 안전성 연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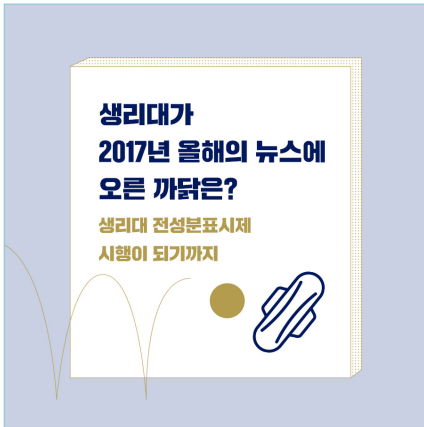
관련하여 2014년 미국 시민단체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는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방출 실험을 진행한 바 있어요. 이 단체는 생리대 속 VOCs가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발암성, 생식독성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죠. 여성환경연대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2017년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실험을 진행했어요. 생리대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체감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근거가 없었기에 검증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11종에 대한 유해성 실험을 강원대 연구실에 의뢰했고, 모든 곳에서 VOCs가 검출되

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여성환경연대는 해당 기업과 생리대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실험 결과를 알리고, 생리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조사와 제도 마련을 촉구했어요. 하지만 검출 실험 후 토론회까지 개최했음에도 기업은 침묵할 뿐이었고, 식약처 역시 “세계 어디에도 생리대 위해성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내놨어요. 이 막막함을 깨뜨린 것은 또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였어요.

여성환경연대는 특정 생리대를 사용한 이후 많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생리가 멈췄다고 호소해왔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었어요. 여성환경연대는 온라인을 통해 생리대 부작용 피해자 접수를 진행했어요. 이틀간 접수된 피해 내용만 3,000건이 넘었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죠. 2017년 9월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라고 외치며 길에 드러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어요.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를 만



들어 배포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리대 전 성분 표시제를 요구하기로 했죠. 나아가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여성들의 건강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역학조사도 필요하다 보고 요구 사항에 포함했어요. 결국 2018년 10월 정부는 생리대 유해성 조사 및 건강영향조사와 전 성분 표시제를 시행했어요. 1971년 생리대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면적인 조사였어요.

[의미 :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 월경은 오랫동안 여성들의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로 여겨져 왔어요. 그러나 2017년부터 공론화된 생리대 이슈는 월경이 '시민'들의 건강 및 인권 문제임을 보여주었죠. 또한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불신은 면 생리대나 생리컵 같은 대안 월경 용품에 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어요.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전 성분 표시제로 생리대 제조에 들어가는 물질명이 표기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성분의 유해성을 일일이 체크하긴 쉽지 않죠. 결국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해 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생리대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길이에요. 인간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물건은 생산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유통에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죠. 2020년에도 여전히 "일회용 생리대가 안전한가?"는 같은 질문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2018년 일회용 생리대 건강 영향 예비조사를 거쳐 현재 2차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결과가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참여 : 모두가 건강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2018년 7월에 공공 월경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참여자들은 "생리대가 공중화장실에 있으면 좋겠다", "생리대 가격이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우리나라의 월경 지원 정책이 취약계층, 비상시 등의 조건을 떼어버리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국가와 제도의 개입 없이 개인의 선택과 소비에 맡기면 사회 구성원의 건강은 점점 더 양극화될 거예요. 이번 기획에 ‘안전한 생리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건강 ③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의약분업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환자에게는 알 권리를!”

[시작 : ‘의약분업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병·의원에서도 약을 살 수 있고, 약국에서도 의사의 별도 진료 없이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어요. 감기약부터 항암제까지 원하는 약이 있다면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한국 의약품 오남용은 심각한 수준이었죠. 심지어 약사나 의사 모두 자신의 처방전을 공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기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의약품의 중복 복용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손실을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유통과정의 비리도 심각했어요. 1994년 서울 YMCA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공동으로 감기와 관절염 모의환자(병을 가장한 환자)를 이용해 의원과 약국의 처방 행태를 조사했어요. 이 조사는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한 문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무질서하고 비전문적인 보건 의료 이용 체계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어디서든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편리성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의약품 사용에서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도 도입을 합의한 후 돌연 입장을 바꿔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의사협회의 여론 선전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1999년 3월 의약분업 1년 연기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편, 직능단체의 이해에 매몰돼 제도 도입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죠. 경실련, 참여연대,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했고 인의협과 건약, 학계가 관련 자문 단체로 참여했어요. 1999년 5월 시민대책위는 병원을 포함

한 모든 의료기관,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상으로 하는 의약분업을 내놓았고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이러한 시민대책위 최종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해관계 너머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과정] 1999년 7월 김대중 정부는 시민대책 위원회의 합의안을 기초로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를 구성하고, 보건 의료 직능단체·시민대책위·언론계·학계·국책연구기관·공무원 등 총 25명을 실행위원으로 위촉했어요. 그러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약분업에 '사회주의' 제도라는 색깔론을 입히며 보이콧 운동에 들어갔고 이후 다양한 형태로 합의를 파행시켰죠.

[드디어 의약분업 시행되다] 오랜 갈등 끝에 2000년 7월, 마침내 의약분업이 시행되었어요. 2000년대 의약분업은 의사(의료기관)와 약사(약국)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의약품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근대화·합리화하기 위한 변화였어요. 또한 의약품 사용에 있어 의료이용자들의 여러 권리를 보장하는 의료 개혁과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 합리적 처방 유도 환경을 만들어 내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보건 의료 제도 개혁과 문제 해

결이 최초로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개입한 과정이었어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넓어지면서 국민 건강권을 보다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죠. 직능단체의 이해관계에 맞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의약분업 10년 평가 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이후 의약품 오남용 억제 효과가 커져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른 처방(스테로이드제 등)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 의약분업이 약가 마진을 통한 이윤 축적의 고리를 끊어내고 보다 의학적이고 합리적인 처방을 유도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었어요.

[참여 :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지원을] 의약분업을 추진하고자 각종 토론회나 설명회 등을 주최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친 항의와 협박 문자를 받는 등 매우 모진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의약분업 추진에 매진했던 인의협의 경우, '사회주의 의사 집단'이자 '정권의 흉위병'이라는 의사 집단 내 따돌림을 감내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회원 의사들의 탈퇴 등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기도 했죠. 환자 알 권리 확보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보건

의료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들은 의료보험 통합의 연장선으로 의약분업의 안정적이고 완전한 정착을 촉구하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아프지 않기 위해 먹는 약에 대한 알 권리도,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궁극적으로는 보편성과 공공성에 기반해야 하죠. 이번 기회에 ‘의약분업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건강 ④] 돈보다는 생명, 환자들이 거리로 나온다

“생명을 이윤과 동등한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지 말아야”

[시작 : ‘글리벡 약값 인하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00년 골수이식 외에는 생명 연장 방법이 없던 만성골수백혈병 환자들에게 치료제가 개발된다는 기적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기적의 신약’ 글리벡에 대한 개발 소식을 접한 환자들은 치료제가 국내에 조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에 호소했고, 그 결과 미국, 스위스에 이어 세 번째로 국내에서 판매가 허용되었어요. 그러나 한 달에 최소 6알, 증상에 따라 최대 10알을 먹어

야 하는 환자들에게 1알당 25,005원으로 책정된 글리벡 약값은 그림의 떡일 뿐이었죠. 당시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98만 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이 드는 약값을 환자가 부담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우회와 만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2001년 봄 ‘글리벡 약값 인하와 의약품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글리벡 공대위)’를 결성했어요. 환자와 보건의료인, 시민단체로 구성된 글리벡 공대위의 첫 공동 행동은 강남에 자리한 노바티스 본사 앞 항의 시위였어요. 환자복을 입은 백혈병 환자와 의료인들이 함께 “이윤보다는 생명이다. 글리벡 약값을 인하하라”라는 한글과 영문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었고 이날 기자회견은 제약회사에 약값 인하를 요구한 국내 최초의 시위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죠. 글리벡에 대한 접근권 운동은 의약품 특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투쟁이 되었어요. 글리벡 공대위는 당시 “약값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문제를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환자들과 시민단체의 약값 인하 요구가 거세어지자, 정부도 어쩔 수 없는 협

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노바티스는 가격을 절대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글리벡 공대위는 그 근거를 물었고, 1989년 복지부가 미국과의 양자 협정에서 국내 약값을 선진 7개국의 평균가로 정한다는 기준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죠.

글리벡 공대위는 거의 매주 노바티스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어요. 환자들의 시위는 노바티스와 정부를 모두 향해 있었고, 노바티스와 가격 결정 회의가 있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장을 기습 점거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글리벡 공대위는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투쟁을 해외 활동가들에게 알리는 등 국제 연대를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2003년 브라질 ‘세계사회포럼’ 현장에서 거대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싸우고 있는 국내 환자들의 투쟁이 소개되기도 했어요.

글리벡 약값 인하와 노바티스의 도덕성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산하자, 노바티스는 문제가 더 번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한국 구매물량의 10%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러나 글리벡 공대위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환자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며 이 알량한 제안을 거절했죠.

시민사회단체들은 글리벡을 계기로 드러난 국내 신약 약가 결정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어요. 공중보건에 중요한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 실시권(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제약)’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글리벡 공대위와 환자들의 투쟁으로 현재는 글리벡의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무상 공급 프로그램 등으로 환자들의 접근권이 개선되었지만, ‘전 세계 단일 약가’를 고수하는 노바티스의 탐욕은 꺾지 못했어요.

[의미 :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다] 글리벡 공대위는 환자와 함께 본질적으로 치료제에 대한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는 특허권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더욱 부각하고 특허권보다 생명이 우선인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동을 확장했어요. 또한 글리벡과 같은 ‘신약’의 경우, 선진 7개국(A7) 평균가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내부 계약 조건을 처음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대안을 만들다] 글리벡 공대위 소속 활동가들은 인도의 제약회사들을 방문해, 글리벡과 동일한 성분으로 더 싼 복제약(제네릭)을 만들 제약사를 물색했어요. 이때의 인도 방문과 글리벡 복제약 생산 과정은 영국 BBC 다큐멘터리로도 소개되었

고, 이후 인도 낫코사의 '비낫'이 저렴한 가격의 글리벡 제네릭으로 출시되었죠.

[참여 : 약을 사지 못해 죽어가는 환자들 이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 해 1,400만 명이 약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거대 제약회사의 권력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화되고 있어요. 높은 약값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약이 있어도 돈이 없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수십만의 환자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죠. "이윤이나, 생명이나?"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의약품의 필수재이자 공공재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1955년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어 낸 조너스 소크 박사는 "이 백신의 특허권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태양에도 특허를 낼 수 있냐?"라고 답했다고 해요. 의약품과 의학의 발전은 인류가 함께 쌓아온 사회적 산물이며 누구 한 사람의 특허로 소유권을 정할 수 없다는 의미였죠. 소크 박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아마비 환자는 백신 출시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해요. 의약품의 공공적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접근권 보장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죠.

[건강 ⑤] 시혜에서 권리로, 낙인에서 차별 철폐로

"가난한 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의료보장을"

[시작 : '의료급여 제도 개선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9년 9월 7일 제정 후 2000년 10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는 의료보호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2001년 10월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의료 역시 가난한 이들의 '권리'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죠. 시혜적 관점의 보호 개념이 수급 권리로 바뀌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도 국가와 사회에 당당히 의료 서비스를 주장하게 될 수 있었어요.

2001년 10월 기존의 '의료보호 제도'를 대체하는 '의료급여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의료보호' 제도는 경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복지정책 중 하나였지만,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었고, 의료보호 카드를 제시해야만 진료할 수 있어 의료보험 환자와의 차별 대우 문제가 컸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를 국가의 의무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시혜적' 정책으로 인식하였던 거죠.

[경과 :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001년 10월 의료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산 확대 등 몇 가지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먼저 수급 자격과 관련해서는 본인 부담금 없이 의료 보장을 받는 1종 수급자의 수가 증가했어요. 또한 2001년 신설된 중앙의료급여위원회를 주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2003년 1월에는 2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을 완화해 주기 위한 보상금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어요.

[개약의 움직임도 있었다] 2007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담론이 유포되면서 제도를 개약하고 재정을 절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어요. 시민사회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의료남용자로 보는 시각에 반대하여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을 펼쳤고, 재정 부담을 핑계로 의료급여 제도를 개약하려던 정부의 방침은 대폭 삭제, 수정되었죠.

[의료급여의 높아진 문턱]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들어 몇 가지 제도는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차상위 수급권자 중 희귀 난치성 환자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다시 전환되었어요. 이듬해 2009년에는 차상위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었어요. 근로 능력 판정 제도 기준도 더욱 엄격해져, 본인 부담금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1종 수급권자는 더욱 줄어들었죠.

[의미 :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그간 점진적 개혁과 후퇴를 진행해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저소득층 의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어요. ‘생활보호’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 개혁했고, 의료보호 제도 역시 가난한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약한 거죠. 가난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서 기초 생활 서비스 제공을 노력해 온 결과예요.

[참여 :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는 수급권자를 늘려야 합니다] 수급권자,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 이하 빈곤 위험 계층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10%~15%로 추정되지만, 2015년 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5만 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3.1%에 불과해요. 차상위계층 이하 빈곤 인구의 약 1/5~1/3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는 빈곤층 인구 비율이 너무 적은 실정이에요.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1종, 2종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이들에게도 불구하고, 단지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2종으로 분류되어 본인 일부 부담 제도(입원의 경우 총진료비의 10%, 외래의 경우 1,000원, 검사 의 경우 15%)를 적용받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의료 보장은 가난한 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의료급여 제도 개선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건강 ⑥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모두를 위한 의료를

“아파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시작 : ‘의료보험 개혁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1963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했지만, 대기업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한 1977년부터가 실질적인 의료보험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200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조합주의 방식을 취했는데, 이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경제적 지불 능력에 따라 조합 간 격차가 발생한다

는 점이었죠. 농촌지역의 경우 군 단위로 운영되었는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은 반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은 많아서 항상 적자 신세를 면할 수 없었고 매년 높은 보험료 인상에 시달려야 했던 거예요. 1989년 당시 경기도 용인군 농민들은 전년 대비 68.4%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해요.

1988년 농촌지역 의료보험 시행 직후 높은 보험료 부과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의료보험증을 반납하거나 불태우는 등 항의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이후 농민단체 등과 연계되면서 저항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보건 의료단체 및 사회단체가 의료보험 시정 운동을 함께 전개하였죠. 1988년 6월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의보대책위)’가 결성되었어요. 여기에는 30개 군 단위 의료보험 대책위, 농민단체, 보건의료인 단체 등 48개 단체가 결합하여 있었죠. 대책위는 현행의 의료보험 조합이 농어민과 빈민을 수탈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 상품화 거부,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1988년 10월에는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소득에 따른 누진적 보험료, 본인 부담금 10% 이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의료보장법(안)’을 채택하여 국회 입법화를 요구하였어요. 1989년 2월 말 농민들의 공화당사 점거 투쟁을 통하여 공화당의 통합 일원화 찬성을 끌어내기도 했어요. 3월 9일에는 통합의료보험과 소득 및 재산에 따른 보험료의 누진적 부담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고 말았죠.

[의료보험 통합운동을 추진하다] 1989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은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의료보험 통합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어요. 1994년 4월 노동, 농민, 시민, 보건의료 단체 등 총 77개 단체와 6개 지역연대회의가 모여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이하 범국민연대회의)’를 결성하였죠. 범국민연대회의는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보험 적용 확대’, ‘공평한 보험료 부담 달성’을 목표로 활동했어요.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사회보장 개혁 투쟁의 일환으로 의료보험 통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보험 통합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나갔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의료보험 통합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어요. 1998년 지역 조합과 공교 의보를 부분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공포되고, 1999년 2월에는 의료보험 완전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죠.

같은 해 6월에는 노동·시민·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가 출범하였고 의보 통합 등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어요. 직장의보노조와 한국노총이 의보 통합을 반대하는 1,000만 서명운동 등을 펼쳐 시행까지 6개월가량 연기되기도 하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2000년 7월 1일자로 통합의료보험 체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게 되었어요.

[의미 :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 의료보험 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효율성 개선,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성과가 뚜렷해요. 또한 건강보험 운영을 투명화하고, 조합주의에서 국가와 사회적 연대로 책임 소재가 옮겨왔다는 점 역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죠. 한국 복지사에 한 획을 그은 의료보험 통합 논의는 노동자, 농민, 보건 의료단체, 시민단체가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싸워온 결과예요. 민주주의와 더불어 건강권과 의료보장

확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보다 주요하게 다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참여 :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의료보험 통합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었어요.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선언문에서 드러나듯이, 보다 통합적인 의료 보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더 나아가야 해요. 지금까지의 의료보험 통합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만들어진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보건 의료·건강권 운동의 상설 연대기구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통합의료보험은 의료 위험에 대한 전 국민 연대의 실현,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 기반 마련, 공정한 보험료 부담의 실현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죠. 이번 기회에 ‘의료보험 개혁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건강 ⑦] 동네의 건강은 시민이 지킨다, 지방자치 제대로 이용하기

“지역 문제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할 의무”

[시작 : ‘담배 자판기 폐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1년 부천 YMCA 청소년 상담실 자원 상담자 모임인 ‘디딤돌 어머니 모임’에서는 설문을 통해 절반이 넘는 고등학생의 흡연 경험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나 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자판기를 주목하게 되었죠. 1992년 1월 24시간 밤을 새워 담배 자판기 이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담배 자판기 이용자의 23.6%가 중고등학생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조사 결과는 부천시역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 제정을 청원하는 시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의정지기단, 디딤돌 어머니 모임,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부천시민의 모임 등 YMCA 산하 학부모 모임 외에도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등 각기 다른 지향점을 지닌 단체들과의 연대를 가능하게 했죠. 이렇게 모인 시민단체들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해외 사례를 조사하던 중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상정 중인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발의안을 접하게 돼요. 이후 담배 자판기의 이용 제한·설치 제한·벌칙 및 상벌 규정 등의 내용을 명시한 조례 초안을 작성하여 본격적인 입법화 과정을 시작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주

민들의 방문 자체를 무시했어요. 조례의 상위법이자 담배 자판기 설치의 근거가 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재무부 령)에 따라 부천시가 독자적으로 금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였죠. 그럼에도 조례 제정 운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주민들은 담배사업시행규칙이 상위법인 미성년자 보호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찾아내는 한편 시의원들에게 엽서와 방문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 등을 벌였죠. 또한 중앙언론사 및 지역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찰청 등 관련 정부 기관, 의사회나 변호사회 같은 전문 단체들과도 끊임없이 교류했어요.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 제정]

1992년 7월 재무부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공포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1992년 7월 26일,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가 부천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죠.

[실질적 변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당시 지방자치법은 기초의회에 벌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있었어요. 벌칙 규정이

없다 보니 담배 판매회사들 역시 철거를 거부했고, 강남지역 담배 소매업자 12명은 이 조례가 헌법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죠. 이러한 상황은 지방의회의 무력함과 지방자치법의 모순을 드러내어 지방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어요. 1994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마침내 기초의회도 조례를 통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었어요.

[의미 : 지역을 바꾸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확장하다]

담배 자판기 폐지 운동은 지역에서 시작된 움직임과 성과가 국가의 자치제도 전반을 바꾼 사례라 할 수 있어요. 부천시는 오랜 시간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곳으로, 그 관심사를 지역사회 의 시민운동으로 확장했죠. 지금도 부천시 주민들은 여러 사안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이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의 만장일치 통과를 끌어냈고, 전북 남원시, 서울시 강남구 등 기초자치단체, 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에도 확산하였다고 할 수 있어요.

[참여 : 지역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 참여가 필요합니다]

1991년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함으로써, 지

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특별한 해라고 할 수 있어요. ‘30년 만의 풀뿌리 정치’ 재개였지만,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와 방청석은 한 달을 못 가 텅텅 비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경기도 부천시의 회에는 의원들보다 먼저 방청석을 지킨 ‘부천YMCA 의정지기단’이 있었어요. 의정지기단은 시민이 의정의 주인으로서 선출한 대표를 지원하고 감시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최초의 여성 부천시의원으로 선출된 최순영 씨가 지역의 생활 운동을 지방의회와 연결해 활발히 펼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나의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 기회에 ‘담배 자판기 폐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건강 ⑧] 가슴기살균제 사건 후 10년, 말뿐인 사과 말고 재발 방지 대안을

“가슴기 살균제 사건 후 10년, 화학물질 관련 3법이 만들어지다”

[시작 : ‘화학물질 3법 입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1년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을 겪고 있는 7명의 산모가 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중 4명이 치료 도중 사망했구요.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질환이었으나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더 확인되었고, 담당 의사는 새로운 감염병의 심을 질병관리 본부에 신고했어요. 그해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이 실제로는 가슴기 살균제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는 사실을 역학조사로 밝혀냈어요. 2020년 7월 10일 기준, 사망자 1,552명 그리고 피해 생존자 5,254명.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6,808명에 달해요.

이 밖에도 2012년 구미 국가산단의 휴브 글로벌 사업장 불산누출 사고, 생리대 유해 물질 파동, 라돈 침대, 살균제 달걀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는 늘 우리 주변을 맴돌았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따져보니 위험한 물질이 있었다는 걸 이런저런 사고, 사태, 파동을 겪으며 깨우쳐왔어요. 우리 집 주변의 공장이,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화장품이 막연히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기에 충분히 많은 경험이 쌓여온 거예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구미 불산누출사고와 가슴기살균제 사고는

국가 제도와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민사회 역시 화학물질 사고를 둘러싼 진상 규명과 제도 변화, 시민의 알 권리 강화, 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고요. 환경운동연합은 각 기업이 생활 화학물질 제품의 성분을 어느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화원'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전 성분 공개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여성환경연대 역시 생리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문제를 제기하여 생리대 제품의 전 성분 공개를 성과로 끌어내기도 했고요. '발암물질 사회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의 경우 유해 물질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학교 교구, 체육용품, 문구용품 등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화학물질 3법 입법 성공] 이 과정에서 지난 2015년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그리고 지난 2019년 1월부터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어요. 화관법은 구미 불산누출과 같은 사고를 예방

하고 주변 주민들의 일상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사업장의 관리 방안을 담고 있어요. 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정보를 국가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따른 관리 책임을 지게끔 하는 법률이에요.

[의미 : 판매 이전에 기업의 책임 강화]

화평법과 더불어 살생물제법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생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전에는 시민들이 보도를 접한 후에야 정부에 안전 여부를 알려 달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품이 개발, 출시되는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요. 그동안 가슴기살균제, 생리대, 침대, 화장품, 장난감을 둘러싼 안전 논란이 제기될 때 기업들이 하나같이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 '안전하다'라는 말로 무마해 왔던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거예요.

2013년 환경부 화학물질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4만 7천여 종이 넘고, 매년 600종 이상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등록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는 12만 종이 넘게 유통되고 2천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새로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화학물질 제품을 시장으로 들이려는 기업에게 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입

증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안정성과 기업윤리를 강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돼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살생물제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기업들의 자율 관리를 강화하며 전 성분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성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없이 공개만 이뤄지다 보니 시민들이 제도 변화의 장점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환경부 시민사회 단체들이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품의 위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트에서, 시장에서 시민들이 구입하는 순간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해요. 또한 생활 화학제품 생산자들의 항균, 탈취, 안전 관련 과잉 광고를 제한하여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제품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화관법과 화평법을 포함한 화학물질 3법의 시행으로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어요. 이제는 기업이 화학물질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과 판매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정보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책임지도록 해야 해요.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과 소비자의 안전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

책을 마련하고요. 이번 기회에 ‘화학물질 3법 입법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건강 ⑨】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 주민자치 건강권 확보 운동이 던진 질문

“우리 사회의 돌봄 정책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

[시작 : ‘주민자치 건강권 확보 운동(의료협동조합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63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만들어져서 시범사업을 거친 뒤 1977년에 본격적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어요. 의료비가 비싼 탓에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 의료보험법 도입의 이유였죠. 이후 차례대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1979년), 5인 이상 사업장(1988년)을 거쳐 도시지역 자영업자(1989년)까지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변화에 모두가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내주기 때문에 50%만 부담했으면 됐던 직장인들과는 달리, 농민들은 100% 본인들이 납부해야 했으며

로 경제적 부담이 컸다고 해요.

[경과 : 주민자치 건강권 확보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의료협동조합 운동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관계를 살아가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생활변화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윤 추구를 가장 중심에 둘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협동조합'은 소외된 이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고 유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의료협동조합'이 출범하게 됐어요. 1994년 안성, 1996년 안산, 1997년 인천 등, 주민이 조합원으로 공동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서로 돌보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전국 각지에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인 지역건강 운동이 시작됐어요. IMF를 거치면서 주민들은 실직하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협연대'는 장애인, 노인 가정을 찾아가 가사, 간병, 목욕서비스를 제공했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되어 이후 사회적일자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어요. 2015~2017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지역건강네트워크 구축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

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수행하기도 했어요.

[의미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뚜렷한 수요를 확인하다] 사실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30년 전부터 민간이 알아서, 주민들의 필요로 인해 의료협동조합이 해오던 일이었어요. 처음 의료사협이 생기던 시절에 이들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건강의 관계망을 만드는 활동으로 발전했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돌봄 사업을 확장하고 돌봄 네트워크를 두텁게 만드는 데에 기여했어요. 대표적인 의료사협 중 하나인 서울 은평구의 살림의료사협이나 노원구의 함께걸음의료사협은 돌봄 주택 사업을 준비하거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중이에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가장 중요한 건, 의료사협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어요. 어딜 가나 믿을 수 있는 주민자치 기반의 돌봄시스템 제공 주체가 있다면 이사도 안심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덧붙여, 처음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도입되었을 당시 건강 코디네이터가 법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지역사회 내의 자원 연계를 위해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이 역할이 들어있지 않고, 최소한의 운영 재원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결국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괄적

운영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사회는 돌봄에 대한 가치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우리에게 는 고령화 사회라는 묵직하고 커다란 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어요. 돌봄의 가치는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단순히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들떠보지 않기에는 주민자치 건강권 운동이 던지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 ⑩]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 안전 상비약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상비약, 약국 밖에서도 살 수 있게해주세요!”

[시작 : ‘안전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 갑자기 아플 때면 보통은 구비된 가정상비약을 사용해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비약이 없다면? 약국 문이 열릴 때까지 불편을 참고 기다리거나 응급실로 달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증상으로 인한 불편은 물론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2012년 이전까지 모든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단순의약품, 필수약품의 구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가계 의료비 절감을 위해 상비약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판매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1년 3월 23일 열었습니다. 특히 약국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중소도시 등에 의약품 구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판매장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어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경실련은 일반의약품 정책제안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품목 제안서 등을 제출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해외 사례와 비교해 일반의약품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정책 제안 운동을 지속해서 진행했어요.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약사회는 전국적으로 약국 수가 많다는 점과 약의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정치인들은 지역 약사회를 의식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합니다. 심지어 서울시약사회는 시민단체가 대기업과 유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이르러요.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아파도 걱정 없도록

안전상비약 판매는 어떻게 확대되었을까요?



변화사태 아카이브
NPO X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2020

1. 시작



- 상비약, 쉽게 살 수 있나요? (~2012)
- 가령 내 상비약이 떨어지면? (생약 공황)
- 약국 문닫기 기다리기 / 응급실 가기

독점 판매

모든 의약품: 약국에서만 구입가능
⇒ 소비자 구매불편, 지역별 가격차이

구입 불편성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 필요
일반약품: 처방 없이 구입가능
부작용 적고 과소용 우려가 없는 간단한
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구입가능

해외에서는 일반의약품(안전성 입증)은
약국 외에서도 판매허용 ⇒ 구입편의

판매 허용 촉구

경실련
국민 자가격리 의약품 접근성 확대
취지 | 의료비 절감, 의료이용권 보장
판매 장소 확대, 포장단위 제한
표시 기재 정보제공

2. 성과

- 안전한 상비약 약국 밖에서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 방향 제시** 2007년: 안전성, 효과성 검증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의견서 제출
- 분류체계**: 일반의약품/전문약품 + 약국 외 판매 의약품
2008년: 대통령 인승위에 제안서 제출

반반

서울시약사회: 의혹 제기 → 경실련 운동 통해
대한약사회: 결의대회, 비대위 구성, 복지부 합의방문
지역 약사회: 국회의원 직접 면담, 조직차원 국회 반대
약사회는 판매요건을 감태우고자 '심야응급약품' 도입 주장

심야응급약품

경실련 4년터단 조직 직접조사
- 전국 약국 약의 0.3%에 불과
- 절반이상 수도권 집중
- 운영실태 허술

대대적 공세

- 경실련 전국응동으로 선포, 기자회견
- 거리서명 캠페인, 온라인 서명
- 심야약국 실태조사
- 전국 다수의약품 가격조사

실현성 없음?

개정

2012. 2: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2012. 5: 약사법 개정

3. 현황·과제

성과

공급자 / 전문가 중심
→ 소비자 편의
중심 방향 개선

운동 방식

전국응동 + 지역별
가치 + 참여 { 지역실태조사
캠페인
국민의 목소리 전달 / 여론 형성
국회의 관련 법 개정

품목 확대 필요

개정된 약사법: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
: 24시간 판매 가능
↓ 약사회 감수
13개 품목만 지정

2019 경실련 국민대상 설문조사
- 품목 확대 필요: 압도적 의견
- 특정 의약품이 아닌 효율성 기준 검토
- 품목별 지정이 아닌 선행명 지정
⇒ 상비약 목록 확대

그래픽 서머리: 정진호

그러나 경실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11년 3월,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경실련의 전국 운동으로 선포하고 전국 단위의 기자회견과 거리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아 국민 여론을 모으는 데 힘썼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2011년 8월, 청와대의 강한 반발과 여론의 비판에 힘입어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함과 동시에, 약사회가 해당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게 되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약사법 개정안이 2012년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5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비약을 약국 밖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의미 : 의료정책 방향성의 개선] 이 운동은 의료정책을 공급자·전문가 중심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게 했다는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확장하면서 실태조사, 캠페인 등 지역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에 성공했어요. 약사들의 격렬한 저항을 뚫을 수 있었던 것도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여론을 형

성하고 논의의 장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13개 품목만 지정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의 반발로 인해 20개 특정 제품 중 지사제와 제산제, 항히스타민 등은 아예 배제된 것이죠.

복지부는 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사회 위원의 자해 소동 등 반발로 6차례 회의 동안 한 개의 품목도 늘리지 못했어요. 2019년 경실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국 외 판매 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향후 특정 제품이 아닌 효능군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품목별이 아닌 성분명으로 지정하는 등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 목록을 늘려나가야 할 거예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처음에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요구가 거세지자 이를 잠재울 목적으로 '심야응급약국', '당번약국제' 도입을 주장했어요. 그렇게 심야응급약국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경실련이 심야응급약국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직접 조사에 나섰어요. 직접 방문해서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심야응급약국은 전국 약국 수의 0.3%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수도권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렇게 심야응급약국은 실효성 없는 대책임을 경실련이 밝혀냅니다. 이런 끈질긴 휘방과 반대에도 경실련의 더 끈질긴 집념과 노력이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CHAPTER
05

교육



[교육 ①] 제도 개선에서 학교문화 혁신까지, 교육 민주화를 향하여

“바람직한 학교 조성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시작 :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 혁신의 뿌리는 1980년대 비민주적인 교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1989년 5월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9월 설립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가 중심 역할을 했죠. 전교조는 제도 교육의 문제를 비판하고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표방하며, ‘참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어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제도 개선 외에도 촌지, 부교재 채택료, 방학책 강매, 육성회 불법 찬조금, 졸업앨범 커미션 비리 등 잘못된 관행에 맞서 싸우며 국민적 지지를 얻었어요. 국어과 교사모임(1988년), 전국역사교사모임(1990년) 등을 통해 주입식 교육, 왜곡된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실 안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죠. 1990년대 들어서는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개혁 운동, 교육법 개정 운동, 학교 민주화운동을 펼쳤으며, 이는

2000년대 학교 혁신 운동의 밑불이 되었어요.

[잠깐, 혁신학교는요]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혁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쟁과 성적 위주의 수업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성 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 교사-학부모-학생 간 소통을 중시하죠. 남한산 초등학교는 공교육을 혁신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힘을 모아 만든 새로운 공교육 학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과 : 학교의 장을 직접! 교장공모제]

2007년 9월, 6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 교장공모제도 학교혁신의 큰 바탕이 되었어요. 교장공모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교사 및 학부모 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제도로,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장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부형, 개방형, 초빙 교장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특히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새로운 교육 혁신을 시도해온 교사들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개혁 의지를 가진 교사들의 열정, 학부모 및 지역사회

회의 노력과 함께 교장공모제를 통한 거버넌스 개선이 혁신학교라는 제도를 제도 위에 올려두었어요.

[학교 운영을 함께 고민하는 위원회]

1995년 제도화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어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및 학생의 요구를 학교 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예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 등 공급자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예요. 학교운영위원회는 보충수업 폐지, 교장과 교사 초빙 추천 등 기존에 교장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한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이에 반감을 가진 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초기 일정 등 필요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젊은 교사의 참여를 막기도 했죠.

[보다 민주적인 교육 정책을 위한 도약]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뜻있는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 기여했어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

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바로 알리기 운동을 펼치고,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학교 운영위원회 불법 선거 방지 등 관련 활동을 지속해서 해나갔어요. 201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동이 지역 풀뿌리 운동과 결합하기 시작했어요. 교육희망네트워크와 같이 지역사회 내 교육 정책에 집중하는 풀뿌리 운동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해당 단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고교 평준화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의미 : 공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다]

1990년대까지는 비민주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2000년대에는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학교라는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육 혁신을 이뤄나갔어요. 독재 정권하의 제도 개선으로 시작된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혁신적인 학교 모델을 만들고,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개선 운동으로 확대되어 나갔어요. 참교육 학부모회 등은 1980년대 말부터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즐기치게 벌여왔어요. 1990년부터 시작한 돈 봉투 없애기 운동, 체벌 등 학생인권 유린 방지 활동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학생활동 보장, 학교 급식 개선, 불법찬조금 몰아내기 등을 즐기치게 펼친 결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어요.

[참여 :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을 위해서는 아직도 만들어가야 할 것들이 많다]
바람직한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하죠.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 내 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지역 풀뿌리 운동으로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가 가장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어요. 지역 간 격차와 학교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혁신학교 제도가 없는 지자체 등에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또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학교는 공부 외에도 삶을 배우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공간에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삶의 역량을 기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기회에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교육 ②]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검은 마음, 촌지가 뇌물이라는 당연한 사실

“학교 안에서 공공연하게 주고받는 뇌물, 촌지”

[시작 : ‘촌지 거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촌지 문화는 굉장히 성행했어요.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건네지는 촌지는 부정한 청탁 혹은 강요에 의한 악습이에요. 촌지는 학부모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자 부정 특혜를 유발하는 뇌물이지만 감사와 후원의 뜻을 담은 작은 정성인 것처럼 은폐, 축소되었어요. 오랜 시간 촌지가 가진 위법성에 대한 자각 없이 일종의 미풍양속인 것처럼 포장되기까지 했던 거죠.

1989년 4월 전국교사협의회 울주·울산 교사협의회를 통해 초기 단계의 조직적 촌지 거부 운동이 일어났어요. “제2차 봉투 안 받기 운동을 전하며” 성명서는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촌지를 거부하거나 사양하는 시도는 이전에도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촌지 거부 운동’은 교육 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교사협의회와 전교조에 의해 조직되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전교조의 전신은 1987년에 결성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예요. 바로 이 전국교사협의회에서 촌지 거부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죠. 전

교협과 전교조의 촌지 거부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던 학부모들은 물론 양심의 가책을 느껴온 교사들도 대대적인 호응을 보냈어요. 1989년 11월 '돈 봉투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가두 선전의 날 행사(전교조 부산지부), 1990년 4월 '돈 봉투 문제 어디까지 왔나' 공청회(참교육학부모회), 2002년 3월 '신뢰받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거리 캠페인과 서명 운동(부평여성회와 전교조 인천지부 등 시민단체들) 등을 거치며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로 번져 나가 범사회적 운동이 되었어요.

[어떻게 비리를 척결해갔을까] 촌지 거부 운동을 포함한 비리 척결 운동은 참교육을 방해하는 비민주적 관료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촌지 거부 운동과 같은 시기에 전개된 사립학교 교원 채용 기부금 반환 요구 투쟁, 부교재 채택료 거부 투쟁 등 다른 교육 비리 척결 운동 역시 다른 이름의 촌지 거부 운동이자 참교육 운동인 셈이에요.

[의미 :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 촌지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비리를 용납하지 않는 윤리 의식이 사회 전반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해요. 전교조의 촌지 거부 운동은 법적 처벌이 아닌 자발적인 윤리 의식 각성 운동으로서 성과를 냈는데에 그 의의가 있어요. 촌지 거부 운

동과 같은 학교 내 비리 척결 운동은 사회 전반에 산적해 있는 비리를 척결해 나가는 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어요.

[참여 : 학교에서 아직도 흐르고 있는 검은돈] 전교조의 촌지 거부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고 그사이 촌지라는 이름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촌지와 유사한 형태의 금품 수수를 조장하는 문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교사를 만날 때마다 부담을 느껴야만 했던 촌지, 내 아이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촌지,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특별히 보살펴지기를 바라는 촌지 등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촌지의 성격을 잘 말해 주고 있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뇌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예요. 이로 인해 실현된 부당한 이익과 피해는 다시 정당성이 없는 권력과 부를 생산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에 불신과 부정행위를 조장하게 되죠. 이번 기회에 '촌지 거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교육 ③] 고등교육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

“대학의 비민주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라!”

[시작 : ‘반값등록금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처음 대두된 것은 1989년이예요. 노태우 정권이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통해 등록금 책정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개별 대학으로 이양한 것이죠. 그 결과 대학 등록금은 폭등했고 가계에서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어갔어요. 이후 IMF 구제금융위기를 막 벗어나던 1999년 말 대학 등록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인하 요구가 커지게 되었죠.

높아진 실업률로 ‘대학생도 취업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대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등록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던 시기 대학 진학률도 나란히 높아지면서 등록금은 일부 대학생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였죠. 전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학교를 넘어 정부를 대상으로 공동투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2004년, 전국 대학생 교육대책위가 결성되었어요. 2006년 학생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8천여 명이 교육공동행동에 참여하였고, 2008년 대학생들과

학부모단체,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 시민단체 540여 개가 함께 ‘등록금넷’을 결성해 등록금 문제를 알렸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값등록금은 2006년 지방선거를 4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를 발표하면서 처음 등장했어요.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약 사실을 부인하며 2009년 5월 취임 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도입했죠. 그러나 상환제는 원금의 3배까지 갚아야 하는 복리 이자로 설계되었으며, 5.7%의 높은 이자율이 책정되었어요. 2009년 한 해는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이후 등록금 인상은 계속되었어요. 결국 신입생만 울며 겨자 먹기로 상환제를 신청해야 했고, 대학생·학부모단체는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었어요.

[반값등록금에 범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에서의 패배를 경험한 한나라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위기감을 안고 ‘민생 정책 기조 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값등록금’ 카드를 다시 꺼냈어요. 그러나 한나라당이 말하는 반값등록금은 ‘소득 하위 50%에 대한 차등 장학

금 지원 제도'와 함께 'B 학점 이상'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하는 형태였어요.

5월 29일 보다 포괄적인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는 대학생 1,000여 명은 기존에 집회신고를 냈던 마로니에 공원 대신 광화문에서 긴급 시위를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70여 명의 학생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면서 전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게 되었어요. 5월 29일을 계기로 매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반값등록금 집회는 '날라리 선배부대'와 시민사회단체·학부모 모임과 함께 한 '반값등록금 운동본부'를 통해 전 국민적 투쟁으로 확대되어갔어요.

[마침내 구현된 반값등록금 정책!]

SNS와 결합한 30대 날라리 선배들은 '대학생들과 함께 하자며'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광장을 함께 열었어요. 그 결과 6월 10일에는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반값등록금을 요구하기 위해 광장을 가득 메웠죠.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작해 이제는 전 국민적 투쟁이 된 반값등록금 운동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무상급식과 함께 복지 패러다임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어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반값등록금 정책협약'을 진행하고 당선 직후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면서 해당 정책을

현실화했죠. 2012년 최초로 '등록금 인하 사례'를 만들어낸 반값등록금 운동은 이후 '국가장학금 제도'로 확장·발전되기도 했어요.

[의미 : 대학 등록금 문제를 민생경제 문제 전체로 확장하다]

2006년 8천여 명이 참여한 교육공동행동 성사를 시작으로 교육 문제를 사회정치 여론화시키는 시도가 이어졌어요. 등록금 투쟁이 대학생들뿐 아니라, 교수,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 간의 주요 사안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인식의 확장은 대학 등록금 문제가 비단 교육 주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생경제 전체를 관류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조명해요.

[참여 :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대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이는 입학금, 등록금, 실험실습비, 졸업준비금 등이 별다른 기준 없이 임의로 책정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대학 교육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또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고, 정부 예산 일부를 받아 보상하려는 시도는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근본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턱없이 부족하죠. 앞으로 우리 사회는 "교육비에 대한 정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불투명하게 산정되는 등록금과 대학의 비민주적 운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대학에 입학해 교육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금 빚에 허덕이는 청춘이 아닌 빚을 낼 수 있는 청춘’을 위해서는 대학 운영에서 투명성·민주성·책임성이 실현되어야 하죠. 이번 기회를 ‘반값등록금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교육 ④] 생각이 확장되는 대안교과서, 잠자는 교실은 이제 그만

“제도화된 교육과정에 배움의 흥미를 잃는 아이들”

[시작 : ‘대안교과서 만들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한국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포기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015년 5월 수포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개 나라의 수학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국

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어요. 이를 통해 수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사걱세는 과거와 같은 검정제 교과서로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식의 수업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주입식 수업과 ‘찍기’ 시험으로 평가되는 수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대안 교과서 개발을 시작했어요. 학생의 수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수학 수업과 평가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 거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수학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모금한 돈으로 대안 교과서 <수학의 발견>을 제작할 수 있었어요. <수학의 발견>은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학습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구성했어요. 이후 2019년 3월부터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69개 중학교 1, 2학년 학생 약 1만여 명에게 사업세가 제작한 <수학의 발견>을 보급했어요. 신청한 학교의 수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안 교과서 활용 집중 연수도 진행했죠.

강원도교육청 외에도 대안 교과서로 인해 전국에 의미 있는 흐름이 생기고 있어요. <수학의 발견>을 사용하는 수학 교

사들을 중심으로 수업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전국적으로 생겨났어요. 2019년 1월 23일 사업세와 전국수학교사모임이 협력하여 세미나 팀 발대식을 가졌고 현재까지 전국 총 10개의 세미나 팀이 운영되고 있죠. 학습공동체를 통해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으로 가닿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교사들의 변화와 함께 학교 수업도 달라지고 있어요.

[의미 : 즐거운 배움의 과정을 만든다]

대안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한 학교의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수업을 참여하고 그 안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수학 수업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 상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할 수 있고,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주고받음으로써 수포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죠. 수업 시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서로를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업의 동료로 인식하고 함께 배워나가는 즐거움을 맛보는 거죠. 수학이 어렵고 수업이 지루해서, 혹은 경쟁 구도에 따라가기 지쳐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의 수를 줄이고, 나아가 전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학문을 배우는 것 외에도 함께 고민을 나누고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이뤄져 있어요. 어려운 수학 과목이라 할지라도 답을 함께 찾아 나갈 동료가 있다면 포기 대신 도전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죠. 이번 기회에 '대안교과서 만들기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교육 ⑤] 엄마들이 움직였다,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유아교육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시작 : '유아교육 정상화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7년 2월 범부처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전국 9개 시·도 95개 유치원, 어린이집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91곳이 부실 운영으로 적발되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어요. 총 609건의 위반 사례가 있으며, 205억 원의 부당 사용액이 있었고, 가족 중심의 불법적 시설 운영, 금지된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적립금을 변칙 운영, 위생 관리 부실(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등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위협할 사안의 존재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러나 정작 발표된 내용에서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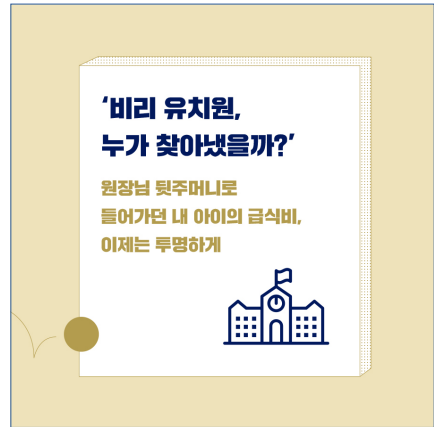
발된 기관명은 빠져있었고, 2017년 4월에 시작된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기관명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된 사립 유치원에서는 입금하는 계좌가 여러 개로 분산 운영되거나, 필요 경비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라는 등 재원 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뤄졌어요. 또 “아이가 기관에서 돌아오면 그렇게 배가 고프다고 한다”며 영양 관리가 잘 되는지에 대한 의심도 있었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 보육 교육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사회 전반에 퍼져있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7년 7월 25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아교육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세미나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무력으로 행사 개최를 막아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로지 이익 추구에만 골몰하여 세미나를 무산시킨 뒤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한유총의 횡포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정치하는엄마들은 곧바로 “유아교육·보육은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2017년 10월 25일 정부와 여



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어요. 당초 2022년 목표로 했던 원아 수 기준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2021년까지 40%로 확대하고,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2020년까지 도입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유치원 비리 신고 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어요.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은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발된 비리 유치원의 명단 공개를 요청했죠.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경기도 교육청 양측 모두로부터 “비리 유치원 명단을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돼요. 이에 2017년 11월 2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 차례 더 기자회견을 했어요. ‘대통령 임기 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 공약 달성을 위한 연도별 이행 계

획을 공개하고, 정부 및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유치원·어린이집의 명단을 즉각 공개해 처벌할 것, 국공립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아동 대 교사 비율 제고에 국가 재정을 우선 투입할 것 등을 요구했죠.

[의미 :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

마침내 10월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그간의 감사 적발 내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양육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비리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지 촉각을 세웠고 사안의 심각성에 분개했어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비리 내용과 금액 정도가 심각했던 경기도 동탄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부모 비대위가 꾸려졌죠. 정부와 여당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후 유치원 3법은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어요.

[당사자, 행동으로 변화를 만든다]

아이를 키우며 직접 불합리한 점을 체감했던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아교육의 현실에 의문을 가졌고 분노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어요.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언론

의 낮은 관심, 소극적이고 적대적인 기관의 태도 등으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기자회견과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에 걸쳐 국회의원들에게 사안을 알리고 문제 제기를 요청하는 과정을 지속해 변화를 만들어냈죠.

[참여 : 더 이상 관행을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 실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정부는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정파와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유치원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한 거죠. 한유총 회원 수백 명이 위력으로 세미나를 파행시키거나, '집단 휴원' 카드를 수시로 내밀어도 번번이 무릎 꿇고 방관했어요. 행정당국의 탁상행정과 임기응변식 관행으로부터의 단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한 아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이는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 노동·보육·교육·주거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관계 맺고 자라는 환경이 보다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업화에 대한 경계가 필요해요. 이번 기회에 '유아교육 정상화 운동'이 가지

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하면 어떤가요?

[교육 ⑥] 엄마들이 나서서 낸 목소리, 유치원 비리에 맞서 법을 만들어내다

“유아교육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들이다”

[시작 :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활동(유치원 3법 제정)’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정치하는 엄마들은 우연한 기회에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 척결추진단의 보도자료를 접했어요. 2017년 2월에 실시한 전국 대형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95곳 특별 감사 결과 내용을 발표한 것이었는데, 총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으며 부당 사용 금액이 약 205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치하는 엄마들은 혹시 보도자료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정보공개 청구 작업은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로 이어졌어요. 엄마들은 아이 손을 잡고 관련 행사에 나가기 시작했고 행사를 보이콧 하던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집단 휴원을

강행하면 어차피 워킹맘들은 원의 뜻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활동을 방해했어요. 이에 개탄한 엄마들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현장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어요. 또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엄마들은 발 빠르게 대응했어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MBC 뉴스 보도 이후, “대체 그 유치원이 어디래요?” 라는 질문이 대표 포털사이트에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연일 상위 랭크에 ‘비리 유치원 명단’ 검색어가 오르내리고, 각종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사립유치원 비리 행태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비리 유치원 공개 뒤엔 ‘엄마들’의 추적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신문사 토요판 커버스토리가 게재되면서 청취율이 높은 각종 TV, 라디오 프로그램 섭외 요청도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전국민이 유치원 비리 실태에 공분해 법안 개정을 함께 요구하는 계기가 마련됐어요.

교육부가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11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심사에 돌입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난

관은 '유치원 3법'의 소관 상임위원인 국회 교육위원회였어요. 예상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는 거셴고 법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사립 유치원을 대표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 3법 제정 반대 공세가 이어졌고요.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물러서지 않고 맞서 대응했고,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며 광화문 집회를 열고 여론을 만들어 나갔어요.

[의미 : 유치원 3법 입법 성공] 결국 2018년 12월 27일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3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383일 뒤인 2020년 1월 13일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어요. 그 결과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었어요. 유치원 교비가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덧붙여 정부가 부담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해 학부모가 부담한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어요. 나아가 유치원의 운영 실태 평가 공개,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을 의무화했으며 유치원이 제

재 처분을 받을 경우 관할청이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유치원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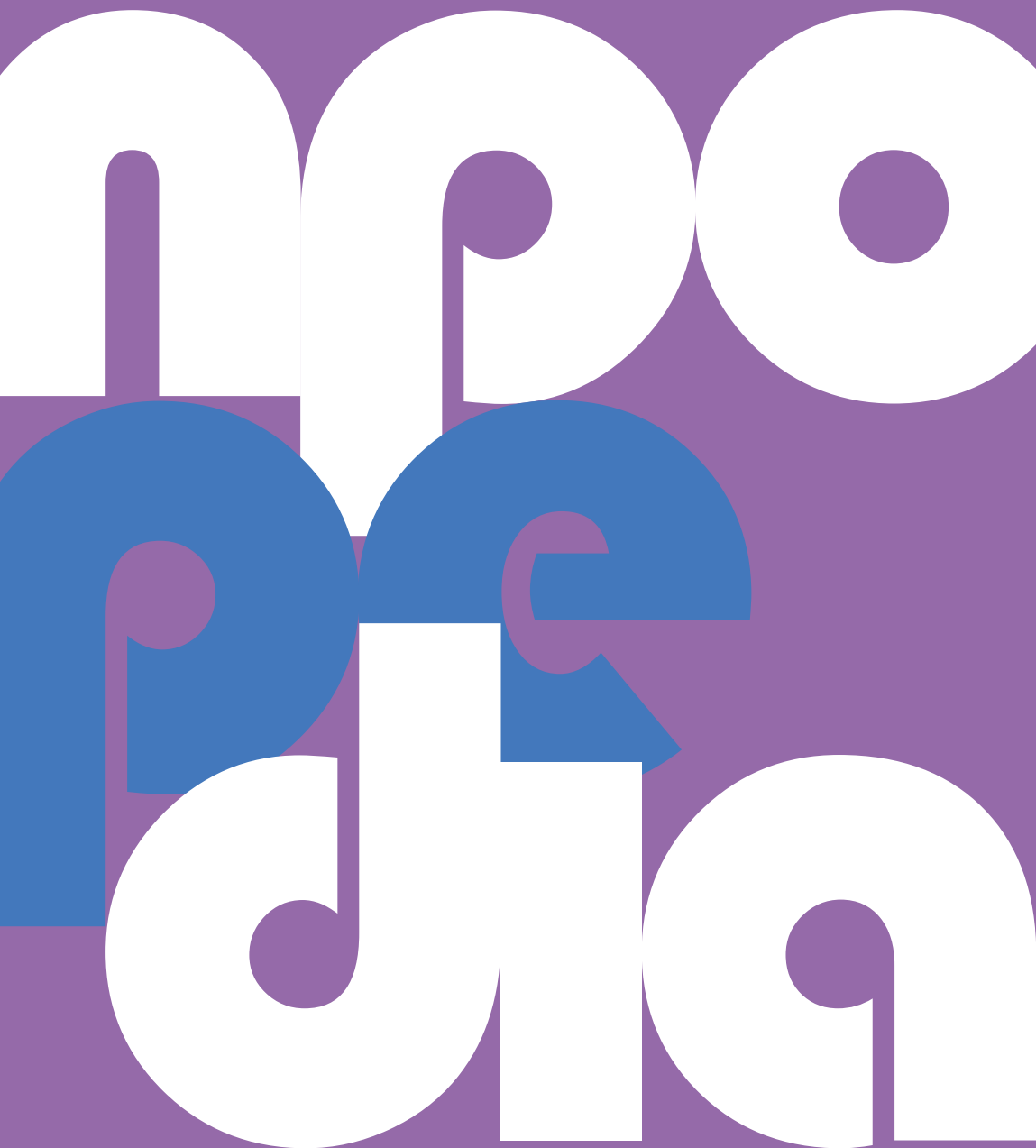
[참여 : 계속되는 운동] 물론 유치원 3법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원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모든 유치원에 예외 없이 적용되기를 바랬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한정 적용하도록 한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법 통과 이후에도 과제는 남아있어요. 법으로 도입이 의무화된 에듀파인 및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관리 감독 인원 총원 역시 차근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도 같은 수준의 보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비리 해결을 위한 제반의 활동들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치원 3법 이외에도 무려 22년째 동결되어 온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끈질기게 촉구해 관련 예산 증액을 끌어냈어요.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썼고 그 결과 '하준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을 통과시켰고요. 전국 스쿨미투 전수조사

및 스콜미투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했고, 한국형 맥도날드 병의 사실상 검찰 재수사 착수 약속 등의 변화도 끌어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활동을 응원하며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CHAPTER
06

여성



[여성 ①]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호주제는 위헌이다

“우리 삶 주변에 깔려 있는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들”

[시작 : ‘호주제 폐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이태영(1914~1998) 변호사는 첫 여성 서울대 법대 졸업생이자 최초의 여성 사법고시 합격자였어요. 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여성은 아직 이르기 가당치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태영을 판사 임용에서 제외했고,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었죠. 1953년 가족법 초안이 마련될 당시 이태영은 여성계 대표들과 함께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죠. 이후에도 호주제가 국민 개개인의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조장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1979년, 1989년 두 차례 가족법이 개정되는 동안에도 호주제는 계속 유지되었고, 1998년 끝내 변화를 보지 못한 채 이태영 변호사가 별세했어요.

1999년 5월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호주제폐지운동본부’를 발족해 서명운동, 사이버 시위,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을 전개했어요. 보수적인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먼

저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 언론과 저명인사의 입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한편, 토론회와 의원 간담회도 활발히 열었어요. 대선, 총선과 같은 큰 정치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정당에서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운동을 벌였어요. 2002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을 포함해 모든 당의 대선 후보들이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하게 되었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1997년에는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존엄, 양성 평등한 혼인 제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이와 같은 논리라면 호주제 역시 위헌 결정이 타당했기에 2000년 말부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주축으로 한 호주제 위헌소송이 이어졌어요.

동성동본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유림 쪽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씨족총연합회·성균관유도회 총본부·한국독립동지회·대한노인중앙회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은 “은 나라가 콩가루 집안이 되고 우리 민족이 개·돼지와 다름없이 되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가족법 졸속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를 가진데 이어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1천만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어요. 호주제 폐

지는 중복이라는 엉뚱한 이념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토론 방송에서 “호주제가 없으면 한국 인구 상당수가 쌍놈”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시대를 거스르는 발언으로 반감을 샀죠.

[의미 : 선택의 권리를 확장하다] 2003년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5번의 변론 끝에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어요. 호주제는 2008년 완전히 폐지됐고, 가족 구성원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되었어요. 이후 혼인 신고서 양식에는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와 같은 항목이 신설되었어요.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이 문항에 “예”라고 체크하는 경우는 2008년 65건, 2009년 211건, 2010년 128건, 2011년 215건, 2012년 212건이에요. 매년 200건 안팎에 불과하지만, 선택의 권리를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참여 : 여전히 견고한 부계 관습을 바꿔야 합니다] 호주제 대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됐지만 기본 틀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외국인 남편을 둔 여성만이 자유롭게 자녀의 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남성’ 중심의 가족관계를 여실히 보여주죠. 법에 선택 조항이 마련되긴 했지만, 혼인신고 과정에서 미래 태어날 자

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하겠다고 결정, 주장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아요. 지난 2014년 2월 남인순 의원은 ‘부 우선의 성분 제도를 탈피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선택하여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 차례 상정된 후 거의 논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으로부터 수차례 민법상 부성주의 원칙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호주제 폐지는 단지 누구의 성을 따르는가의 문제만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가족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번 기회에 ‘호주제 폐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여성 ②] 만연한 차별을 견어찬다, 여전히 불평등에 저항한다

“남녀가 함께 일하고 국가가 함께 돌본다”

[시작 :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80년대 이후 증가한 기혼 여성노동자의 수와 높아진

여성노동자 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은 무보호 상태의 여성 노동환경이 지속되어왔어요.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1990년대 초반 '평등한 노동, 건강한 모성', '평생평등노동권 확보' 등의 슬로건 하에 노동시장에서의 모성 파괴 실상을 폭로하고, 모성보호는 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임을 알리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왔어요.

고용상의 성차별 철폐는 여성운동의 핵심과제인 동시에 노동자 전체의 관심사로 확장되어야 하는 사회문제예요. 여성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는 성평등 인식의 확산과 법 제·개정을 위해 단체 설립 초기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벌여왔죠. 그 결과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불투명하고, 법 실행의 강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컸어요. 여성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1995년까지 두 차례 법이 개정되었죠. 그 과정에서 남녀 차별 금지 규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 등이 다소 보완되었어요.

일부 내용이 개정되긴 했지만, 여성운동 진영이 핵심적으로 요구한 간접차별 및 성희롱 금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1993년에 발생한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역시 고용상의 성차별 문제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게 되었죠. '서울대 조교 성희롱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 당사자의 법적 싸움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상의 성차별 내용을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논리와 근거를 개발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어요. 직장 내 성희롱 역시 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의미 : 행동하는 당사자가 만든 변화]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운동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의 법제화를 통해 직장 내 여성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과 조직문화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어요. 출산 전·후 휴가 90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임신·출산·양육 때문에 여성들이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현장에서 쌓인 경험과 지식] 여성단체들이 요구한 의제가 실제로 법제화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성연합의 회원단체

들은 상담·교육 활동을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법 제·개정에 필요한 기초 연구 작업을 해왔어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리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두루 검토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수집하여 이론과 경험을 쌓아 나갔죠. 이를 토대로 법안을 직접 작성하여 청원안을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탄탄하게 쌓인 설득력으로 변화를 만들어 나갔어요.

[참여 : 성평등한 일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적 저임금, 성별에 따른 업무 배치, 성별 직급 분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차별 시정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이 도입되어도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는 여전한 상황이지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이에 대한 왜곡된 시선 또한 어딘가에서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공감하고 동조하며, 지지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만나 목소리를 조직하고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다양한 노동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와 제도 마련이 중요해요. 이번 기회에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여성 ③] 끝까지 말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말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시작 :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86년 독재 정권의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후 여성단체들과 공동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요. 극심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이어가며 법원 앞 항의 시위, 성명서 발표, 석방 서명운동, 특별검사 선정 건의서 발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등 3년여 동안 활동을 이어 나갔죠. 성을 고문의 수단으로 삼는 군사독재 정권의 반인륜적 폭압에 분노하는 과정에서 정권 타도의 구호도 터져 나왔어요. 이때의 투쟁이 성폭력 추방 운동 기초가 되었죠.

여성단체들은 1988년 영생애육원 성폭력 사건, 1989년 대구 경찰에 의한 다방 여종업원 윤간 사건 등에 대한 대책 활동을 이어갔어요. 1991년에는 21년 전의 강간범을 살해한 김○○ 씨 건 공동대책위

원회를 조직하고, 이후 연이어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연대하며 성범죄 관련 법제의 한계를 공론화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장치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며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폭력 사건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게 되었어요. 성범죄를 당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했던 친고죄,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당시 우리 사회 법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부당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죠.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1992년을 '성폭력 추방의 해'로 선언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조직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갔어요. 반성폭력 운동을 주목받는 이슈로 만들어낸 여성단체들의 연대와 투쟁 끝에 1993년 12월 성폭력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이루게 돼요.

여성단체들은 법 제정을 위해 법률 시안을 작업하고 법사위 위원장과의 면담, 정당초청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법 제정을 촉구했어요. 또한 성폭력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고 입법 압

력을 가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어요. 성폭력 추방을 위한 홍보 소재자 및 자료집을 발간하고, '위험할 때 세 번!'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호루라기 볼펜을 제작·판매하여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기도 했죠. 서울 외 각 지역의 단체 및 성폭력 상담소들도 연대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의미 :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계를 만들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여성 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의료비·간병비·돌봄비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피해자 국선번호인제도 등이 있어요. 성폭력 관련된 법과 제도의 마련을 요구하는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대부분 수용하였고, 빠른 제도화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 사생활 보호 및 정보인권 존중 등의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예요.

[참여 :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 정의와 규정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죠. 성폭력의 개념을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폭력으로 포괄할 것인지, 성적(sexual)인 것으로 한정할 것인지의 논쟁은 현재도 진행 중

이에요. 성폭력을 규정하는 형법의 제목도 과거 '정조에 관한 죄'라는 낡은 관념이었던 것에서 개선돼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지만, 여성단체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진화되는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하여 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를 지원해 온 여성단체들은 2018년 한국 사회가 미투 운동과 디지털 성범죄 추방 운동으로 기록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3년이 흘러 2021년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큰 분노를 주었던 N번방 사건 등 일상의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상태예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성폭력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및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예요. 그렇기에 피해 생존자가 비난과 의심 속에 고통을 홀로 극복해내야 하는 상황을 막고,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닿을 수 있도록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기회에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여성 ④】수요일의 외침, 일본 정부는 사과하라!

“역사는 감춰진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시작 : '수요 시위'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43년 윤정옥이 다니던 대학교에 군인들이 찾아와 남학생들한테는 학도병을, 여학생들한테는 정신대를 종용했어요. 이러한 분위기를 두려워했던 윤정옥은 대학을 자퇴하고, 해방 후 '정신대'로 끌려갔던 친구들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윤정옥은 '위안부'로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자신의 처지에 동시대인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해 사회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1988년 윤정옥 교수가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린 이후 3년 만에 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공개 증언을 해요.

1990년 11월 16일 사회학자인 이효재 선생,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가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결성하게 돼요. 정대협은 일본 정부에 범죄 인정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위한 모금, 치료를 위한 지원활동을 시작했어요. 1991년에는 '정신대 신고 전화'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공개 증언을 끌어내게 되죠.

1992년 1월 8일 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첫 번째 수요집회가 시작되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1993년에는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설치·운영에 일본군이 가담하였다는 것을 부분 인정하고 피해 여성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비친 '고노 담화'가 발표되었지만, 국가로서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에 대한 방침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민간업자에게 경제적 책임만 떠넘긴 상황이었죠. 2년 후 일본 국민에게 성금을 모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설립하였으나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닌 위로와 연민을 담아 인도적 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자국민을 포함해 한국, 대만, 필리핀 등 피해 여성 258명에게 암암리에 기금을 전달하고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선언했어요.

2015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종결시키기 위해 서울로 외교부 장관을 파견했어요. 이에 우리 정부는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양국 '정부'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타결한다는 발표를 해요.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 없이, 피해자 지원재단

에 10억 엔을 기부 받는 조건으로 앞으로 더 이상 국제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의미 : 치유의 관계와 과정을 만들어내

다] '일본군 성 노예'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증언하며 인권운동가로 활동을 이어 나가셨어요. 학교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시작했고, 각종 국제회의에서 증언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2007년에는 미국 하원이 일본 정부의 사죄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했죠. 같은 해 12월 유럽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이끌기도 했어요. 또한 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아프리카와 파키스탄 등지에서 전쟁과 폭력에 시달리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어요.

[참여 :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31일 기준, '일본군 성 노예' 피해 여성 중 14분만 생존해 계세요. 2020년 정의기억연대는 '2015 한일 합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일본 정부 위로금 10억 엔 반환'과 관련하여 21대 총선에서 정당별 정책 질의서를 보냈고 7개 정당에서 모두 반환 조치 이행을 요구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죄하고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는 1,400번의 시위가 열리는 동안 진상 규명과 책임 이행 등 문제 해결과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이 연대하는 장소, 여성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장이 되어왔죠. 이번 기회에 ‘수요 시위’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여성 ⑤] 범죄가 아닌 기본권으로, 여성들의 이야기가 변화를 만든다

“낙태죄 폐지,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시작 :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53년 한국에 형법이 만들어진 이래, 임신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일은 내내 범죄였어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따라 임신을 중지한 여성 당사자나 의료인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하

게 되어 있었죠. 2010년 시민단체들은 연대체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임신 중지 비범죄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2009년 임신 6주 차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 중지 시술을 해 기소된 한 조산사가 위헌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듬해 몇몇 의사들이 생명 보호를 내세우며 임신 중지 시술을 한 다른 의사들을 고발했고 일명 ‘낙태 고발 정국’이 닥쳐왔죠. 정부 역시 ‘불법 낙태’를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던 때였어요. 시술 가능한 병원을 찾기도 어려워졌거니와 병원비가 수백만 원대로 치솟았고, 여성단체에는 애타게 병원을 찾는 여성들의 절박한 전화가 쇄도했어요. 어떤 이들은 병원을 찾아 해외로 나가거나 시술해 주겠다는 걸 빌미로 한 범죄에 노출되기도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가 크게 이슈화된 첫 번째 국면이었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선언했던 첫 번째 헌법소원 결과는 수많은 질문으로 이어졌어요. 다양한 곳에서 임신 중지에 대해 말하는 다양한 자리들이 마련되었죠. 영화 상영회, 말하기 대회, 토론회, 인터뷰, 캠페인, 집담회, 이야기 모임 등을 열고,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글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나

났어요. 서로 다른 조건에 처한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경험하는지를 차곡차곡 기록했고 여성들의 증언과 함께 분노와 상상력, 변화의 동력이 모이기 시작했죠. 낙태죄 폐지 운동은 여성을 출산과 양육 외에도 온전한 삶을 영위할 주체로 바라봄으로써 여성인권 운동으로 확산하였어요.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이르기까지]

2017년 9월 시민단체들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했어요. 낙태죄가 무엇을 침해하고 있는지,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 및 출산과 연동된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하는 계기들을 계속해서 마련했죠. 2017년 10월에는 23만여 명의 국민이 낙태죄 폐지와 인공유산 유도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동참했어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133일간 일인시위가 진행되었고 선고 당일 각계각층의 기자회견이 여덟 건이나 연이어 열렸어요. 마침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고했어요.

[의미 : 당사자, 우리의 언어를 만들다]

무수한 경험담을 나누면서 활성화된 낙태죄 폐지 운동은 기존의 법제가 왜 위헌인지를 지적할 더욱 강력하고 풍부한 언



어를 축적하게 되었어요. 임신 중지 경험을 숨죽여 온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가장 친한 친구랑 남편만 알던", "죽을 때까지 물어두려 했던",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진 않았지만,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 이야기는 "나만 겪은 일이 아니었구나",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또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불러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수많은 여성의 이야기를 필두로, 시대정신은 이미 변화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참여 :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의 변화를 상상하다]

2021년 1월 1일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지만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존의 법은 틀렸다'는 전제하에,

관련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임신 중지와 관련된 다른 정책들을 어떻게 재정비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죠. 66년간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하고 관리해 온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재생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되었으나, 2020년 10월 7일 발표된 정부 개정안은 주수를 규정하는 세부 사항 등에서 오히려 후퇴한 방향이에요. 낙태죄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임신 중지권을 비롯해 사회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포괄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 교육, 보육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법과 정책적 변화가 필요해요. 낙태를 범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자신의 결정에 따라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결정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이번 기회에 '낙태죄 폐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여성 ⑥] 아이를 대상으로 한 허위 광고에 맞서 양질의 영양을 공급해야

“아이에게 최고의 영양공급원은 모유!”

[시작 : '모유 수유 권장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80년대만 해도 모유보다 분유를 먹이는 것이 우리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어요.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는 오히려 구시대적인 것처럼 표현되기도 했고, 분유를 먹은 아이가 더 건강한 아이로 표현되는 광고도 많았죠. 1983년 창립된 소비자시민모임은 1981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통과된 '분유 등 영유아 식품 제조·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이 한국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모유 수유 권장 운동을 시작했어요. 소비자시민모임은 모유 대체품의 국제규약 위반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보건기관과 보건 전문가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모유 수유의 인식을 높이는 데에 주력했죠. 분유 회사의 광고 마케팅으로부터 영유아 어린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운동이었던 거예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유 수유의 확산을 위해 보건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유 권장위원회를 조직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단, 포스터, 그림엽서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광범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어요. 1984년 4월에는 모유 권장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985년 11월에는 모유 권장 분과 위원회를 발족하여 분유 등 영유아 식품

의 제조, 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하고 1986년 정부에 제출했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분유 및 이유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카자키균 등 미생물 검사 및 분유 성분 조사, 가격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했어요. 또한, '두뇌 발달을 돕는 성분 강화'라든지 '모유에 한층 가까워진 분유' 등의 광고 문구 관련 성분 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의 모유 수유실 설치 및 환경 개선 활동 등 모유 수유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으며, 국제 모유 수유 주간에는 심포지엄,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의미 : 각계각층과의 연대로 뻗어나가다]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 식품영양학과 교수, 간호사,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모유 권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내법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동참했어요. 국제소비자기구, 국제유아식품행동망(IBFAN)과 공동으로 한국의 조제분유 판매 실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1990년대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소비자기구, 국제유아식품행동망,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등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국

내 대상, 병원 대상 실태조사를 각각 벌여 국제규약 위반 실태를 알리게 되었죠.

[참여 : 영유아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006년 젓먹이의 건강 증진 법률(안)을 통해 모유 대체식품 관계자들과 모자보건 관련 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모유 수유와 면 기저귀 사용을 권장하는 활동을 펼친 바 있어요. 그 외에도 어린이 젓병, 젓꼭지 등의 환경호르몬 문제, 영유아용품의 안전성 품질에 대한 기준 강화를 위한 조사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어요. 이는 모두 영유아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서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영유아가 먹는 음식과 사용하는 물건, 나아가 자라나는 환경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기회에 '모유 수유 권장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여성 ⑦] 미의 기준 바로잡기, 성차별적 미인대회 폐지로부터

**“다양한 미와 가치를 상품화하고
획일화하지 마세요!”**

[시작 : '미인대회 공중파 방송 폐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사람을 수치와 외양으로 평가하고, 외모에 우열을 가리는 행사였어요. 이에 1980년대 여성유권자 연맹은 미인대회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여러 여성단체가 이에 동참했어요. 1989년 여성신문에서는 “노예시장 같은 미인대회를 차 버리자 - 미스코리아 대회는 굴욕적이고 반여성적인 추태”라고 논평을 하기도 했지요.

미스코리아가 아름다운 여성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경쟁도 치열해졌어요. 특정 미용실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미스코리아 대회를 준비시키거나 수억 원의 뒷돈이 오고 갔다는 비리가 밝혀지고, 나이와 학력을 위조하는 일도 생겼죠. 1993년 심사위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드러나자 미스코리아 대회를 반대하는 여론도 높아지기 시작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성명서를 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년 미스코리아 대회는 공중파를 통해 전야제부터 본 대회까지 모두 생중계가 되었어요. 이에 1996년 여성연합은 MBC 방송국 앞에서 방송 중계를 중지하라고 시위를 하였고, 1999년 민주연론운동시민연합은 '이달의 나쁜 방송'으로 MBC

의 미스코리아 중계방송을 선정하였죠.

미스코리아 반대 움직임을, 누군가는 '못생긴 여자들의 질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비웃기도 했어요. 미스코리아가 이미 획일화된 미의 기준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고정관념에 대응하다] 1999년 페미니스트 매거진 <이프>는 미인대회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을 11년 동안 매해 진행했어요. 기존의 정형화된 미의 기준에 맞서자는 안티 미스코리아 대회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죠. 10살 된 어린이, 20대 남학생, 트랜스젠더, '일본군 성 노예' 피해 할머니, 여성 축구 선수, 남자 간호사 등 다양한 '아름다움'을 공감하고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은 당시 방송인 홍석천 씨, 영화감독 변영주 씨, 가수 백지영 씨 등 많은 시민에게 관심을 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하였어요. 이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오랫동안 생중계했던 MBC도 내부 비평 프로그램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공유했고, MBC가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2001년을 마지막으로 미스코리아 대회는 공중파에서 사라졌죠.

[의미 : 외모 평가에 반대합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문화관광부의 요청으로 지역 미인대회가 하나씩 폐지되었어요. 미인대회 폐지에 대한 움직임은 이후 여성의 성 상품화를 문제시하는 인식으로 확장되었고, 외모를 기준으로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인식 역시 대중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참여 : 외모를 상품화하는 과정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외모를 상품화하고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양상은 대중문화 곳곳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공중파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가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폐지되기도 했죠. 최근에는 1인 방송을 쉽게 만들고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기를 끌기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을 상품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어느 누구도 외모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평가받을 수 없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가치가 존중받을 때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번 기회에 '미인대회 공중파 방송 폐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여성 ⑧]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위해, 여성 개발자들이 나섰다

“여성 개발자들은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시작 :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방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랜덤채팅'에 대해 아시나요? 랜덤채팅이란,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정해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익명으로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 수가 없는 건 덤이죠. 2019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 중 랜덤채팅앱이 차지하는 비율은 33.3%라고 해요. 온라인 전반의 비율은 87.2%인데, 이는 2016년 조사(74.8%)에 비해 12.4%p 증가한 수치예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아동 청소년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랜덤채팅앱 개발자들은 서비스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성매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어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랜덤채팅앱 개발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십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조 대표는 여성IT개발자들을 만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만난 이들은 온라인 청소년 성

매매 해결을 위해 여성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모여 2019년 2월, 십대여성 IT자문단 Women Do IT가 만들어집니다.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Women Do IT 구성원들은 왜 랜덤채팅앱에서 성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어요.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제도적 허점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랜덤채팅앱에서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앱은 앱스토어 정책에 따라 관리되고 평가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감독하지 않거든요. 랜덤채팅앱 개발자들은 등급 심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이름의 앱을 여러 개 만들어 이용자 수를 분산시켜요. 두 번째, 성인인증 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할 수도 없고, 피해가 일어나도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가 어려웠거든요. 세 번째, 성범죄 관련 언어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보통 은어를 통해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개발자들이 이런 단어들 금지어로 등록하고 관리하지도 않으니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웠죠. 언어를 관리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데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많은 이슈에 직면하자, Women Do IT 멤버들은 단순히 개발자들의 기술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도달해요. 결국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얼마나 손쉽게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게 '깨톡'이 탄생합니다.

[의미 : 최소한의 해결책, 그리고 공론화]

깨톡은 성범죄에 취약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와 기능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가이드와 온라인 성범죄의 발생 방식에 대해 알려주며 범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청소년에게 알려주는 대책 가이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어요.

깨톡이 오픈한 시기는 2020년 1월로, 한창 N번방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치솟던 때였어요. 덕분에 깨톡 역시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깨톡 오픈 이후에도 성착취 피해 예방과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십대인권여성센터는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 해 9월 10일 여성가족부가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게 됩니다.

[참여 : 함께 바뀌 나가야 할 것들] 하루가 멀다하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온라인 성범죄 역시 그러해요.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는 이를 막으려는 노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이에요. 여성가족부의 고시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인 셈. 이를 시작으로 랜덤채팅앱을 더 철저히 감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Women Do IT가 깨톡 가이드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서비스 윤리규정을 마련하는 데에 한 몫을 했으니, 이제 더 많은 변화를 위해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N번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라인 공간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산업 내에서 자정하길 기대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인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더 나아가,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서비스가 미칠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고 선행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⑨] 불법촬영과 온라인 성착취,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끝장낸다

“성폭력은 성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 음란한 것이 아니라 인격권에 관한 문제”

[시작 : ‘성폭력처벌법 촬영죄 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5년, 온라인 공간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지적하고 분노를 사회적으로 표출하고자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메르스 갤러리가 등장했어요. 이후 독립 사이트인 ‘메갈리아’가 열리게 됩니다. 메갈리아가 문제를 제기했던 이슈들 중에는 불법 촬영 문제도 있었어요.

일상적이면서도 내밀한 공간인 여자 화장실이 너무 쉽게 불법적으로 촬영되어 ‘야동’으로 소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름을 떨치던 불법 성인사이트의 대명사 ‘소라넷’을 직접 지목하여 몰카 근절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렇게 2015년 11월부터 소라넷 폐지 서명이 시작되었고 8만 명이 넘는 서명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뒤, 이듬해 6월 소라넷은 폐지됩니다.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소라넷이 폐쇄되었다고 해서 불법촬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매일 같이 불법촬영 사건들이 보도되는 등, 일상적 공간들이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계

속 일깨워줬던 거예요. '나도 몰래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국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에는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접수되었는데, 2017년 당시 국가 차원의 피해지원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한사성 활동가들이 누적되어가는 삭제 지원에 대응해야 했어요. 그렇게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현장으로부터 대두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정부는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배경에는 거대한 성착취 산업이 개입되어 있어요. 피해촬영물을 '야동'으로 취급하여 소비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돈을 벌고, 그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삭제해주는 척하던 이런 산업적 연결고리가 소위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어요. 한사성은 이 문제를 2018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2019년 정부가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합니다.

[의미 :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다] 기존 법에 따르면 스스로 찍

은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되었을 때도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명백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사성은 김포여성상담센터와 피해자를 공동 지원하던 사례를 계기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을 촉구했어요. 이러한 움직임 덕분에 2018년도 말 '성폭력 처벌법 제14조가 개정'됩니다. 이후에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2020년 2월에는 한사성을 포함한 4개 여성단체가 대책위를 출범시켰고, 피해지원, 언론대응, 입법 운동, 재판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 끝에, 20대 국회 막바지에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공론화와 입법 활동을 통해 법이 개정되거나 관련 조직들이 신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디지털 성폭력이 세상에서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결국 삭제지원을 넘어서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를 규제해서 피해촬영물을 유통하는 시장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피해촬영물을 유통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국가 정책은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영될 과제들이 많아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으로 온라인 성착취에 대해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현행법들은 여전히 ‘음란’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해당 범죄들을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이 얼마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소명해야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법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안전한 온라인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여성 ⑩] 일상을 침범하는 스토킹 범죄, 낯선 개념을 법으로 제정하기까지

“스토킹은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본 글에서는 2021년 3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스토킹처벌법’으로, 법이 제정되기 전 이상적인 법제 안으로서의 스토킹 관련법은 ‘스토킹방지법’으로 표기하였다. 다만,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진행된 구체적인 사업명이나 논평, 성명 등에서는 두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두 ‘스토킹방지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시작 : ‘스토킹방지법 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83년 6월, 한국여성의전화는 창립과 함께 여성폭력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 전화를 개통했어요. 그러자 곧 여성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당시는 ‘스토킹’이라는 말도 없던 때였어요. 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은 상담을 통해 남편·남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끈질기게 통제당하고, 감시당하고, 학대받는 경험을 풀어놓았어요. 한국 사회에서 ‘스토킹’이라는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이 과거에도 현재도 얼마나 인식되지 않는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회의 편견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스토킹방지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스토킹 관련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되었어요. 스토킹에 대한 강고한 사회적 편견에 맞서 ‘제대로 된’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토킹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스토킹 문제를 가시화하고자 했어요.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도 직접 만들어야 했죠. 2009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 통계 ‘분노의 게이

지'를 발표하며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제재 및 법률의 부재, 그 결과 살인까지 이르는 스토킹범죄의 현실을 집중 조명하는가 하면, 2009년부터는 매년 발표하는 상담통계의 성폭력 피해유형별 현황에 '스토킹'을 따로 집계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한국여성의전화 사업명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전후라고 볼 수 있어요. 2009년,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커리큘럼에 '친밀한 관계라는 가면을 쓴 폭력(아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스토킹)'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신설되었어요.

2012년에는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스토킹방지법 제정하라"를 포함한 열 가지 요구안이 발표됩니다. 2013년에는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15년에는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한국여성의전화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대중 캠페인, 서명운동 등 이슈화를 위해 점차 운동을 확장해나갔어요.

[의미 : 스토킹은 중범죄라는 사실]

2021년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에 제정되었어요.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만 다루어지며, 그 심각성에 비해 사실상 제재할 방안이 거의 없었어요. 이번 스토킹처벌법 제정은 스토킹을 중범죄로 다루며 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가 수많은 피해자를 지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활발히 입법 운동을 전개한 성과이기도 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은 오롯이 한국 사회의 문제 일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스토킹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수사기관, '벌금 10만원'뿐인 법률, 법안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는 국회, 가해자의 변명을 적극적으로 믿어주려 하는 사회, 공식 통계로 집계조차 되지 않는 여성들의 죽음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스토킹을 일삼던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던 거예요.

더불어, 스토킹은 여성폭력 문제와 떼어

놓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라는 관점으로 스토킹을 이해해야만, 성별 권력관계가 공고한 상황을 직면해야만 스토킹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통과된 법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존에 제기되었던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된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위해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쌓아온 논의가 무색할 정도로 큰 우려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며, 언제 강력범죄로 연결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스토킹이 발생한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과 분명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정부와 입법부는 무엇보다 여성폭력 범죄로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니까요. 법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지원체계와 세부 지침 정비, 인식 개선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여성 ⑪] 68년의 배제를 넘어, 가사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됐다

“우리는 가정부가 아니라 가사·노동자’입니다”

[시작 :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8년 IMF 경제위기가 한국을 뒤덮었을 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전국 11개 지역 지부들과 함께 ‘여성 실업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여성노동자들의 실업상황에 대응했어요. 상담을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여성이 우선적으로 하고 1순위가 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활동을 했죠. 이후 전국 11개 지부 여성노동자회는 실직 여성들이 많이 진입하는 가사노동자들의 현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조항 때문이에요. 4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산재가 발생해도 수입이 없는 가운데 스스로 치료를 이어 나가야 했어요. 임금체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민사를 진행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용자가 갑작스레 일하러 오지 말라고 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죠.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가사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주변에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남의 집 일, 가사노동이라는 저평가 속에 노동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 지점이었죠. 호명되는 이름부터가 문제였는데, 가정부, 파출부, 가사도우미는 노동자를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는 아줌마로 통칭하기 일췌였죠. 주체성과 존중을 담은 호칭이 필요했어요. 가사노동자들의 경제공동체를 상징할 것, 전문직업인으로 호명될 수 있을 것, 자립과 서로 돕는 공동체를 표상할 것 등의 원칙을 놓고 조직명을 논의했어요. 그렇게 가사관리사라는 용어가 탄생했고, 뒤이어 산후관리사, 가정보육사 등 가정 내에서 하는 모든 일을 포괄하는 단어로써 ‘가정관리사’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협회원들에게 이용자 가정에 인사하면서 “가정관리사 000입니다”라고 불러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했어요. “아줌마, 이거 해”라는 말은 “관리사님, 이것 좀 부탁해요”라는 말로 바뀌어갔습니다. 협회원들은 2010년, 거리 캠페인을 시작하며 가정관리사라는 말을 알려 나갑니다. 2011년 KBS 드라마 <식모들> 제작 발표회 이후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가 연대하여 제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후 이 드라마는

<로맨스 타운>으로 제목을 바꾸게 됩니다.

[의미 : 가사노동, 계약서를 씁시다]

2013년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가사노동자 노동과 건강 실태조사에 나섰어요. 조사 결과, 가사노동의 직무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업무별로 정확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어 2014년 직무분석을 진행한 결과, 가사노동이 7대 영역에 걸쳐, 70가지 세부 업무로 나뉘며 이를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업무당 3분 안에 끝나야 하는 실정임을 밝혀냈어요. 이러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보장을 외면한 결과라는 사실이 사회적 동의를 얻게 되었어요. 가사노동의 공식화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된 것이죠.

2014년 정부는 가사노동자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며 가사노동자 단체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결국 내놓은 것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법안이었어요.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에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자체 TFT를 구성하여 대안입법 마련에 나섭니다. 2016년 이인영 의원의 입법 발의, 2017년 법안 재정비 후 민주당 서형수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발의가 있었으나 회기 마감으로 폐기되고 말아

요. 2021년이 되어서야 한국노총이 현장 단체들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이후, 임이자 의원을 필두로 하여 법안이 발의된 후, 5월 21일 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가사법 덕분에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길을 열게 됐어요. 주 15시간의 최소노동시간을 명시함으로써 노동관계법도 모두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최소근로시간 보장을 통해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4대 보험과 연차, 유급휴일,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가사법이 제정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바람에, 시장의 상황은 처음 법 논의를 시작할 때와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다는 한계 역시 있어요. 가사노동시장을 비영리 생태계로 만들고자 했지만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거치는 동안 플랫폼이 가사노동시장을 급속히 잠식해 가고 있던 참이었죠. 가사법 논의 당시 플랫폼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처음 법 논의를 시작할 때 조직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던 비영리 가사노동단체들은 플랫폼 등장 이후 조직이 약화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비영리 가사노동단체들은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중간착취가 발생하지 않아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사노동을 중개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인 것이죠. 향후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이 법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개기관이 노동자로 고용한 가사노동자만을 노동자 범위로 포섭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날로 확산하고 있는 비정형 노동 형태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가사법은 성과만큼 뚜렷한 과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여성 ⑫] 터부와 침묵을 깨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위해

“깡창 생리대가 사회에 던진 화두”

[시작 :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전 세계에서 월경을 언급하는 건 오랜 금기였어요. 여성들은 인생 중 약 40년 동안 월경을 하면서도 ‘월경’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생리’라거나 ‘그날’이라고 예뉘러 부르는 일

이 더 많았죠. 월경을 터부시하며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로 여기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많은 문제를 혼자 조용히 해결해야 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한 청소년이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 운동화 깔창을 대신 사용한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어요, 이른바 ‘깔창 생리대’는 월경을 부끄럽고 사소한 문제로 쉬쉬하며 이를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 보도 이후 많은 이들이 안전한 월경용품을 생필품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기본적인 권리로 실감하게 됩니다.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누구나 소득·세대·계급·장애·지역·종교·성정체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이 필요했어요.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2017년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해 광장에 나섰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월경에 치얼스”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해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고 다양한 월경 교육을 시행하라고 외쳤어요.

2016년, ‘깔창 생리대’ 이후 정부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통해

월경용품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이용하는 청소년은 많지 않았어요. 신청 절차의 복잡함과 가난을 증명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신청률(2019년 4월 기준)이 62.6%에 그치는가 하면,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선별적 지원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또한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한정된 월경용품 지원 제도와 민간 캠페인들은 ‘소녀의 눈물’과 같은 표현을 홍보물에 사용하는 등 청소년의 월경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여성환경연대는 서울시가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 없이 월경용품을 지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2019년 5월 28일, 정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의미 : 월경용품 보편지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운동본부의 활발한 활동과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2019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는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비롯한 월경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어요. 이로써 서울시 모든 청소년들이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월경용품

을 지급받고 학교에서 월경과 자신의 몸
에 대한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열리게 됐어요.

같은 해 10월, 서울시 구로구에서도 청
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가 통과돼
현재 구로구의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센터에는 누구나 월경용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됐습니다.
2020년에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대구
광역시, 인천광역시 또한 청소년 월경용
품 보편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조례
를 제정했어요. 여주시에서 시작된 흐름
이 서울시에 뒤이어 전국적으로 확산한
해였죠.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코로
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으
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도, 정부의 지
원사업 자격요건에서 떨어져 아무런 지
원을 받지 못해도, 생리대 등 월경용품을
구매할 돈이 없어도 여성들의 월경은 계
속돼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세대주만 지
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탓에 가정폭력 피
해자, 쉼터 청소년 등 많은 여성들은 제
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또한 학내 보건실 등을 통해 필요한 월경
용품을 구했던 청소년들마저 온라인 개

학으로 학교에 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난 2019년 10월 마련된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으로
학교 보건실에 생리대가 반드시 비치돼
야 했지만, 취지와 다르게 학교 104곳은
자판기를 통해 생리대를 유료 판매한 경
우가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의 전국적인 확
대는 월경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
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재난 상황에서의 월경권 문제 역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깔창 생리
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월경을 중요한 사회 의제로 인식하고 개
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제도
적 변화가 필요해요. 월경은 할지 말지,
언제 어떻게 할지, 개인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안전하
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위해서는 다
양한 변화와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
니다. 월경은 인구의 절반이 인생의 약 절
반 동안 경험하는 일이자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성 ⑬] 지속가능한 여성농민
공동체, 실험적인 대안 먹거리
운동이 되다**

“10여 년간 가장 실험적이고 성공적인 한국 농업의 대안 먹거리 운동을 펼쳐오다”

[시작 : ‘지속가능한 여성농민 공동체’에 대해 알고 있나요?] 현재 농업정책의 구조 속에서 여성농민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어요. 여성농민이 농업 생산자, 농업 생산활동에 절반 넘게 참여함에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배제되고 있는 것이죠. 전체 여성 농민 농지보유 비율은 불과 37.3%에 불과해요. 그중 농사일에 가장 활동적인 50대 여성 농민 25%만 자신 명의의 농지가 있다고 해요. 또한, 농기계 사용도 거의 남성 위주. 대형 농기계를 구비할 경우 남성이 조작하고, 여성농민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과 : 여성 농민 공동체만이 해답이다] 이미 농민의 수는 줄 대로 줄고 있지만 그마저도 노령화가 심화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농업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상황은 진즉부터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은 바뀌지 않았어요.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여러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발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성농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언니네 텃밭’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손에 아무것도 쥘 것이 없이 오직 우리의 고민을 현장에서 풀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니네 텃밭은 크게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사업을 진행했어요.

1) 무 제초제-생태순환적 사업 : 언니네 텃밭은 농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식량주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농업환경을 생태순환적으로 만들고자 제초제를 치지 않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습니다. 또한 화학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여가고자 참여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인증 등급을 매기는 것이 목적이 아닌 생태순환의 점진적인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2) 소량 다품종-토종종자 확산 : 초국적 기업에 저당 잡힌 종자권을 농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토종 유전자원을 중심으로 소량 다품종 생산 원칙을 세웠어요. 이를 위해 지역의 토종 유전자원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며, 이를 농민의 공동 자산으로 가꿔 나가기 위해 여성농민회와 함께 토종종자 도감 발간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3) 공동체 운영 : 현재 언니네 텃밭은 전국 10곳의 꾸러미 공동체와 6개의 장터

공동체가 있어요. 이렇게 공동체 운영으로 단체의 가치를 더욱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미 : 가장 실험적인 대안 먹거리 운동]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언니네 텃밭은 한국 농업의 가장 실험적이고도 성공적인 대안 먹거리 운동을 해왔음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적은 지원으로도 최대로 빛나는 성과를 내왔고, 그 어려운 공동체를 10년 이상 유지 발전시켜 왔어요. 대안 먹거리 운동의 정수를 지켜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공동체가 가진 힘으로 그간 맞서왔던 다양한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이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지난 10년간의 훌륭한 경험과 지속이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강한 의지가 있지만, 현재 언니네 텃밭의 가장 큰 어려움은 꾸러미 소비시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품목 소량 생산을 하는 텃밭 농산물 꾸러미로 매일 식사를 준비하는 소비계층이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반조리 제품이나 밀키트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거리 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불어, 기후 위기

시대에 먹거리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또한, 온라인 먹거리 소비시장이 더욱 확대되면서 축적된 이들의 경험은 지역 네트워크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언니네 텃밭이 만든 공동체는 정작 지역 먹거리 정책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대다수 소농이 지역 먹거리 체계로 편입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 먹거리 취약 계층과 다양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문제는 언니네 텃밭의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왜 이들은 여성농민 공동체 운동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건 현재 농업정책이 여성농민 개별 생산자, 공동체의 가치 등 이들의 지향점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니네 텃밭은 앞선 문제에 맞서 농업 문제에서 대안적 실천해왔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 10여 년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터득해왔어요.

[여성 ⑭] 엄마의 성·본 쓰기 운동, 모두가 존중받는 새로운 가족상을 향해

**“모든 개인이 존중받는 새로운 가족상을
만들어가는 것, ‘엄마의 성·본 쓰기’
활동의 최종 목표”**

[시작 : ‘엄마 성·본 쓰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호주제 폐지 그 이후] 호주제는 가족의 대표인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호주는 남성만이 될 수 있었어요. 여성은 결혼하면 출가외인이니 오직 남성만이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958년에 제정된 한국의 가족법에 뿌리박힌 가부장제였어요. 그런 호주제가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운동의 노력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성우선주의(민법 제781조 제1항), 자녀가 태어나면 아빠의 성을 물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엄마의 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물려줄 수 있다는 법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여전히 딸이라서, 엄마라서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그나마 부부간 협의를 통해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생기는 했어요. 하지만 출생신고가 아니라 혼인신고 때 이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런 준비 없이 주민센터에 간 신혼부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충분히 상의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별도의 협의서도 내야 하고, 혼인신고시 부부 모두가 참여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서로 협의했다는 공증서류를 별도로 내야 하기까지 했어요. 아빠 성을 물려주려고 할 때는 필요 없는 절차들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부당한 부분들이었어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이런 인식을 함께 한 몇몇 부부들이 알음알음 모였어요. 언론 인터뷰와 SNS가 연결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실제 자녀에게 엄마 성을 물려준 경우도 있고, 부부가 함께 협의 중인 경우도 있고, 아빠 성을 물려주었지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2020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자녀에게 엄마 성을 줄 수 있는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진행했어요.

청원은 현 제도가 평등한 부부 관계를 방해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부부간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것을 새로운 원칙으로 만들고, 정부가 제도 개선과 홍보·연구에 나서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청원을 홍보하기 위해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고, 모임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SNS를 활용했습니다.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웹툰 <며느라기>

를 그린 수신지 작가도 홍보에 동참해주기도 했어요. 특히 현 제도를 매우 이상한 구내식당 메뉴 선택 시스템으로 비유한 웹툰도 그려줬어요.

[의미 : 여성가족부가 움직이고 법원이 바뀌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 2021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년~2025년)을 발표하면서 '가족 다양성 포용'을 위해 자녀의 성·본 결정 방식을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아직 제도 전반을 개선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는 중입니다.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물려주고 싶은 부부가 엄마의 성·본으로 자녀 성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준 것. 2021년 9월 김지예(아내)·정민구(남편) 부부가 딸의 이름을 정정원에서 김정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고, 한 달 후인 10월 법원은 성평등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부부의 결정을 존중해서 이를 허가한다고 밝혔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엄마 성을 물려주기 위한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부부협의주의로 바꾸는 것입

니다. 사회 인식이 바뀌는 것 같고, 국회·정부·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서 우호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부성우선주의 제도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사회 인식을 환기하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표출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엄마 성을 물려준 다양한 사례자와 앞으로 엄마 성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현 제도에서는 혼인신고 때 엄마 성을 물려주겠다는 문항에 표시해야만 해요. 최근까지 성·본 변경 재판의 사례를 보면 법원의 판단은 매우 보수적이었고, 최대한 친부의 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한 달 만에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원이 변화하는 사회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읽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엄마 성 쓰기의 확대가 평등한 가족, 다양한 가족을 만드는 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CHAPTER
07

노동



[노동 ①] 이주노조 창립 10주년, 합법화로 나아가는 길

**“이주노동자도 한국의 노동자다, 권리를
위해 투쟁하라!”**

[시작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쟁취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00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 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노투본)’가 결성됐어요. 이노투본은 이주노동자 중심의 리더십을 조직하여 한국 노동자와 연대하는 방식의 투쟁을 전개했어요.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고용허가제가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단기 체류와 강제 추방을 초래하는 정책이라 비판했어요.

2001년 이노투본은 ‘서울경인 평등노동 이주노동자 지부’로 이어졌고, 2002년 4월에는 1천여 명의 이주노동자 집회를 최초로 조직해 단속추방 반대와 이주노동조합 합법화를 요구했어요. 초기 이주노동조합은 노조 설립과 동시에 위원장들이 폭력적으로 단속되어 국가인권위 접거 농성에 들어가는 등 대정부 투쟁을 지속했어요. 이후 여수화재보호소 화재 참사 규탄 투쟁,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투쟁, 지도부 표적 단속 규탄 투쟁, 마석 대규모 단속 사태 대응 투쟁 등 거의 매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 가면서 각 지역 이주 단위 및

이주공동체들과 연대를 강화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동조합설립 신고서가 서울지방 노동청에서 반려되자 이주노조는 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과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총 10년의 세월이 걸렸고, ILO와 UN 등으로부터 설립 인정 권고가 나왔지만,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이를 무시했죠. 미셸 위원장 출국 이후 2년간 비상대책위 체제를 유지하던 이주노조는 2014년 10월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어요. 지도부 선출과 함께 이주노조 1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에는 반드시 노조 합법화를 쟁취하자는 결의를 담은 사업 계획이 통과되었어요.

이주노조는 7월 27일 11시 서울노동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 필증 촉구를 위한 농성 투쟁을 시작했어요. 서울 고용노동청 앞 농성장에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전 세계 이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졌고, 매일 저녁 문화제에서는 각국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즐거운 투쟁을 이어나갔죠.

하지만 상황을 더 이상 장기화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이주노조는 8월 16

일 2차 임시총회를 열어 규약을 일부 수정하고 노동부에 제출했어요. 마침내 2015년 8월 20일, 서울 고용노동청의 설립필증 교부로 10년 하고도 4개월간 이어져 왔던 이주노조 합법화 투쟁이 마무리되었어요.

[의미 : 당사자,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다]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외칠 수 있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신장시키고 노동권을 쟁취하겠다는 사명 아래, 한국인 활동가들에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 노동조합을 건설하고자 한 것이죠. 농성 투쟁 과정에서 네팔 공동체가 네팔 투쟁단을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등 노조의 저변이 넓어진 것도 독자적인 노조 결성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참여 :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기] 이주노조 합법화 이후 조합원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상담을 하더라도 가입을 꺼리거나 실제로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았지만, 합법화 이후 조합비를 꾸준히 납부하는 조합원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네팔,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에 조합원들이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

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이 이주노조 합법화를 위한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나가기 위한 새로운 투쟁이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또한 주체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신장시키고 노동권을 쟁취하는 과정은 언제나 중요하죠. 이번 기회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쟁취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노동 ②]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다, 알바도 노동자고 사람이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시작 : ‘청년 알바 노동권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0년 12월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 노동자 최 모 씨(24)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어요. 최 씨가 일했던 피자 업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 노동자는 그해에만 3명, 2009년의 경우 배달노동자 1,395명이

이륜차 사고를 당했고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았죠. 당시 피자 업체에서는 30분 내에 배달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피자 값을 할인해 주거나 무료로 해주는 30분 배달 보증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주문에서부터 피자를 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만 약 12분에서 15분, 업체는 시간 내에 배달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임금 삭감 등 배달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사실상 '질주'를 강요해 왔던 거죠.

청년유니온은 조합원들에게 트위터 멘션 창 맨 앞에 '#노(NO)30 서비스'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도록 하고, 트위터 시위를 피자 업체 본사 등지에 설치된 스크린에 생중계하면서 정책 변화를 압박하였죠. 누리꾼들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피자 업체들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30분 배달보증제'를 폐기하고, 내부 업무 지침을 삭제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1년 7월 청년유니온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커피빈, 할리스를 비롯한 주요 커피전문점 7개 브랜드 251개 지점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지급 비율을 조사해 발표했어요.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 A 씨는 청년유니온의 노동법 세미나에서 '주휴수당' 규정을 알게 되고, 자신이 일하던 커피전문점 사장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요구했죠. 당시 그의 시급은 최저임금인 4,320원, 주 40시간씩 5개월 가까이 일하면서 밀린 주휴수당은 172,800원이었어요. 지점장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본사의 결정에 따랐지만,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미지급분을 제공했어요.

카페베네 측은 부랴부랴 청년유니온에 교섭을 요청해왔어요. 이것이 당시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법외노조였던 청년유니온이 노동조합으로서 첫 번째 교섭을 하게 된 사건이에요. 청년유니온은 그동안 '구직자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가 불허되어왔어요. 이 교섭의 결과로 카페베네는 직영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103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5천여만 원과 3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의 주휴수당까지 모두 지급했고 지점마다 주휴수당 지급 교육을 했어요. 또 전체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커피빈은 본사에서 5억 원 정도의 주휴수당을 일괄 지급했죠.

[의미 : 안전하게 노동하며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권리를 만들어내다]

기업의 마케팅으로 인해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리거나, 일하고도 불합리한 금액을 받을 때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변화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에 임금체불, 부당하고, 위험환경

에 대응하여 변화를 만들어가는 조직적인 목소리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노동 상담과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할 권리를 찾고, 청년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3개월 아르바이트 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카페베네 김선권 대표를 고발했던 김민수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 한 명의 밀린 수당을 받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생각해 고소하게 됐다”라고 말했어요. 이 과정은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동을 하게 수많은 사람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참여 : 최저임금 '1만 원'이 곧 청년의 임금] 최저임금 1만 원은 2013년 알바연대(이후 알바노조)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 원 위원회' 회원들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항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의 담장 넘기 시위를 하면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후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결합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요구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2016년 4.13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

거의 핵심 공약으로 부각되었지만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에서 멈췄죠. '1만 원'은 단지 '알바'나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장시간 노동, 나아가 불로소득과 금융 수탈에 대한 우리 사회 산업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밖으로 던지는 화두예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안정된 노동권을!]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특히 주휴수당 적용 예외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당 1,730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죠.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과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에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우리가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노동시간에 맞는 임금을 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해요. 이번 기회에 '청년 알바 노동권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노동 ③] 카메라 뒤의 더 소외된 이들, 미디어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드라마 뒤의 잔혹 드라마, 한빛이 소리를 내다”

[시작 : ‘미디어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6년 10월 26일 한 청년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어요. 청년의 이름은 이한빛.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씨제이이앤엠(CJ E&M)에 입사한 지 고작 아홉 달 만의 일이었죠. 그는 티브이엔(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막내 피디로 일했어요. 죽음의 이유를 밝힌 유서 안에는 드라마 제작 현장의 잔인한 관행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하루에 스무 시간씩 이어지는 살인적 노동시간, 비정규직 제작진에게 한없이 불공정한 계약 등 인권침해가 만연한 현장을 이한빛 피디는 그냥 보아 넘길 수 없었어요.

유가족과 ‘tvN ‘혼술남녀’ 조연출 사망 사건 대책위’는 이한빛 피디의 뜻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현장 종사자와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건을 공론화시켰어요. 대책위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이한빛 피디가 남긴 자료를 분석하고 동료, 지인들의 증언을 모아 언론에 공개했어요. 사건 초기 CJ E&M은 모든 잘못을 이한빛 피디 개

인의 과실로 몰아가려 했지만, 대책위의 끈질긴 활동과 청년 세대의 질타 끝에 사건 발생 약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CJ E&M의 사과를 받아낸 후, 이한빛 피디의 유가족과 대책위는 2018년 1월 1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를 설립했어요. 방송사 및 미디어 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고, 낡은 방송 제작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목적에서였죠.

비정규직 등 개별 노동자들은 방송 산업의 복잡한 산업구조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보하거나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노조나 기관을 갖추기 어려웠어요. 한빛센터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실감하고, 직접 미디어 신문고를 만들어 현장의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2018년만 하더라도 30개가 넘는 드라마 현장에서 제보를 받아 대응할 수 있었고, 현장의 문제를 보다 더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이슈별 상담·대응 매뉴얼 정립을 노력하고 있어요.

[의미 : 당사자들이 모여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거대하고 복잡한 방송 산업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해 결함이 있는 제도를 하나씩 개선해나가고 있어요. 청년유

니온, 언론노조, 희망법 등과 함께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드라마 제작 현장에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2018년 9월, 최초로 드라마 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냈죠. CJ E&M의 드라마를 담당하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지상파 방송국은 자발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노동시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참여 : 방송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 현장 개선이 지속해서 필요합니다] 한국의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은 총 18조436억 원에 육박해요. 방송 현장에는 1천 개가 넘는 사업체, 수만 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죠. 거대한 사업 규모로 한류의 주역이라 불리고 있지만, 카메라 뒤의 사람들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요. 주당 120시간을 촬영하는 살인적인 촬영 현상이 지금도 비일비재하죠. 2018년에는 SBS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에 참여했던 스태프가 내인성 내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는 숨지기 이틀 전까지 폭염 속에서 76시간 동안 연속 촬영을 했다고 해요. <나의 아저씨>, <동백꽃 필 무렵> 등 역시 하루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2017년 tvN 드라마 <화유기> 촬영장의 스태프 추락 사고를 비

롯해 <아스달 연대기>,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등에서도 비슷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피라미드식 산업구조, 도제식 문화로 인해 스태프들은 방송국과 제작사에 착취를 당해도 제대로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우리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고, 즐거움을 찾기도 하죠. 초장시간 노동으로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방송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은 내가 즐겁게 보는 미디어 뒤에 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와도 맞닿아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미디어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노동 ④]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그만, 위험의 외주화가 범인이다

“위험의 외주화,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시작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

던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어요. 故 김용균 씨는 불과 며칠 전 비정규직 대표단의 기자회견을 알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정작 그 기자회견에 자리할 수 없었어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의 현실을 주목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태성은 비통한 눈물을 흘렸어요.

하청회사 간부들은 영안실에서 아들의 죽음을 막 확인한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만나자마자 고인의 죽음이 고인 탓이라는 말을 하기에 급급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에 공감은커녕 “용균이가 착실했지만 하지 말라는 일을 했고 가지 말라는 곳을 갔다. 사고를 당했으니 보험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간부들의 말과 달리 현장 동료들은 위험한 곳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가서 일하라는 지시를 받는다”라고 했고, 김미숙 씨는 싸움을 결심했어요. 아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짓밟힐 현실에 분노한 김미숙 씨는 사고 3일 만에 열린 ‘시민대책위’ 사망사고 현장 조사 실태 보고 자리에 나섰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에서는 해마다 2,000명이 넘는 노동

자가 절반은 사고로, 절반은 직업병 및 업무 관련 질병으로 목숨을 잃어요. 싸움은 단순히 故 김용균 씨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데 멈추지 않고, 발전소의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안전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한 법 개정 요구로 나아갔어요. 유가족은 “말로만 하는 위로는 필요 없다”며 대통령이 만나자는 제안까지 거절했죠. 오직 사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만을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故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산재 사망과 안전한 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이어졌어요.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 위해 사흘간 국회의원을 하나하나 방문해 설득했어요. 6차에 걸친 범국민추모제 기간 점점 더 많은 시민이 함께 촛불을 들었고 사회적 반향이 커지면서, 2018년 12월 27일 ‘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죠.

[의미 : 변화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다] 노동자들의 죽음은 언론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아 가족이나 친지들, 가까운 동료 이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하지만 젊은 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피켓을 들었던 故 김용균 씨의 죽음은 쉬이 잊히지 않았죠. 그가 일하던 현장에 대한 진실을 소리 높여 외쳐준 동료 노동조합원들의 존재와 그의 꿈과 삶을 알린 어머니 김미숙 씨의 호소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2018년 2월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법 개정안은 28년 만의 전면 개정인 만큼 여러 의미 있는 변화를 담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고,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을 좀 더 제대로 보장하는 법안인 거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처럼 직접적인 변화가 아니고 선언 수준에 머문 내용도 있지만, '위험의 외주화'가 故 김용균 씨와 같은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켰어요.

[참여 :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보장 요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故 김용균 씨가 죽은 뒤인 2019년에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막을 수 없었던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어요. 2019년 상반기에도 1,11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는데, 이는 2018년 상반기보다 더 늘어난 숫자예요. 질병 사망자를

제외하고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65명으로 2018년에 비해 약간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산업 부진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 일터의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김미숙 씨가 국회의원실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설득해 통과시켰던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가 2019년 4월 '황산, 불산 등 4개 화학물질의 설비, 보수 해체 업무 등'의 적용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게 되었어요. 2021년 1월 8일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면서 책임져야 할 주체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일터의 환경이 변화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성처럼 되돌아가 누군가가 다시 희생돼요. 노동자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스스로 방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 위험 환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기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노동 ⑤] 갑질 감수성을 높여라, 일터의 관행과 구조를 바꾸는 여정

“광장 민주주의에서 직장 민주주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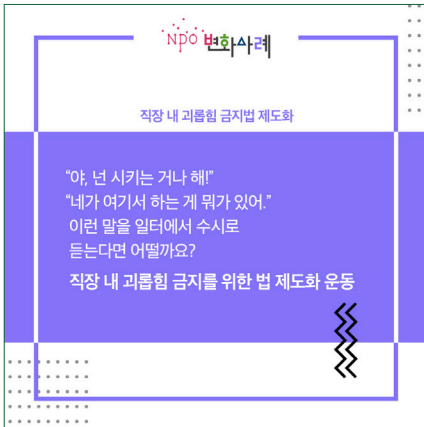
[시작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화’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7년 11월 1일 오후 1시 직장갑질119는 오픈 채팅방을 열었어요. 일터를 바꾸고 싶지만 노조를 만들기는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소통과 상담 활동을 시작한 첫날, 채팅방 48건, 이메일 7건 등 총 58건의 갑질이 제보됐고 일주일 만에 총참여자는 1천 명이 넘었죠. 첫 상담은 상사의 폭언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제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정신이 피폐해질 지경이라고 밝혔죠. 이는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인 동시에 저항의 선언이기도 했어요.

직장갑질119는 ‘갑질을 고발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손쉽게 만들기 위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대신 이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존 플랫폼을 이용했어요. 그 덕에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1천 명이 넘는 직장갑질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직장갑질119 출범 직후 제보되었던 ‘대형병원 간호사 선정적 장기자랑’은 사회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한국 사회 ‘직장 갑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렸어요. 그러나 정작 이를 제어할 법과

제도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직장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게 되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직장갑질119는 힘없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했어요. 직장갑질119 출범 1년 차가 직장 갑질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간이었다면, 2년 차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간이었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괴롭힘을 정의한 규정이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제보자들이 집단 항의 전화를 거는 등 다양한 통로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 2018년 12월 27일 입법되었어요.

직장갑질119는 ‘직장 갑질 감수성 지표’를 개발해 실태조사를 벌였어요. 이 지표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30개 문항에 녹인 것으로, 갑질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죠. 2019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평균 68.4점으로 4등급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죠. 2019년에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정부 지원금 제도와 직장 내 괴롭힘', '특수고용 노동자가 겪는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의미 : 운동의 형태를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가다] '직장 갑질'을 잡는 특급 소방관이 되어 보자며 결성한 직장갑질119의 출발점은 노조 결성 운동이에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처럼 2016년의 촛불혁명이 직장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바라며 토론회를 열었어요. 몇 번의 공개토론회를 열면서 민주노총 법률원,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건강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금융노조 등으로 참여단체가 늘어났어요.

['직장갑질', 마음 놓고 터놓을 창구가 생겼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카오투드 오픈 채팅과 이메일 상담은 하루 평균 6~70건에서 11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동안 근로기준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문제였기 때문에 신고도 제보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게 된 거죠. 직장갑질119에는 법률·노동 단체들과 그 외 변호사, 노무사, 노동운동가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 내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상담을 이어 나가고 있어요. 익명 상담으로 문턱을 낮추고, 노동법에서 조차 소외된 노동자들, 정보와 노동법 교육에서도 소외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과정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참여 : 직장 내 괴롭힘을 완전히 근절해야 합니다] 직장갑질119 활동가들은 하루빨리 단체가 해산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2017년에 결성된 이후 여전히 활발히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혹시 내가 직장갑질의 당사자(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사람을 지켜보는)가 아닌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에서 동료

들이 괴롭히고 피해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곳은 건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권력관계에 의해서,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에 정당한 이유란 있을 수 없어요. 이번 기회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화'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노동 ⑥] 설 수 있는 권리,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시작 : '신입사원 연차 보장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6년 10월 독립활동가 갱은 시민 누구나 입법을 제안하고 서명 1,000명을 달성하면 국회의원에게 직접 발의 요청이 가는 서비스인 국회 특독을 통해 신입사원 연차 보장을 제안했어요. 5년간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6개월 차에 전환 배치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갱은 회사를 퇴사했고,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력보유기간이 길어질 경우 취업이 어려워질 것에 대한 판단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했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는데 격주 또는 한 달에 한 번 아픈 아이를 휴가를 내고 챙기느라,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사용하지 못했고 삶의 질이 많이 나빠지게 되었죠. 갱은 처음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는 주요 전염병에 걸릴 경우 부모에게 연차 1일을 지급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수소문했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서 먼저 연락이와 발의가 되었으나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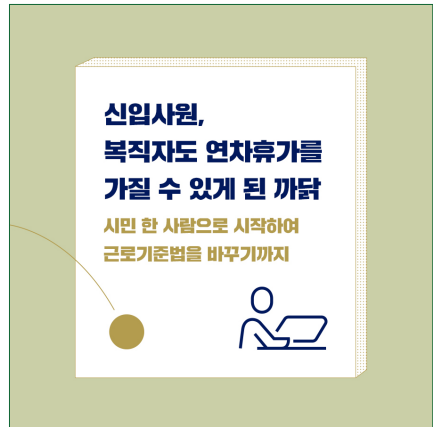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법을 고민하던 갱은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돌아와 “1년 차에 쓴 연차를 2년 차에 지급하는 연차 15일에서 같음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의원실에 메일을 보냈어요. 신입사원은 만 1년을 채운 뒤에 연차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연차를 끌어와 써야 했고, 갱은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한 군데에서 좋은 제안이라며 연락이 오긴 했지만 현실화시키긴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속수무책으로 있던 중 SNS에서 국회 특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제안은 정치 스타트업 '와글'을 비롯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400명까지 서명을 받은 뒤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팔로워가 많은 트위터러안이 서명 링크를 공

유하면서 순식간에 1,000명을 넘기게 되었어요. 국회 특특에서 천 명의 서명을 달성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배정받아 간담회를 거쳤고, 이후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법안은 노동소위와 법안소위,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8년 5월 개정된 연차법이 시행되었어요.

[의미 :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 방식을 확장하다] 연차법은 시민 발의 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된 1호 사례예요. 앞서 다음 아고라는 국회 특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프로세스가 부재했어요. 국회 특특의 경우 온라인으로 서명이 모이면, 운영진이 직접 의원실에 전달하여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연차법 도입이 새로운 방식의 정치 참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참여 : 노동자의 쉼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갠은 연차법이 “신입사원의 연차를 2년 차에 삭감하지 말아 달라”는 소극적 저항일 뿐이었다고 회고해요. 연차 개수를 늘리는 데에 집중하느라 정작 “왜 우리 사회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혹은 일용직의 휴식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



요했다고 덧붙였어요. 구체적인 의제를 쥐고 있는 것 자체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그 자체에만 매몰되어 확장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직접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 지금은 국회 특특 뿐만 아니라 청와대 사이트에서도 특정 제안의 서명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관련 부처의 책임자가 답변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서명인 20만 명을 넘어도 해결되지 않아 시민들의 목소리가 ‘호소’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죠. 갠은 이후 빠띠(국회특특을 함께 개발한 민주주의 활동가 그룹)에 참여하여 다른 법안의 캠페이너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그 법안들도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해요. 갠은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다른 법안들과 그 안에 계류 중인 모든 목소리를 응원하고 싶다고,

‘20만 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의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적절한 휴식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조금씩 만들어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잘’ 쉴 수 있기 위해서는 쉼을 보장하는 제도와 문화가 함께일 때 가능하겠죠. 이번 기회에 ‘신입 사원 연차 보장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노동 ⑦]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가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피할 권리’를 위해”**

**[시작 :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3년 대기업 임원이 기내에서 제공된 라면이 설익었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했던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 이후, 감정노동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촉매제가 되어 2013년 5월 한명숙 의원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규제 관련 첫 입법발의를 했어요. 하지만 감정노동 문제는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였죠. 막무가내로 때를 쓰거나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는 소비자들은 늘 있었지만, 오히려 기업에서는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하거나 피해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어요.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낼 필요를 느꼈고 입법을 위해 실태조사 활동을 꾸준히 벌였어요.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각 노동조합들과 관련 연구를 해온 시민단체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시민 캠페인과 언론 활동을 펼쳤어요.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네트워크는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EAP협회, 중앙일보, 안전보건공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과 함께 감정노동 전국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했어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감정노동자 문제에 대해 여성운동 경력이 있는 한명숙 의원이 큰 관심을 보였고, 다행히 입법발의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2015년 한명숙 의원이 구속되면서 힘차게 입법을

추진하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법안은 이인영 의원실로, 다시 한정애 의원실로 옮겨갔어요. 19대 국회에서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법안을 한명숙, 이인영 의원실과 함께 입법발의했어요.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이었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도 두 차례(2014년, 2015년)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신설된 법조문을 어겨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즉,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문화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2015년 제시된 개정안은 2014년 개정안보다 더 후퇴한 안으로 감정노동 업종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었어요.

그 외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안이 봇물 터지듯 제출되었으나 실제로 개정에 이른 법안은 심상정 의원실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중 감정노동 및 기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진단명 추가와 김기식 의원실의 금융 관련 5개 법률 중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 신설 부분이었어요.

[의미 :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2018년 3월 마침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감정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생겼고 가해 고객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어요. 이 보호법의 핵심은 '피할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 피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이미 겪어버리면 트라우마가 남게 되므로 이 과정을 예방적으로 없애자는 취지예요.

한편 2016년 서울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 어떤 개선안에도 뒤지지 않는 촘촘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고객과 산하기관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집행의 강제가 가능해요. 또 서울시는 조례 5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약 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과 함께 10여 년의 활동이 이어져 왔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 중 하나는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전국 캠페인이었어요. 감정노동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 단체와 약 3년에 걸쳐 '정의로운 소비'를 외치며 전국 캠페인을

별였어요.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입장이 아닌 노동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서준 것이죠. 시민의 반응 역시 뜨거웠고요. 그리고 법은 통과됐으나 2019년 10월경 법 적용 수준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70%의 사업장에서 예방조치나 피할 권리가 잘 구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2013년 5월 한명숙 의원실에서 첫 입법발의를 한 지 5년 만인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 보호 규제가 시행됐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법 적용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노동 ⑧] 특성화고 고졸 차별 멈춰! 졸업생 스스로 운동의 중심이 되다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 우리가 직접 바꾼다”

[시작 : ‘특성화고 차별 반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7년 7월 26일, 구의역 9-4 승강장에 20여 명의 특성화

고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 우리가 직접 바꾼다!”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그들이 구호를 외친 이곳은 김 군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거쳐 취업한 뒤 스크린도어 수리 중 숨진 사고 현장이었어요.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행동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어요. 20여 명으로 시작된 학생들의 활동은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이하 연합회)’라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어요.

2017년 11월, 창립대회를 한 지 열흘이 지나 제주에서 들려온 소식은 학생들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어요. 그것은 생수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이민호 님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학생들은 소식을 들은 그날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촛불을 들었어요. 청년들이 왜 계속해서 현장 실습하다 죽어야 하는지 무거운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어요.

연합회는 이민호 님의 영결식이 열릴 때까지 추모 촛불을 이어갔고, 이후에는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어요. 계속 반복되어 온 현장실습 사고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과 교육부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교육부의 현장실습 개선 협의체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어요. 기자회견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알리며 문제점과 정책 제안을 발표했구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취업은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만큼, 연합회는 설립 후 3년간 안전 보장 등 현장실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어요. 2018년 다소 급하게 마련된 교육부의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정책이 이후 2019년 현장실습 개선안으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정리하고 학생들의 권리선언 운동으로 사회에 알렸어요.

교육부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결과 ‘직업계고 학생 정책소통단’ 사업이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특성화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 연합회에서 운영을 맡아 3년째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요. 2019년 1학기 지역 모임에서 학교 실습 과정에서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아 낫땀 연기를 마시며 실습을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이는 특성화고 교내 실습 안전보건 환경 개선 운동으로 발전했어요. 2019년 7월 연합회의 “마스크를 지급하라, 환풍기를 설치하라!” 기자회견 후 교육부는 즉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실습실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의미 :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평등을 위하여] 연합회는 고졸 차별을 없애고 직업과 직무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구별과 처우, 노동환경이 조성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동안 차별받고 무시당하며 존재가 지워지다시피 했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생존이 위협되는 일자리에 내몰리던 고졸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작이에요.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꿈으로써 사회 전체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인 것이죠. 고졸 차별을 철폐하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면 과열된 대학 진학과 입시 풍토 역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직업마다 상이한 기술과 자격이 요구되고 일정 정도의 임금 차이는 존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이 아무런 조건의 고려 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고졸’이 하나의 낙인처럼 차별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 활동과 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 이러한 차별은 임금, 직급, 처우 등 노동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괴롭힘 등의 형태로 포착되기도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이 겪고 있는 문제는 독립된 사안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 교육, 노동, 인권, 차별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따라서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한국 사회에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안이기도 해요. 이번 기회에 ‘특성화고 차별 반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노동 ⑨] 노동조합이 생소했던 그들, 대법원에서 승소하다

“투쟁을 통해 증명한 우리의 옳은 신념”

[시작 : ‘톨게이트 불법파견 반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요금수납업무는 원래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의 업무였어요. 그런데 1995년에 신설된 영업소에 한해 외주화가 시작되었고, IMF로 경제가 어려웠던 1997년 일부가 또 외주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2009년 정부 정책에 의해 전

면 외주화가 되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인 요금수납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2007년, 하이패스가 도입되면서 수납업무가 줄었다는 이유로 많은 인원이 감축됐어요. 해고의 불안이 커졌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어느 날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진행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서산 톨게이트에 근무하던 대다수의 수납원들은 그 소송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2017년 2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은 1심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하게 돼요. 그해 7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표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망을 품었지만, 도로공사가 꾸린 노사정협의회를 통한 협상은 일방적 소통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한국노총 조합원 900명과 민주노총 조합원 600명이 투쟁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2019년 6월 30일,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 44명의 조합원이 올라가며 고공농성이 시작됩니다.

[의미 : 회사와도 싸우고, 무관심과도 싸

우고 하이패스가 도입되면서 수납원의 역할이 줄었다는 건 예측하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이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삶 역시 존중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자주 짓밟히고 말아요.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회사의 불통보다 사람들로 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자신들의 싸움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회사가 농성장의 전기를 끊으면서 본사 안 모든 언론의 취재가 통제되기도 했을 만큼 회사는 이 문제가 세상 밖으로 더 새어나가지 않길 바랐던 것일지도 몰라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 지원직이라는 새로운 직급을 만들었어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나가 쓰레기를 찾아 헤매야 하는 업무예요. 2년마다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삼아 장거리로 보내 버리면서 전세 지원금 8천만 원 지원이 고작이라는 사실. 교묘하게 차별적인 복지체계를 집어넣으면서 여전히 꿈수라는 지적이 존재해요. 승리를 쟁취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노동조합이 뭔지도 잘 몰랐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은 그야말로 송고한 느낌까지 들게 해요.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순간에도 동료와 함께 부끄럽지 않게 싸웠다는 그들.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겼는지 모두 이해하는 건 당사자가 아니면 힘들지도 몰라요. 이 문제는 무관심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노동 ⑩] 화물노동자 부담은 덜고, 기업의 책임은 키우고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그만큼, 도로의 안전도 증진된다”

[시작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망사고 10건 중 6건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사고예요. 차량이 크다 보니 화물차 사고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2.6배나 높아요. 화물차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화물차 사고의 원인으로 화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과로·과적·과속을 지목하고 도로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도입’을 목표로 지난 18년간 투쟁해왔습니다.

2002년 화물연대가 처음 출범했을 때, 화물운송시장은 무규범 상태나 다름없었어요. 화물 운송을 지시하는 화주(대기업)는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 운반비를 계속 낮추고자 했으며 운송사들은 물량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결국 이들은 화주들에게 앞다퉈 더 낮은 비용을 제시했어요. 이 과정에서 화물노동자의 운임은 꾸준히 하락했고 화물노동자들은 점점 더 높은 노동 강도와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시장을 안정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화물운송운임을 정부에서 결정해 고시하는 표준요금제의 도입을 요구했어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2003년, 이제 막 출범한 화물연대가 한국의 물류를 멈추고 정부에 표준요금제(현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했을 때, 정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화물노동자의 운임을 정부에서 정해달라니, 불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한 것이죠. 화물연대의 기세에 밀려 일단 제도의 도입을 약속했으나 제도 도입이 10년 넘게 미뤄진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한번 표준운임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결국 무산됩니다. 세계 어디에도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견고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 것이 국제운수노련(ITF)와 호주운수노조(TWU)예요. 특히 호주운수노조는 오랜 투쟁 끝에 2012년 전국적인 안전운임법을 도입한 바 있었어요. 호주의 안전운임법은 화물연대가 요구한 표준요금제와 거의 유사한 제도였는데, 지구 정반대의 나라에서 두 개 노조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화물연대는 호주의 예시를 들며 정부를 설득했어요.

[의미 : 과속은 줄고 평균 수면시간은 늘었다]

화물노동자들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심야 운행, 과적, 과속 등 위험 운행에 노출되어 있어요. 안전운임은 이러한 노동 환경이 화물차 사고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도로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화물운송원가를 포함해 산정된 적정운임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운임 시행 이후 정말로 화물노동자와 도로의 안전이 증진되었을까요? 안전운임 시행 2년 차인 현시점에서 답은 “그렇다”입니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KSRRG)이 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난 2020년 7월,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안전운임 시행 이후 졸음운전, 과속은 줄고 평균 수면시간은 늘었다고 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화물운임제는 그동안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겼

던 비용을 다시 기업에 되돌리는 제도인 만큼, 화주 기업과 운수업체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어요. 사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를 현장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및 이해당사자의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 역시 필요한데 한국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법 개정이 없는 한 2022년에 소멸할 예정입니다.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은 물론 모두의 도로 환경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지만, 자칫하면 한때의 시도로 끝나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안전운임은 화물운송시장을 혁신하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해요. 화물운송시장에 만연한 다단계 구조는 화물운송운임을 낮추고 화물노동자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동안 물량 주선의 대가로 화물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던 영세 다단계 업체들이 도태되고 있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물량 수주를 위한 비용 절감 경쟁도 줄어들고 있어요. 운임이 투명하게 결정되고 지급되다 보니 화물운송시장의 전반적인 투명성 역시 제고되고 있는 것이죠. 제도가 현장에 정착한 이후에는 안전 증진 및 시

장 혁신 효과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 ⑪]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권리를 찾기 위한 그들의 싸움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아온 ‘무늬만 프리랜서’들, 시민권을 얻는 그 시작”

[시작 : ‘방송작가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언제부터인가 방송에서 방송작가들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연예인과 함께 일하며, 프로그램 곳곳에서 활약하는 그들의 모습은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방송작가는 정식적인 채용 절차가 없다는 걸 아시나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사는 방송작가를 공채가 아닌 ‘알음알음’이라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사가 전부 그렇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더 납득할 수 없는 건 채용의 절차가 서면이나 계약이 아닌 “내일부터 나오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 말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 한마디의 해고 통지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더욱 열악한 상황의 작가들이 있었

으니, 그들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방송국 소속 작가들이었어요. 전국의 KBS, MBC, 민영 방송사를 비롯해 TBN 한국교통방송과 종교방송 등 각각의 방송사에는 10~20명의 방송작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20년 동안 인상 없는 원고료와 해고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견디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과 : ‘방송작가유니온’ 출범하다] 그렇게 버티던 작가들은 눈물의 세월 속에서 중견작가가 됐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는 죽을힘을 다해 혹은 운이 좋아 버텨왔지만, 뒤에 오는 후배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물려주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둘, 작가들의 용기 있는 의지가 모여 2017년 11월 11일, ‘방송작가유니온’이 출범합니다. 방송 카메라 뒤에 방송작가가 존재함을, 방송 프로그램 기획부터 송출까지 모든 곳에 방송작가의 노동이 들어 있음을, 그러나 근로 환경과 처우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함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방송작가들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어요.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이 출범하자 전국 곳곳에서 관심과 가입 문의가 쇄도했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방송작가들이 구름

처럼 모여든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숨어서 울어야 했던 작가들이 함께 손을 잡게 된 것이죠, 이듬해 2월 24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작가들을 중심으로 ‘영남지회’가 출범했고, 같은 해 3월 30일 대전, 세종, 충북 작가가 참여한 ‘대전충청지회’가 출범했어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기댈 곳 없는 곳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던 방송 작가들에게 처음으로 울타리가 생긴 거예요. 전국 방송작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방송작가유니온은 빠르게 행보를 이어갔어요. 우선 지역방송작가 실태조사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상황은 열악했어요.

[의미 :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최초의 인정] 2020년 MBC 보도국 작가 2명이 부당해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보도국 아침 프로그램인 <뉴스 투데이>에서 9년을 일했던 두 작가가 하루아침에 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매일 새벽 출근해 담당 피디의 지시에 따라 뉴스를 작성하고, 아버지 상중에도 빠지지 않고 방송 일부터 챙기던 작가들이 하루아침에 전화 한 통으로 해고를 당한 거예요.

작가들은 사측의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방송작가유니온과 손을 잡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어요. 프리랜서이니 사용자의 사정과 의사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었지만, 2021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된 두 방송작가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합니다.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가 된 것이죠.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여전히 작가들은 불안한 오늘 위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2019년 문체부에서 ‘방송작가 표준집필계약서’를 마련했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측의 편의에 따라 방송 개편에 맞춰 6개월 단위로 체결되는 계약서는 고용안정의 보호막이 아니라 ‘계약 종료’라는 더욱 손쉬운 해고의 명분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실 적용에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한 법이지만, 이에 대해 문체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방송계는 그 어느 업계보다 관행이라는 구습과 구태를 따르며, 형태도 방식도 다양한 비정규 직종의 생산 집합체의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고, 침묵은 깨졌어요. 21년 4월부터는 방송작가유니온이 제출한 특별근로감독 청원 진정에 따라 서울 지상파 3사(KBS, MBC, SBS) 시사교양·보도부문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있어요. 이번 근로감독은 방송작

가뿐만 아니라 방송사 다른 비정규직 직군의 현황까지 모두 살펴볼 예정이어서 연대로 발표될 근로감독 결과가 주목됩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방송하지 않을 권력을 가진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일은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방송사 내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과정은 간단치 않아요. 그런 문제에 공감한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연대와 지지로 방송작가유니온의 싸움을 함께 돕겠다고 나섭니다. ‘방송작가 친구들’의 경계 없는 연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방송작가를 비롯한 방송 정규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론화하며 해결을 위해 손잡고 뛰게 될 거예요.

[노동 12] 계속되는 최악의 산재사고, 시민들의 요구가 만들어 낸 중대재해법

“일하다 죽는 사회, 생명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시작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2020년은 기대와 냉소 그리고 환

희와 절망의 전환이 그 어느 해부터 빠르게 교차하며 나타난 한 해였어요.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2018년 대비 2019년 사망자가 116명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기 때문이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역대급 산재사고사망 감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희망과 기대가 절망과 냉소로 바뀌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2020년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건설 도중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이죠.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와 다를 바 없는 사고였어요. 발생 시점과 회사만 바뀌었지 똑같이 반복된 대형 산재 참사인 셈, 정부가 고개는 숙였지만 마땅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고, 책임이 있는 사람과 기업은 있되 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경과 : 계속되는 산재 사망을 멈추기 위해 모이다] 2020년 5월 27일,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와 코로나19의 재난 불평등 속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연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로 확대·재편됐어요. "사람이 먼저다", "이윤보다 생명을"이라는 윤리적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해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과 더불어 거대 여당이 탄생한 21대 국회 상황 속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해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국회에서 첫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2020년 12월 2일이 되어서였어요. 2020년 9월 22년 완성된 10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과 연이은 정치권의 립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불투명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논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여주었어요. 당시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변명 그리고 기업들의 로비는 여전했지만,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혼자였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다르게 더 많은 산재 유가족들이 모두를 위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단식까지 결의하며 법 제정의 실질적인 촉진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국회 앞에서 단식과 농성은 노동계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다르게 종교,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법조인, 일반 시민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폭넓은 연대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었어요.

[의미 :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를 하나의 법으로]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의를 찾아보자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를 규율하여 오고 형법과 안전 관련 법령이 시민 재해를 규율해 오던 방식에서,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하여 다루도록 하였다라는 점에 있어요. 특히 그동안은 구체적인 행위자(재해 발생과 관련된 실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그쳤다면, 이 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지 정책 운영 과정에서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중요한 가치로 고려하여야 하고, 비용으로 치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참여 : 좀 더 근본적인 산재의 원인을 찾아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 부분 수정된 채 통과됐어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 그리고 중대재해에서 일터 괴롭힘 등의 제외와 입증책임 전환의 무산 등 법안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법안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좀 더 근본적인 산재의 원인으로는 '위험

의 외주화' 같은 산업구조의 문제가 지적되곤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0인 미만 사업장에 나가 보면 대부분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라 안전문제는 고사하고 이런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니까요. 그런 기업이 생산활동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단계 하도급으로 그 생산물이 값싸게 대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작업은 한계기업에 맡기고 이윤은 위에서 뽑아가는 산업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보니 산재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의 죽음을 막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어렵게 제정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를 거듭해 '누더기 입법'이란 비판을 받았어요. 시행령으로 빈틈을 메우지는 못할망정 법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으니 이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민사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2003년 노동건강연대가 막연히 외치던 '기업살인법'이 지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지켜보고 함께 행동한다면 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넘어, 내 동료들의 목숨을 지켜낼 '노동자 생명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CHAPTER
08

인권



[인권 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도' 존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학생은 어떻게 사람이 되었나”

[시작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학생인권'이라는 말은 낯선 외계어로, 누군가에게 권해줘야 할 이데올로기나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학생들이 학교와 가장 가까운 이미지로 '감옥'을 떠올리고, 교복을 죄수복으로 이름표를 수번호로 받아들이던 시절이었죠.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 학생들은 매일 아침 '죄인'이 되어 검열과 통제, 폭력이 횡행하는 학교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게 당연한 '학생 생활지도'라 여겨졌던 시절, 한마디로 학생은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2008년 5월, 광우병 위험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어요. 촛불집회의 현장에서 학생들은 '나쁜 소고기'뿐 아니라 '나쁜 교육' 반대를 함께 외쳤어요. 2009년 5월, 경기도에서 치러진 첫 직선제 투표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됐어요.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이 발표되자 “학생인권은 시

기상조다”, “학교가 무너진다”와 같은 보수 언론과 교육단체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2010년 6월, 다시 치러진 전국 동시다발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고 9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의회를 통과했어요. 학생을 '사람'이자 '시민'으로 대하자는 학생인권조례 시대가 드디어 막을 올린 거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0년 7월 7일 인권·교육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출범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주민발의라는 정면 돌파 방식을 선택했어요. 주민발의에 성공하려면 단 6개월 만에 서울 시민 유권자 1%(당시 8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했죠. 학생인권이라는 변방의 의제로, 게다가 당사자인 학생들은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서명도 아니고 주민번호까지 기록해야 하는 자필 서명지를 받아내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서명 종료일이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 서울본부 소속 단체들이 모아낸 서명지가 도착하고 트위터 등 SNS에서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민발의 무산 위기 소식과 더불어 서명을 호소하는 칼럼 등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미국, 독일, 캐나다 등지에서

서명한 국제우편까지 하루 수백 통의 서명지가 우편으로 도착했어요. 2011년 5월 10일, 마침내 서명 종료일이 다가왔고 서울시민 유권자 1%가 훌쩍 넘는 서명지를 수십 개의 상자에 옮겨 담아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하던 날, 교육청 앞은 눈물 콧물 바다였어요.

“학생인권과 소수자 인권,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호소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도 이미 포함된 차별 금지 사유를 서울에서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 결국엔 통하게 되었죠. 2011년 12월 19일,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된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켜낸 최초의 사례가 되었어요.

[의미 : 청소년은 우리의 동료 시민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은 학생도 존엄한 사람임이 사회적으로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된다는 게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친 사건이기도 하죠. 지난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 사회는 학생이 ‘사람’ 일뿐 아니라 ‘동료 시민’이기도 함을 또다시 경험했어요. ‘사람’이 된 학생·청소년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로 결집해 이제 ‘시

민’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죠.

[참여 :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이후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조례가 제정된 지 7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학교의 변화 속도는 느리며 조례의 법적 효력이 약한 탓에 조례를 무시하는 학교도 많아요. 학생인권과 교육을 대립시키는 공세가 여전하지만, 대놓고 “학생이 인권을 무슨 인권이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줄었죠.

과거엔 당연했던 폭력과 강압, 모욕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도 늘었고, 학생을 대할 때 조심하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딘가에서는 계속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2018년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스쿨미투 고발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란 고질적 문제에 대해 대중들의 인식을 환기하기도 했어요.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학생인권법 제정이 시급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우리는 모두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받는 과정에서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동료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해요. 이번 기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인권 ②] 국가폭력에 의해 간첩으로 몰린 사람들의 진실을 규명해내야 합니다

“진실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다”

[시작 : ‘간첩 조작 진실규명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피해자들은 1970년대~1980년대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으로 몰렸어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는 북에서 남파되어온 간첩이 아니라, 남한에서 살던 평범한 시민들이 이른바 ‘고정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일이 잦았어요. 언론은 수사기관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받아쓰다시피 했고, ‘반공’이 최우선시되던 시기에 ‘간첩’은 다른 모든 진실을 집어삼키는 낙인이었죠. 피해자들은 검찰과 법원의 외면 또는 적극적인 동조 아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0년에서 20년 가까운 징역을 살았죠. 출소한 뒤로도 보안 관찰로 인한 경찰의 감시에 줄곧 시달렸어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소속 인권운동가들은 “고문을 당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는 피해자들의 울부짖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국 각지 교도소로 면회를 다녔어요. 가족들을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장 판결문 등 사건의 기록을 분석해, 1989년 전국 교도소에 ‘간첩죄’로 수감되어 있는 100여 명을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고문으로 인한 조작 사건의 피해자, 즉 ‘조작 간첩’이라 정의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권운동가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민가협 내에 ‘장기수가족협의회’라는 소모임을 만들어 운동을 시작했어요. 장기수가족협의회는 ‘간첩 조작은 이제 그만’, ‘간첩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라는 이름의 간첩 사건 조작 증언 자료집을 만들어 실태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1989년 전국 순회 간첩 조작 사례 발표회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고통을 직접 용기 내 말하기 시작한 최초의 시도였어요. 그 뒤로도 인권활동가들은 ‘나는 간첩이 아니다-조작 간첩 사건 실태 보고서’, ‘조작 간첩 가족들의 인권 실태 보고서’ 등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고통을 피해자들의 언어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사회에 알려 나갔어요.

[과거사 위원회의 설립과 역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의문사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의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이 시작되었어요. 그 투쟁의 결과로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를 시작했죠.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설립되어 과거에 벌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조사에 박차를 가했어요. 영원히 묻힐 것만 같았던 인권침해 사건들의 일단이 햇빛 아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134건의 확정판결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그 가운데 73개 사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죠.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은 공교롭게도 모두 안기부에서 고문 조작한 사건들이었어요. 고문수사관이근안에 의한 대표적 조작 간첩 사건이었던 함주명 사건을 시작으로 조용환 변호사는 재심의 법률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갔어요. 재심 준비 및 재판 진행 과정 동안 시민들이 '조작 간첩' 피해자들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결국 공식적으로 무죄판결이 났어요. 판결문에는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어요.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일상에서 반복되어온 고문 후유증과 두려움, 공동체로부터의 차별과 소외를 부족하게나마 치유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의미 : 피해자의 내상을 들여다보는 관점의 전환] 재심을 위해서는 고문과 조작이라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증언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고통이었어요. 불법감금과 고문이 이뤄졌던 지하 고문실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했고 그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피해자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주변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정의는 없어요. 2005년 9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청문회에서 고문 조작 사건이 생존자의 삶에 미친 정신적 내상을 드러내고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지게 됐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함께 '고문 피해자가 겪고 있는 현재적 고통'을 드러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는 '고문 치유모임'의 기본 동력이 되어 재단법인 진실의 힘 설립으로 이어졌어요.

[참여 : 간첩 조작 진실규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과거청산은 미완성이고 여전히 그 길 위에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수사가

관의 고의적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밝혀지기도 했지만, 가해자들은 한 사람도 처벌되지 않았죠. 고문 조작을 대가로 그들이 받은 훈·포장도 그대로예요. 과거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법과 제도, 기구를 손보고 시정하려는 노력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들을 간첩으로 옹가맨 국가보안법은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은 채 여전히 전하며 국정원, 기무사, 경찰 대공분실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또 다른 형태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국가의 기본을 흔들고 있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국가 폭력 사건들은 우리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직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거울이에요. 이번 기회에 '간첩 조작 진실규명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인권 ③] 인권을 보호할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활동가들의 요구가 실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나”

[시작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에 대해 알고 있나요?] 과거 독재 정권에서는 감옥으로 끌려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고, 고문을 당해 건강과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군사정권이 물러난 1993년의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민주화가 어느 정도 보장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적어도 대통령이 군인은 아니었으며, 각종 민주적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인권운동가들은 국가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의 여지가 있는 정책을 만드는지 감시하는 국가기구가 있다면 노골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죠.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을 두고 인권 단체들과 정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권 단체는 국가인권기구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최대한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정부를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자신을 감시하는 국가기구에 그만큼의 지위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고 했죠.

1999년 4월 30일 공추위는 '올바른 국

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인권공대위)로 확대돼요. 법무부는 인권위를 독립적 지위와 권한이 보장되는 국가인권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으로 설립하겠다고거나, 인권위원의 지위를 민간인으로 규정하겠다는 등의 제안으로 인권 단체와 갈등을 지속하게 되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0년 12월 18일부터 인권활동가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가라 국가보안법, 오라 국가인권위”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숙 단식농성을 진행하게 되었죠. 서울, 부산, 울산, 전주, 수원, 광주 등 전국 15개 인권 단체 소속 활동가들 역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 돌입의 배경과 결의를 밝혔어요.

단식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도 늘었고 언론의 관심도 받으며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알릴 수 있었어요. 13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치고 국회 앞 집회, 민주당사 앞 릴레이 시위 등으로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였죠. 2001년 4월 30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권위에 진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통과되었고, 5월 24일 공포 후 11월 25일 인권위가 만들어지게 되죠.

[의미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바꿔가다]

인권위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인권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거나,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인권의 언어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2002년 인권위는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특정 색을 살색으로 이름 붙인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토록 권고했어요. 또한 2003년에는 몸무게, 종교 등 업무와 상관없는 것들을 인사지원서에 작성하지 못하도록 차별 항목 시정을 권고했으며, 2005년에는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에 대해 아동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권고의견을 냈어요.

[참여 :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해]

인권위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5년 사형제 폐지의견 표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권고 등 인권 침해적인 국가정책과 법·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미투 운동의 물결에서 피해자와 연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외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며 국가권력을 감시하던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가 2007년 당선 직후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려 했다가 국내

외 인권 단체의 반대로 실패한 뒤, 2009년 인력을 21%나 축소해 조직의 힘을 뺐은 것이죠.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권위원 인선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채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처럼 정부가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 사건에 침묵, 특장대응해 왔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국가인권위는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독립적 기구로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공정하고 평등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이번 기회에 '국가위원회 설립'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인권 ④] 축제하라, 변화를 향해!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가시화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다”

[시작 :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0년대는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져 가던 시기로, 표현의 자유와 문화콘텐츠의 소재 역시 이전에 비해 폭넓게 보장되었어요. 그

러나 문화콘텐츠를 검열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었죠. 1997년 왕가위 감독의 <해피투게더>가 동성애를 다룬다는 이유로 국내 개봉 심의가 반려되었고, 같은 해 서울퀴어영화제는 상영관의 전기가 차단되어 개최가 무산되었어요.

1998년 <해피투게더>는 일부 장면이 삭제된 형태로 개봉되었고, 서울퀴어영화제도 첫 회를 개최하게 되었죠.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향유하는 문화, 고민하는 담론 등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던 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 위원회가 독립예술제의 퍼레이드에 단독 참가하게 되면서 현재의 틀이 마련되었어요.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2000년에 처음 개최되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1990년대 한국의 언론은 이따금 성소수자 이슈를 다루곤 했으나, 주로 음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삶 등만을 다루었고,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죠. 성소수자는 ‘가려진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보도는 일시적 가시성으로만 소모될 뿐 실질적으로 가시화의 효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성소수자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에 관련 화두를 던지며 지속



일러스트: 신주옥(LPW)

해서 존재를 알리는 게 필요했고, 퀴어문화축제가 중요한 운동의 방식 중 하나였던 거죠. 퀴어문화축제는 해마다 슬로건을 내고 다양한 행사를 조직해 한국 사회에 목소리를 내왔어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는 물론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때로는 응원을 때로는 부당한 사실에 대한 성토를 담은 슬로건은 '지금' 필요한 고민과 논의의 지점들을 환기했어요.

퀴어문화축제를 방문하는 많은 참가자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있죠. 관공서의 부당한 민원 처리 기준에 대한 항의, 성소수자가 사회를 살아가며 겪게 되는 차별에 대한 성토,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등 다양한 제안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 시민사회단체 역시 현장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응원하며 지지하고 있죠.

퀴어문화축제를 단순히 특이한 사람들의 행사로 언급하던 언론보도도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달라졌어요. 일상적 행사의 알림 형태로 바뀌었다가 주최 측과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형태로 변화했죠. 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의 의미는 무엇인지,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사회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담은 기사와 언론 보도가 점차 늘어났어요.

[의미 : 문화행사이자 운동의 현장이 되었다] 퀴어문화축제는 영화, 공연, 전시, 토론, 퍼레이드 등의 문화적 콘텐츠를 향유하는 장, 그에 담긴 의제들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소통을 시도하는 장, 문화행사를 통한 사회적 가시화를 이루기 위한 장이 되었어요. 즉, 문화행사인 동시에 시민사회 운동의 현장이 된 것이죠.

[참여 : 여전한 편견과 폭력을 금지해야 합니다] 2014년에는 서대문구청이 퀴어 퍼레이드의 개최 장소인 신촌 연세로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일부 성소수자 혐오 세력이 퍼레이드 행렬 앞에 드러누워 방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행사 진행이 4시간 가까이 중단되었지만 경찰은 현장의 상황을 방치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퀴어문화축제가 점점 더 많이 알려지면서

인
권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집단적인 움직임과 그에 대한 정부와 관공서의 모호한 태도 역시 두드러지게 된 거죠.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 가능 여부가 토론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기도 했어요.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폭력을 방지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변화가 두루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각종 지표 속의 한국 사회는 이미 빠르게 변화해왔지만, 여전히 ‘보통의’, ‘평균적인’ 삶을 기준으로 타인을 재단하는 문화가 공고해요.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치열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퀴어문화축제’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인권 ⑤] 장애인 차별에 저항하라,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평등을 위한 투쟁은 모두에게 더 나은 오늘을 선물한다”

[시작 :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01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철심이 끊어져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전에도 장애인 리프트 관련 고장 추락 사고가 연이어 있었지만 개통된 지 채 6개월이 안된 ‘오이도역’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억눌려왔던 장애인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노들장애인야학을 중심으로 ‘추락참사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전국 65개 단체가 ‘장애인 이동권연대’를 결성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외쳤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하철에 집단으로 승하차하는 시위를 이어 나가던 중 2002년 5월 발산역에서 다시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가 발생했어요. 장애인들의 투쟁은 더욱 거세져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달려오는 지하철에 몸을 던지거나,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 이동권을 외치는 형태로 이어졌어요.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접거해 39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고, ‘이동권’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장애인 수백 명이 함께 마포대교를 기어 건너거나 노숙도 불사했죠.

2011년에는 지하철이 다니는 선로에 길

게 줄지어 앉은 뒤 서로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 강제로 끌어내는 경찰에 저항했어요.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무자비하게 끌어내졌고,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가 구속됐죠. 김도현 씨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그 절박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임을 강조했지만, “시위를 하는데 왜 장애인들을 대동하고 나왔나?”, “장애인들을 이용해 장애인 문제와 관련 없는 다른 주장을 펼치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등 목숨까지 내걸고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철저히 대상화하고,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시혜와 동정 차원으로 폄하하기도 했어요.

[의미 : 이동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다]

마침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약속했어요. 2003년에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서울에서 첫 시동을 걸었고, 2004년 건설교통부의 발의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어요. 예산과 설계상의 문제, 구조상의 문제 등 온갖 이유로 불가능하다고만 이야기되었던 각종 편의 시설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2003년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동권’이라는 단어를 신어로 수록하였고,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

의 증진을 위해 5년 단위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어요.

[참여 :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넘어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어요.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수용 입장을 밝히고, 2019년 10월부터 전동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를 시범 운행해왔죠. 그러나 기술 인증을 받은 휠체어만 탑승할 수 있고, 시범사업으로 운행했던 노선이 기차 등 이동 수단이 편성돼 있는 곳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난 1년간 고속버스를 운행했음에도, 실제 탑승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단 16명에 불과하다고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힘이 들 때 유용하게 이용하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흔들림이 적어 편하게 이용하는 저상버스가 이동권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장애인 운동가들의 결실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기회에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인권 ⑥]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끔찍한 인권유린의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시작 : ‘염전 노예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공동대응’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4년 1월, 신안의 염전에서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는 일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를 운영하던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곧바로 시민사회에 연대를 촉구했어요. 장애인들의 인권이 참혹히 짓밟힌 사건이자 국가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는 판단과 호응 아래 ‘염전 노예 장애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러졌죠.

2014년 1월 중순, 한 여성이 전라남도의 한 외딴섬에서 부쳐진 편지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편지의 발신인인 김 모 씨는 마흔 살의 저시력 시각장애인으로 2000년부터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겠다는 한 60대 남성을 만나게 돼요. 그를 따라왔다가 100만 원에 팔아넘겨진 김 씨는 목포항에서 배로 2시간이나 떨어진 섬의 염전에 도착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6,000평의 염전에서 김 씨는 새벽

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일에 시달렸어요.

일이 서툴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에게 수시로 무지막지한 폭력이 날아들었고 탈출 시도는 번번이 막히게 되었죠.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극적으로 부친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서로 뛰어갔고,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끔찍한 인권유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 일이 비단 김 씨와 채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일대에 널리 퍼져있던 관행이었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컸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 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자 비슷한 사례가 속속 적발되었어요. 공대위는 당시 장애인 노동착취를 전수 조사하던 경찰에 제안해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참여했죠. 실종자에 이름을 올린 수많은 사람과 지적장애인들이 섬 지역에 끌려 들어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과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2인 1조로 구성된 ‘도서 인권 보호 특별 수사대’는 1주일씩 교대로 사건이 발생한 섬에 경찰과 함께 상주했어요. 장애인 피해자가 발견되는 즉시 피해자를 면담하고, 경찰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진술을 도왔죠.

[피해자 중심의 수사 과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를 조력하는 일은 공대위의 주요한 활동이었어요. 피해자들의 장애 상태에 대한 이해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면 불공정하거나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 공대위가 별도로 구성되기도 했어요. 피해자 변호인단은 주로 서울 지역의 공익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직접 목포로 가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피해자가 겪은 일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겼죠. 섬을 탈출한 피해자들의 거처를 마련해 신속히 안정을 찾도록 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들였어요.

[의미 : 국제사회에 노동착취 문제를 알리다] 2014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에는 염전 노예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어요. 국제사회에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포스터를 제작하여 심의장 입구에 붙였죠. 활동가들은 장애인 권리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사건 해결과 대책 마련을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권고해 달라"라고 설득했어요.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들은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서도 다룰 문제"일 만큼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착취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배상

할 것을 권고했죠.

[참여 : 장애인 노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길고 힘겨웠던 싸움은 2019년 4월 국가배상 소송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이 되었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축사, 농장, 염전, 양식장 등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공대위에서 파악해 지원한 피해자는 일부에 불과한데도,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분도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먹여 주고 재워줬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어요. 장애인을 '모자라고 쓸모없는' 존재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염전 노예' 사건은 이름만 달리해 반복될 수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취약한 이들을 하대하거나 착취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애인들의 인권이 참혹히 짓밟힌 이 사건은 이를 행한 사람과 뻔히 상황을 알고도 방치해 두거나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돕기까지 한 또 다른 가해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이번 기회에 '염전 노예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공동대응'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인권 ⑦]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다. 난민법을 제정하기까지의 긴 여정

**“난민은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입니다!”**

[시작 : ‘난민법 제정’에 대해 알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가입했어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기치로 한 민주주의 체제가 형식적으로 구축되어 가고,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발돋움하는 흐름 속 이루어진 일이지요. 난민심사 제도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하지만 국경관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체류 심사를 운영해오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업무를 맡게 되면서 본국의 박해로부터 피난온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송환되거나, 불안정하고 차별적인 체류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난민 인정은 심사제도 시행 7년 만인 2011년에야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05년 6월 16일에는 ‘피난처’가 주관하고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이 주최하는 ‘한국의 난민 실태와 난민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포럼이 개최

되었어요. 이 포럼의 참석자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난민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월 1회 난민법 제정안을 연구하는 모임을 하게 되었죠. 연구모임은 ‘난민 지원 네트워크 월례 모임’으로 발전해 본격적으로 난민법 제정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난민법 초안을 서울지방법변호사회가 2009년 입법 청원하였고, 같은 해 5월 25일 황우여 의원이 대표로 국회에 발의하여 상정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이후 2년 동안 입법부 논의 과정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의미 : 난민의 인권 옹호와 처우 개선] 난민법의 통과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과 입국 후 난민 신청과 같은 난민 인정 절차상의 권리,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인정자의 권리 등 난민의 처우가 보다 명확히 규정되었죠. 또한 주로 내부 지침으로만 규율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법적 권리로 명료하게 정비되어 난민 인권 활동의 탄탄한 근거가 되었어요.

[참여 : 난민을 보호하는 취지로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자 수는 매년 약 1.5~1.8배씩 증가해왔지만 정작 난민 인정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고 절차도 보

다 정립되었지만, 실제 법을 운용하는 정부 당국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법제가 마련되었음에도 난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난민 지위를 거부하고 송환하는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거죠. 난민제도 남용을 우려하는 법무부의 반대로 원안을 대폭 수정하는 과정에서 난민 보호라는 본질을 제대로 담지 못했고, 당시 수정된 어중간한 형태의 조항들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 난민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해야 해요] 2018년 여름 '예멘 난민'의 제주도 피난 사건이 불러온 파문으로 인해, 정부는 제도를 지금보다 더 후퇴시키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요. 2018년 6월 '난민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과 70만 명을 넘긴 청원 동의자의 수가 그 기세를 보여주고 있죠. 난민 인정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운용되도록 감시하고 조력하는 것을 넘어 난민법의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운동이 요구되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난민은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취지의 정책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해요.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정착을 위해 전 생애 단계를 고려한 포괄적 정책 설계 역시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난민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인권 ⑧] 난민심사 시 영상 녹화 의무화는 어떻게 가능했나?

“난민심사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상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시작 :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면접 과정의 영상 녹화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영상 녹화 조사실의 현황과 이용 실적을 알아보는 실태조사를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난민심사를 전담하고 있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현 출입국·외국인청)를 포함해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약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영상 녹화 조사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2012년 2월 10일 독립된 인권법으로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지면서 난민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난민 신청자를 면접하는 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난민 신청자에게 녹음 또는 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았어요. 당사자가 이 권리 조항을 알고 녹음 또는 녹화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묵살하는 사례 역시 발견되었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법 도입 직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번 미뤄진 영상 녹화 시설 정비는 이후에도 좀처럼 추진되지 않았고, 난민인권센터는 지속적인 예산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출입국의 실무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했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난민법 시행 이후 1년간 난민 인터뷰 과정의 녹음 녹화 실시 현황’을 요청한 결과 2014년 7월 중순부터 난민 신청자 요청 시 녹음, 녹화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법무부 답변을 받아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6개월 후 ‘2014년 면접 과정 중 영상 녹화 실시 현황’에서 영상 녹화 현황이 총 80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어요. 난민 신청자의 약 70%를 심사하는 서울 출입국 사무소의 영상 녹화 건수는 1건에 불과했죠. 난민인권센터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영상 녹화 실시 건수는 점차 늘어나 2017년 연간 818건에 이르게 되었어요.

[의미 : 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영상 녹화 의무화] 법무부는 이 사건이 법원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언론 보도 등으로 계속 공론화되자 2018년 9월 6일 “상기 판결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난민 면접 시 녹음·녹화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해요. 또한 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난민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연 5~6회)하고, 기존 난민전문통역인 재정비 및 보수교육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죠. 추후 인력 증원을 포함하여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 약속했어요.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다] 여전히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난민 심사 불인정 결과를 받아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난민 면접의 영상 녹화 기록이에요. 현재는 난민법 제8조 3항에 근거하여 면접 시 난민 신청자에게 “녹음·녹화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신청자의 의사를 면접 조서에 함께 기록하여 절차를 체계화하였어요.

[참여 :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은 제도 도입 초반, 난민 면접 영상 녹화 기록은 일절 공개할 수 없다

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열람은 가능하게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상 녹화 기록을 파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열람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소가 지정한 날짜와 장소로 출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상 녹화 기록을 권리 구제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역인, 변호사 등 조력인과 함께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따라서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자신의 난민 면접 영상 녹화 기록 파일을 공개하도록 기존의 실무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난민들의 박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자료가 구하기 어렵다 보니 난민심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만큼 난민 신청자의 면접이 얼마나 정확하게, 또 윤리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결정적이죠. 이번 기회에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인권 ⑨]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의 가치, 참여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생명윤리

“사회적 논의 없이 행해지는 비윤리적 연구를 반대합니다!”

[시작 : ‘생명윤리법 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생명공학에서의 과학적 성취는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로 주목받으며 관련 분야는 해마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연구 자원을 지원받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1997년 복제 양 돌리가 출현한 이후 생명공학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동안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생명공학의 윤리적 문제가 인간 복제 가능성이라는 구체적인 우려로 다가온 거죠. 이 사건 이후 인간 배아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는 동물과 사람의 이종 간 교잡 연구, 유전정보의 상업적 이용 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죠.

복제 양 돌리 출현 직후 1997년 7월에는 장영달 의원이, 1998년에는 이상희 의원이 각각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방치되었어요. 시민과학센터는 별도의 생명윤리법 제정, 배아복제 금지, 독립적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죠. 법률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더욱 커졌어요. 2000년 6월 인간 유전체 사업의 초안 발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유전정보를 통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고, 8월에는 황우석 박사의 배아복제 성공 발표가 있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시민과학센터는 생명안전윤리 법제화를 위한 워크숍, 인간배아복제 14일론 토론회, 인간 유전정보보호 토론회, 유전자 치료 토론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각 영역별 현황과 쟁점을 짚어나갔어요. 아울러 인간복제만을 다루는 법률이 아닌 포괄적인 생명윤리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게 되죠. 2000년 10월에는 연속 토론회의 결과물, 관련 학자들에게 받은 자문, 국내외 규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생명과학 안전 윤리법에 관한 의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어요.

[아쉬움을 남긴 생명윤리법 제정] 2003년 12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29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생명공학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생명공학 육성법 아래 20년 동안 관리와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생명공학 연구 및 임상 분야를 규제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규제가 시급했던 인간 개체복제를 금지했고,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간배아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었죠.

[의미 : 시민사회, 주도적인 변화를 이끌다] 생명윤리법 제정은 정부가 아닌 인간 존엄성과 환경적 가치를 고민했던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요구와 참여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동안 생명공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정책 영역은 과학자들과 일부 관료의 전유물로 인식됐고, 시민사회의 개입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인간배아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 조항까지 담아 입법청원을 이뤄냈어요. 정부나 학계에서 해야 할 생명공학 쟁점에 대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연구까지 시민단체가 진행한 거죠.

[참여 :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조작 작물의 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 논란, 유전정보로 인한 감시와 차별, DNA나 난자와 같은 인체 유래물의 상업화, 인간배아연구로 인한 인간 존엄성 훼손, 부실한 임상시험 등을 둘러싼 논쟁 등이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에요. 특히 생명공학은 인체를 포함한 생명체를 연구 및 상업화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윤리 사회적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인체를 포함한 생명체를 연구하기에 더더욱 사회적 합의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죠. 이번 기회에 '생명윤리법제정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인권 ⑩] 통제에서 자율로의 변화, 핸드폰 허용은 혁신의 한 부분일 뿐

“군대에서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게 된 계기, 병사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시작 : '군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4년 시민사회, 국방부, 군이 머리를 맞대고 병사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어떤 정책을 입안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사용 허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당시 시민사회는 병사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고, 군은 완강히 거부했죠.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간부와 선임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던 '故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라는 조직을 발족시켰어요. 병영에 횡행하는 인권침해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죠. 2016년 국방부는 전화와 문자 수신전용 핸드폰을 생활관 호실마다 하나씩 배치한 바 있어요. 병사들과 가족, 친구들의 소통을 손쉽게 만들어주자는 취지였지만, 나눠 써야 하는 인원이 많은데다 휴대성이 없어 금세 유명무실한 기계가 되어버렸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18년에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군인권센터의 대표 임태훈 소장은 병사의 핸드폰 사용을 시범적으로 일부 부대에서만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하게 돼요. 병사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우려되는 점들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 확인해보고, 별문제가 없다면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보자는 뜻이었죠.

[예상치 못한 긍정적 효과] 4개 부대는 각각 핸드폰 보관 방식, 사용 가능 시간, 사용 가능 구역, 카메라와 녹음 기능 제한 방식에 차이를 두고 3개월간 시범 운영하였어요. 이후 군 인권센터와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고, 일과시간 이후 생활관에서만 핸드폰을 소지하다 보니 크게 우려되었던 보안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복무 부적응을 호소하는 병사들이 눈

에 띄게 줄었어요. 체육활동에 흥미가 없어 기존의 단체 활동에 어울리지 못하던 병사들이 핸드폰 게임 등을 통해 전우애를 쌓기도 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체력단련이 더 즐거워졌다고 말하는 병사도 있었죠.

[의미 : 모든 군인,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지다] 이러한 반응에 탄력을 얻은 국방부는 하반기에 육·해·공군, 해병대 일부 부대로 시범 운영 부대를 확대하게 돼요. 하반기 시범운영 때에도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함께 2개 부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상반기 때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어요. 연말에 열린 시민 공청회에서 수합한 여론 역시 핸드폰 사용에 우호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2019년 3월, 국방부는 모든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게 되죠.

[조직, 변화를 만들어가다] 군대는 오랜 시간 통제에 기반한 병영 문화를 구축해 왔어요. 자율성을 부여하고 문제를 보완해가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라 금지하고, 뺏는 방법만 취해온 것이죠. 물론 '통제'가 당장에는 가장 쉬운 조직 운영 원리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발전도 어렵고, 비전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은 우리 군이 통제 일변도의 병영 문화를 탈피한 의미미한 시작이라 평가할 수 있어요.

[참여 : 통제에서 자율로 권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강한 군인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어진 자율 속에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이죠. 군 당국이 장병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선진 강군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일 뿐이겠죠. 핸드폰 사용과 더불어, 군인권센터가 오래전부터 제안하고 추진해 온 병사들의 평일 외출도 허용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임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평일 외박 검토도 제안 중이에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지금껏 병사들에게 핸드폰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병사들을 통제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자율'을 통해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나가는 앞으로의 실험에서는 병사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논의도 더 활발해질 수 있겠죠. 이번 기회에 '군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인권 ⑪] 주민등록증 전자화에 대한 논쟁,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요구하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막아라”

[시작 :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5년 4월, 내무부는 ‘세계 최초의 전자주민카드’를 선보일 계획을 밝혔어요.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카드 등 4개 증명을 하나로 통합하고 7개 분야 42개 정보를 1매의 IC 카드로 통합한 통합 전자신분증이에요. 그러나 1996년 8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맥브라이드 라운드 테이블의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세미나를 통해 문제의식이 환기되었죠. 1996년 10월 14일, 1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어요.

유네스코 맥브라이드 위원회로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국제사회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아 “새롭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세계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개최되었어요. 학술 세션과 별도로 마련된 NGO 세션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몇 달간 회의를 함께 준비하며 새로운 미디어 질서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어요. 당시 발제를 맡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박사과정 김주환 씨는,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인 보

편적 신분증(주민등록증)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국가로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지 모른다”라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전자주민카드 구상 자체가 1989년 안기부와 경찰청의 요청에서 출발했다는 내무부 관계자의 말이 전해지면서 정보기관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어요.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는 단지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증의 전자화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모든 국가 시스템의 통합 전산화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죠. 멀리는 1942년 일제강점기로부터, 가까이는 1962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간첩 색출을 목표로 도입된 국가신분등록제도 자체가 이미 인권 침해적인데, 전산망으로 정보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이에 반발한 거예요.

[정보의 주체로서 권리를 요구하다!] 나아가 시민사회는 디지털 시대 국민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어요. 당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지만, OECD 가이드라인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의 권리는 거의 없거나 형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 또한 예외가 많았죠. 이에 시민단체는 OECD 가이드라인 등을 국내에 소개하며 국민이 보유한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는 한편,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원했어요.

[의미 :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다] 1970년대에 강력한 전산 시스템의 개발과 일반적 이용이 확산하면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개념이 확장됐어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다소 소극적인 의미가 있었던 프라이버시권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에서는 이 권리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 법원의 판례 등으로 확정되고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참여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운동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쟁은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민사회 문제의식의 여명기로 평가 받고 있어요.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을 통해 시민사회는 국가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대하여 민주성과 적법성을 요구하

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문제를 한국 사회에 제기하였죠. 이런 문제의식은 이후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최근 보건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논쟁에서도 계속 중요한 쟁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 빅데이터 시대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이어지는 과정에는, 결국 개인정보에 대해 통제할 권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뜻하겠죠. 이번 기회에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인권 ⑫]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 여정,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시작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999년 개인정보 침해 제보·상담 게시판 열었어요. 2003

년까지 3년간 들어온 667건의 제보 사례 중 1/4에 달하는 173건이 주민등록번호에 관련된 케이스였죠. 그러나 당시 정부에서는 인터넷 댓글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으면서 각종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미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 지문날인 전산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어 있던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어요.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만연한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인증을 하겠다는 계획은 실효성도 의문스러운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개인정보 남용을 부추기는 행위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주민등록번호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몇 구 공산권 국가를 제외하면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평생 불변의 전 국민 고유 식별 번호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누구에게나 부여되며, 번호 자체에 연령과 성별, 그리고 출생지가 표시되는 탓에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하기가 매우 쉽죠. 21세기 웹사이트가 보편화되면서 신원확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시작되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3년 10월 6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식 제안했어요.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을 부추기는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구축된 상황에서 즉각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이죠.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를 위한 움직임]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문제 제기의 타당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정부 당국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정보통신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 및 국가기관 웹사이트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문제시하며 변화를 꾀했고, 노회찬 국회의원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안을 발의하였죠. 정작 주민등록번호의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요지부동이었고, 2004년 초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 도입되기에 이르렀어요.

[헌법불합치 판결로 제도에 균열을 만들다]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 가입자 3500만 명의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

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캠페인은 다시 추진되었어요. 행정안전부는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83명의 청구인단은 행정소송에 돌입하였어요. 당시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였고, 2014년 헌법소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였어요.

[의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다] 1962년 박정희 군사 독재와 함께 시작되어 50년 이상을 굳건하게 유지되어온 주민등록 제도에 드디어 균열을 낼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어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포함해 일련의 개인 정보 보호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한민국의 정보 보호 체계는 비로소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은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2011년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12년 8월 정보통신망법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개정되면서 2013년 2월부터는 웹사이트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2014년 8월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명시적 법적 규정 없이는 주민등

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죠. 2015년 1월에는 정보공개 청구 시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의무화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개정이 권고되기도 했어요. 1990년대 중반 몇몇 인권 단체들이 처음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학계와 법조계, 국회까지 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참여 : 아직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형식적 틀만 만들어졌을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어요. 당장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만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방식으로 도입되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임의 번호 체계 도입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주민등록번호 열세 자리 중 앞의 생년월일과 성별 표시는 유지한 채 뒤 여섯 자리의 변경만 허용하는 방안이 도입됐어요. 변경 대상자 또한 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이나 재산상의 위험이 인정되는 사람들로 국한하고 있죠. 개인정보보호법 내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또한 독립성과 구체적 내용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정보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COVID-19' 이후 방역 지침의 일환으로 보편화된 QR코드 인증 및 핸드폰 번호 기재는 개인 정보가 국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통제되는 과정에서 침해받을 우려도 놓고 있습니다.

[인권 ⑬] 철창 없는 수용자 면회,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접견실을 향해

“아빠가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시작 :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에 대해 알고 있나요?]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목표로 2015년에 출발한 비영리단체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그동안 수용자 자녀 약 330명에게 성장 지원비, 자존감 회복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아동과 양육자 상담 등을 지원해왔어요. 2017년에는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의 수감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면회하러 가는 경우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후 세움은 수용자 자녀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부모를 만

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사업'을 추진했어요.

2017년 어느 날 세움이 지원하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6세 아들이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하여 교도소 면회를 하러 가려고 한다고요. 세움은 면회비를 지원했고 6세 남자아이는 1년 만에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철창이 있는 반투명 플라스틱 창 건너편에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아빠를 만났다는 기쁨보다 그 장면이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는 아빠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면회 후 어머니에게 “아빠가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며 펄펄 울었어요. 1년 만에 어렵게 용기 내 찾아간 아빠였지만 아이에게는 부정적 경험만을 남기게 되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움은 2017년 여주교도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에 유일한 여성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구축했어요.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접견실을 꾸렸고 다시 오고 싶은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읽을 동화책과 장난감 등도 구비해 놓았고요. 세움은 시

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매뉴얼을 제작하여 법무부에 제공했어요. 법무부에서는 이후에 구축되는 가족접견실들도 세움에서 제공한 매뉴얼을 따라 아동친화적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했지요.

세움은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 이어 2019년에는 민영교소도인 소망교도소와 군산교도소에도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설치했어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도 2017년 하반기 5개소, 2018년 7개소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설치했고, 2020년 말 현재 전국 45개 교도소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이 마련됐어요.

[의미 :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접견실이 됐어요] 어느 날 여주교도소의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에서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와서 담당 교도관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교도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거든요. 아이는 아빠를 만나러 또 이곳에 오고 싶다고 전했어요.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에서 면회하고 온 가족들로부터 감사의 편지와 전화가 오기도 해요.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사업은 단순히 교도소 접견 환경을 바꾼 것을 넘어, 수용자 자녀에게도 ‘아동이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알린 사업이

있어요. 또한 성인 중심의 교도소 면회 정책을 아동과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요.

[참여 :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이 늘고 있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교도소별로 공간이 한 실밖에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하루에 최대 두 가정만 면회가 가능하다는 점은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교도소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숫자를 고려하여 접견실을 양적으로 충족할 필요도 있지요.

지금은 가족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용자가 수용 분류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요. 즉 등급이 좋은 수용자 혹은 모범수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해요.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중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수용자 아동 혹은 면회를 원하는 아동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토요일·공휴일은 진행하고 있지 않은 현행을 개선해 ‘아동이 만나고 싶을 때면 언제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아동 중심의 면회 정책이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세움은 국내 최초로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제안했고, 전국 45개 교도소에 설치되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가족접견실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여전히 필요해요. 이번 기회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구축 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인권 ⑭] 복지와 시혜의 대상을 넘어, 장애인이 인권의 주체가 되기까지

“차별에 ‘법대로’ 맞서 온 역사”

[시작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오랜 시간 장애인에게 차별은 일상이었어요. 외부 일정은 꿈도 꾸지 못했고, 그렇게 20년 30년씩 집안에서 생활하며 접하는 세상은 그저 창밖 풍경일 뿐이었죠. 학교는 장애인에게 너무 먼 곳이었으며, 장애인을 받아주는 일터를 찾는 일이란 정말 어려웠어요. 누군가는 쉽게 건너는 육교와 도로의 턱이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이 길로 다니지 말라고 막아서는 높은 벽이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 시설로 보내져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나오는 길이 없는 곳에 갇힌 셈이죠. 폭행과 폭언에 신음해도, 그러다 생

명을 잃게 되어도 많은 사람은 그러한 삶과 죽음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2000년대 초반은 장애인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시기였어요. 2003년 4월 15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목표 아래 모인 장애계 단체 58개에 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제정추진연대)’가 출범했어요. 제정추진연대는 단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하고 평등하게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형태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해요.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길거리에서 157일간의 노숙 농성을 진행하는가 하면, 2005년 12월 세계 장애인의 날에는 서울과 부산의 장애인 활동가 13명이 삭발식을 통해 법안 통과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2001년 초기 논의를 시작하고 제정추진연대를 구성하면서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은 6년여의 긴 세월동안 이어졌어요.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이 제정되기까지 전국 297개 단체로 확대되었어요.

[의미 :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는

법]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차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었어요.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2009년에는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이하 상담전화)가 개설됩니다. 8년째 운영되어온 상담전화에는 한 해 평균 300여 건, 총 2,400여 건의 장애인차별사례가 접수되었고, 이 사례들을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작게는 개인의 삶을 크게는 사회제도를 바꾸어내는 변화가 이루어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하지만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지과 표현의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들은 그 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피해 사실이 축소되고,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가해 사실이 확대되어 어떤 상황에서든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게 돼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려고 제정 당시부터 의사소통 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장애인당사자나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해당 조항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당사자들은 여전히 질문합니다. 이 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흔한 과태료 조항 하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직접적으로 구제받는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물질적 손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경찰에게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가해자를 구속하거나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는 매우 잘 쓰여 있으니 법대로만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장애인의 삶은 매우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이 법이 잘 적용되지 않아요. 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면 회사는 장애인과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게 뻔하니까요.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나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법의 적용을 놓고 매일같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이 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세월에 맞게 변화시키고,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이 10년을 훌쩍 넘어서면서, 그래도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사

회 안에서 바꾸어왔어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보편적인 인식을 확산시켰고, 최소한 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차별하는 행위가 인간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장애인차별을 법에 담아내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장애인차별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권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인권 ⑮] 장애인의 시설 밖 자립,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

“수용, 통제, 감시... 국가의 권위와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 장애인을 차별하다”

[시작 : ‘장애인 탈시설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에 살던 사람이 시설 밖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수용의 역사 속에서 인간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 당사자가 ‘살아있음’으로써 시설과 세상이 세운 벽에 균열은 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서 사회변혁 운동이에요. 이러

한 노력이 탈시설 ‘운동’으로 확산한 계기는 2002년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 ‘조건부시설공대위’를 조직하면서부터예요.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8년 1,527곳에 달하는데 전체 거주인 중 49.3%가 30인 이상의 집단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또한 거주인 중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한 비율은 67%에 달하며 입소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58%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설 수용은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자기 결정권,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간의 매우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하는 인권침해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는 1996년 에바다 농아원, 2005년 청암재단, 2006년 성람재단, 2014년 인강재단 등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생해 온 다수의 시설 인권침해와 학대, 비리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어왔고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하 발바닥)은 탈시설 당사자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정부의 시설화 정책에 대응하여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전국 시설조사에 참여하고 시설인권연대, 시설민주화연대 등을 통해 정부의 시설화 정책을 막기 위해 싸웠어요. 2006

년부터는 장애계와 함께 본격적으로 성립재단, 석암재단, 청암재단, 우석(인화원)등 대형화되고 사유화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및 비리 척결 투쟁을 이어갔고요. 이 투쟁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의 '탈시설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마로니에 8인의 역습] 2009년 '마로니에 8인'으로 불리는 탈시설 당사자들의 시설에 대한 역습이 시작되었어요. 경기도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시설 비리에 맞서 싸워 서울시의 시설 폐쇄정책을 끌어낸 이들이 시설 장애 당사자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 62일간 노숙 농성의 결과, 서울시에 장애인전환 서비스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체험 홈·자립생활 주택 등이 탈시설 장애 당사자의 주거정책이 마련되었어요.

[의미 : 탈시설 정책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 발바닥은 설립 직후부터 쌓아온 탈시설 지원 경험과 2010년부터 3년간 수행해 온 '탈시설 장애인 주거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탈시설 모델'을 구현하며 혁신을 주도했어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과 컨소시엄으로 탈시설 장애

인의 보증금, 월세, 주택 개조라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개인별 탈시설 정착 정책을 지원했어요. 나아가 인권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탈시설지원네트워크'를 구성했고요.

한국의 탈시설 운동을 시작한 지 17여년이 지난 2013년 1차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2013~17)이 수립되고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 로드맵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책의 중심에는 여전히 '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서울시의 제2차 계획(2018~22)은 시설이 더 작아지고 운영구조만 바뀐 형태의 체험 홈이 확대되었을 뿐이고, 탈시설 목표 인원은 1차 계획보다 감소한 연 60명 수준에 그쳤어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탈시설-자립생활에 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추진 인력 및 예산까지도 미미한 상황이에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발바닥은 탈시설이 권리로서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탈시설 장애 당사자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과 주거약자법 개정, 주거 서비스법 제정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최근 여러 범죄사실이 밝혀진 대구시립희망원의 경우, 150일간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시설 거주인 9명만 지역사회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제정되면 10년 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이 폐쇄되고 전체 시설 거주인을 지역사회 기반 주거 서비스로 전환,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어요. 또한 주거약자법 및 주거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시설 중심 사회를 재편하고 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이들이 국가로부터 통제, 격리, 감시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통제, 격리, 감시가 일상화된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시설 속에 수용되어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격리된 장애인들이예요. 이들이 인권 침해의 공간인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탈시설 권리를 보편적인 권리로 정착시켜야 해요. 이번 기회에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인권 ⑩] 모두에게 문턱 없는 이동을 위한 지도

“지하철 휠체어 여정, 피부로 와 닿았던 문제점들”

[시작 :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한 지도 제작'에 대해 알고 있나요?] 소아암 치료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휠체어를 타는 딸은 어릴 때부터 지하철 타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휠체어로는 지하철을 타기도, 환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6살 때 이사 온 동네(상일동) 지하철역은 서울 시내 수백 개 역 중에서도 얼마 안 되는, 엘리베이터가 단 한 대도 없는 역이었죠.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유치원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많은 시민이 선호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해 교통약자들에게는 다양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 구간에서의 어려움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요. 비장애인 위주로 표시된 환승 통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환승 길이 잘 표기되어 있다면? 이동에 대한 교통약자의 스트레스가 줄고 실제 환승 시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교통약자 환승 길을 표기해 준다면 어떨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2015년, “시민이 그 곳에 쉽게 가고 싶다” 카카오 스토리퍼펀딩을 기획했던 계기가 됐어요.

[경과 :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한 지도 제작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스토리펀딩 연재를 통해 휠체어 탄 아이와 함께 지하철에 가본 후 실제 현장의 문제

를 파악하고 유튜브 비디오를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했어요. 스토리펀딩에 서 모은 금액으로 처음엔 지하철 내부에 환승 안내 스티커를 붙이려고 했는데, 지하철 내부 스티커 부착은 허가받지 않은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란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모바일 앱'을 제작하겠다는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최초로 지하철 환승지도 18개역 18개 구간을 제작했어요. 2017년 서울디자인재단의 후원과 자원봉사자 70여 명의 참여로 22개역 40개 구간을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은 지하철 환승 디자인 가이드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 무의가 제작한 모바일앱용 환승지도 디자인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지하철 CAD 지도를 일일이 그려야 했지만 2018년에는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프로그램 참여자가 되면서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3차원 실내 지도를 입수하여 보다 쉽게 지하철 실내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2018년 행복나눔재단에서 일부를 지원받고 재단과 연계된 여러 기업에서도 비용을 지원받아 환승지도

제작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의미 : 비장애인의 인식개선과 시스템의 변화] 리서처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활동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리서치 활동 이후, 이동이 힘든 교통약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항목에 관해, "더욱 공감하게 됐다"는 답변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실제 휠체어를 타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인식개선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실제 변화를 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2016년 서울시 지하철 접근성 담당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2-4-5호선 환승이 가능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안내 표지의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무의의 제안 후 수십 개에 달하는 환승 안내판이 한꺼번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공공건물 유니버설 디자인 회의에 참석하여 환승지도를 공공에서 제작하고 민간의 플랫폼에 엮을 수 있도록 협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결과 행정안전부의 주선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 제작한 2020년 7월 카카오맵에 휠체어 환승을 비롯한 편의시설 지도가 탑재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휠체어 접근 정보는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성과 자유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건물은 법적 한계 때문에 강제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에는 면적 기준이 있는데 2021년 12월 기준 300m²(약 90평) 이하인 곳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안 만들어도 된다고 해요.

이런 곳이 전체 사업장의 90%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사업장에 설치 의무가 없어요.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면적 기준을 50m²(약 15평)로 개정하겠다고 입법을 예고했지만, 개정된 기준은 2022년부터 신축, 개축, 증축되는 시설에만 적용될 예정이라 한계가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지상 민간 정보의 경우 데이터 수집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데이터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됐어요. 또 프로젝트 경우, 지자체가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한정적인 지도를 만들고 종료될 수밖에 없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파편적인 정보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거시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의는 '정보를 모으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권 ⑰]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아만의 세월을 되돌리는 한 걸음

“게이라고 잡아가서 수사해도 되나요?”

[시작 :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7년 3월, 군인권센터 아미콜 상담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어요. 내담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게이라고 잡아가서 수사해도 되나요?” 게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당연치 안 될 일입니다.

한국 사회가 아무리 성소수자에게 차별적인 사회라지만 수사기관에 끌려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차근차근 설명하며 내담자를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담자가 알고 있는 육군 소속의 성소수자 군인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이었어요. 부대로 대뜸 찾아가 아무 설명 없이 게이냐고 물어봐 멘탈을 흔든 뒤 핸드폰을 빼앗아 포렌식을 하고 동성 간 성관계 여부와 다른 게이 군인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방식은 공히 똑같았죠. 그뿐만 아니라 “교제하면 반드시 성관계를 하나?”, “민간인과의 잔 적이 있

느냐?”, “음란 동영상은 어떤 취향을 좋아하느냐?”와 같은 모욕적 질문을 하는가 하면, “군에 큰 피해를 끼쳤는데 죄송하지 않냐?”, “군인으로서 동성애자들과 함께한다는 게 좀 그런데 다시 잘 생각해 봐라”처럼 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인지한 후에도 색출 작업은 줄줄이 계속되었어요. 사태를 계속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센터는 색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2017년 4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련의 상황을 공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을 입수한 육군은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둔 시점에 색출 피해자 중 한 사람을 출장지까지 쫓아가 긴급체포했는데, 그가 바로 2017년 당시 ‘A 대위’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육군은 아예 A 대위를 구속해버렸어요.

육군의 이러한 무리수는 많은 시민의 공분을 일으켰고, 국방부 앞에서 매주 “나도 잡아가라”는 제목의 촛불집회가 열렸어요. 매주 200여 명의 시민이 촛불을 밝히며 “사랑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국방부 주변을 행진했죠. 또 4만 605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A 대위의 무죄 석방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

는 등 성소수자 색출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더해졌어요. 색출 피해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시작된 법률지원기금 모금에는 한 달 만에 무려 7,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모였어요.

[의미 :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 그러나 다가온 고통의 시간은 길었어요. 대법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장 4년의 긴 세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기 때문이죠. 예비역 장교의 2심 진행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도 덩달아 사건을 추정시켰고, 색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추행죄 헌법소원을 쥐고 있던 헌법재판소 역시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렇게 4년이 지난 2022년 4월, 색출 피해자들은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는 통지서였죠. 그들은 대법원으로 향했고, 결과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었어요. ‘무죄’, 그 두 글자에 자리에 함께한 피해자의 얼굴엔 웃음이 피었어요. 나중에 법정을 나서며 한 이야기지만 피해자는 대법관이 읽는 판결문에 너무 공감한 나머지 별떡 일어나서 “그 말이 내가 지난 몇 년간 하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이라고 소리를 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참여 : 대법원 무죄 판결, 남은 것은 추행죄 폐지] 아직 균형법상 추행죄 이슈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의 판례 해석이 바뀌었을 뿐, 추행죄는 여전히 존치되고 있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을 폐지해야 해요.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과는 별개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의 존재는 그 자체로 문제적이기 때문이죠.

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 및 판단과 별개로 조속한 위헌 결정을 통해 인권침해 상황을 종식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추행죄의 위헌성을 판단해주는 것과 별개로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추행죄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19대 국회부터 추행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긴 하지만 혐오 세력의 조직적 반대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폐기되거나, 타협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이 사건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진 명백한 국가 폭력으로, 균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폐지 논의와 동시에 추행죄로 인해 당사자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해요.

균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기 위한 긴 여정이 20년을 훌쩍 넘기고 있는 지금, 인권 단체들의 오랜 노력, 무엇보다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견뎌낸 시간이 마침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만들어냈어요. 남은 것은 위헌적인 추행죄 폐지입니다. 이제 성소수자 군인이 겪어온 차별의 시대를 끝낼 때가 왔습니다. 사랑은 범죄가 될 수 없으니까요.

[인권 ⑱] 난민법 제정 이후, 변화를 만들어 낸 판례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한국, 만들어낸 변화와 여전히 남은 과제들”

[시작 : ‘난민법 제정 이후의 난민구호 활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아시아 최초로 보다 철저한 난민협약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독자적인 법률인 난민법이 2013년 7월 1일자로 시행됐어요. 9년이 지난 현재, 입법 단계에서부터 여러 논쟁과 타협 속에 만들어졌던 난민법은 실제로, 그 입법과 시행 자체가 빛나는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행정이 나아진 부분들도 있지만, 진취적인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존재했어요. 실무상 법률의 취지가 잘 지켜지지 않거나, 제정 과정에서 법률조항 자체가

미흡하게 제정되어 난민들이 권리 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경과 : 변화를 만들어 낸 판례들]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실무적, 제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왔어요. 크게 여섯 가지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시다.

(1)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 신빙성 판단, 입증 책임의 소재, 경감 법리에 관한 국내 최초의 대법원 결정인 소위 나르시스 판결(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3930)을 끌어낸 이후 어필은 국내 난민 소송에서의 초석을 만들어 왔습니다.

(2) 난민 구금에 관한 소송 : 구금에 관하여도, 보호명령 취소(대구지방법원 2022.4.1. 선고 2021구단11666),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중 집행 정지, 단독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관한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송 두 차례(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3헌바196)와 현재의 헌법소송에서의 결합, 자유권 규약에 따른 유엔인권위원회 진정 등으로 난민신청자의 구금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개정법령으로 기간 연장 시 법무부 장관의 3개월

만의 내부 승인 절차를 만들거나,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제도의 신설과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3) 변호사 접견권에 대한 소송 : 공항 난민에 관한 조력 중, 수용상태 자체에서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게 되어 헌법재판소 2018.5.31. 2014헌마346 결정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에 관한 시금석이 되는 결정을 끌어내 공항에서의 난민 접견 절차가 새롭게 지침 형태로 정착되었습니다.

(4)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급거부처분에 관한 소송 : 난민 신청자의 핵심적인 권리인 생계비 지급에 관하여 처분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통보한 생계비 지급거부 결정 통보가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밝혀내 생계비 지급 결정과 거부 결정에 관한 통보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7.7. 선고. 2015구합79413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6934 판결)

(5) 난민 신청자 체류에 관한 소송 : 소위 난민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내린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출국 명령 취소(서울행정법원 2019. 11.7. 선고 2019구단63044 판결), 체류자격 변경 거부처분 무효(서울행정법

원 2020.12.3. 선고 2020구단50051 판결), 체류 기간 연장 거부처분 취소(서울행정법원 2020.9.10. 선고 2019구단 64429) 같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6) 난민 국적 취득과 생계요건에 관한 소송 : 생계 능력이 부족하다며 난민 인정자라는 사실에 대한 고려나 생계 능력에 대한 세심한 조사도 없이 내려진 불인정처분에 대해 1심 재판부도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결국 난민은 한국 국적을 얻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1.19. 선고 2016구합75371 판결).

[의미 : 어필이 만들어 낸 법적 변화] 난민들은 공항에서 난민 불회부 처분 결정을 받아 구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공항 난민 신청은 난민법 시행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난민법 시행 이후에는 공항에서의 난민 신청 절차가 매우 불완전하지만, 규정되어 있어 강제송환 금지원칙의 적용 범위와 의미에 대해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 어필은 선례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밖에도 송환대기실에서의 구금이 인신보호법상 수용이라는 판례(인천지방법원 2014.4.30. 선고 2014인라4 결정), 환송구역에서의 대기 역시 인신보호법상 수용이라는 판례(인천지방법원 2021.8.9. 선고 2020인라8결정)를 끌어내어 공항에서 신청하는

난민들의 처우와 문제에 관하여 문제를 확인했어요.

[참여 :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난민법 제5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난민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출국 유예, 출국 명령을 반복하여 난민제도에 관한 접근을 부당하게 제약하려 해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체류 기간 경과 후 난민 신청임에도 내린 체류에 관한 부정적 처분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어필은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대처했고, 더 나은 판례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후 유사 사건들의 축적 과정에서 소위 난민 심사, 처우 지침의 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지침 일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장이 완화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어필이 끌어낸 판결은 국제협약의 구체적 조문을 실제로 적용하여 체약국인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의무를 도출하고 난민협약의 취지에 충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비록 유보 없이 국제협약에 가입했지만, 법원이 사안을 판단할 때는 보통 해당 협약은 참고 혹은 보충적 판단으로 여겨지기 일쑤였기 때문이죠. 이런 유사한 사건들의 판결이 축적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한국 사회 난민의 법적 지위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권 ①9] 기후위기와 코로나 앞에서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외치다

“대법원의 과밀수용 국가배상 판결, 남은 과제는?”

**[시작 :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운동’
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1년, 부산지
방변호사회는 부산교도소 수형자 2명
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각각 7,100만
원과 3,000만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어요. 이들은
소장을 통해 “2평 남짓한 좁은 감방에서
6~7명의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하
면서 취침 시 옆으로 누워서 자는 이른바
‘칼잠’을 자야 했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
이 차는 등 항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과밀수용에
대한 법적 대응은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
소로도 이어졌어요.

수용기간 중 실제 수용된 인원은 4명~6
명으로 표지판의 정원은 지켜졌으나, 천
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수용실
에서 잠을 잘 때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을 겪었다고 해요.
2013년 강 활동가는 이러한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했다는 취
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과밀수
용에 대한 최초의 헌법소원이었어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과밀
수용의 폐해는 혹서기에 더욱 두드러진
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 기후위기로 여
름철에는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
되고 겨울철에는 강한 한파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교정시설에서도 기후위기
에 따른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아요. 폭염
이 이어지던 2016년 8월 부산교도소 수
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달아 숨졌
는데,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열사병
등으로 추정됐어요.

이처럼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신체의 자
유가 제한되어 있어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폭염과
한파가 단순히 기후의 열악한 상태가 아
니라 자연재난으로 규정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2019년 8월 공익인
권법재단 공감 등 인권단체들은 “행집행
관련 법령으로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정
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
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
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어요.

**[의미 : 수형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
는 과밀수용, 멈춰!] 2016년 헌법재판소
는 전원 일치로 과밀수용 위헌 결정을 내
놨어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에 수
형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
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처음 언급한 부산지방법원 사회공익소송 사건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이러한 현재의 위헌 결정 이후 뒤집혔어요. 위헌 결정 이듬해인 2017년 8월 부산고등법원은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좁으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참여 : 현실성 있는 수용면적 상향으로]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은 국가 배상 책임 여부의 기준이 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의 정원 기준인 2.58m² 보다 적은 2m²라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수긍했어요. 하지만 이는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의 면적을 뺀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현실성이 없다고 봐야 해요.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보다 좁게 인정한 위 대법원 판결로는 교정시설에 만연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결국, 형집행법령을 개정하여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수용면적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해야 해요. 2.58m²라는 기준은 법무부가 수용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일 뿐,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기후위기의 시대,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최저선을 요구하는 데에 교정시설이 빠질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감옥 환경의 개선은 감옥 밖 환경의 개선을 견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옥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손쉽게 정당화하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의 합당한 수준의 인권 향상을 함께 외치는 건 어떨까요?

CHAPTER
09

행정



[행정 ①] 국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강제적인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국민을 통제하고 있는 반민주, 반인권적 제도를 거부한다”

[시작 : ‘지문날인 거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전 국민 열 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1968년에 도입되었어요. 박정희 정권은 국가보안법, 향토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등과 함께 주민등록법을 개악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와 지문날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대공 방첩 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결국 군사정권이 정권의 안위를 위하여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죠. 박정희 정권은 38년 전에 무너졌지만, 그들이 만든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는 아직도 살아남아 국민을 통제하고 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지문날인 제도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 2000년 ‘지문날인 거부 78+’라는 조직을 만들고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들은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밝힌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어요. 개인들이 모여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이내 많은 시민단체가 운동에 동참했죠.

[위헌성을 밝혀내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 지문날인 반대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1999년과 2004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2005년 5월 헌법재판소는 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중 3인이 소수의견을 통해 이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밝혔어요.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수집할 필요는 없으며, 지문이 필요할 때도 어떠한 제한도 없이 활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 요지였죠.

[의미 : 관행에 제동을 걸다]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경찰 조사 과정 중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지문 무단 채취에 제동이 걸렸어요. 기존에는 경찰에서 조서를 쓸 때는 피의자와 참고인 모두 관행적으로 지문날인을 해왔어요. 하지만 꾸준한 반대 운동의 결과, 사건 처리를 위해 경찰에게 지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목적과 이유, 수집 범위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영장을 통해 채취하게 되었죠.

[참여 : 지문날인 거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 국민 열 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무단 사용에 반대해 온 운동은 이후 다른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행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죠. 인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 다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한정적으로 수집 및 이용되어야 해요. 무분별한 개인 정보의 취득을 막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지문날인 거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행정 ②] 우리에게 알 권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무기는 정보공개

“안전한 삶을 위해, 알 권리는 살 권리입니다”

[시작 : ‘정보공개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한 의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냈어요. 1994년 정부가 구성한 정보공개법 심의위원회에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자리했으며, 1996년 법이 제정되기까지 경실련에서 시민사회의 여론을 주도했죠. 경실련이 정보공개제도 실현을 위한 토대

를 잘 닦아두었고, 이후 참여연대가 제도를 활용하며 확산과 성장에 기여했어요.

[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알 권리]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이후 정보 자유의 취지에 걸맞은 입법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92년 실질적인 군사 정부의 종결 이후부터예요. 초기 정보공개운동은 행정 감시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납세자가 예산을 감시하는 형태로 확산합니다.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정보공개를 요구하려 해도 공공기관에서 기록을 정확하게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 불가능한 사례들이 이어지자 2000년대 이후 정보공개운동은 기록관리 운동으로 확대돼요. 2006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세계일보가 함께한 ‘기록이 없는 나라’ 기획은 기록 관리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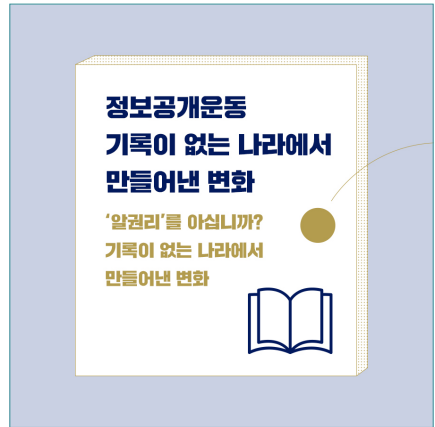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정보공개 운동] 2008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더 많은 시민에게 제도를 알리기 위해 사례 발굴 및 교육을 이어 나가는 한편, 정보공개와 기록 관리 등 알 권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쳤어요. 2010년 이후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

게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면서 정보공개운동도 확대의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의미 : 국가권력에 맞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다] 우리나라에서 ‘알 권리’라는 말은 군사독재 시기인 1969년에 처음 사용되었어요. 미국을 비롯한 해외도 ‘알 권리’ 운동은 파시즘이나 독재가 지배적일 때 강하게 일어났어요. 1996년 법이 만들어지기 전 1992년 청주시의회가 자체적 의지로 정보공개 조례를 만들어 공포하면서 정보공개제도가 시작됩니다. 이는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 사회적 과제로 퍼진 것이라 할 수 있죠.

[알 권리를 보장받는 과정을 만들어간다] 세월호 참사와 가슴기 살균제 사건을 거치며 우리 사회는 위험에 대한 비공개와 은폐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뼈아프게 깨달았죠. 그 덕분에 최근 몇 년 사이 화학물질 정보공개가 확대되도록 관련 법이 바뀌고 영업 비밀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GMO를 표시하라는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참여 : 정보공개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한 해에 수천억 원씩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도 남기지 않고 집행돼요. 소위 헌법기관이라 일컬어지는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조차 할 수 없어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어 죽은 노동자의 산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삼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알아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년을 꼬박 싸워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기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정보공개운동은 공공에 대한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민주주의를 위한 알 권리가 주창되었지만, 이제는 ‘안전한 삶을 위한 알 권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죠. 이번 기회에 ‘정보공개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행정

[행정 ③]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주민이 직접 목소리 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대상에서 조례를 만드는 주체로”

[시작 : ‘주민 발안제’에 대해 알고 있나요?] 주민발의권이 도입되기 전에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청원이나 민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천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는 주민 발안제가 도입되기 전에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에 성공한 사례로, 방식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다른 지역과 시민단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부천 YMCA에서는 담배 자판기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했어요. 1992년 5월 재무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7월 26일 부천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되었어요. 1992년 11월 서울 YMCA, 서울 YWCA, 흥사단, 경실련 등 9개 단체가 ‘담배 자판기 전면 규제 조례 청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첫 번째 주민발의안은 2001년 광명시에서 등장했어요. 광명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까지의 거리를 30m라는 짧은 거리로 규정하는 조례가 통과돼서 문제가 됐기 때문이죠. 광명지역 시민단체들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조사를 통해 거리를 50m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청구하였고, 광명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2001년 12월 공포되었어요.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진행된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필요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례 제정을 청구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안전한 학교 급식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이 진행되었어요.

[의미 : 주민과 함께 정책과 규칙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다] 주민발의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체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또한 입법청원과 달리 규칙이나 정책을 조례로 제안, 서명 과정이라는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참여 : 주민발안에 대한 참여와 관심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주민발의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야만 조례로 확정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제도 시행 이후 2016년까지 총 223건의 주민발의안 중 약 30%에 해당하는 66건이 의회의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폐기되고 있어요. 주민발의는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될 때 원래 도입의 의미를 살릴 수 있어요. 송파구의 ‘의정비 인상 반대 조례’가 조례가 통과된 이후 12월 한 달분에만 적용되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 발안 확정은 매우 중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주민발의 활성화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명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서명을 가능하게 하고 자치법규제 정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다양한 의제를 발견하고 주민과 함께 해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주민발안’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행정 ④] 시민참여로 꿈꾸는 마을 만들기, 감시-참여-권한의 삼박자로

“지역과 마을에서 참여하는 주도적인 시민-되기의 과정”

[시작 : ‘시민참여예산’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00년 전후 시민사회는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삭감을 요구하는 등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참여예산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몇 년 간 축적된 시민사회 예산 운동의 경험과 반성이 토대가 되어, 2002년부터는 ‘시민참여조례제정 운동’을 벌였죠. 중앙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2004년 ‘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보급과 정착을 제시하는 기본지침을 내리고,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제39조)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국내에 도입되기까지] 시민참여예산은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되었어요.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어요. 이후 국내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예산감시 운동, 정보공개 운동, 납세자 소송 운동을 통해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지역 내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되

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권한을 부여하지는 못했죠.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민참여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어요. 이에 따라 2010년 말부터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적극적 시행을 위한 논의와 시도들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시민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꾸릴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극적으로 바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의미 있는 것을 좀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는 지역과 마을’을 함께 꾸려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일례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서 2017년 집행되었던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사업은 ‘의료지원, 경제적 자립, 여가문화, 사회적 관심, 통합 관리 등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5개 영역에 걸친 프로그램 진행과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의미 : 예산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예산감시 운동, 정보공개 운동, 납세자 소송 운동은 모두 예산의 낭비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 이미 낭비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죠. 이와 달리 참여예산은 시민과 함께 좋은 예산을 만드

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적재적소에 편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참여 : 시민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시민참여예산에 부정적이예요.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시민들 역시 “예산을 잘 몰라서 혹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자주 직면하게 돼요. 그러나 최고의 정책과 사업을 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시민의 선택에 있죠. 시민과 과의 소통 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내린 선택과 결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시민참여예산은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독점되었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예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과 공동체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이번 기회에 ‘시민참여예산’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행정 ⑤] 최악의 예산 낭비를 달성하면 불명예스러운 상을 드립니다

“빨리 없어져야 할 불명예 상, 아직도 지속되는 이유는?”

[시작 : ‘밑 빠진 독상’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0년 8월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 최악의 예산 배정과 예산 낭비 사례를 선정하여 ‘밑 빠진 독상’을 수여해왔어요. 실질적으로 불명예상인 이 상은 대개 수상을 거부당하여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닫힌 출입구 앞에 놓아지는 등 상징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었죠.

[시민사회 예산감시 운동] 시민사회 예산감시 운동은 1997년 경실련 경제정의 연구소에 예산감시위원회가 등장한 뒤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1998년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로 선포되면서 본격화 되었어요. 이후 1999년 창립된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본격적인 예산감시 운동을 전개하며 모두가 받기 싫어하는 ‘밑 빠진 독상’을 만들게 되었죠. 이 시기의 예산감시 운동은 시민들의 권리 재확인과 참여 의식 제고를 목표로, 정부의 재정 투명성 향상과 각종 제도 개혁을 요구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밑 빠진 독상’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상이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찾아 나섰어요.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밑 빠진 독상’ 선정위원회는 사례를 검토하여 그중 낭비 정도가 심각한 사례를 수상 대상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반론을 청취한 후 전문가들이 재검토,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수상 여부가 결정돼요.

[예산 낭비를 눈감아주는 제도를 바꿔야 해요] ‘밑 빠진 독상’은 상을 수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지속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아우르죠. 예산 낭비는 비슷한 사업에서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시위, 감사 청구, 소송, 관련자 낙선 운동 등의 시민행동을 통해 예산 낭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요.

[의미 : 재정 및 예산 절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밑 빠진 독상’은 2004년 한 해에만 공식적으로 1,02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을 인정받아 사단법인 반부패 국민연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제정한 제4회 투명사회 기여상을 수상해요. ‘밑 빠진 독상’은 개별적인 사업의 예산 낭비에만 대응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공론화함으로써 재정 및 예산 관리 시스템의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시민을 위한 정부 정책을 만들어 나가다] 기존의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 과정에서 예산은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을 구현하는 정책 수단으로 쓰였어요. 그만큼 지극히 폐쇄적이었던 예산 운영에 시민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 거죠. 시민사회 예산감시 운동이 본격화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감시 운동에 호응하여 정부의 재정 및 예산 관리 시스템도 함께 개선되었어요.

[참여 : 시민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활동가들은 단순하게 예산 낭비가 ‘맞다/틀리다’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의 예산감시 운동은 더 이상 과거처럼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2017년 10월 제37회 ‘밑 빠진 독상’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예산의 과정과 절차에 주목하여 ‘밑 빠진 독상’을 수여하였죠. 새롭게 태어날 ‘밑 빠진 독상’은 예산의 법적 과정과 절차를 소홀히 하는 불통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여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찾아가고 꾸러가는 과정은 민주 사회에서 매우 중요해요.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토대로 소통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이번 기회에 ‘밑 빠진 독상’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행정 ⑥] 나라 살림살이 세는 곳이 없나, 판공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다, 주권자이자 납세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시작 : ‘판공비 공개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과거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직급에 따라 엄청난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사용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어요. 호텔, 술집, 고급식당 등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격려금이라는 용도로 현금을 직원과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죠.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 시민연대 당은 2000년 10월 10일 서울시와 시내 25개 구청에 대해 판공비 장부 사본 공개 등을 청구했어요.

1998년 1월 1일 IMF로 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어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주는 법안이었지만 시행 첫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만 6천 건에 불과했어요. 각 구청장 역시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유지, 방대한 자료의 양을 핑계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소극적으로 응했어요. 이에 참여연대는 지속해서 정보공개 청구와 비공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하였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참여정부 당시 고건 총리는 2003년 6월 19일 총리 훈령을 발표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서울시를 상대로 한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전국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제도화되기도 했죠. 2004년 7월 3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 행정정보공표(7조)에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문화함으로써 업무추진비 공개는 제도로 완성되었어요.

[의미 : 판공비 공개, 일상화되다] 정보공개법의 시행은 시민들에게 국가의 예산·결산을 감시할 수 있는 실제적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최근에는 중앙일보 등에서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 및 예산내역서를 분석해 지출명세를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이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이 홈페이지는 폭발적인 방문자 수를 자랑하며 총 방문자 수가 100

만 명이 넘어가고 있죠. 서울시는 정보공개정책과를 만들어 각 부서의 정보공개 실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발적 원문공개사이트인 정보 소통광장을 만들어 1천500만 건의 문서를 공개하고 있어요.

[참여 : 판공비 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일상적 감시 영역으로 자리 잡았지만, 비슷하게 쓰이고 있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여전히 불분명하게 지출되고 있어요. 특히 국정원, 경찰, 검찰 등에서는 연간 8,500억이 넘는 돈이 투명성 없이 지출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를 감시해야 할 국회도 매년 80억이 넘는 특수활동비와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1998년 하승수 변호사가 시작했던 판공비 공개 운동은 2018년 특수활동비 공개로 이어지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미국에서는 정보공개운동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 햇볕을 비춘다는 의미를 담아 '선샤인 액트'라 부르고 있어요. 정부 예산도 시민들의 감시라는 햇볕을 비추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운동은 시민운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판공비 공개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행정 ⑦] 검찰 권력에 맞선 연대의 힘, 시민이 외치고 국회가 응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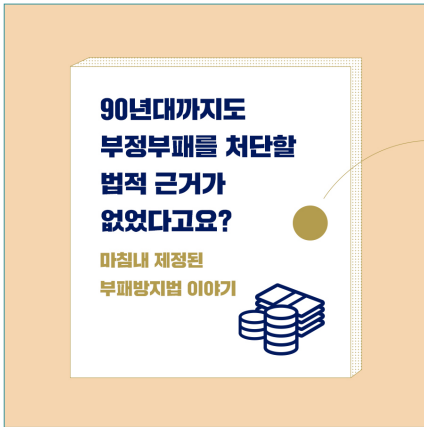
“23년, 시민참여·연대·전문성으로 공수처를 만들기까지 걸린 시간”

[시작 : ‘공수처 설치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5년 12월 5일, 검찰은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노태우가 재벌들로부터 돈을 받아 재임 동안 4천5백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었어요. 뇌물을 받은 노태우는 구속되었지만, 뇌물을 준 술한 재벌 영수들은 액수를 축소하거나 부정하였고 그들 대부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어떤 노력을 했을까] 1년여 뒤인 1996년 6월, 서울역 광장 앞에 참여연대 회원들이 모여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1월 7일에 국회에 부패방지법 제정을 청원했어요. 그 법안 제8장 137조에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한다”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청원 당시 이미 국회의원 절반의 찬성 서명도 받아놓은 상태였기에 순조로울 것 같았던 공수처 설치 운동은, 그 뒤로 수많은 난관과 좌절을 마주해야 했어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참여연대가 제안한 공수처는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구를 검찰 외부의 기관으로 독립시켜,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철저히 처벌해 검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국회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만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했지만, 상당수 국회의원은 강력한 검찰의 위력과 그럴듯한 논리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고요. 결국 의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먼저 설득해야 했어요.

결정적인 전환 국면은 2016년 가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 때 찾아왔어요.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정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국정 농단의 허브 역할을 했던 우병우가 검찰청에 소환되어서도 팔짱을 끼고 편하게 웃고 있는 사진은 수십 년간 누적되어왔던 시민들의 검찰에 대한 분노와 개혁 여론을 폭발시켰어요. 그러나 공수처법은 발의만 여러 번 될 뿐, 번번이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고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꾸준히 연구하고 입법청원을 준비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유력 대선후보들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약속하는 성과를 만들었어요.



[의미 :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통과]

그리고 마침내,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 찬성 의원 16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시민의 힘으로 검찰과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반대를 뚫은, 23년 만의 결실이었죠. 공수처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타협이나 합의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기관 및 그들과 연계된 정치 세력들의 집요하고 조직적인 방해로 시민의 힘으로 돌파한 여론전과 입법 투쟁의 산물이에요.

[참여 : 8부 능선은 넘었지만] 공수처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의 제·개정도 여전한 과제예요.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 위원회 운영 규정을 입법해야 하고, 처장의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도 필요해요.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고위공직

자 부패 수사를 지휘·감독할 공수처장을 잘 뽑아야 해요. 그러나 아직 국회의 일부 정당은 공수처 설치를 원천 부정하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공수처 설치법은 참여연대가 1996년에 최초로 제안해, 무려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수한 좌절과 실패 끝에 통과된 법안이었어요. 그 끈질긴 싸움 끝에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번 기회에 '공수처 설치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행정 ⑧]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주민투표로 한 발짝 더 가까이

“2,000억 예산의 국책 사업을 중단시킨 주민투표, 직접민주주의의 힘”

[시작 : '민간 주도 주민투표'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03년 8월 주민투표법이 입법예고 되던 시점, 전북 부안군에서는 핵폐기장 건설 문제 때문에 부안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1989년부터 핵폐기장 건설을 시도했던 정부는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시도를 마

행정

지막으로 정부 주도의 건설 예정지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자율유치공모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공모 신청을 하는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자 3천억의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는 한편, 그래도 안 되면 정부가 정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압박까지 하기에 이르렀죠.

[경과 : 어떻게 전개 되었을까요?]

2003년 입법 예고되고 2004년부터 시행된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 또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2014년 10월 삼척에서 시행된 주민투표는 삼척 시장이 중심이 된 민간 주도 주민투표였는데요, 이는 핵발전소 건설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산업부와 행안부의 답변 때문이었어요. 당시 김양호 시장은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했던 김대수 삼척시장이 낙선하고 등장한 김양호 시장에게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김 시장은 민간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10월 9일 삼척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인 명부등재자의 67%가 투표에 참여했고, 84.9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게 삼척핵발전소 계획은 결국 유보되었고, 2019년 6월 5일 지정·고시가 해제됨에 따라 백지화 되었어요.

[의미 : 기존 주민투표법이 가로막은 주민의 목소리를 살려내다] 이후 민간 주도 주민투표는 핵과 맞선 사람들에게 있어 저항의 '정석'처럼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영덕과 기장, 울산에서도 민간 주도 주민투표를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시키거나 백지화시키는 데에 성공했어요. 이는 주민투표법으로 인해 국가정책 결정 사항에는 주민투표를 통한 의사 반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한 결과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거예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일수록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주민투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정부가 마련해 둔 참여제도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가로막기 때문인데, 결국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 그 자체로 불합리한 일이 아닐까요? 그것을 '진짜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주권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조금이나마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요?

[행정 ⑨] 감시의 사각지대 국회 예산, 잘못 쓰인 국민 세금을 찾아라.

“국회 감시 어벤저스가 등장했다!”

[시작 : ‘국회 예산 감시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300명, 6,787억, 500조’,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시나요? 2020년 기준으로 한 해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예산과 감시하는 국가 예산입니다.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사람들을 앉혀놓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국회에서 쓰는 세금은 누가 감시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감사원이 국회를 감사할 수 있지만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감사원의 예산 역시 국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던 때에 시민단체 3곳(세금 도둑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

예산센터)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모여 국회 예산 감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감시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에 직면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면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동안 공개됐던 국회 예산 자료는 너무나도 부실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죠.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국회는 청구해도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그들을 고민에 빠지게 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무조건 소송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도 판결받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국회 예산에 대해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잘 몰랐던 예산 항목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국회는 해당 예산 항목들에 대한 정보공개도 모두 거부했어요. 그러면, 또 소송을 할 수 밖에요.

[의미 : 세금 도둑의 실체가 드러나다] 소송을 하던 중,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일부 정책 자료집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심지어 그마저도 상당수의 국회의원 정책 자료집들이 다른 기관의 보고서 등을 표절한 것이었고, 정부

변화사전에 아카이브
 NPO X 세금도둑 잡아라 등
 2020

국회 예산을 무분별하게 쓰는 세금도둑

누가 감시하나요?

감시 시작

감시의 시작지대 국회
국회의원: 300명
연간예산: 6,787억 원
국가예산: 500조 원
(2020년 기준)
감사원: 국회 감사 가능? 이권상 가능
국회의원 앞에서 피감기관

국회감시 어벤저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홀몬예산센터
2017.3
뉴스타파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주체들
대한민국 입법부를 제대로 감시해보자

난관
· 너무나 복잡한 국회 예산 관련 자료
· 국회의 공개 거부

활동시작
의문: 과연 국회를 감시 하는 것이 가능할까?
정보 공개 활동 시작
방법: '만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무조건 소송을 한다.'

성과

소송시작

- 특수활동비 영수증 없이 사용 80명/년 (2017)
- 업무추진비 내값, 선명구입비 국회 예산에 산재
- 예비금 사용내역 공개 X 연간 13억 원
- 입법 및 정책개발비: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정책자료집 86억 원/년

소문 예산 발견

- 정책자료반간, 홍보문 유언비
- 정책자료발송비 · 독립업무경비

영전연승

1심에서 모두 승소
국회 사육처 자료집, 보고서 원문공개 거부

세금도둑의 생체

상당수의 정책자료집 = 표절, 자필기거짓서술
현수 요구 → 반납예산: 2억 1천만원
반납국회위원: 31명

현황 · 과제

세금도둑 추적 진행 중

-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71명이 국민세금 모함용 (약 25%)
- 잘못 쓰여진 세금 4억 여원 → 일부반납

법산의 일각

→ 국회의 다른 기관에 대해 감시영역 확장 중
: 시민단체 + 뉴스타파

제도개선 필요

- 세금을 엉터리로 쓰는 국회 관행
- 21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국회 예산 시스템 개선의 물의

↓

33명 긍정적 답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 감시 필요.

그래픽 서머리: 정진호

보도자료를 짜깁기한 경우도 있었어요. 2017년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이러한 बे끼기 실태를 단독으로 보도했고, 특정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참여: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국회 세금 도둑 추적 프로젝트'를 통해서 잘못 쓰인 4억여 원 중 일부는 반납이 됐어요.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의 조사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국회 외의 다른 기관들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역시 감시의 대상이고요. 결국,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관행'처럼 진행되어오던 국민 세금 낭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마치며: 끝은 또 다른 시작] 국회 세금도둑 추적 프로젝트의 의의는 우리가 감시의 눈초리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권력자들은 세금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오랜 소송을 거쳐야 그나마 일부라도 공개 받을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독립언론과 시민단체의 끈질긴 추적과 조사가 아니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결국, 21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감

행정

시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행정 ⑩]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 정부 정책에 ‘젠더 렌즈’를!

“정부 예산은 중립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다”

[시작 : ‘성인지 예산 제도화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에 대해 아시나요? 성인지 예산이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 배분 과정이에요. 한국에서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2000년대 초반 지역 여성운동이 여성 예산을 분석하면서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01년부터 지역의 주부들로 구성된 ‘생활 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모임(생강 모임)’이 주축이 되어 지자체의 여성정책과 예산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초창기 전국 단위 여성운동 단체들의 관련 제도개선 운동을 통해 2006년 국가 차원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가 선행되고,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시

작으로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성인지 예산 운동 경험이 있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지방의회에 진입하면서 지역 정치와 여성운동의 연계 속에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일상 곳곳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성별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변화사례들을 통해 점차 알려지게 됐어요. 서대문구 공공자전거 개선 사례는 성별 영향평가 우수사례로 자주 소개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공공자전거와 성별 영향평가,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당시 서대문구가 공공자전거 사업에 대해 성별 분석을 한 이유는 자치구 내 여성 인구수가 높음에도 여성의 자전거 보유율 및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자전거 거치대의 내외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지속해서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욕구를 높여야 하는 점, 자전거 이용을 통해 지역의 탄소 발생을 줄여 대기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세 가지였어요.

[의미 : 젠더 거버넌스의 도입] 서대문구의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좋은 예산은 결국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민과 관이 협력하면서도 견제하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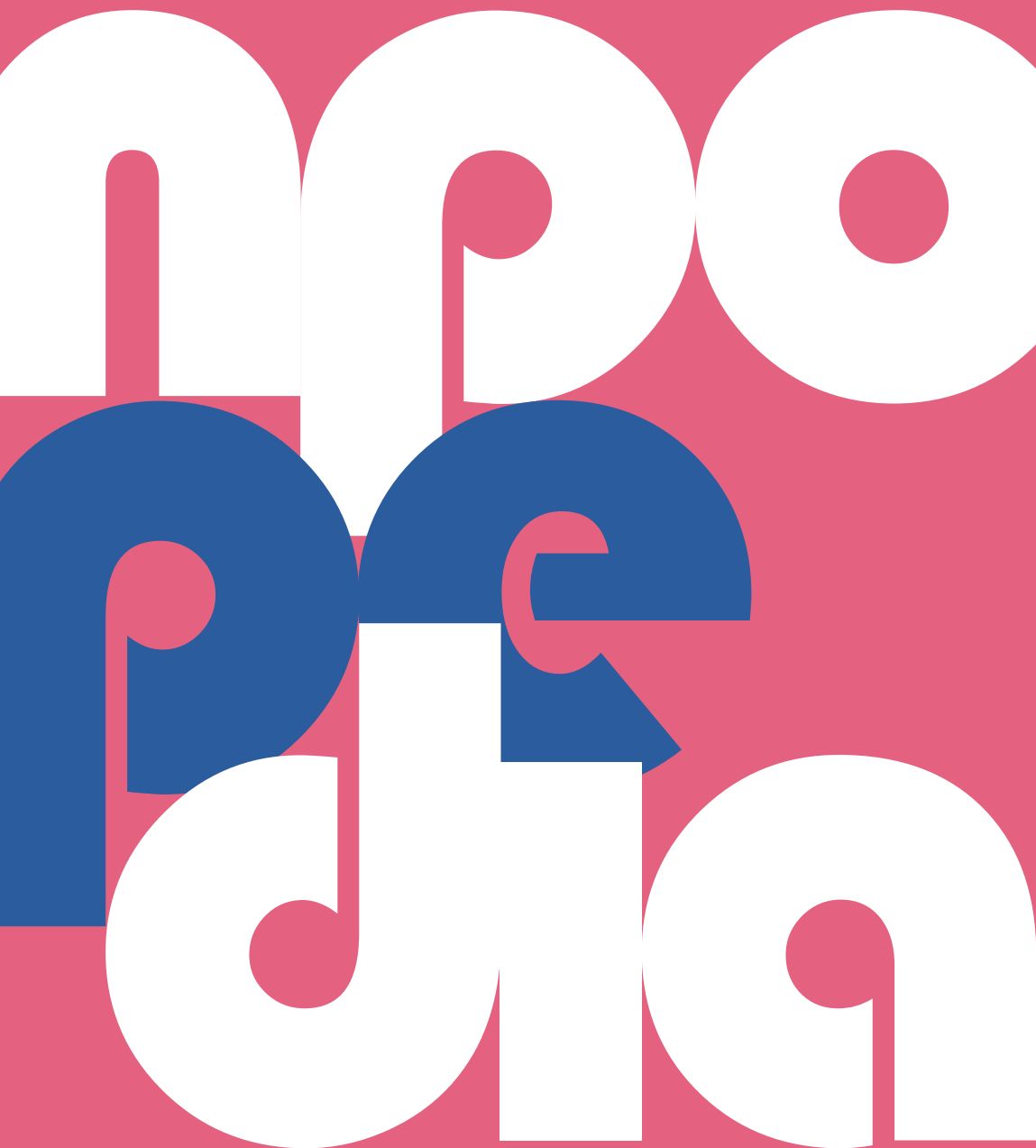
버너스가 잘 맞물려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 세 주체가 참여하면서 정책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살피고, 정책의 내용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따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성인지 예산은 제도화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씩 변화를 지속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성인지 예산 실험은 주무 부처인 예산 부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담당자들의 책상 위에만 머무는 서류작업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오해로 인해 '엉터리 성인지 예산'에 관한 기사도 예산 시즌이 되면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성인지 예산과 성별 영향평가는 젠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놓치고 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젠더 렌즈로 자전거를, 화장실을, 지하철 손잡이를 살펴보면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성인지 예산 제도는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향상을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CHAPTER
10

정치



[정치 ①] 고질적 정치 구태를 바로잡다, 뭉 없는 이들의 뭉을 위해

“이익집단의 대변자를 응징하고 민주주의에서 답을 찾다”

[시작 : ‘매니페스토’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에 많은 상처를 입혔어요. 고용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렸고 중산층은 통째로 무너졌죠. 공동체 의식이 붕괴하고,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졌으며, 청년 실업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극심해졌어요. 외환 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 고질적 정치 구태였어요. 또다시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선 민주적 통제장치와 정치개혁이 가장 시급했어요.

매니페스토 운동은 고질적인 정치 구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작되었어요. 2006년 2월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이 진행되었어요. 실천본부는 2006년 지방선거에 앞서 7개 광역 지자체 후보 30명의 공약을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했어요. 2007년 11월에는 17대 대선 후보자의 분야별 정책을 분석하고 뒤이어 12월 5일 대선 후보 매니페스토 토론회를 개최했죠. 2008년에는 18

대 총선 의정 활동 계획서 분석 내용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해나갔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09년 10월 16일에는 ‘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추진본부’를 출범하였어요. 매니페스토 운동은 재정 운용을 중심으로 선거 때의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집중 점검해왔어요. 일례로, 4대강 보다 약 14배의 사업비가 들어간 31조 원의 인천 에잇시티, 31조 원이 쓰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853억 원을 들여지었지만 흉물처럼 버려진 채 철거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인천 은하철도 등은 대부분 지방선거에서 나온 대형 개발 공약들이었어요.

[의미 :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지다] 매니페스토 운동과 같은 정치개혁 운동은 정치를 비로소 민주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다지는 과정이에요. 선거에서 다뤄지는 의제들이 허울 좋은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하죠. 또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정밀하게 검증하고, 실천 의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해요. 정의로운 사회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노력과 용기에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참여 :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민사회는 액터(Actor)가 아닌 디렉터(Director)의 관점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2012년부터 시작해 100회를 넘긴 공약 평가 주민 배심원제,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등에서 숙의민주주의의 경험을 축적하기도 했죠. 주민배심원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인구비례를 고려한 무작위 추천(ARS) 및 전화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활동하는 시민의회 방식이에요. 서로의 다름을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대신 존중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을 위해 불편한 약속을 만들어가는 시민교육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여 민주주의의 효용성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민주적으로 구태를 바로잡아 나가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기회에 ‘매니페스토’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정치 ②] 의정 감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낙선시킨다

“잘 뽑는 것만큼이나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 : ‘낙천낙선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00년대 이후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사회 구현과 정치 개혁이라는 의제에서 좀 더 다분화 되어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정치적 구태가 잔존해 있었어요. 16대 총선에서 전개된 낙천낙선 운동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죠.

2000년 1월, 전국 412개 연대 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부적절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 반대와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어요. 낙천낙선 운동은 단지 부정부패를 일삼은 의원을 적발하여 정치 사회에서 퇴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회로 도약하는 과정에 있어 경제정의와 토지 정의의 실현, 국정 감시 등 구체적인 쟁점들을 당면 과제로 삼고 전개된 시민사회 운동이에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기존 의정 감시활동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낙천낙선 운동은 16대 총선을 앞둔 4월 3일 공천 반대자 64명과 반인

권 전력 및 납세 비리, 저질 언행 관련자 22명 등 모두 86명의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어요. 초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새천년민주당은 당의 중진들이 대거 포함된 명단을 보고 다소 후퇴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당시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명단을 발표한 총선시민연대 측에 청와대와 민주당 일부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음모론으로 맞섰어요.

[국민의 지지와 정치권의 비난을 동시에 받다]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정치권은 온갖 비난과 힐난을 서슴지 않았지만, 국민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결국, 86명의 낙선 대상자 가운데 59명(68.6%)이 떨어졌고, 22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 중에는 15명(68.2%)이 낙선했어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자 중 19명이 무더기로 떨어져 낙선 운동의 위력을 과시했죠.

[의미 : 시민의 열망 속에서 낙천낙선운동 진행된다] 낙천낙선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정치개혁 운동은 주로 의정 감시의 형태로 전개되었어요. 1999년 정기 국회에서 국정감사 모니터 운동을 거치면서 성숙한 의정 감시 운동이지만, 그 한계 역시 뚜렷했죠. 낙천낙선 운동은 대안을 찾기 위한 시민적 열망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정치학적 혹은 법학적 근거보다도 더욱 확고한 정당성을 확보

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참여 : 민주주의 진화의 결실을 가리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낙천낙선 운동의 후폭풍으로 총선연대 지도부 30여 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서게 되었어요. 울산과 광주 등 일부 지역의 대표자들은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을 선고 받기도 했죠. 당시 공직선거법 제87조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하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운동이 기존의 의정 감시라는 제삼자적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지·반대의 목소리로 이어진 것은 놀라운 발전이라 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낙천낙선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정치 ③] 투표가 끝나도 주인으로 살고 싶다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소환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작 : ‘주민소환제’에 대해 알고 있다

요? 지방자치에서 비리와 부패, 혈세 낭비, 난개발, 무책임 행정, 외유성 해외연수, 막말 등은 비단 어느 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죠.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5·16 쿠데타로 인해 중단된 후 1991년 30년 만에 당시 야당 대표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 등을 통해 부활했으나, 그마저도 주민소환제나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는 제외된 채로 기능했어요.

경기도 고양시는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주거지 건너편은 물론 학교 앞에까지 러브호텔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이에 2000년 고양시 여성민우회는 숙박유흥업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고양시청과 고양시 교육청에 학교 주변 러브호텔 규제지침 제정 마련을 촉구하였죠. 지역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시장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전개했고, 시의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대책을 촉구하는 등 쫓기대회, 정보공개 청구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00년 고양시에 이어 2003년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비리 연루 단체장 등에 대한 소환

운동이 전개되었어요. 25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주민소환청구권을 통해 '주민소환조례'로 비리 단체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할 것을 밝혔죠.

[주민소환제를 입법하기까지] 비록 지역에서 주민발의권을 통한 주민소환제 도입은 법률의 미비로 인해 좌절되었지만,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은 주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해 정치적 의제로 올리기에 충분했어요. 2004년 1월 16일에는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되어 주민소환제의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주민소환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입을 모색했어요. 이후, 2006년 부동산 대책법 등으로 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던 중 캐스팅 보트를 쥔 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고, 1년 후 실시되었어요.

[의미 : 잘못된 지방자치에 제동을 걸다] 주민소환제는 단지 부적절한 공무원을 사퇴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비리·부패 등의 예방 내지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견제의 효과도 있어요. 시·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의 서명을 120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각각 15%와 20% 이상

의 유권자 서명을 60일 이내에 받으려면 소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후 선관위의 확인을 거쳐 소환투표를 진행하는데,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소환이 확정돼요.

[참여 : 소환이 어려운 주민소환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소환 투표율이 1/3 미만이거나 여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표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절차가 종결돼요. 지나치게 높은 소환 여건은 제도의 작동을 어렵게 해 부적절한 공직자를 견제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이외에도 서명 기간 주소 이전 등으로 서명이 무효가 되거나, 소환 대상자의 소환투표 불참 유도에 따른 소환 무산 등의 한계 역시 드러났어요. 따라서 주민소환제 발의와 개표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으려 자세를 낮추지만, 선거가 끝나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주인 행세를 하기 마련이죠. 주민소환제의 도입으로 주민들은 각종 비리·부패와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정에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기회에 '주민소환제'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정치 ④] 법관이 가진 정당성의 한계, 주권자 국민의 참여로 보완한다

“국민을 위한 사법을 넘어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으로”

[시작 : '국민참여재판 도입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9년 5월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사추위)가 구성된 것을 계기로, 7월 13개 단체가 모여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15대 과제를 발표했어요. 서울YMCA,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제안한 15대 과제에는 '배심제 등 시민의 재판 참여 방안 도입'이 포함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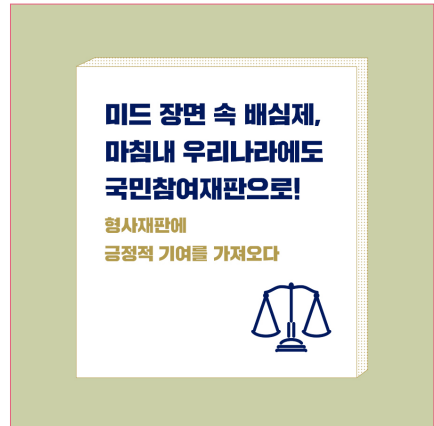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의 사법 참여 방안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미루어졌다가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동으로 사법개혁 분위기가 고조되었어요. 대법원에 사법개혁 위원회(사개위)가 구성되고, 범정부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제도 논의는 다시 활발해졌죠. 참여연대는 사개위에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로 배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고, 2004년 11월 사개위는 배심제를 토대로 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

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참여연대는 2007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집중해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국회의원에게 8편의 공개 편지를 부치는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속 편지 보내기 사업을 전개했어요. 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부친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를 시작으로 “주권자의 사법 참여가 왜 위헌입니까?”, “국민참여재판, 민주주의와 진보 정치의 발판입니다” 등의 편지가 계속 이어졌죠.

[첫 국민참여재판 열리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2007년 4월 30일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08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어요. 직업 법관, 즉 판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판결에 참여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죠. 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냈어요.

[의미 :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이 만들어지다] 2008년 1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배심제는 형사재판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참여한 배심원 후보자 수는 6만여 명에 달하며 배심원의 국민참여재판 직무수행 만족도는 97%에 달하죠. 또한 배심원 평결과 판결 일치율은 93%에 이르고 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관예우의 문제점도 일부 해소되고 있어요.

[참여 :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당시에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사건 범위를 일부 중범죄 등으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참여재판은 전체 합의부 대상 사건의 3% 이하에 불과하죠. 피고인이 희망하지 않더라도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는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요. 시민사회가 주장한 배심제 도입은 ‘국민을 위한 사법’

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을 지향하기 때문이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사법권은 국민이 법관에게 위임한 국민주권의 하나지만, 국가에 의해 임명된 법관이 행사하는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에는 그만큼 한계가 있죠. 직업 법관이 판결하는 경우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국민참여재판 도입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정치 ⑤] 청와대와 검찰의 공생관계,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일깨우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이루자”

**[시작 :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 시민은 민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끌어냈고, 박근혜 정부는 4년 만에 막을 내렸죠. 촛불 시민은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그동안 이를 비호했던 검찰 역시 국정 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였어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

민사회단체들은 최순실-박근혜 국정 농단 정국 이전부터 지속해서 작동해 온 검사동일체의 원칙 파기, 공수처 설치 등을 포함하는 검찰 개혁안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어요.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수사권을 오남용해왔어요. 특히 정윤희 문건 수사나 국정 농단 초동 수사의 실패는 사회적 분노를 촉발해 시민을 광장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했죠. 검찰과 청와대는 출세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서로를 이용하며 공생관계를 맺어왔어요. 유신시대 때부터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검찰총장 및 법무부 장관 출신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2013년 8월부터 검찰-청와대의 유착은 극심해졌죠.

[경과 : 개혁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다] 그동안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참여연대는 검찰을 감시해 온 유일한 시민단체로 ‘법무부 탈 검찰화’를 검찰개혁 및 법무부 정상화 방안으로 오랫동안 제안해왔어요. 특히 참여연대 내 사법감시센터는 정치권력 또는 기득권층의 부패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검찰의 역할에 주목하였죠.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통령 후보, 2017년 19대 대통령 후보 당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견제 기능과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강조하며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어. 당선 이후 2017년 8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기도 했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2017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가 검사 출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의 조직으로 변화하여 법무행정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어.

[의미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의 막이 내리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일어난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 비리 사건, 진경준 당시 검사장의 100억대 주식 뇌물수수 등 전·현직 검사들의 범죄 혐의가 연이어 제기되었지만 이를 엄중히 다뤄야 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부실하게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죠. 시민·사회단체의 꾸준한 문제 제기와 노력 그리고 당시 들끓었던 검찰개혁 여론에 힘입어 국회는 2017년 2월 임시국회에서 '검사 퇴임 후 1년간 청와대 임용 금지, 청와대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

[참여 :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9일 법

무부는 법무·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검사의 보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총원하는 등의 인사 방안을 발표했어. 하지만 법무부 직제상 여전히 검사 '만', 혹은 검사가 먼저 말할 수 있는 주요 보직이 아직 많아.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 국실장급, 부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여 법무부와 검찰 간 견제와 균형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정치권력과 검찰이 지배력 강화와 출세를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폐습은 근절되어야 해요. 이번 기회에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정치 ⑥] 악법에 이의 있습니다, 법은 사라져도 제도는 그대로

“군부독재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켰던 법을 폐지해야 한다”

[시작 :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사회보호법은 상습범이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해 보호 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법이에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중 처벌 제도로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입법되었죠. 피감호자들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보호감호 철폐, 교도관 폭행 근절, 감호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어요.

사회보호법은 수감된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징역 기간과 별도로 임의 기간 감호소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범죄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법은 불법적인 권력 찬탈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신군부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삼청교육대 교육생들의 사회복귀를 막고 그들을 장기간 격리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죠. 1988년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청송감호소의 실상이 세상에 하나둘 알려지면서 보호감호와 관련된 조항들이 삭제 및 축소되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회보호법의 대대적 개정이나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국판 아우슈비츠란 악명을 떨치던 청송 감호소는 1990년대 후반 ‘대도’ 조세형 씨 등 피감호자들이 잇따라 인권침해 실상을 폭로하면서 다시 세상에 회자하였

어요. 2003년 청송감호소에 수감돼 있던 피감호자들은 10년 만에 또다시 대구 모 시위를 조직했죠.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을 통해 이들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했고, 이 간절한 외침에 응한 건 인권 단체들이었어요. 2003년 3월 11일 인권운동사랑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22개 민간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출범을 선언했어요.

[여론을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 당시 많은 사람에게 ‘청송감호소는 흉악범들의 소굴’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사회보호법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켜주는 법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대위의 가장 큰 과제는 사회보호법의 폐해에 대해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청송감호소를 방문해 피감호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출소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증언대회를 개최하거나 언론에 기고했어요.

[의미 :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다] 2005년 8월, 드디어 독재 시대의 잔재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온 사회보호법이 폐지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장래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재범의

위험성을 내세워 사회적 정화를 시도하겠다는 사회보호법 보호감호제도의 폐해를 알리는 과정은 결국 군부독재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 속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한편 2006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4년 청송감호소의 인권침해에 항의하다 폭력 끝에 사망한 박영두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이름 없는 피감호자들의 정당한 저항을 인정했어요.

[참여 : 사회보호법이 남긴 잔재를 완전히 단절시켜야 합니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긴 했지만, 이전에 보호감호처분으로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은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지속해서 구금되어왔죠. 이에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020년 10월 12일 “사회보호법은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위헌적인 보호감호제도는 존속하고 있다”며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장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정의로운 국가라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잔혹한 형벌을 내리거나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번 기회에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정치 ⑦]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거 시기마다 침해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시작 : ‘공직선거법 93조 1항 개정’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07년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 UCC 운용기준’을 발표했어요. 당시 선관위는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죠.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근거로 시민 누구라도 온라인을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여부를 밝히지 말라고 규정한 것이예요.

2007년 대선은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선거 얘기’에 대한 탄압이 가장 심했던 시기예요. 앞서 치러진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나라당은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 중인 ‘온라인 문화’를 꼽았어요. 선거 UCC 운용기준은 누가,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어디서’까지 포함해 온라인상의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07년 9월, 시민단체들은 시민청구인 192명과 함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처벌 규정인 255조(부정선거운동죄) 2항 5호에 대해 헌법소원(2007헌마1001)을 제기했어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죠.

[위헌 결정을 받다] 2007헌마1001 사건이 계류된 채 또다시 선거가 다가왔고, 인터넷이 매섭게 활성화되는 동안 선관위의 UCC 운용 지침은 여전히 유효했죠. 트위터 등 SNS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선관위의 게시물 삭제 지시도 늘어만 갔어요. 2011년 12월 29일, 4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나 전자우편 전송을 포함해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의미 :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과정을 만들다] 2007헌마1001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어요. 기존의 선거 운동이 벽보, 연설 등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걸맞게 법을 해석한 것이죠.

[참여 :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 위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선거일 180일 전부터’라는 기간 규정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 조문이 공직선거법에 존재하는 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진 않은 것이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선거 시기에는 예외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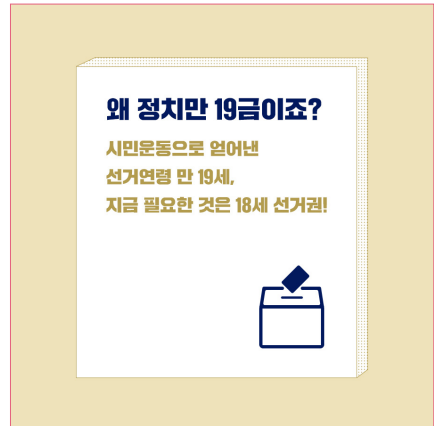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우리 시민들을 대표할 선출직 공직자로 누가 적합할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토론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에요. 선거 시기에는 당연히 선거 얘기, 정치 얘기가 오가야 하죠. 이번 기회에 ‘공직선거법 93조 1항 개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정치 ⑧] 청소년도 정치해야 한다, 청소년 인권의 시작, 선거권 하향

“청소년도 동등한 유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작 :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00년 초반부터 청소년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정치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의 흐름 속에서 2004년 5월 9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의 물꼬를 틀기 위해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가 발족했어요.

[어떤 논의가 지속되었을까] 1995년 이후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등의 단체와 개인들이 선거연령 20세 규정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2001년 12월에는 민주노동당의 18세 청소년 당원이 현행 선거연령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죠. 그러나 현행 선거연령 규정을 위헌으로 판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사회 발전과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 연령이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쳤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1997년 대선을 앞두고서는 대학생 유권자위원회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주장하였어요.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낮추자'라는 18세 선거권 운동 모임이 청소년 선거인단을 직접 모집하여 모의 투표를 시행하기도 했어요. 이후 모의 투표는 18세 선거권 운동의 주요한 방식이 되었죠. 이때를 전후로 경실련에서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출 것을 포함한 정치개혁법안을 입법 청원하였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연대 준비위원회 등에서 18세 하향화를 주장하였어요.

[선거연령 인하의 목소리, 정치권까지 확대되다] 2000년, 두발 자유화 운동인 노컷 운동을 거치면서 청소년들도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촛불시위를 지나면서 청

소년들의 정치 참여, 사회참여도 더 이상 금기가 아님이 증명되었죠. 대통령 인 수위에서도 선거연령을 18세나 19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정치 권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그 결과 2005년 선거연령이 만 19세로 한 차례 변경되긴 했으나 전반적인 사회의 민주 화와 함께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식이 성 속함에 따라 선거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 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었어요.

[의미 : 당사자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안이 통과되어 만 18세 선거권이 도입되었어요. 2021년 4월 7일 열린 지방 보궐 선거에서 처음으로 18세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였죠. 청소년들은 더 이상 통제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구성 원으로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이에요.

[참여 : 청소년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 하는 과정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만 18 세 선거권을 통해 청소년들도 자기 삶을 결정짓는 교육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통 로를 부족하게나마 갖게 되었어요. 청소년 시기를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 ‘공부 와 성적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시 기’로 결정한 것은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 죠.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더 이상 미

성숙하고 권리를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한 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만 18세 투 표권 확대는 현재와 미래의 주인으로서 청소년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 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정치 ⑨] 사회의 안정과 시민의 삶, 부패 방지법으로 지켜낸다

“씩은 나무로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다”

[시작 : ‘부패 방지법 제정 촉구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6년 1월, 참여연 대는 “부패 공화국이 되어버린 우리 사 회의 현실을 바로잡고 부패와 성역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을 선언했어요. 부패방지법 제 정 공청회를 개최하여 부패방지법안을 발표하고,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출범 했어요.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내에는 공 익제보지원단과 정책 사업단이 꾸려졌으 며, 정책 사업단이 부패방지법안 마련을 비롯한 각종 반부패 정책을 입안, 제안하

는 활동을 담당했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990년대는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압축적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무시되고 은폐되어 온 사회적 모순들이 본격적으로 사회 표면 위로 등장하던 시기였어요. 특히 오랜 시간 동안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온 부정 부패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죠. 부정 부패의 대가는 1997년 IMF 구제금융과 전 국민의 고통으로 귀결되었고, 민주적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과 자본의 유착, 뇌물수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급행료, 줄 대기 등에 지불되는 사회적 비용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제안한 최초의 부패방지법안은 대폭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공무원 범죄수익몰수특례법을 포함하고, 특별검사부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돈세탁 규제에 관한 규정 등을 망라해 150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안이었어요. 이 법안을 발표한 후 3월부터는 한겨레신문사와 공동으로 부정부패 추방캠페인 “맑은 사회를 열자”를 시작했어요.

[부패 방지 입법시민연대로 확대되다]

뒤이어 제16대 국회에서도 부패방지법 제정은 가장 중요한 입법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38개 시민사회단체가 ‘부패 방지 입법시민연대 (이하 시민연대)’를 구성하면서 보다 범시민 사회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죠. 시민연대는 국회의원 208명의 서명을 받아 2000년 9월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 방지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그 이후에도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전국 자선거 대행진, 집회와 토론회,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의견서 제출, 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 입법 로비를 나섰어요.

[의미 :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시민사회 힘을 모으다]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은 다양한 시민입법 운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모범적인 사례예요. 시민사회가 주도해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시민의 여론을 모아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 입법까지 이루어진 역사적 법안이기 때문이죠. 부패방지법을 처음 제안하고 만들어 낸 것도, 국회를 압박하고 움직여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결국 시민들의 힘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참여 :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꾸준한 요구와 지난한 입법 과정에도 부패방지법은 세부 내용이 많이 후퇴되었다는 평가를 받

아요. 따라서 반부패 전 담기 구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어요. 그 외에도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패방지법을 개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한국의 근현대사에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바로 잡으려 했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한 순간들이 많아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 현상을 진단하고 제대로 척결하는 과정과 정책이 중요해요. 이번 기회에 '부패 방지법 제정 촉구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정치 ⑩]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시민이 중심되는 주권 운동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 군부대를 넘어 대통령 선거를 바꿔내다”

[시작 : '공명선거 감시단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87년 12월 16일 선거

당일 서울 구로구청에서 투표가 진행 중이던 오전 11시에 구로구 선관위가 의문의 투표함을 몰래 빼돌리다가 발각됐어요. 이어서 의문의 투표함과 투표용지, 인주 등이 연달아 발견되고요.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구로구청을 점거해 농성에 돌입했고, 정부는 백골단 등의 용역과 최루탄을 동원하여 진압, 총 1,034명을 연행하고 208명을 구속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시작됐을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선탁)'는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공명선거의 정착을 목표로 삼고 선거 감시를 위해 활동하던 전국 57개 시민단체의 연합체로 출발했어요. 공선탁의 공명선거 운동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운동이 아닌, 금품향응 거부, 관권 개입 차단, 불법·탈법적 선거운동 감시를 위한 정의 운동 단체예요. 공선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을 생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무보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공선탁은 부정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자', '내부고발자'들의 용기에 힘입어 선거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펼쳤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지문 중위의 병영 내 공개투표 양심선언'이었어요. 이지문 중위

의 양심선언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해 1997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 영외 투표가 보장되어 공개투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어요.

공명선거 운동은 1997년경 공선협 자체의 검표 조직을 가질 정도로 성장했어요. 이후에도 지속해서 공명선거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 나갔어요. 2007년 대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대통령상(像)-대선후보 검증 논란과 관련하여”라는 주제의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어요. 2007년에는 100인 검증특위를 구성해 대통령 자질 관련 공통 질문과 각 예비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을 준비해 대선후보의 자질 검증에 노력했어요.

[의미 : 공명선거 문화 정착, 그리고 그 이후] 25년 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열면서 지방분권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각 지방의 자치행정 및 자치 의회가 시작되면서 지방행정은 물론 각 의회에 대하여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체계가 없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과 의회 활동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명선거 감시 운동은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표로 시작됐지만 투명하고 효율적 행정 및 의정 활동으로 가는 초석을 닦았어요.

[참여 : 계속되는 공명선거 운동] 이후에

도 공선협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입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의식 개혁 운동에 주력하려고 해요. 이제 어느 정도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긴 했지만, 선거에 당선되겠다는 욕망이 살아 있는 한 부정행위는 언제나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신성한 제도이고 누가 감시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공명선거 운동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정부 곳곳의 내부고발 자들과 함께 공선협은 그동안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큰 노력을 해왔고 선거제도를 성공적으로 바꿨어요. 하지만 여전히 감시의 고삐를 늦출 수 없어요. 이번 기회에 ‘공명선거 운동’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정치 ⑪] 고위공직자를 검증한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인사청문회,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검증하는 과정”

[시작 : ‘인사청문회 법제화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9년까지만 해도 고

위공직자가 지명되면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건 상식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사실상 인사에 있어서는 전권을 행사해오던 때였죠.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문민정부)는 첫 내각 구성원들이 땅 투기 의혹과 자녀 국적 문제 등으로 인해 임명 1~2주 만에 중도에 하차하는 일이 발생해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6년 검찰권 행사의 실질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되,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어요.

[경과 : 우리는 이런 공직자를 원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 개정안 제출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 지명된 공직 후보자들을 자체적으로 검증 평가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민 중심의 인사 검증'을 시도했어요. 한편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공직자의 부패 이력 검증에 초점을 맞추어 1998년 2월 '절대로 등용되어서는 안 될 사람 104인'을 지목하여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당시 대선후보 김대중은 1997년 대선에서 인사청문회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법안이 발의되면서 여야의 협상을 거쳐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 시행되었어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그 대상을 최소화하려 했어요. 당연히 시민사회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죠. 당시 통과됐던 청문회법은 그래서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게다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전력 등의 도덕성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자격 검증의 일부에 불과해요. 책임성과 민주성, 개혁성과 전문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민사회는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와 함께 인선 및 인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의미 : 문턱은 높이고, 대상은 넓히고]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까지 확대되었어요. 경실련 역시 인사청문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시민단체 중 하나였는데, 2004년 이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들로 인사청문회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는 등 청문회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도 함께 발표하면서 인사기준과 검증과제 제시에 주력했어요.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으로 마침내 장관 등 국무위원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역설적으로 청문회가 참여한 정치적 갈등의

무대가 되는 역효과도 있었어요. 이제 모두 청문회에 '진심'이니까, 여당은 엄호하고 야당은 낙마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게 되죠. 또,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부분들을 검증하려고 든다거나, 본인이 개입하지 않은 사안인데도 가족이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이 확대되는 등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방식으로 곧잘 악용되곤 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문제가 있는 공직 후보자를 거르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정사유를 사전에 파악하고 처음부터 임명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많은 사람이 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사전에는 공적인 부분 중심으로 검증하되 그 뒤에 문제가 드러나면 지명을 철회하거나 인사권자가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검증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인사청문회, 우리 정치가 이 기능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정치 ⑫] 우리 동네 후보의 정보, 3분이면 빠짐없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동네 후보에 대해 알기 위해 필요한 시간, 단 3분”

[시작 : ‘후보자 정보 제공 활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온라인 기반 활동이 활발한 한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정보 접근이 가능해요. 하지만 막상 선거 시기가 되면 필요한 정보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가 하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선거는 후보자들의 지난 행보에 대해 심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잘 다듬어 유권자에게 전달하고 유포하는 방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선거 때마다 정책선거를 촉진하고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해 온 시민단체 입장에서든 마찬가지예요.

[경과 : 쉽게 우리 동네 후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2016년 총선 당시,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를 결성했어요. 통상적으로 해왔던 정책 제안과 약속받기 등의 활동도 있었지만, 다양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3분 총선’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는 건 새로운 시도였어요.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3분만 검색해도 우리 동네 후보에 대해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기획을 책임지게 된 참

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들과 협의해 사이트 설계와 동시에 자료 집적 및 정보 수록 활동에 들어갔어요.

3분 총선 페이지는 후보자들의 재산 현황과 경력, 현역 의원일 경우 의정활동의 주요 내용, 국민이 관심 두는 한국 사회 주요 이슈와 정책에 대한 입장 등 총선넷이 선정한 38대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별 약속 여부 등등 정말 많은 내용을 다 담았어요. 이는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DB를 구축하고 있는 참여연대의 '열려라 국회' 정보를 기본적인 출처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심차게 만들어진 '3분 총선'을 알리기 위해 인증샷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했어요.

[의미 : 온라인 정보제공 운동의 가능성] '3분 총선'은 시민단체들이 온라인에 기반한 정보제공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시도한 것에 대해 각계의 호평이 이어졌어요. 이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후보자 정보공개 활동은 2017년 대선 시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가 공식화되면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대선 #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2017 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했어요. 참여연대는 사이트 개설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프

로젝트 정당을 표방하는 우주당과 협의에 들어갔고, 후보자 정보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표명이라는 참여방식이 가미된 '2017 대선 오디션'이 개설되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기획이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의 선거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해요. 인물 중심 선거에서 정책 선거로 전환하고, 준비되고 검증된 공약을 내놓으라는 요구이죠.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일 거예요. 유력 후보자와 정당이 내놓은 정책과 발언들을 기억하고 심판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후보자 정보제공 운동은 선거 시기 한계가 많았던 시민단체들의 활동 방식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언론 환경이 달라지고, 정보가 유통되는 방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 변화도 불가피하기 때문이에요. 무한대로 확장하는 온라인 세상으로 활동반경을 넓히는 건 당연해요. 관건은 높아진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 수준이나 콘텐츠의 한계 등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가 될 것입니다.

[정치 ⑬] 유권자 울리는 선거법 독소조항, 현재를 넘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은 선관위, 그리고 여기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

[시작 :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유권자 운동을 펼치기 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을 결성했어요. 총선넷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2016년 총선이야말로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고,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 과제 선정, 투표 참여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죠. 대표적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해 부적격 후보를 대상으로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통상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현수막과 손피켓, 마이크를 사용했고, 문서나 도화에 후보자 이름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통째로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네모 모양의 구멍을 뚫어서 활용했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선거법 위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이었지만 서울시선관위는 선거 전날 총선넷 책임자 3명을 고발했고, 6월 16일 경찰과 검찰은 참여

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들의 집까지 압수 수색했어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긴 시간 끝에 2021년 11월, 대법원 선고로 최종 유죄가 결정되었고 총선넷 주요 집행책임자에게 벌금 200만 원, 150만 원 등 총 790만 원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만 5년의 시간 동안 법원도, 국회도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는 관심이 없었고 누구도 선거법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나서지 않았어요.

[경과 : 기계적인 선거법 해석이 만든 피해자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활동가들의 변호인들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어요. 그런데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해 재판해달라는 위헌 제청신청도 기각하고 말았죠.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 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

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 시기에 허용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근본적 문제를 지적했어요.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그 결과 처벌 여부가 선관위나 검·경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도 강조했죠.

[의미 : 선거사범 탄생의 주역, 선거법 독소조항 사라지다]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총선넷이 제기한 문제 조항 중, 제90조와 제9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제103조는 단순 위헌으로 결정했어요(2018헌바357, 2018헌바394).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을 입막음해 온 것은 물론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약해 수많은 ‘선거사범’ 탄생의 주역이었던 독소조항이 뒤늦게나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참여 : 유권자 표현의 자유, 공은 이제 국회로] 헌법재판소가 바로 효력이 정지되는 단순 위헌이 아니라 2023년 7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개정할 때까지는 법 적용이 계속되도록 결정한 것은 비판받을 지점입니다. 한편 총선넷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선거법 독소조항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장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은 한계로 남았어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임을 선언한 제90조와 제93조는 폐지하는 게 마땅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2022년 뒤늦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기기까지 솔한 ‘유권자 피해사례’가 있었어요.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규제 중심의 선거법 때문에 범법자가 되어야 했죠. 그동안 선관위와 검찰, 경찰, 국회, 법원은 모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무관심했고, 더 많은 참여와 표현을 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열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방치해왔습니다. 이제라도 현재의 결정에 부응하는 것이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 ⑭] 공론장으로 문제와 대안을 나누자

“더 많은 주제가 공론화되어 청년들의 삶의 문제와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길”

[시작 : ‘청년참여 공론장’에 대해 알고 있나요?] 청년으로 살아가며 어떤 이슈에 문제의식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변화를 위한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캠페인부터 정

책 활동까지 정말 다양한 움직임이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그중 청년들이 함께 모여 직접 목소리를 내고 함께 대안을 제안하는 '공론장'을 생각했습니다. 공론장이란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이슈에 관해 이야기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토의의 장입니다. 청년들이 모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연결고리가 되는 공론장. 빠띠와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경과 : 청년참여단부터 부산청년들까지]

1. 성남청년참여단 : 성남청년참여단은 30여 명의 성남시 거주 및 활동 청년이 지역 청년들을 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인 거버넌스예요. 참여단은 각자의 관심사, 경험을 기반으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지 논의하고 더 많은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공론장인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빠띠는 2020년 1기 참여단의 의제 발굴과 팀빌딩, 타운홀 미팅 기획으로 함께했습니다. 참여단은 먼저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서로의 주제를 확인하며 청년문화, 일자리, 근로복지, 기본소득 총 4가지의 의제와 팀을 구성했어요.

2. 청년기후긴급행동X빠띠 : 청년기후 긴급행동과 빠띠가 함께한 "서울시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정책제안"은 기후 위기가 시대의 과제를 넘어 긴급한 생존의 문

제가 된 가운데, 이번 보궐선거에 그 심각성과 대안을 제안하는 후보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어요. 청년기후긴급 행동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청년 활동가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책임', '도시에 서 실현하는 기후정책'이라는 주제로 참여한 청년들과 더 많은 경험, 생각을 나누고 토론을 통해 '탄소 배출', '기후 위기 적응'에 대한 해결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3. 부산청년들X빠띠 : 부산 청년들과 함께 연 "부산에서 나답게 살 수 없을까?" 공론장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문제로 시작해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열린 공론장이었어요. 먼저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할 이야기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 삶에서 맞닥뜨릴만한 질문을 사전 투표로 선정하며 참여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으고자 진행했어요. 이후 모인 공론장에서선 '지역 격차로 부산 청년이 겪는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지방 소멸과 이를 막기 위한 청년들의 성장 욕구 충족, 다양한 삶의 형태와 가치 생성 등을 이야기하며 공론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미 : 함께 만들어가는 공론장] 빠띠는 다양한 청년 주제에게 공론장을 제안하여 함께 만들어갑니다. 더 많은 주제

정치

가 공론화되어 청년들의 삶의 문제와 대안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고, 또 그렇게 모인 이야기들이 실제 우리의 삶을 바꾸길 기대하면서요. 또한 공론장을 진행하면서 빠띠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를 기반으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어젠다(agenda)를 다루고 그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제안했던 빠띠의 '열린 공론장 실험'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알게 해줬어요.

[참여 : 함께 바뀌 나가야 할 것들] 빠띠는 더 많은 청년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모두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다양한 활동을 툴킷(가이드)으로 제작해 공공재로 배포하고 있어요. 다양한 청년 거버넌스를 만들고 함께 정책 제안을 하는 방법, 공론장을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제안하는 방법 등 공론장을 열고 싶은 누구나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엔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가 많아요. 지역, 이슈, 조직별로 여러 어젠다가 우리 삶과 맞닿아있어요. 청년세대 또한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학교에서, 누군가는 동네, 직장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만날 때도 있고, 우리 일상에 와닿는 변화를 꿈꾸기도 해요. 모든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처음으로 공론장에 참여해 시민참여의 기대와 효과를 느끼거나, 공론장을 통해 나온 이야기들이 추후 정책화의 밑거름이 될 때, 혹은 실현할 수 있는 실험실의 형태로 진행될 때 공론장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곤 합니다.

CHAPTER
11

경제



[경제 ①] 시민사회가 일궈낸 경제정의, 시민사회가 띄운 여론 정부가 받아내다

“지하경제 종식과 부정부패 일소, 탈세 예방을 위하여”

[시작 : ‘금융실명제’에 대해 알고 있나요?] 금융실명제가 처음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1982년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1982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인척 관계인 장영자가 남편 이철희와 공모하여 청와대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벌인 사기 사건이에요. 이들은 정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재정난을 겪고 있었던 건설업체들에 자금조달을 약속해주고는, 대가로 조달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냈어요. 약 2년여 동안 7,111억 규모의 어음을 받아냈고 총 6,40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했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융실명제 실현이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였어요. 당시는 차명계좌를 통한 재계 및 정치권의 불법적 자금 조성, 경영권 상속, 주가 조작 등 만연했고 이 때문에, 어음 거래 등에서 사기, 불법적 거래 역시 다반사로 자행되던 시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6월 이경식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금융실명제 추진 방안을 은밀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죠. 정보가 미리 유출될 경우 자금 빼돌리기 시도 등으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한 조치였어요.

[금융실명제 도입되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금융실명제는 헌법 76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발동해 지하경제를 종식하고 정경유착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어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비실명계좌의 실명 확인 없는 인출을 금지’, ‘순 인출 3천만 원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며,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13일은 오후 2시부터 금융 기관의 업무를 시작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의미 : 시민사회 운동으로 변화의 물꼬를 트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출범 이후 50여 차례의 성명서와 10여 차례의 집회를 통해 지속해서 금융실명제 실시를 촉구했어요. 경실련은 전문성과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당시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한 데 받았던 쟁점을 성공적으로 공론화시켰죠. 1990년 1월 1일부터

터 1993년 8월 12일까지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제목 노출은 118건, 본문까지 합계하면 총 3,010건으로 당시 범사회적 관심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요.

[참여 : 지하경제 종식을 위해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금융실명제가 발효된 다음 날인 8월 13일부터 두 달간 실명 전환율이 97.4%에 이르렀고, 전환된 금액도 6조 2천379억 원에 달했어요. 그러나 1996년 대기업 도산 등으로 금융실명제 완화론이 부상하여 1997년 말 장기 채권과 외평채는 무기명 발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 '보완 조치'를 시행했죠. 결국 금융실명제 도입의 원칙이 무색해지면서 향후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의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뇌물 등의 부정부패와 탈세 등을 통해 지하경제가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라면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겠죠. 이번 기회에 '금융실명제'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경제 ②] 작은 권리를 위해 싸우다, 부당하게 낸 천 원 때문에

“작은 권리도 치열하게”

[시작 :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참여연대 작은 권리 찾기 운동본부는 2000년 3월 정부와 조계종,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적으로 통합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천은사는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천은사 매표소가 절 입구가 아닌 성삼재길 입구 도로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천은사에 방문하지 않고 성삼재 길을 오르는 등산객이나 자동차를 이용해 바로 노고단으로 향하려는 시민들까지도 통행을 위해 1천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했어요. 천은사를 관람하러 온 게 아니라며 입장료가 부당하다는 일부 시민들의 항의도 소용이 없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0년 5월 참여연대 작은 권리 찾기 운동본부는 문화재 관리법 제39조가 “관람료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방문 의사조차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취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2001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입장료를 발급받은 이상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죠. 참여연대는 즉각 항소하였고, 2002년 1월 2심 재판부는 천은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한 1천 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2002년 8월 대법원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참여연대가 최종 승소했죠.

[시민들의 관심과 직접행동이 이어지다]

참여연대의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이후에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대한산악연맹 회원들도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에 항의에 나섰고 종교투명성센터, 불교재가연대 등 종교시민단체들도 2013년 73명의 시민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천은사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죠. 2018년에는 여러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는 등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이어졌어요.

[의미 : 작은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과정]

참여연대는 소송과 별도로 환경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 국립공원 관리 사무의 전반적인 개선과 문화재 관람료 합동

징수의 폐지를 요구했어요. 일괄 징수된 입장료가 실제로 문화재 관리 비용에 우선 사용됐는지 등을 알 수 없다는 지출 명세의 불투명성 역시 문제가 됐죠. 참여연대의 문화재 관람료 공익소송은 종교계의 사안이라도 사회적 비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점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참여 :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합니까] 천은사와 같이 문화재 관람료를 일괄

강제 징수하던 사찰들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한 명의 피고에게 같은 피해를 본 원고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없다 보니 한 사람이 승소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일상에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 크기에 상관없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경제 ③]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응징하라”

[시작 : ‘통신 요금 인하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한국통신이 전파법에 따라 3개월마다 부과하는 3,000원의 휴대전화 전파사용료는 요금의 적법성과 성격, 징수 방식, 사용내역, 형평성 등에서 논란을 빚었어요. 참여연대는 전파사용료를 별도의 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은 헌법 75조의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위반이며,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 방법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파사용료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전파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참여연대는 1990년대 기본요금 환불을 요청하는 ‘씨티폰 가입자 권리 찾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씨티폰은 발신전용 전화로 공중전화에 설치된 기지국 200m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통화 성공률도 20%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의 불만이 컸어요. 기본요금을 계속 징수하면서도 기지국 관리를 소홀히 해온 한국통신은 1999년 4월 씨티폰 사업을 포기한다고 발표해요. 하지만 곧이어 8월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문제가 불거진 것이죠.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은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파사용료 자체가 사라지면서 취하되었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동통신 이용자는 1990년대 말 700~800만 명 수준에서 2001년 2,700만 명까지 늘었어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시행하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었고, 별도의 마케팅도 필요 없었죠. 그 사이 통신업자의 이익은 대폭 늘었으나, 비싼 통신 요금은 조금도 인하되지 않았어요. 이에 참여연대는 2001년 3월 높아진 소비자들의 불만을 대변하고자 ‘거품 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에 돌입했어요. 온오프라인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동통신 요금이 8.3% 인하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죠.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3사와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해 10월 이동통신 제조 3사, 통신 3사를 상대로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80여 명과 함께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

죠.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고 통신사들의 이익이 급증한 것에 대하여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어요. 각 통신사들의 요금제가 매우 유사하여 담합 소지가 있음을 신고했으며 선택 약정 할인율을 당초 12%에서 현재 25%로 상향될 수 있도록 끌어냈죠.

[의미 :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
을 지속해나가다] 참여연대의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회복 운동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동통신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통신 캠페인은 시민들의 ‘끈질긴’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캠페인을 통해 크고 작은 통신 요금 인하를 끌어내고, 전파사용료 부과 및 발신자 표시 유료화 처럼 부당한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어요. 또한 통신사들의 다양한 편법에 맞서기 위해 통신 요금 원가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진행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폭리의 부당함을 밝혀냈죠.

[참여 : 통신 요금 인하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
다] 국민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못지않은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피해는 광범위했지만, 개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모든 면에서 어려웠어요. 참여연대는 한 명이 소송을 하더라도 관련 피해

자 모두가 해당 판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어요. 또한 이동통신 재벌 3사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KT와 관련해서는 노동 탄압, 불법 비리·낙하산 경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석채 전 회장의 불법 혐의를 고발해 회장직 사퇴와 검찰 수사를 끌어냈어요. LG 유플러스가 대리점과 갑을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피해 대리점주 협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했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휴대전화가 일상 필수품이 된 만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해요. 세금 지원으로 빠르게 발전한 기술 산업인 만큼, 통신의 공공성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통신 요금 인하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경제 ④] 부도덕하고 과도한 이자 폭리, ‘이자제한법-대부업법’으로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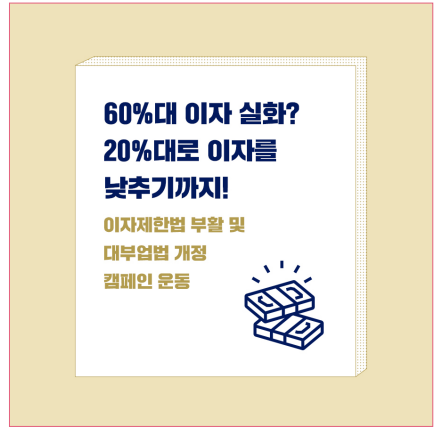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로 시민을 괴롭히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시작 : ‘이자제한법 부활 및 대부업법 개

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최고 이자 제한 제도는 모든 금전대차에서 25% 이하의 이자만 받게 하도록 규정하던 제도였어요. 오랜 시간 존속되었지만, IMF를 계기로 폐지되었고 이후 사채와 이자 폭리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하였죠.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생·시민단체들은 이자 제한법 부활과 IMF 사태 이후 제정된 대부업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 기관과 대부업계의 이자 폭리 근절을 지속해서 요구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나라 전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야기하고야 말았어요. IMF로 인해 금융자본이 폭주하게끔 하는 정책들이 도입됐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자제한법을 폐지해 고금리 정책을 유도한 것이었어요. 또한 정부와 대기업들의 신용카드 사용 권장 등을 계기로 신용불량자와 과중 채무자의 양산, 가계부채 급증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어요.

[경과 :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요구하다] 참여연대와 서민금융 보호단체들은 대부업 특혜 금리를 폐지해 일괄적으로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받도록 하고, 최고 금리 역시 여타 선진국처럼 20% 이하로 규정하도록 법률 개정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했어요. 이후에도 참



여연대는 서민 대상 대출이나 금융 상품 판매 등의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의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대부업의 관리·감독 강화 및 방송 광고 금지 등을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도 벌였어요.

[이자제한법의 부활] 2007년 이자제한법이 부활 제정되면서 대부업법 시행령 상 66%까지 보장되던 대부업체 특혜 및 폭리가 2009년에는 39%까지, 2013년에는 34.9%까지 낮아졌어요. 이후 2017년 10월 31일, 최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2월 8일부터 금융기관 대출 거래, 대부 업체와 개인 간 거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등 모든 금전대차에서 적용되는 이자 최고금리가 연 24%로 제한되었어요.

경제

[의미 : 서민금융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참여연대는 연대 기구인 금융소비자네트워크(구 서민금융 보호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이자 폭리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했어요. 또한 가계부채 해결에 있어 진정성이 결여된 정부의 태도와 대출한도를 늘려 부채로 개인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접근법을 비판하였죠.

[참여 : 과도한 이자 징수에 대한 인하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자제한법이 다시 시행되긴 했지만, 현행 24%도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참여연대와 민생·시민단체들은 최고 이자율이 반드시 20%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금리 시대임에도 과도하게 책정된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또한 폭리를 추구하는 행위는 사법의 엄정한 판결과 범사회적 캠페인 등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공공성이 큰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대출 이자를 책정해 반인권적 채권 추심 행위를 벌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개인이 폭리에 시달려 고통받는 일도 사라져야 하죠.

이번 기회에 '이자제한법 부활 및 대부업법 개정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경제 ⑤] 소액주주, 기업의 반칙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싸우다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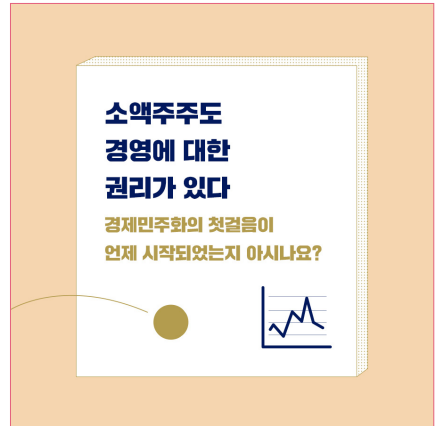
[시작 : ‘소액주주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소액주주운동은 1997년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그룹 부도 사태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한보그룹에 불법적으로 대출을 해주어 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제일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대표로 주주대표소송을 내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1997년 당시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5%의 지분을 확보해야 했어요. 제일은행 주식의 5%는 약 82만 주로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최초의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를 대신해서 주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시세 조작이나 분식회계, 허위 공시 등으로 손

해를 입은 선의의 투자자들의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물어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이 아니라 회사가 배상받는 일종의 공익 소송이라 할 수 있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액주주운동은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되게끔 대주주와 경영진을 감시하는 운동으로 참여연대의 '시민과 함께하는 재벌 개혁 운동' 차원에서 기획되었어요. 정부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재벌을 개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주주의 권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해낸 것이죠. 소액주주운동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언론들은 이를 '개미들의 반란'으로 보도하기도 했어요.

[기업 경영진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다] 1997년 제기한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참여연대가 모두 승소했어요.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제일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게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이후에도 참여연대 내 경제개혁연대는 제일은행을 포함하여 재벌그룹과 총수 일가 등을 주 대상으로 여러 건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어요. 그중 승소한 8건에



서 재판부가 피고들에게 배상을 명한 금액은 총 2천265억 원에 달했죠. 이후 참여연대는 2000년 10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청원했고, 만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죠.

[의미 :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꾸준한 노력]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와 주주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기업 경영진이 총수 일가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으로 경제개혁연대는 2006년 재벌기업들의 총수 일가와 계열사 간 거래를 분석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 기회 유용(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업 기회를 지배주주나 이사가 가로채는 행위) 실태를 폭로했어요. 그 결과 2011년 상법에 회사기회유용 금지 조항이 도입되고

경 제

2013년에는 공정거래법에도 관련 규제가 신설되었죠.

[참여 :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한 소액주주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1997년부터 삼성그룹의 불법 세습 문제를 폭로하고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활동을 벌여왔어요. 삼성전자는 1997년 3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재용 씨에게 저가에 넘겼는데, 참여연대는 이러한 방법이 세금 없이 회사 지분을 물려주기 위한 변칙 증여라고 판단했어요. 참여연대는 곧바로 법원에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과 대기업의 의식과 관행이 반드시 바뀌어야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너무나도 더더요. IMF 사태가 있었던 1997년 시작되어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소액주주운동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번 기회에 '소액주주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경제 ⑥] 연대하고 협력해서 만든 변화,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극복한다

“정치와 경제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작 :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고 있나요?] 국내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1980년대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빈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안 공동체 운동, 노동자 협동조합 등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서로 돕는 경제공동체로서 시작되었어요. 이후 1980년대 중반 한살림 등 생활협동조합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시민에게 성큼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고, 추후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형태로 확산하였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0년에는 자활공동체, 2007년에는 사회적 기업, 2010년에는 마을기업, 2012년에는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생협은 79만 명의 조합원 대상 8,589억 원의 매출(2013년 말)을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으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고용도 많이 늘어났죠.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

체 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20개가 사회적 경제 조례를 제정했어요.

[저소득층 결식아동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한다] 2005년 1월,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을 수령해 영양 상태가 허술한 도시락을 제공하는 영리단체가 고발되었어요. 일부 비영리단체 등도 시설이나 설비 등이 허술해 부실한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었죠. 같은 해 하반기 SK와 실업극복국민재단(현 함께일하는재단)은 아이들에게 영양 높고 맛있는, 또 위생적으로 생산되는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해 협업했어요.

[의미 : 주체적으로 삶을 살며 서로 돕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 데에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경제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노동 착취 등 자본주의가 가진 여러 문제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에요. 효율성, 경쟁력을 강조하는 기조에서 시장과 정부가 소홀했던 영역에 사회적 경제가 뛰어들면서 그 역할이 점점 커진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구성원들이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참여 : 사회적 경제 규모 경제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도 시장경제에 맞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어 나가려면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규모의 경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연대와 교류가 공동 플랫폼, 소셜 프랜차이즈, 중간 지원조직 등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해요. 또한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의 본질을 잃지 않고 지역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하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한국의 경제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여전히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국민의 행복도 역시 개선되지 않았죠. 약자의 삶을 돌보지 않은 채 단순하게 외형을 키우는 성장으로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어려워요. 이번 기회에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경제 ⑦]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래,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만든 변화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작 : ‘공정무역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00년 4월, 영국의 작은 마을

가스탕(Garstang) 주민들은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공정무역을 활성화한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란 확신으로 마트에서 공정무역 바나나를 사고, 지역 학교에 공정무역 제품이 들어간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했어요. 국내에서는 2002년 아름다운커피(아름다운재단의 공정무역 전문법인)가 최초로 공정무역 운동을 소개했어요. 당시만 해도 공정무역의 필요성과 목적, 정의와 원칙이 생소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가게 매장에 진열된 공정무역 수공예품에 대한 반응도 미미했죠.

[어떻게 정착시켜나갔을까] 초기 공정무역 운동은 공정무역 제품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고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 왔는지 등 상품의 생산과정에 관한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었어요. 공정무역의 과정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려 노력한 결과, 소수의 공정무역 지지자와 소비자가 저개발국 농민의 상황을 이해하게 됐죠. 상품의 생산과정이 많이 알려지고 신뢰가 쌓이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윤리적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내 단체들은 일상에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정무역 제품을 고민하던 중 2004년 두레생협연합이 마스코바도

설탕을, 2005년 한국YMCA전국연맹의 피스커피가 동티모르 커피를, 2006년 아름다운커피가 네팔 커피를 한국에 소개했어요. 이후 시민단체, 국제 개발, 환경 분야 단체의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으로 공정무역 활동도 확대돼 갔고, iCOOP 생협, 여성환경연대, 기아 대책이 공정무역 운동에 동참하면서 페어트레이드코리아, 행복한 나눔과 같은 공정무역 브랜드가 늘어났어요.

[캠페인에 참여하며 배우는 공정무역]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문단과 챗터에 공정무역이 소개되기 시작했고 2016년 기준으로 30,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공정무역 교실'을 통해 공정무역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었어요. 이 밖에도 iCOOP 생협의 초등학생 대상 교육을 통해 공정무역과 협동조합 등을 접한 시민들이 계속 늘어났죠.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전국 곳곳에서 공정무역 캠페인을 벌였어요. 공정무역 교육을 접한 젊은 세대는 공정무역 지지자가 되었고, 이러한 교육 효과에 공감한 지역활동가는 나아가 시민 강사로 활약하기도 했어요.

[의미 : 공정무역의 가치가 확산하다] 공정무역 운동의 핵심 가치이자 구심점은 작지만, 지속해서 공정무역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에요. 앞서 가스탕 마을의 공정무역 단체

와 지역 주민들 역시 더 많은 사람이 공정무역에 공감하고, 제품을 구매,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쳤어요. 공정무역만을 운동의 확산은 공정무역 지지자와 소비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자 캠페인이죠. 이웃 동네의 참여에 자극받는 등 공정무역마을 운동에 참여하는 지역은 점차 늘고 있어요.

[참여 : 공정무역 운동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공정무역이 확산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참여자의 행동을 끌어낼 필요가 있어요. 개개인의 의지뿐 아니라 단체행동을 요청할 수 있는 동인이 필요하죠. 공정무역이 대한민국에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요 사회 변화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끌어낼 지역 지도자와 오피니언 리더를 설득하고, 지역의 생산 이슈와 공정무역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며, 공정무역 제품의 품질과 다양화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공정무역으로 혜택을 받는 생산자를 계속 키워나가려면 마을 단위의 지지와 소비가 필요해요.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윤리적이고도 지속적인 거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공정무역을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죠. 이번 기회

에 ‘공정무역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경제 ⑧] 바른 먹거리의 사회 확산, 자연과 인간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생산자, 생명의 끈으로 이어진 지속가능한 삶을 향하여”

[시작 : ‘생협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76년 1월, 한국 유기농의 아버지라 불리는 풀무원 농장 원경선 원장은 ‘정농회(正農會)’를 조직하고 당시 오지였던 경기도 북부 양주에 4만 평의 터전을 마련하여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농업을 시도했어요. 정농회를 주축으로 농민들이 우리 농업과 농산물, 땅을 살리기 위한 고집스러운 활동을 펼친 결과 1980년대부터 유기농 경작 농민들은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농민단체, 신협,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이 도시-농촌 직거래를 추진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를 만나기 위한 여정] 소비자 시장을 위한 첫 돌파구를 연 것은 한살림이었어요. 원주지역의 친환경 농업 생산자

경제

들이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처음 열었죠. 도시민의 밥상이 농약, 화학비료, 저질 수입농산물 때문에 위태롭다고 여겨 농민 운동의 연장선에서 도시지역까지 진출한 것이예요. 대부분의 농업이 농약과 제초제를 쓰는 등 화학약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유기농 농업에 헌신해 온 사람들 덕분에 친환경 농업,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기 시작했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1980년대 후반 다수의 지역 단위 생협(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한살림은 1988년 한살림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소비자들 대상 생산지 방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뢰를 쌓는 활동을 펼쳐나갔어요. 그러나 작은 규모의 지역 단위 생협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의 물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웠어요. 특히 1997년 IMF 전후에 지역 단위 생협들의 경영 적자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죠. 오랜 고민 끝에 물류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방안이 세워졌고, 경인 지역의 비교적 규모가 큰 생협들이 모여 두레생협연합회를 설립하게 돼요.

[좋은 먹거리에 대한 열망과 함께 성장하다] 2000년대 들어서 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엄마 모임(현 먹거리 정의



변화사에 아카이브 X NPO
일러스트: 신주옥(LPW)

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식품 표시제 표기 운동,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운동 등을 펼치면서 소비자의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하였어요. 그 결과 생협은 친환경 먹거리를 지향하는 소비자 속으로 깊게 뿌리를 내렸죠. 아이쿱생협은 2016년 12월 기준, 전국 90개 회원조합과 193개의 자연드림 매장, 25만 명이 넘는 조합원, 직원 수 3,600여 명, 매출액 5500억 원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어요.

[의미 : 지속 가능한 자연과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만들어가다] 생협 운동은 자연과 밥상, 농부와 농업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유기·환경 농업, 우리나라 기후 및 풍토에 맞는 농업, 지역 생태 순환농업, 생물 다양성 존중, 토종종자 보급 등을 지향함으로써 우리 땅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 기후변화

경제

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참여 : 생협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농업 및 바른 먹을거리 운동은 우리나라 식탁 문화를 바꾸어왔으나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요. GMO로부터 안전한 식탁을 만들고, 토종 종자를 보급하여 지역 농업을 보다 견고히 자리 잡아나가야 해요. 또한 가까운 지역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된 농·축산물을 소비하는 동시에 이러한 친환경 먹을거리를 더욱 광범위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더 나은 먹거리를 지키는 과정은 우리와 다음 세대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 지역 농민의 수익을 제대로 보장해 우리 농업을 육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번 기회에 '생협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경제 ⑨] 사회적 경제 토양을 다지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산 공동체 운동, 저소득층 자활의 시작”

[시작 : ‘자활기업’에 대해 알고 있나요?]

자활(自活)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상호 협력을 통해 그 힘을 길러내는 것을 중요시해요. 이러한 가치를 담은 자활기업 역시 ‘1인 이상의 자활사업 참여자 및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을 뜻하죠. 자활활동가들은 단순히 개인의 탈빈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축하는 것에 노력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1990년부터 5년간은 사회참여에 관심 있는 종교인과 활동가들이 빈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산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1990년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설립한 ‘건설 일꾼 두레’가 있죠. 주로 집수리, 봉제, 단순 가공업 등으로 조직된 이 시기의 생산 공동체는, 훗날 자활사업이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어요. 1996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연계한다는 목적 아래 정부와 NGO가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고, 그 결과 5개의 지역자활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취약계층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게는 일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체화한 것이었죠. 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역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공동체를 설립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는 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나간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불과 5년 만에 전국 시·군·구에 모두 221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되었어요. 이 센터들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자활기업의 싹을 틔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오고 있어요. 자활사업의 양적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공동체 방식으로 자립·자활을 모색하는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의 설립 역시 크게 확대되었어요. 자활사업의 기반이 자리 잡혀 있었던 덕분에 사회적 기업 역시 단기간 내에 빠르게 육성될 수 있었죠.

[의미 :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에 힘을 싣다] 자활기업은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독립에 크게 기여했어요. 초기 65%를 웃돌던 수급자 비율은 2016년 32.9%까지 줄어들었죠. 대신 차상위계층 및 자활 특례자들을 포함해 저소득층의 고용 창출에 지속해서 힘쓰고 있어요.

또한 자활기업은 2005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사회적 경제의 토대를 구축해왔으며, 일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죠.

[참여 : 자활기업을 지원,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 방식으로 창업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아요. 또한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인력이 참여하고, 자본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해야 해요. 한편 일정 기간 보호된 시장을 통해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비율도 높이면 큰 도움이 되죠. 나아가서는 다양한 사업 시도가 가능해지도록 민간 사회적 금융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자원과 연계하여 자활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네트워킹과 연대를 통한 확장이 필요하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존재를 발휘하는 과정이에요. 이번 기회에 '자활기업'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경제 ⑩] 한 번쯤 고민해 본 ‘면접 정장’, 관심이 변화를 만들었다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멋질 권리가 있다”

[시작 : ‘정장 공유 옷장’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1년 11월 19일, ‘열린 옷장’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세상에 선을 보였어요. 당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후유증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모두가 힘겨운 상황이었죠. 특히 청년 구직자들은 소득 없이 지출만 있는 취업 과정이 장기화하면서 고통받고 있었죠. 열린 옷장 창업자들은 취업의 부담에 주눅 들고 축 처진 어깨에 조금이나마 힘과 응원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면접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평균 357,000원에 달하는 면접 정장 구매 비용이었어요. 취업 준비생의 91.9%가 이 면접 정장 장만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해결을 위해 관심을 두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희망제작소의 사회혁신 프로그램 <소셜 디자이너 스쿨 10기>가 종강하는 날 광고 카피라이터, 프로그래머, 기획자로 전혀 다른 일을 해온 3명의 직장인이 한 가지 목표로 뭉쳤어요. 2012년 1월, SNS에 “청년을 위한 정장 공유

옷장을 만든다면, 당신의 옷장 속 정장을 기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의 설문조사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설문조사를 게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나도 기증하겠다”는 답변들이 이어졌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상 기증받으려고 나섰지만,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설문에 응답했던 시민들의 정장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취지는 좋지만,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많았죠. 특히 정장 옷장이라면 옷을 보관할 공간도 아주 필요하고, 옷을 관리할 사람도 아주 필요하고, 세탁비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좌절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창업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일단 자신들의 옷장을 먼저 열었죠. 그렇게 모인 10여 벌의 정장으로 열린 옷장은 문을 열었어요.

[활동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다] 열린 옷장의 활동은 정장 공유 옷장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취준생 증명사진 촬영을 하는 ‘열린 사진관’, 변화가 필요한 청년을 위한 1:1 ‘자신감 컨설팅’, 청년 무료 법률상담, 대학생 비영리단체 ‘십시일밥’ 식권 기부활동 등으로 확장되었죠.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열린 옷장은 누구나 멋질 권리를 꿈꾸

고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 청년들 모두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는 자신감'을 누릴 수 있기를, 그 멋진 순간들이 모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도전할 힘을 갖기를, 나아가 멋진 삶을 열어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의미 :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공유 경제를 만들어간다] 열린 옷장이 문을 연 지 9년이 지났어요. 2018년 기준으로 열린 옷장에 동참한 개인 기증자의 수는 무려 5,000명이 넘어요. 옷과 함께 보내온 응원 편지의 수도 3,000장이 넘고 그사이 함께 한 기업도 80여 개나 되죠. 기증된 옷은 그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어요. 열린 옷장은 남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참여 :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정장 공유 옷장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 안양시, 군포시, 남양주시, 용인시, 고양시, 광주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청년들의 면접 정장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역 일자리 센터의 안내를 받고 열린 옷장을 이용하면 무료로 면접 정장을 입을 수 있죠. 취업생들의 면접 정장 고민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함으로써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과정이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하면 더 좋겠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면접과 결혼식처럼 중요한 자리, 옷을 갖춰 입고 싶지만 비싼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아요. 상황이 여의찮은 청년들에게 그 간극을 채워 시작을 응원하는 환경이 필요하죠. 이번 기회에 '정장 공유 옷장'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경제 ⑪] 행복한 물림 교복 은행, 오고 가는 교복 속에 지속되는 관계

“소비지향적 생활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

[시작 :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7년 IMF 직후 국가부도라는 큰 위기 앞에 YMCA 등대 생협 회원들이 모여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의논했어요. 그리고 소비지향적인 생활을 점검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활동을 결의했죠. 1998년 2월, 평촌 NC백화점(당시 뉴코아백화점) 앞 공터

에서 시작된 청소년 교복 물려주기 활동이 이후 안양Y녹색가게의 재사용, 재활용 운동으로 이어졌죠.

1998년 4월 평촌 농협의 2층 로비에 4평 정도 되는 작은 상설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생활용품을 가지고 나와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기증된 물건은 저렴하게 구매,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기증된 물품은 판매 가격의 40%를 '녹색 카드'에 적립하여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사용하도록 하죠. 하지만 이후 공간이 철수되면서 녹색가게는 YMCA 회관 4층 복도 한 칸, 관양동으로 이사한 건물의 주차장, 지하 복도로 옮겨갔어요. 열악한 조건에도 변화를 위한 몸짓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3년 중단되었던 교복 물려주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해 성남 교복은행을 견학한 이후, 2014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사업에 참여하여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추억을 위해 교복을 보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교복을 입고 오면 가격 할인해주는 이벤트 등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교복 기증이 줄었어요. 자원봉사자 확보도 쉽지 않았고, 상설매장의 불안정성으로 교복은행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갔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

하기 위해 시의원들과 의논한 끝에, 안양시에 공간 협력을 위한 간담회와 조사 활동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어요.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확산시키다]

2018년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집중 판매 기간 준비를 위해 각 학교를 돌며 교복을 모으고 있을 때, 4년간 교복 은행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선생님이 전근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학교장과의 만남을 주선해주었어요. 그 덕분에 매주 금요일 오후 3시~5시까지 관양중학교 2층 나눔방을 교복 은행 상설 공간으로 이용하게 되었죠.

[의미 :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이 지속해서 이어지다]

'행복한 물림-교복 은행'은 부모님들의 경제적 주머니도 생각하고, 지구환경도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이 다른 이에게 가서 꼭 필요한 그 무엇이 되는 '선물 창고'라고 할 수 있어요. 안양 '행복한 물림-교복 은행'은 교복 물려주기가 졸업식과 입학식 때에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기 중에도 교복 구입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고. 또한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물자 절약 및 재활용을 가능성을 고취하고 이를 통한 환경보전 의식을 높여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참여 : 교복 물려주기 운동은 앞으로도 지속됩니다] 교복 무상 지급, 학교 자체 내 교복 물려주기 운동 등이 이루어지면서 교복 은행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 중이에요. 이에 안양Y녹색가게 및 교복 은행에서 6년~15년 이상 장기근속한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했고 월 1회 신청한 학교로 찾아가는 교복 은행을 통해 학부모위원회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교복은 대부분 중고등학생이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복을 불편적으로, 차별 없이,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하죠. 이번 기회에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경제 ⑫] 공인인증서 없는 삶, 시민사회가 만들어 낸 값진 성과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으로부터의 해방, 시민사회가 움직한 덕분”

[시작 :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공인인증서 때문에 불편해 본 경험, 한국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거예요. 인증서를 의무로 요구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어느 순간부터 공인인증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골치덩어리가 됐죠. 그런데 이걸 중국인들도 겪었다고 해요. 2014년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고 출연한 코트가 중국에서 화제가 되어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천송이 코트를 주문하려는데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어 결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터넷 정책 개선을 위해] 2013년, 자유·개방·공유의 가치를 내걸고 인터넷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설립되었어요. 인터넷은 거의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정책 역시 거의 모든 시민이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가장 체감을 할 정책 개선 사례가 뭐가 있을지 고민해봤더니,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문제였어요. 오픈넷 이사를 맡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경과 :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2013년에는 이미 다양한 인증 방법이

온라인 금융거래 상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정책은 어떻게 폐기될 수 있었을까요?

변화사태 아카이브
NPO X 개인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
2020

시작

- 천송이 코드** <별에서 온 그대> 주인공의 코드 중국어 인가
↓
"공인인증서" 없이 중국 네티즌 주민 불가
↓
불편하고 제한적 전자상거래 환경
이용자가 체감 가능한 정책개선 필요
- 오픈넷**
 - 2013년: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설립
 - 다양한 인터넷 정책분야에서 합리적 공론장을 지향
 - 체감형 정책사례 발표 1호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문제"
- 감기창**
 - 오픈넷 이사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금융결제원 상대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민사소송 제기
 - 보안 기술의 시장 경쟁력 저하 문제 제기
 - ▶ 오픈넷 합류: 정책개선 운동 시작

성과

- 본질적 문제 해결**
 - 2013.5: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 발의
 - 공인인증서 도입 10년 경과
 - 다양한 인증방법 시장 도입
 - 정부가 인증방법을 강제할 필요성 희박
 - ☆ 상위 법률 개정
 - 정부의 역한운 공정한 시장경쟁 담보로 축소
 - 이용자의 다양한 인증방법 선택권 보장
- 다양한 노력**
 - 공청회 공동개최
 - ↳ 유튜브 생중계 / 영상 온라인 공유
 - 2013.6: 개정 법률안 지지 전화가 300여 명의 서명 공개 → 국회 통과에 큰 역할
 - 온라인 운동: 버튼 클릭 ⇒ 추후 트윗 발송
 - ☆ 2014.9.30: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안의 사회적 가치와 의의**
 -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운동 → 이용자 참여 공감 확대
 - 전문성에 기반한 NPO의 정책분야 활동 지평 확대

현황·과제

- 이용 환경의 변화**
 - 전자금융거래에 다양한 인증방법 도입
 - 공인인증서 없는 인터넷 은행
 - 간편결제 서비스 다양화
 - 전자금융거래법이 특정 인증방법 강제 X
⇒ 인터넷 이용 환경 극적 변화
-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 여전히 공인인증서 요구
 - 전자서명법 전면개정 필요
 - 2019년 개정 법률안 발의
 - 2020년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심의!
- 연대의 힘**
 - 시민사회 노력과 이용자들의 연대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문제 해결
 - 향후 불합리한 규제도 폭넓은 연대로 해결 가능

그래픽 서머리: 정진호

시장에 도입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정부가 전자금융거래에 특정 인증 방법을 강제할 필요가 줄어든 거죠. 오픈넷은 인증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2013년 5월, 이종걸 의원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요.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오픈넷은 법률안 발의 이후에도 개정안의 취지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공청회도 열고, 개정안 전문가 지지 서명도 받았어요. 자유와 개방, 공유를 주장하는 단체답게 해당 공청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

었으며 이후 녹화분을 온라인으로 공유했고, 버튼 클릭만으로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트윗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참신한 방식의 온라인 운동도 기획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14년 9월 30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사전에 통과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금융위원회는 특정 기술 및 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의미: NPO 활동의 지평을 넓히다] "정책 비판에는 능하지만 대안 제시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NPO가 그동안 받았던

경 제

지적이었어요. 실제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문제도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강제하고 있는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오픈넷은 상근 변호사와 법학 전공 이사진의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을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법률이 개정된 덕분에 인터넷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2019년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고, 해당 법률안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렇게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은 '폐지'됩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전자서명 시장에서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던 것이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이 남긴 발자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법 하나를 바꿨다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오픈넷의 이번 활동 사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와 공감을 쉬우면서도 폭발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인터넷 정책 개선 운동에 하나의 힌트를 던져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HAPTER
12

사회



[사회 ①] 지역상권 회복과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규제 도입이 이끄는 효과

“지역 경제 붕괴와 중소기업의 몰락을 막아라”

[시작 :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도입’에 대해 알고 있나요?] 대형마트가 과포화 상태에 이른 2007년 전후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 골목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유통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을 치고 들어와 지역 상권을 파괴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특히 지방 도시 상권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시장은 우리나라 유통과 소비의 중심으로 지역 경제의 거점 역할을 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소비생활의 안정에 기여했어요. 그런데 대형마트가 등장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통시장은 날로 그 규모가 축소되고 존폐 위기에 이르게 되었죠. 이후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등이 속수무책으로 사라져 갔고,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9년 5월 지역별로 대응해오던 전국 중소기업인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를 결성, 전국 단위의 대응 활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조직에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각종 중소기업인 단체는 물론 지역별 대책위, 참여자치 지역 운동연대, 지역경실련 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였죠.

[규제 장치를 마련하다] 2009년 10월 SSM 허가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였고,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응답한 113명 의원 중 103명의 찬성 의사를 받아냈어요. 주기적인 기자회견, 대규모 집회와 농성 등 캠페인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어요. 2010년 11월 전국 중소기업인들의 활발한 운동과 여론에 힘입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고,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 지역의 SSM 출점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12년 11월에는 지식경제부 장관, 대형마트 대표, 전국 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대형마트 출점 자체, 월 2회 의무휴업 등이 합의되었어요.

[의미 : 급격한 경제 변화에 시의적절한 화두를 던지다] 대형마트가 우리나라

에 처음 등장한 건 1993년 문을 연 이마트 서울 창동점이에요. 1995년 18개에 불과했던 대형마트는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의 변화에 힘입어 199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죠. 세계화를 외치던 김영삼 정부가 유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한 것도 큰 이유예요. 과거에는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면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후에는 시, 군, 구에 등록만 하면 개설할 수 있게 변화되었죠.

[참여 :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과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이후 전통시장 매출액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영업규제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매출액이 동시에 감소했다며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공멸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죠. 반면 중소상인 단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 이후 시장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며 규제가 효과적이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새로운 유통 서비스가 등장하고, 사람들의 생활 소비 형태가 변화에 감에 따라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역의 다양성을 만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지속해서 지역에서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상생을 위한 고민이 더욱이 필요하겠죠. 이번 기회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도입’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②] 모두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 무연고, 저소득층을 위한 장례

“장례의 목적을 찾아서, 애도 중심의 작은 장례를 위하여”

[시작 : ‘장례문화 개선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0년 만들어진 한겨레두레협동조합(한두레)은 사회문제를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에요.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으로, 첫 번째 사업인 장례 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죠. 2012년 12월 26일 상포계 나눔연대회의를 발족하고 활동 확산을 위해 ‘품앗이 마을 장례’ 주민 모임을 결성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자본으로 얼룩

진 상조시장의 폭리구조와 리베이트는 유가족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조합원에게 소박하고 품격 있는 맞춤형 장례를 설계하고, 직거래 공동구매를 통해 비용도 크게 절감했죠. 조합원은 안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고, 고비용화·대형화·독과점화되어가는 병원 장례식에서 벗어나 집이나 마을 공간을 활용한 '공동체적인 장례'를 지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마을공동체 안에서 초상 때 드는 비용을 함께 마련하고 슬픔을 나누는 계 모임의 형태로 시작되었어요. 이후 극도로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장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더 모이면서 2014년에는 민·관이 함께하는 '종로구 마을 장례지원단'을 발족하게 되었어요. 한두레가 지원하는 결연 장례 대상 어르신들의 삶을 구술 채록하여 책으로 엮고, 행복한 장수 사진 찍기 등 '웰다잉(well-dying)' 홍보가 이루어졌어요.

[공영 장례로 한 발짝 더 나아가다] 공영 장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돌아보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이에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이 완전히 외면되지 않도록

연고자에게 장례 상담 및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죠. 국민의 품격 있는 죽음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최소한의 추모 의례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장례문화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들여온 노력과 쌓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두레는 2018년 6월 1일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와 협약을 맺고 공영 장례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의미 : 장례문화에 변화를 만든다] 국가도 기업도 시장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장례 리베이트(뒷돈) 문제를 한두레는 시민의 힘으로, 협동의 힘으로 해결했어요. 직거래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장사 물품의 폭리구조를 과감하게 없앴어요. 또한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 생애 구술사 기록, 장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였어요. 한편 고 리영희 선생, 김근태 전 장관, 장준하 선생, 백남기 농민 등 민주와 평화, 평등과 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의 민주사회장도 치러왔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복원에 대한 고민을 현실화하고 마을 장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참여 : 장례문화 개선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장례문화는 불과 2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2006년 3월 13일 발표한 한국갤럽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에는 10명 가운데 7명 이상

이 집에서 장례를 치렀지만, 2005년에는 10명 가운데 8명이 이상이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죠. 장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뒷돈 거래 관행과 수의, 관 등에서 폭리를 취하는 유통 및 사업 구조예요. 고비용의 장례는 시설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에게는 물론 저소득층이나 무연고 사망자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어, 이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존엄한 죽음을 구현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극심하게 상업화된 상조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공동체 장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이번 기회에 '장례문화 개선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③]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아들, 소비자주권운동으로 해결한다

“안전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라”

[시작 : '소비자주권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에어백을 제조하는 다카타社は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에 에어백 분사제로 사용되던 테트라졸을 일종의 상업용 폭약 성분으로 대체하였어요. 국내에서는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17개 자동차 업체들 중 혼다, 도요타, BMW, 아우디, 재규어, 랜드로버 등 14개 수입차 업체들이 국토교통부에 자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진행했어요. 그러나 벤츠코리아와 한국지엠, 지엠 코리아는 리콜 요청을 외면한 채 16만 5,861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위협에 그대로 노출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다카타 에어백 문제는 2014년 10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에어백 파편으로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처음 알려졌어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리콜 이행 권고를 내렸고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대 이상의 차량이 리콜되었죠. 세계 2위의 에어백 제조사인 다카타社は 결국 '죽음의 에어백'이라는 논란을 이기지 못하고 일본과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결함 사실을 공개하거나, 시정 조치하지 않는 자동차 제작자와 부품 제작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 안전을 관리하는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다카타 에어백의 결함과 리콜 사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에어백 결함을 은폐한 혐의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벌금을 부과한 사실과 이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 역시 인지하고 있었지만,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보인 미온적인 태도를 좌시할 수 없었어요. 이에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여 강제 리콜을 압박하고, 나아가 수입 3사의 자진 리콜을 유도했어요. 그 결과 2017년 12월 벤츠 코리아는 수입 판매한 다카타 에어백 장착 자동차의 자발적인 리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어요. 이후 2019년 현재 한국지엠, 한국toyota자동차, 벤츠 코리아 3개 사가 수입 또는 판매한 16개 차종 19만 5,608대의 다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 리콜을 끌어냈죠.

[의미 :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다] 다카타 에어백 사례는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와 자동차 이용자에게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련 제도는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 관리 감독기관 역시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적극적으로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소비자주권운동은 소극적이었던 국토교통부의 태도를 문제제시하고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참여 : 소비자주권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디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피해 상황을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책임지게끔 하는 사후 보완 조치가 미흡한 편이에요. 다카타 에어백 사태에서 보인 것처럼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필요하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자동차 에어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 경제적 이윤을 따져 조치해서는 안 되겠죠. 생산자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

전한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결함 관련 사실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알려주어야 해요. 이번 기회에 '소비자주권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④] 태안을 살려낸 빛나는 시민정신, 이제는 책임 규명에도 관심을

시민들이 수습한 재앙, 책임규명과 보상은 원인 제공자의 몫

[시작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 사고 피해 복구 활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7년 12월 7일 이른 아침 삼성중공업 소속 11,828톤급 크레인 부선 삼성 1호와 홍콩(중국) 선적 146,848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현대오일뱅크 용선)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근방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국내 최대의 유류 오염 사고로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을 중심으로 방제 활동 시민참여단이 빠르게 조직되었어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를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시민 간사를

모집하였고, 봉사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죠.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07년 12월 8일부터 2008년 5월 말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137만여 명으로 하루 평균 7,821명의 자원봉사자가 태안으로 몰려든 셈이에요.

[경과 : 그 뒤로 피해는 어떻게 복구되었을까요?] 환경단체들은 야생동물 구조와 기름유출로 인한 서해안의 오염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유화제 살포와 고온·고압 처리 작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어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법률 대책단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대응도 이어나갔어요. 2008년 1월 21일 검찰은 악천후 속에서도 무리하게 운항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 모두가 신속히 대처하지 않은 점을 사고가 커진 원인으로 판정, 발표했어요.

[경제적 피해보상을 끌어내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받았던 유조선 선장 및 당직 항해사, 법인에 대해 2008년 12월 10일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2009년 4월 23일에는 예인선과 유조선 양측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각각 3천만 원씩의 벌금이 부과되었죠. 2013년 11월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삼성중공업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3,600억 원을 보상하기로 했어요. 출연금 3,600억 원 중 삼성중공업이 이미 지급한 500억 원을 뺀 2,900억 원은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억 원은 향후 2년간 지역 공헌 사업에 쓰기로 하였어요.

[의미 : 시민의식으로 기름을 닦아내다]

자원봉사자들의 방제 작업 참여로 사고 직후 절망 상태에 놓여 있었던 연안 생태계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정화되었어요. 하나의 재난에 이처럼 대규모의 자원봉사자가 몰려든 것 자체가 매우 경이로운 일이었는데 방제 성과까지 훌륭했던 것이죠. 이런 연유로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의 기름 제거 작업을 ‘태안의 기적’, ‘민족의 저력’ 등으로 평가하게 되었어요.

[참여 : 피해는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잘못에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는 소홀히 다뤄지고, 어민들의 생계 문제와 보상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어요. 피해의 상처가 배상금으로 모두 해결될 수는 없어요. 태안 앞바다에서 눈에 보이는 기름 흔적은 거의 사라졌지만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바닷속은 아직도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시점에 머물러있어요. 미역이나 다시마가 바위에 붙어야 하는데 기름 성분 때문에 붙지를 않고 전복의 종패를 넣어도 상당수가 폐사하고 있

다고 호소하고 있죠. 또한 여름이면 타르덩어리들이 계속해서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겁게 변한 바다와 이 피해를 오롯이 겪게 될 주민들을 위해 시민들은 2007년 태안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공적 유대가 빛났던 것에 비해 원인 제공자들의 책임 규명과 배상 요구는 순탄치 않았어요. 이번 기회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 복구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학교 앞 화상경마장이 웬 말이나!

“아이들의 생활 공간을 침범하는 유해환경 조성을 불허하라!”

[시작 : ‘학교 앞 화상 경마장 반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서울 용산 주민이었던 정방 씨는 딸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4월, 성심여중고 정문에 걸린 “학교 앞 화상 경마장 절대 반대”라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어요. 며칠 후 참석한 대책 회의에서 마사희가 자신

들 소유의 지하 7층 지상 18층 건물 전체를 화상 경마장으로 만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주민 동의라는 과정 없이 이런 행정절차가 가능하다는 것에 분노했던 정방 씨는 건설까지 5개월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2013년 5월 1일 '용산 화상 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시켰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부모, 주민, 교사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용산 화상 경마장 입점 저지 서명'을 받아 구청에 항의 방문도 하고 건설 예정지 앞에서 도박의 폐해를 알리는 1인 시위도 이어 나갔어요. 교실에서 보이는 위치에 거대한 화상 경마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누구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믿었기에 용기를 내서 알리기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나섰죠. 학교와 마을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17만 명의 서명을 모았고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도 주민 편에 섰어요.

[변화를 만들어내다] 대책위는 좌절하지 않고 매일 노숙 농성과 집회, 기도회를 이어 나갔어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기사를 쓰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방

송에도 출연했죠. 2016년 광화문에서 함께 촛불을 들고 변화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데에도 힘썼는데, 국민의 힘으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하나씩 바뀌어 나가자 마사회 역시 주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화상 경마장 반대 운동 1천705일, 천막 노숙 농성 1천440일 만인 2018년 12월 31일, 마침내 용산에서 화상 경마장은 추방되었어요.

[의미 : 학교 주변 유해시설 추방에 대한 목소리를 내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은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학교 주변 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다양하게 활동을 펼쳤고, 결국 추방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어요. 국민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탄 내는 도박 산업을 미래 세대의 교육 환경에 노출하는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사점을 준 사례였죠. 대전 화상 경마장 주변 주민 역시 여러 피해를 호소하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마사회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차질을 겪고 있어요.

[참여 : 화상 경마장 반대 운동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6년에서 2019년 9월까지 전국 30개 화상 경마장에서 발생한 장내 폭행과 소란 사건이 총 625건이라고 해요. '도박 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연구'에 따르면 2009년 도박중독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78조이며, 2050년에는 약 36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요.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2천6백만 원을 웃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용산 주민의 반대를 겪은 이후 마사회는 화상 경마장이 학교에서 최소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그러나 시민들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학교로부터의 거리가 아닌, 아이들의 생활 환경에 유해 환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해요. 이번 기회에 ‘학교 앞 화상 경마장 반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⑥] 막힘없이 안전하게 걸을 권리, 시민의 힘으로 보행권을 회복하다

“보행권은 시민들이 편하게 거리를 오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시작 : ‘보행권 회복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3년 창립한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은 ‘사람과 자동차의 조화’,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교통’을 지향하며 ‘보행권’이라는 말

을 처음으로 제안했어요. 1998년까지만 해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세종대로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없었고, 많은 사람이 길을 건너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지하도를 이용하거나 몇 백 미터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차량 교통을 우선시하던 당시 법에서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5호선 개통으로 지하도가 생긴 후 있던 횡단보도가 사라진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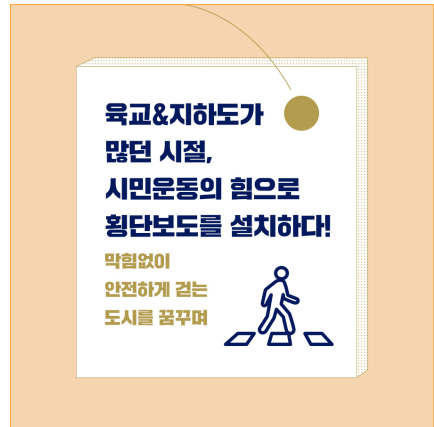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992년 당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1만402명이었는데 이 중 50%가 보행자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였어요. 서울시민 82%는 환경, 주택, 교육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우선하여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뽑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통 행정 담당자들은 소통 위주의 교통 정책만 쏟아내 도로를 넓히기 위해 보도를 줄이고,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고 주택가 골목길을 주차장화하는 등의 행정을 펼치며 모든 교통정책이 차량 소통 위주로 바뀌면서 차를 타지 않고 걷는 사람의 권리는 차를 탄 운전자의 권리에 의해 무시되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도로를 건널 때 이용하는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중 노약자와 장애인이 비교

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없어 불편한 시절이 있었어요. 녹색교통운동은 1997년 시청 주변의 횡단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등 조사를 시작하고 결과를 발표하여 도심에서조차도 시민의 보행권,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알렸어요. 이후 1998년 본격적으로 횡단보도 설치 운동이 시작되었죠.

[횡단보도, 복원되다] 1998년 12월, 서울시는 녹색교통운동이 요구한 10개 지점 가운데 광화문과 신촌 등 6개 지점을 횡단보도 설치 가능 지역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1999년 상반기 중에 횡단보도를 복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어요. 2001년에는 안국동 로터리 육교가 철거되는 대신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어요. 마침내 2005년 광화문의 횡단보도가 동서 방향으로 복원되어 네 방향으로 편리하게 사람들이 거리를 거닐 수 있게 되었죠.

[의미 : 보행권 보장 환경을 마련하다] 보행권 회복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운동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어요. 광화문 네거리에 버스 정류소가 설치되면서 단순히 길을 건너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버스를 편리하게 환승하고 거리를 건널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거리를 오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를 보장받는 과정을 만들게 되었어요.

[참여 : 교통약자를 위해 보행권 회복을 위한 운동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고령화 추세의 증가로 1990년대보다 교통 약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횡단보도가 20여 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에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시민들, 걸음이 서투른 아이들, 걸음이 느린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권리, 거리에서 '보행권'의 최소한의 요건은 횡단보도예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횡단보도는 그 도시의 정책이 보행자 중심인지, 자동차 중심인지를 보여주는 대표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횡단보도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절

사회

대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보행에서 불편함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 기회에 '보행권 회복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⑦] 대학교 입학금을 폐지하라, 평범한 대학생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

“대학 입학금, 과도하고 부당하며 사용 절차가 불명확한”

[시작 :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6년 가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 대학생 1만여 명의 소장이 각 주요 사립대학들의 이름이 적힌 박스에 담겨 차곡차곡 쌓였어요. 전국 15개 대학에서 대학생 9,782명이 각 대학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부당하고 과도한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단체소송을 제기했어요. 1만여 명의 청년·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공익 소송에 나선 것은 대학생들이 처한 문제를 더 이상 기성세대에게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목소리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2012년 국가장

학금 제도의 도입으로 '연 대학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의 급한 불은 잠시 잠재웠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특히 최대 100만 원이 넘는 입학금, 등록금 부담에 육박하는 졸업 유예 등록금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대학생들과 학부모,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대학들은 산정 근거나 사용처 등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묻지마 입학금'을 받고 있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값 등록금 국민운동본부와 청년참여연대 등 청년·대학생 단체들은 2015년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대학 입학금과 졸업 유예등록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대학 입학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어요. 청년참여연대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입학금 상위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금 규모와 산정 근거, 지출 명세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어요. 각 대학의 입학금은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 천차만별이었고 입학금을 등록금 회계와 합쳐서 쓰다 보니 사용처가 불투명했죠.

[공론화를 통해 변화의 목소리를 모으다] 새 학기를 맞은 2016년 9월, 전국의 청년·대학생·학부모들이 모여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

동)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입학금 폐지 운동에 나섰어요. 공동행동은 이후 교육부 장관에게 입학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입학금은 대학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한 이익 제공 행위”라며 신고하기도 했어요. 또한 국회에서 입학금 폐지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입학금 폐지를 위한 대학생 8,510명의 서명 전달, 입학금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등을 이어 나갔어요.

[2022년,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입학금 폐지를 포함했어요.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여 단계별 입학금 폐지 방안을 검토했고, 입학금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입학금 중 5.9%만 입학 실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죠. 청년·대학생 단체들은 입학금 폐지를 반대하는 사립대 총장협의회를 규탄하는 피케팅,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2017년 11월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합의를 끌어냈어요.

[의미 : 청년과 시민사회, 변화의 목소리를 함께 내다] 2016년 9월 입학금 폐지를 위한 운동 본부가 꾸려진 지 불과 1년 만에 대학 입학금 폐지라는 성과를 거두

게 된 것은 청년·대학생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입학금 폐지로 힘을 얻은 각 대학 총학생회들은 ‘전국대학 총학생회네트워크’를 구성해 대학생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청년참여연대와 반값 등록금 국민운동본부도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어요.

[참여 : 교육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대학 등록금 연 1천만 원 시대’는 이어지고 있어요.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높은 소득 기준과 성적 기준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이 절반에 달하죠. 또한 학령인구가 줄면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재정, 교육 환경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학벌을 둘러싼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평등 역시 오히려 더욱 고착되어가고 있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누구나 배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학습 과정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양질의 교육을 위해 투명하게 쓰여야 하겠죠. 이번 기회에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⑧]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점의 전환

“50년도 넘게 억압됐던 시민들의 평화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시작 : ‘집회 및 시위 보장을 위한 시민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광우병 대책 위 활동가들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후 형사 재판의 근거가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2008년 9월 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어요. 또한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의견 표명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전체를 둘러싸 광장의 통행과 이용을 원천 봉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를 통해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모두 극도로 탄압했어요. 정부의 필요에 의한 11개 옥내 집회만 허용하는 임시 조치법을 거쳐 1962년 12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정부 비판 세력이 결집하지 못하도록 집회 시위에 대

한 규정을 상세히 제한해두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시간에 대한 규정이었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9년 당시 서울광장 사용조례는 광장의 사용을 문화행사로 제한하고 그마저도 자의적인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었던 탓에 노무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는 광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죠. 당시 서울시의회는 집권 여당 한나라당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을 통한 개정안 발의가 어려웠기에 주민 발의를 준비해야 했어요. 2009년 6월 참여연대는 서울광장을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을 발족했어요.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다]

광장조례 개정안을 무시하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 등을 상대로 한 낙선 운동과 릴레이 언론 기고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사람이 힘썼어요. 이렇게 법정투쟁, 시민 캠페인, 낙선 운동까지 이어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은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10년 8월 서울광장조례 개정안도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연이어 2011년 6월에는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한 행위가

이제 국회 100m 앞에서도 집회가능!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까지의 여정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내려졌어요.

[의미 : 민주주의 공간을 다시 확보하다]

2013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국회 앞에서 행진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에 시민은 더 넓은 ‘광장’을 누리게 되었어요. 국무총리공관과 법원 100미터 이내 절대적 집회 금지도 차례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죠. 공동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모인 집회임에도 청와대 1km 안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오랜 역사에 비추어보면 더욱 의미미한 변화라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민주주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 끝에 가능했던 결과이죠.

[참여 : 집회 및 시위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법 37조 2항

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주장 또한 이런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공권력을 정확히 행사해달라는 것이죠. 현행 집시법은 1960년대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최대한 억압하기 위한 기본 관점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회는 앞으로도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해 나가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은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앞으로는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집회를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권력 행사의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집회 및 시위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⑨] 헬조선의 근원을 찾아서, 기록과 질문이 만들 더 나은 미래

“우리 삶의 토대를 흔들었던 역사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잘 기억해내야 한다”

[시작 :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 알고 있나요?]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에 남긴 커다란 상흔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금 모으기 운동’으로만 기억되고 있어요.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는 외환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과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기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쯤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작되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외환위기 이후 20년을 맞이하는 2017년부터 외환위기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으기 시작했어요. 기업, 노동계, 연구기관, 언론 보도 등 웹상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도 모았죠. 기록을 모으는 중에 외환위기의 기록을 먼저 살펴보고 연구했던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의 저자 지주형 교수가 기초자료들을 기증하기도 했어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다] 광범위하게 모은 기록들이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히기 위해서는 시민과 연구자가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이를 위해 전자파일을 만들어 목록화하고, 시기별, 주제별, 키워드별로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웹 아카이브를 구축했어요. 또한 ‘시민의 아카이브’로서 난해한 경제용어를 모르더라도 외환위기를 다층적인 시점에서 생각해보고 토론하게 해 줄 콘텐츠가 꼭 필요했어요.

[의미 : 수많은 사람의 시간을 기록하다]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는 우리 삶의 토대를 흔들었던 과거의 역사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기억하려는 시도이며, 더 나은 결정을 위해 더 정확히 따지고 개입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IMF 시기를 지나오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내렸던 해결방안 속 ‘희생’된 가치들과 사람들을 기억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는 극심한 불황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대응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죠. 이를 위해 아카이브는 IMF 구제금융 이후를 살아온 평범한 시민들의 기록을 모으고 있어요.

[참여 : 가려진 기록을 발굴하는 아카이브 구축은 계속됩니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현재도 비밀 기록을 해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IMF에서 한국 외환위기 자료의 공개를 받아내는 것도, 한국 경제 관료의 서류장을 여는 것도 모두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한국 정부가 처음 구제금융을 논의한 한국은행의 보고서, 협상 당시 재정경제원에서 생산한 60철 분량의 공문 등 많은 주요 기록들이 보존되지 않거나 비공개되어 아직도 시민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요. 더 많은 기록이 공유될 수 있도록 비밀해제 요청과 수집 작업이 주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외환위기 시절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사람들도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와 시각을 접할 필요가 있어요. IMF 시대의 의미를 되짚고 지금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해야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죠. 이번 기회에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구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⑩] 진실을 말하는 자를 지켜라, 제보자 보호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

“공익제보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진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시작 : ‘공익제보자 보호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부터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내부고발자 보호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 역시 전무했어요. 하지만 부패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데 내부고발자의 제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내부비리 고발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공익제보자 보호와 사회적 지원에 나섰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감사원의 감사비리를 제보했다가 파면된 감사원 주사 현준희 씨 사건은 제보자 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어요. 현준희 감사원 주사는 1996년 4월, 효산그룹 콘도 허가 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다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양심선언 했어요. 현준희 씨의 주장대로 감사원이 거대 권력형 비리를 목살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보복이었어요. 감사원은 현준희 씨를 명예훼손 및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이유로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부 비리 고발자 지원센터는 법 밖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제보자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었지만, 제도적 기반 없이 제보자를 보호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1994년 10월 29일 참여연대는 첫 번째 입법청원으로 여야 국회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내부 비리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으나 공익제보자 보호의 필요성과 기준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죠. 이후 법안 내용은 1996년 출범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의 종합적 부패방지법안으로 이어져 2001년 입법되었어요.

[공익제보자 보호를 제도로 이어 나간다] 부패 방지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가 생겼어요.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와 관련하여서는 공직자의 비밀 준수 의무를 면제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꾸준히 제시했죠. 2011년 3월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됐어요.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대상이었던 부패방지법에 민간분야의 공익 신고를 다루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더해지면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틀은 한층 모양새를 갖추었어요.

[의미 : 공익제보자 보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산시키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2015년 7월, 합리적 의식에 따른 신고 인정,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양벌규정 도입 등 참여연대의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2017년 1월에는 오랫동안 공익제보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온 사립학교를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죠. 그 결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할 것 없이 신고자를 보호하며 보상하는 제도가 구비되었고, 시민사회에서도 참여연대 공익제보 지원센터, 호루라기 재단, 내부제보 실천운동의 활동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참여 : 공익제보자 보호 운동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2016년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부패사건 중 내부 신고에 의해 혐의가 적발된 사건은 74.2%로 전체 혐의 적발률보다 약 3% 높아요. 내부 신고로 인해 추징 또는 환수 대상이 된 금액 역시 6,250억여 원으로 전체 부패사건 추징 환수 대상액 7,610억여 원의 82.1%에 달하죠. 내부 신고는 그만큼 부패 적발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공익제보자를 대하는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아요.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막상 자신의 속한 조직에서 그런 일이 발생

했을 때는 공익제보자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공익제보로 인한 조직의 발전이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공익제보가 두렵지 않고, 공익제보자가 존중받는 사회는 결국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⑪] 베일에 싸인 그곳 법원, 판결문을 함께 읽으며 견제하자

“판결문의 성역화를 해체하라!”

**[시작 : ‘판결문 공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 실태를 조사해 2006년 1월 4일 ‘사법 감시’ 제27호로 펴냈어요. 당시 법원이 운영 중이었던 공식적인 판례 검색 시스템에서 고위급 판사들의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고 있지 않았죠. 이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고위 법관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였어요. 또한 법원도서관이

발행하는 ‘대법원 판례 해설’ 속 중요 대법원판결 상당수도 접근할 수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이후 판결문 공개 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1년 사법제도 개혁위원회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예요. 사법개혁 여론이 들끓던 2010년 3월, 인터넷을 통한 확정 판결문의 즉각 공개가 여상규 의원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이듬해 기존 법안에 수정·반영되었죠. 판결문 인터넷 열람제도가 실제로 시행된 것은 시스템 구축이 마려던 2013년이예요. 하지만 시스템 자체의 한계와 법원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판결문 공개 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판결문의 공개 상황 못잖게, 판결문 자체도 문제가 많았어요. 삼성의 전환사채가 절차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효로 할 수 없다거나 판결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주관적 해석으로 광화문 앞 1인 시위를 형사 처벌한 판결 등 시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심한 판례들이 있었죠. 참여연대가 ‘광장에 나온 판결’을 모토로 ‘판결 비평’과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사업을 전개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민의 시각에서 판결문을 파헤치고, 제대로 된 비평을 시민들과 공유하

려던 것이죠.

[판결문 읽기 모임,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직접 판결문을 읽는다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강좌의 형태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판결문을 날 것 그대로 함께 읽어보는 강좌를 기획했어요. ‘판결문 읽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10월 14일 첫 강좌가 열렸고, 고리 원자력 인근 암 발병 주민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 판결,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대형할인점 영업 제한 적법 판결 등을 함께 읽었어요. 2018년 후속으로 기획된 ‘내 생애 첫 사법 감시’ 판결문 함께 읽기 강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판결문을 청구해볼 수 있도록 판결문 인터넷 열람제도 및 사본 신청 제도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죠.

[의미 : 법원 및 판결문의 성역화를 사라지도록 물꼬를 트다] 사회적으로 법원 및 판결문의 성역화가 크게 사라진 것도 눈에 띄게 나아진 지점이에요. 국정 농단 사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늘면서, 언론이 전해주는 것만이 아닌 판결문 원문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증가했어요. 판결문 공개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이뤄졌고, 법원의 판결이 국민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제는 자

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참여 : 지금도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결문 공개 제도의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대법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건번호나 당사자 실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형사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취지로 규칙을 변경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은 열람제도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수수료를 일괄 적용했다는 한계가 있죠. 공공 문서를 열람하는 데 돈을 내는 것 자체도 불합리하지만, 그 수수료를 인터넷상에서 결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법관들이 늘 국민을 염두에 두고 상식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판결문은 더욱더 널리 공개되어야 하고, 더욱더 쉬운 언어로 쓰여야 하며, 더욱더 많은 시민에게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해요. 이번 기회에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과 판결 비평 공론화 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⑫]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시민의 힘으로 권력의 역사를 저지하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막는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

[시작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어요. 국정화 발표 직후, 서울대 소속 382명의 역사학과 교수들이 국정 교과서 집필 불참을 선언하며 반대를 표명하였어요. 이후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70여 개 대학 사학계 교수들이 국정화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는 등 국정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어요. 광주, 전남 등의 시민단체, 교육계는 국정화에 대해 더욱더 거세게 반발하였고 479개의 시민단체 등도 목소리를 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교육부는 기존의 역사 교과서들이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지난 2014년 교과서 8종의 서술 내용 2,250건을 수정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표한 지 1년 9개월 만에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이예요. 하지만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그 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합격시킨 주체 역시 교육부라는 점에

서 모순적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왜곡하여 이용하려 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저지 운동은 이미 2011년부터 지속되어왔어요. 2011년 11월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운동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가 결성되었어요. 2013년 9월에 결성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는 교학사가 출판한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 채택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였어요.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한 확산] 학계(역사교육연대, 학회, 연구소 등 50여 개 학술단체), 교사단체(전교조, 전국 역사 교사 모임 등), 학부모 모임, 시민사회(‘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흥사단, 평화나비 등), 정치권(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시도교육감협의회(서울시교육청,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 등) 등 여러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어요. 학계의 경우 한국사뿐만 아니라 서양사학과와 동양사학회 학회들도 참여하여 국정화 반대 운동 과정에 참여한 단체가 2015년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증가했죠.

[의미 : 한마음으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다]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을 통해서 보수적인 국민 담론을 진보 진영으로 견인한 것은 역사학계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진영의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죠. 2015년 10월 13일 JTBC 조사 당시 국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은 각각 47.6%와 44.7%였지만 이후 반대 운동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면서 2016년 11월 23일 CBS 조사에서 국정화 찬성 비율은 19.9%에 불과하지만 반대가 60.4%로 크게 역전되었어요.

[참여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 너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면 실시는 저지되었지만,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국정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지 않도록 '국정화 금지법'을 통과 시켜야 하고, 교육과정을 정권의 이해에 따라 수시로 개정할 수 없도록 12년 교육과정 주기를 고려한 장기적 개정 방침으로 전환해야 하죠. 나아가 역사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나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역사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국가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역사교육과

정에 개입한다면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이 훼손돼요. 또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지역과 계층 간 사회적 갈등도 심화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⑬] 정부에게 기업의 책임을 묻다, 한국 NCP의 해당 운영을 막아라

“한국 NCP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시작 : '한국 NCP 개혁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는 흔히 NCP로 통칭해요. NCP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OECD의 기업 책임 정책을 홍보하는 일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진정을 처리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2000년 OECD 가입국의 NCP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한국 NCP가 설립되었지만, 해외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들이 강압적인 노무관리를 일삼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현지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 등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

지 못했어요.

[필스전 노조 탄압 사건] 2005년과 2006년 사이 필리핀 소재 의류기업 '필스전(Phils Jeon)'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 벌인 파업에서 경찰과 용역이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은 한국 NCP의 무책임한 운영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예요. 필스전 공장 앞에서 농성을 지속하던 두 명의 여성 노조원이 괴한들에 의해 납치당해 길가에 버려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죠.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은 필스전 노조를 한국에 초청하여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NCP에 해당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필스전 사안에 대해 한국 NCP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0월 한국 NCP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하였고, 2013년 9월 한국 NCP는 새로운 운영규정을 발표했어요. 2014년 1월 첫 공식 웹사이트가 문을 열고 개선의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되었어요. 한국 NCP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임용돼야 한다

는 요구였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단체들은 2014년 10월 '한국 NCP 개혁을 위한 모임(이하 개혁모임)'을 발족하게 되었어요.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개혁모임은 2015년 7월 전순옥 국회의원과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개혁모임은 한국 NCP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민간위원을 제대로 선임하라고 요구했지만 친기업 진영의 노동법 교수가 선임되거나, 중재법 전문 변호사가 선임되는 일이 이어졌죠. 한국 NCP 개혁의 당위성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에 설득하는 작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되었어요. 그 결과, 2018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시금 한국 NCP의 운영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리게 돼요. 개혁모임은 NCP 민간위원을 선출하는 데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거치고 투명한 절차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어요.

[의미 :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다] 다국적 기업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인 한국 NCP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과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기 위해 존재해요. 2011년 UN이 마련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울 국가적 의무가 명시 되었어요.

[참여 : 한국 NCP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 NCP는 2000년 설립 이래로, 접수된 약 25건이 넘는 사안에 대해 한 번도 조정 절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2016년 8월, 2015년 7월과 8월에 진정된 ‘한국 하이디스’와 ‘아사히 글라스’ 건에 대해 최초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한국 NCP는 양 기업의 노사가 만나는 자리만을 주선했을 뿐,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사안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소극적으로 임했죠. 반면 외국 NCP의 경우 조정 절차가 긍정적으로 진전되지 않은 경우 절차상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수많은 한국 기업들과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NCP의 역할은 꼭 필요해요. 또 한국NCP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누구보다 큰 책임을 느껴야 하죠. 이번 기회에 ‘한국 NCP 개혁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⑭] 일본의 노골적인 역사왜곡, 동아시아 역사연대로 대처하다

“아시아 연대를 통해 역사왜곡과 국가적 악용을 견제하라”

[시작 : ‘일본 역사교과서 반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01년 4월 3일, 일본은 2002년 용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교과서는 일본 우익 성향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에서 만들고 후소샤(扶桑社)에서 출간한 것으로 ‘임나일본부설’과 ‘위안부’와 관련한 심각한 왜곡 등을 포함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침략전쟁이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까지 담겨있었어요.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물론, 세계사적으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일본 교과서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범아시아 행동의 날과 한일공동시위가 개최됐어요. 아시아 역사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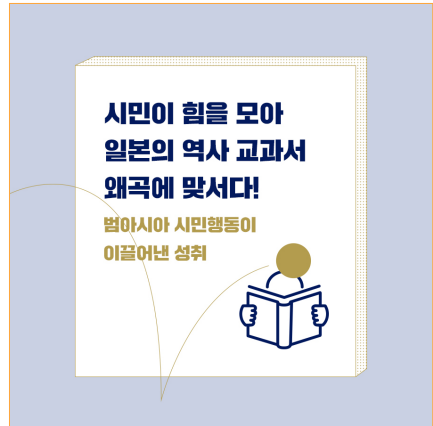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아 역사 연대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바로잡는 것에 전 국민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어요. 초기에는 일본 교과서의 시정을 요구하였다가 문제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이후에는 채택을 거부토록 하는 서명

운동이 전개됐죠. 교총 등 관련 단체도 힘을 모아 총 35만 명의 서명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했고, 일본 신문에 광고를 실어 한국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교과서 왜곡의 실상을 알고 있지 못하는 대다수 일본 시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약 2,6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9월과 10월에 걸쳐 일본의 아사히신문과 한국의 문화신문에 의견광고를 실었어요.

[역사 인식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역사 연대는 출판 및 학술,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했어요. 제1차 심포지엄은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를 중심으로, 제2차 심포지엄은 한국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죠. 학술 심포지엄의 주제는 앞으로의 교과서 운동 방향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일본의 교과서 왜곡뿐 아니라 한국 교과서의 내용이나 형식 역시 점진적으로 바뀌 나가야 한다는 계획이 내재해 있었어요. 또한 출판 활동에도 힘을 쏟아 타와라 요시후미의 저술 '위험한 교과서'를 번역·출판했으며,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편저로 '문답으로 읽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을 출판해서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을 일반인이 읽기 쉽게 펴냈어요.

[의미 : 국가적 연대를 통해 역사 왜곡을 막아낸다] 일본 신문에 광고를 실었던 당시, 일본 언론들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반



일 시위를 들어 한국과 중국 국민들이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있다고 왜곡 보도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반일'이 아니라 '평화'와 '공생'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해야만 했어요. 이 운동은 막중하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동아시아 3국의 시민들에 의해서만, 무엇보다 이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요.

[참여 :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또한 중국의 역사 왜곡도 최근 몇 년간 크게 대두되었죠. 동아시아는 근대사에서 큰 불행과 갈등을 겪었으나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온 이웃 국가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은 좁게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넓게는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문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번 기회에 ‘일본 역사교과서 반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⑮] 침묵과 왜곡의 시대를 넘어 제주 4.3, 진실을 기억하는 시대로

“그럼에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억’하는 것”

[시작 : ‘제주 4·3 알리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사건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잘 몰라요. 비록 2000년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2003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졌지만, 아직도 제주에서 4·3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희생자들을 ‘빨갱이’로 몰아가거나 연좌제를 적용하여 가족들에게까지 그 고통을 전가해 왔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하기 시

작했지만 만연해 있는 ‘레드 콤플렉스’는 여전히 4·3에 대한 기억을, 그들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있어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을 놓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애써온 제주 사람들, 유가족, 시민사회가 모여 2017년 (사)제주다크투어를 설립했어요. 설립 이후 2018년에는 1,400여 명, 2019년에는 1,500여 명이 제주다크투어에서 진행하는 4·3 평화기행에 참가했어요. 2018년에는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국내 외신기자 및 영자 신문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한국에 오래 산 외신기자들조차도 제주 4·3에 대해 처음 들어봤거나 4·3 유적지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다양한 언어로 보도된 제주 4·3의 이야기는 제주도를 넘어 향후 국제연대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어요.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제주도 내 10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했고 전국적으로는 200여 개 단체가 모여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제주 4·3의 상징인 동백꽃 배지를 나누고 4·3 유적지를 알리는 지도도 만들었고요.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19

개 지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4·3을 기억하는 행사를 이어갔어요. 또 제주 4·3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했고요. 제주 다크투어도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소속 단체로 평화기행 위원회, 국제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어요.

[의미 : 침묵과 왜곡을 넘어 진실을 찾아 가는 여정] 다양한 단체들의 연대는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제주 4·3을 기억해 나가는 힘이 되고 있어요. 연대체의 활동을 통해 전국적으로도 제주 4·3이 많이 알려졌어요.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 4·3범 국민위원회는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제주 4·3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라는 것을 다양한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어요. 제주 4·3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도 기억할 것이고 제주 4·3과 연대했던 여순 항쟁도 기억할 거예요. 비슷한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버마 로힝야족에게도 관심을 갖고 연대할 것이고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도 마음을 보탬 거예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제주 4·3은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역사로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요. 70여 년

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제주 4·3의 이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 정명(正名)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중이에요. 20여년 전인 2000년에 제정된 제주 4·3 특별법의 미진한 부분들도 이제는 개정되어야 하고요.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형무소에 끌려가 수감생활을 했던 수형인과 행방불명인에 대한 명예 회복도 이뤄져야 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제주 4·3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역사로 기억될 때까지, 잊히고 사라진 죽음들이 기억될 때까지 제주다크투어의 여정과 관련 연대활동은 계속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제주 4·3 알리기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⑬] 권리보장에서 사회변화로, 청년의 또 다른 가능성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왜 정책은 그대로인가?”

[참여 : ‘청년기본법 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오늘날, 정규직이나 평

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 특히 청년에게 '취업'은 여전히 골머리를 썩이기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죠. 부모 세대처럼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걸까 고민이 들지만 일단 그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부터 의문인바,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누가 관심이 있는 걸까요? 오늘날 청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은 다양한 데 반해,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은 납작했어요.

[경과 : 청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다]

청년정책 도입을 위한 활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어요. 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운동에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하게 되면서 2017년 4월에는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출범했어요. 또한,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해 9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출범합니다. 구심점이 되는 연대체가 발족하게 된 것이죠.

연석회의의 첫 활동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그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것이었어요.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19대 국회 때부터 언급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됐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뒷순위로 밀리는 청년기본법 제정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연석회의는 15개 지역에서 45회 캠페인을 진행하

였고, 그해 11월에는 1만 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어요. 연석회의는 법 제정 공감대에 박차를 가하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매년 기본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와 공론장을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의미 : 권리보장에서 사회변화로]

청년기본법 제정 운동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지우는 일이었어요. 즉, "청년이라면 모름지기 00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관점을 넘어 같은 시대를 살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2020년 1월 4일 해를 넘겨서 청년기본법은 통과되었고, 그해 8월 5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년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덧붙여,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보완 입법과 함께 청년정책의 범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을 새롭게 짜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서 권리와 책임이 있는 시민으로

청년기본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변화사래 아가연
NPO X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연대회의
2020

시작

청년들의 고민

- 사라진 평생직장의 개념
- 좋아하는 취업문
- 극심한 경쟁
- 사망원인 1위: 자살
- 취업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가?

대한민국 청년 관련 정책 (~2019)

연도 정부 주요내용

- 98~02 김대중 적극적 고용정책 위원회 대주요실연대응
- 03~07 노무현 일자리 창출(사적책좌)
- 08~12 이명박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
- 13~17 박근혜 노동시장 구조개혁
- 17~19 문재인 공공일자리 창출 일자리간 소득격차 해소

새로운 해법 필요

-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왜 정책은 그대로?
- 청년 당사자 관점으로 문제 재정의
 - 파격적·실험적 방안 도입

성과

문제적 대상 → 문제 해결 주체로

-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 청년단체 등장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 2015. 1 : 서문서청년기본조례 제정 **마중물**
 - 2017. 4 : 청년청년정책네트워크 출범
 - 2017. 9 : 청년기본법 연석회의 출범

청년기본법 제정 여정

- 기존과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입법논의 진행 지지부진 : 여전히 국회에서 흡수된
청년기본법 연석회의 확대 개시: 시민의 등의 열기
15개 지역, 45회 캠페인
- 2017. 11 : 1만명 이상의 서명을 국회전달
 - 새로운 제도 도입의 진입장벽 실감
 - 대내외 토론회 개최, 55개 청년단체의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촉구 선언 전달
 - 2019. 10 : 청년기본법 연내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국회현장사무실 설치 (의원회관내 휴게실)
 - 2019. 11 : 필리버스터로 논의 중단
 - 전국작지 1인 시위, 서명 운동, 간담회, 캠페인 진행
 - 2020. 8 : 청년기본법 시행, 청년정책도입 준비 중

현황·과제

권리 보장 운동 → 사회 변화 운동

- 정부 : 정기적 청년실태조사 진행
-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 참여

현상향

- 극심한 노동시장 양극화
-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
- 비정규직 부당수익

과제

- 청년기본법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보완입법
- 더 넓고 튼튼한 연대
- 청년세대 운동의 넓은 확산력 필요
- 청년세대 내의 합의
- 기성세대 ↓ 설득
- 공감대 확산

그래픽 서머리: 정진호

것이죠. 그만큼 큰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넓고 튼튼한 연대가 필요 할지도 몰라요.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이 극심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서로 손 잡고 연대할 수 있는 열지를 만드는 것, 그것 역시 청년운동의 과제일 것입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청년은 더 이상 권리를 보장받는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기성세대와 함께 다음 사회를 준비 하는 동료 시민이에요. 결국 청년의 목소 리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청년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색 을 덧입히고 내용을 채우는 건 이제 우리 사회와 청년들의 몫이 된 셈이에요. 극심 한 경쟁 안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결국 에 연대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연석 회의는 보여줬어요. '청년운동'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길 고대합니다.

[사회 ⑰] 500원에 팔린 개인정보, 1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소송은 끝나도 소비자 권리를 되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시작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4년 1월,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어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곳의 카드사에서 1억 4천만 건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인데요,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 전화번호, 주거 상황 등 19종에 달했다고 해요.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모두 유출된 셈이죠. 유출되는 과정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범인은 카드 3사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담당하던 외주업체의 직원. USB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다운받아 이중 일부를 돈을 받고 팔아넘겼는데, 이에 따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한 번 되어버리면 건당 50원에서 500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카드 3사는 2020년 9월에야 대법원에서 각각 1,5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과 : 대규모 공익소송의 시작] 참여연대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적 공익소송을 제기했어

요. 102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접수했고, 나아가 금융소비자연맹은 이후 3사 중 한 곳에서도라도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2만여 명의 원고들과 추가소송을 제기했어요. 25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참여할 만큼 큰 규모의 공익소송이었죠.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2부는 정보 유출 피해자 5천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지 않아 유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어요. 뒤이은 9월 30일에는 민사 제16부가 참여연대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카드사별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그 자체, 즉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어요.

[의미 : 고통에 비하면 너무 적은 배상액이었지만] 2018년 대법원의 위자로 지급 판결이 확정된 후 각급 법원에서는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9년 8월에는 102명 중 97명에게 롯데카드가 약

9만 원의 위자료를, 2020년 1월에는 국민, 농협 카드에 위자료 지급 책임이 확정되면서 6년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돼요. 노출된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 배상액이었지만,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 기업의 책임에 대한 이정표를 마련한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봐야 할 거예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미국의 인터넷 기업 야후가 러시아 요원의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2018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야후에 3,500만 달러(약 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또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5천만 달러(약 550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2년간 약 400억 원 상당의 무료 신용감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했어요. 한국 사회가 변화해야 할 지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결국 이런 집단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에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기업이 판매한 물건으로 인해 개인이 손해를 입거

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개인이 가해 기업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내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개개인의 피해자들이 한데 힘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소송을 제기하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꼭 필요해요.

[사회 ⑱] 아이들의 이름과 맞바꾼 법안,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를 위해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하나의 법률안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시작 : ‘어린이 생명 안전법안 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어린이가 가장 핫한 ‘뉴스거리’가 되는 때는 처참하거나 황당한 사고로 어떤 아이가 목숨을 잃었을 때가 아닐까요? 그제야 어린이는 뉴스, 곧 새로운 소식이 되는 것 같아요. 떠난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른들은 뒷북을 쳐대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2011년도에 이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결된 노상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며 강화된 법규가 도입되

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매일같이 주차장을 통과해 학교와 집을 오가곤 했죠. 이토록 열악한 통학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경과 :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을 법] '세림이법'.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故 김세림 어린이 사망 사고 이후 제정된 법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인솔 교사 탑승 및 안전 확인 의무가 법제화되었어요. 그리고 '하준이법'. 2017년 10월 네 살배기 故 최하준 어린이가 주차장에서 굴러온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는데, 정작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들이 현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차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2019년 4월 경, 국회 법제실, 의원실, 유가족과 상의하며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나갔어요.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2019년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버스 사고로 2명의 어린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덟 살이었던 故 김태호 어린이를 태우고 달리던 노란 버스는 법의 보호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국민권익위는 관계부처에 이미 그 미비한 법령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었지만 바뀐 것이 없는 셈이죠. 블로그를 통해 쪽지를 보냈고 유가족으로부터 연락받았

어요.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행동을 시작해나갔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아이들 이름을 딴 채 20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교통안전 관련 법안들을 '어린이 생명 안전법안'이라 묶어 이름 짓고 법안 통과 촉구 캠페인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어요.

[의미 : 법이 된 아이들] 2019년 12월 10일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이 통과되었고, 2020년 4월 29일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해인이법'이 만들어 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태호유찬이법'이라 이름 지어진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통학 차량도 '세림이법'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법안 통과 이후 몇몇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민식이법' 및 가족 신상 등에 관한 가짜 뉴스들이 무분별하게 유통·재생산되었

어요. ‘민식이법’으로 촉발된 문제가 아닌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 자체를 손보고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는 관련 재판들을 위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지속적인 안전교육은 물론 ‘민식이법’과 관련해 거듭 언급되는 ‘선의의 피해자’ 프레임이란 것에 대해 우리는 어린이와 운전자 둘 중 누구에게 ‘더 조심해야 할 책임’을 물어야 할까 생각해봐야 할 것이예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어린이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굴러온 차에 치여 황망히 세상을 떠나는 아이가 없는 나라, 아이가 스쿨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 믿고 맡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죽는 아이가 없는 나라, 적어도 스쿨존에서만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나라. 이 당연한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다시는 비슷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 법이 되고 벌이 되는 아이가 없기를. 그 바람 하나로 만들어진 ‘어린이 생명 안전법안’. 우리는 그렇게 도저히 값을 수 없는 ‘빚’을 진 게 아닐까요? 그 ‘빚’을 지켜가는 건 응당 남겨진 어른들의 몫일 것입니다.

[사회 19]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는다, 이해충돌방지법

“한국 공직사회의 윤리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

[시작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2003년부터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요. 참여연대의 주장은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으로 결실을 보았지만, 전체적인 이해충돌 규제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부정 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지게 되고, 2015년 3월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어요.

[경과 : 박덕홍과 NH] 21대 국회 개원 후 박덕홍 의원이 백지 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았는데도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해오

고,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어요. 그 외의 몇몇 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다음에 여론에 불을 지른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어요.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LH 직원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 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사실을 폭로했어요.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3월 임시국회 처리를 또다시 약속했어요, 정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 논의는 더디기만 했어요. 참여연대는 정무위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압박하는 기자회견과 입장을 수시로 발표합니다. 결국 이해충돌방지법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3차례 법안심사를 더 거쳐 4월 14일에는 법 제정의 첫 관문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그리고 4월 22일에는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의미 :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시민들

의 분노가 법 제정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거예요. 국회의원 등 공직자 자신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자꾸 미루는 관행을 끊어낸 셈이죠. 또한 이번 법 제정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정보를 신고만 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활동내역에 대한 공개 여부를 소속 기관장의 재량에 맡긴 조항 등은 외부의 감시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요.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정보와 민간 부분의 활동내역은 추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해충돌방지법만으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뿌리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법 제정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외부의 감시가 가능해진다면 한국공직사회의 윤리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했던 내

용이 다수 반영되어 애초 정부안보다 내용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에요. 고위공직자의 범위가 넓어진 부분도 진일보했다 평가할 수 있어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규율하는 것 역시 이 법의 핵심인데 이것과 관련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비밀 정보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있어 이런 엄격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길 바라봅니다.

[사회 ②] 학교로부터 해방된 속옷의 자유, 개성을 실천할 권리를 보장하라.

“효율적인 교복이 아니라 인간다운 교복을!”

[시작 : ‘학생 용의복장 규제 반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4년 청소년 인권 행동 아수나로에서 ‘학생은 학생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서울 곳곳의 학교와 거리에는 “학생은 학생답게 자유로운 머리를 합시다”, “학생은 학생답게 개성 있는 복장을 합시다”, “학생은 학

생답게 잘 쉽시다”, “학생은 학생답게 개별 폭력을 거부합시다”,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 규칙을 잘 바꿉시다”라는 문구들이 적힌 포스터가 붙었죠. ‘학생다움’에 뒤따라오는 사회의 통념들을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2000년에 벌어진 두발 자유화 서명운동 ‘노컷 운동’을 시초로 따진다면 용의복장 규제 반대 운동의 역사는 어언 20년이 넘는다고 볼 수 있어요.

[경과 : 김토끼가 쏘아 올린 작은 공]

2021년 3월, 서울 소재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김토끼는 ‘새로운 출발’이나 ‘설레는 만남’처럼 두근거리는 표현이 아닌, 충격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표현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학교는 보수적인 전통을 자랑하는, 오랜 역사의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였기 때문이죠.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 규정에는 염색·파마 금지, 춘추복 위 외투 금지, 치마 길이 제한, 체육복 착용 제한, 액세서리 착용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겨 있었는데, 규정에 없는 사항들마저 교육청의 감시를 피해 학생들을 통제하기 일쑤였어요.

마침 청소년 인권운동 활동가였던 김토끼는 자신이 활동하던 단체의 게시판에 재학 중인 학교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글을 작성했어요. 김토끼의 글을 계기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용의복장 규제 반대 운동을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우리 학교에 아직도 이런 복장 규제가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처음에는 서울 지역을 한정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혹은 졸업한 학교의 인권 침해적인 용의복장규제를 제보 받았지만, 곧 지역 제한 없이 전국으로 범위를 넓혔어요.

[의미 : 인권위와 교육청의 응답]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해 촛불 청소년 인권 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했어요. 설문조사에 제보된 서울 관내 55개 학교의 학교생활 규정을 조사하고,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33개교를 인권위에 진정했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약 6개월 후 서울 31개 학교에 용의복장 규정을 개정 권고하며 “염색 파마 금지, 체육복 등 학교 금지, 교복 상의 위 외투 착용 강제 등은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참여 :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활동가들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결국 학생 인권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건 교육청의 움직임일 수밖에 없어요. 인권 침해적인 용의복장규제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활용해 각 학교의 학생 인권 실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해 직접 나서야만 해요. “학

교에서 알아서 하라”며 공문 한 장 보내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학교도 교육청의 ‘친절한 책임 회피성 공문’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교육청에서 학교 안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이 학교의 해석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두발 규제 반대 운동의 역사가 20년이 넘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해당 시기 운동에 가담했던 한 청소년 인권 활동가는 2015년 칼럼에서 “길어야 10년 정도면 되겠거니, 그렇게 막연하게 상상했던 것 같다”고 회고해요. 많은 이슈가 그러하듯, 두발 규제 문제 역시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야 간신히 바뀐 셈이에요. 그 역사를 돌아보고 배울 점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 ②] 자원봉사의 실천이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응답하라 자원봉사 1994,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

[시작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사)곰두리봉사협회 자원봉사자 이춘명 씨는 자원봉사를 하다 생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법제도가 생김으로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 5년에 한 번 진흥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 학교나 기업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원 봉사주간, 포상제 등의 방안, 재난재해 자원봉사를 위한 안전교육과 보험 혜택, 자원봉사센터 지원과 같은 민간 인프라 구축 등을 담았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시민과 민간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어요.

[경과 : 응답하라 '자원봉사 199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나오기까지 지난 10년간 민간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원봉사 운동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고,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제도가 마련되는데 탄력을 불었어요.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일명 86아시안게임)와 제24회 서울올림픽경기대회(일명 88서울올림픽) 개최가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는 기점이 되었어요.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설립된 60개의 자원 봉사단체가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시기에 도달했다는 것과 기업의 자원봉사단 구성,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창립 등 기업과 학생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했어요. 민간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의 등장도 시구군을 시작으로 1993~1994년부터 서서히 등장해요. 전국규모의 자원봉사대축제(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주관, 1994.7.7)가 열린 첫해도 역시 1994년이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의미 : 자원봉사센터가 현재의 모습을 갖춰가기까지] 1995년 내무부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자원봉사계를 제안·설치하고 이듬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시범적인 지원에 착수해요. 기본법이 제정된 2005년 이전까지 자원봉사센터는 현재의 모습을 갖춰가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마다 하나씩 설치됐어요. 자원봉사센터 2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자원봉사자와 함께한 센터 20년'에서는 그 시기를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적 필요성을 낳는 태동기라 설명합니다.

법제도 제정 이전까지, 2001년 UN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기념 전국 자원봉사 물결운동과 2002 한일월드컵 자원봉사를 두 가지 주요 기점으로 볼 수 있어요.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는 국제사회에서 자원

봉사의 위치와 위상을 돌아보게 했고, 국가적으로 자원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참여 :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 기본법은 2005년 제정 이후 15년이 지나도록 그간의 환경의 변화와 자원봉사계의 요구를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주무부처의 명칭 변화로 인해 2008, 2013, 2014, 2017년에 각각 조직 명칭 수정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외에는 2014년 문맥을 정확하고 쉽게 변화하기 위한 자구의 수정, 띄어쓰기, 한자표기 등이 추가된 일부개정과 2016년의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일부개정만이 추진됐다는 한계가 남아 있어요. 자원봉사계는 2016~2018년을 한국 자원봉사의 해로 선포하고 추진위를 구성하여 다각도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기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자원봉사는 이제 크고 작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처의 다양화는 물론이고, 비대면 유형의 자원봉사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법 제도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꾸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발판으로 그 모습을 달리할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은 현장

이고, 현장의 변화가 법 제도를, 법 제도는 다시 현장의 원칙을 세우는 기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여전히 예민하고 영민하게 현장에 질문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의 보장, 사회적 인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와 창구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사회 ②]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아이들의 성장”

[시작 : ‘양육비 이행법 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개인으로 특히 여성으로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힘든 현실에서, 자발적인 지급 이행을 기다리며 “양육비 좀 보내 달라”는 애원과 읊소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모멸감, 감정노동, 분쟁 피로에 자녀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이는 양육비 관련 현행법에 강제성이 없을뿐더러 더디고 실효적이지 않은 법 절차만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배드파더스’는 그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경과 :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위하여]

2018년 9월 초,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계기로 봉사활동가인 구분창 님과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의 현 운영진들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만났고 자력구제 활동과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해요. 피해자들의 모임을 만든 지 한 달도 채 되기 전인 2018년 10월 8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법 개정의 근본 해결책을 촉구하는 첫 시위를 시작한 이래,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에서, 법원, 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거리에서 "아동 생존권 보호는 국가의 의무",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대통령 공약" 등 수없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양해연 활동가들은 SNS와 각종 커뮤니티, 동호회, 지역 맘 카페, 방송, 언론, 유튜브 등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양육비 미지급 실태 사례를 공유했어요. 이를 통해 양육비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과 입법의 여론 형성을 꾀했죠. 또한,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열리는 양육비 관련 심포지엄과 정책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관련 부처, 관련 기관, 입법부와 간담회를 갖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했어요.

[의미 : 국회를 넘어서다]

2019년 5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법안이 여가위 통과, 법사위 통과, 본회의 재석 158명 전원 찬성 통과 결과를 얻었어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그토록 염원 하던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의 첫 번째 도입을 이룬 것이죠. 마지막 본회의가 있던 2020년 5월 20일, 마침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안 1호 운전면허 정지 처분 법안이 통과됩니다.

[참여 :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

양육비 이행 강화 개정법안이 도입되어 운전면허 정지 법안은 2021년 6월 11일, 출국 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안은 7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개선 과제는 남아 있어요. 양육비 채권자가 반드시 감치 판결을 받아야만 법안이 적용되는 점, 행정적 강제조치를 통한 양육비 확보의 방법이 없어 양육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 만큼 긴 시간이 걸리는 재판과 소송으로 인해 심리적 피로와 우울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죠. 법안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양육비 이행법 개정운동'은 양육과 생계를 병행하면서 밤잠 시간까지 쫓겨어 하루 24시간 강행군으로 일하는 운영진과 활동가들의 3년간의 열정적 헌신이 만들어 낸 과정

과 결과입니다. 법이 바뀌고 시행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었어요. 시시각각 그사이 빠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운동을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CHAPTER
13

평화



[평화 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일본 정부에게 노동력 강제동원과 인권침해에 배상을 요구하다”

[시작 : ‘대일 과거청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주의는 부족한 노동력과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일제 말기 강제 동원 피해를 본 ‘조선인’은 730만 여명, 이 가운데 해외로 끌려간 사람은 86만여 명에 달했죠. 이 중 67만여 명은 일제의 군수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 조선조, 제철소나 댐, 방공호, 비행장 등 토목공사장에서 노동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어요.

[대일 과거청산 운동의 시작] 1974년 도쿄의 헌책방에서 우연히 ‘일본제철 총무부 근로과’에서 작성한 ‘조선인 노동자 관계’라는 서류철이 발견되었어요. 서류철에는 일본제철 주식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조선인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처리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고, 당사자의 본격적 주소가 남아있었어요. 1995년 9월, 해방 전에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을 도와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과 일

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1997년 12월 24일에는 일본제철 오사카 제철소에 동원되었던 신천수, 여운택 당사자들과 함께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했어요. 오사카지방법원은 일본 제철의 변천사를 이유로 원고들이 동원되었던 (구)‘일본제철’과 1970년에 설립된 (신)‘일본제철’이 다른 회사라고 판결했어요. 해방 전 원고들이 노동했던 회사는 없어졌는데 엉뚱한 회사를 상대로 제소했다는 것이었죠. 일본 최고재판소의 패소 판결 후 원고들과 한일시민단체, 변호인단은 이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이어갔어요. 피해자들이 하나둘 돌아가시고, 고령의 원고들이 힘겨운 몸을 이끌고 일본까지 찾아가도 회사가 제대로 만나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원고 승소 판결이 마침내 확정되다] 법정 공방은 좀처럼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다시 수년이 지나 2016년 11월 23일 원고들과 한·일 시민단체들은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개별 민사부 앞으로 “원고들이 사망하기 전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9월 5일, “여러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죠. 2017년 5월 30일에는 기사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정의라도 찾아야 한다**

21년 만에 내려진
일본 강제노동 배상 판결



회견을 열어 결의문을 발표하며 재차 판결을 촉구했어요. 그러던 중 2012년 5월에 있었던 대법원판결 후 당시 대통령 박근혜와 대법원장 양승태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 큰 사회적 파장이 있었어요.

[의미 :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밝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일본 제철(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강제 동원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을 통해 '일제강점기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한국인들, 특히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착취당한 노동자들이 배상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죠.

[참여 : 지금도 '대일 과거청산 운동'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강제 동원 문제가 갑작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본 정부는 관련 기업에는 "배상도 화해도 하지 말라"는 등, 연일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징용공'이라는 용어 대신 '구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고들이 '모집'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요. 강제 동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며 책임을 희석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일본 강제노역 피해자 소송'은 단순히 일본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양국의 '역사 인식' 문제와 결부되어있죠. 재판 과정과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이어지며, 결국 진실한 역사적 사실을 되찾아 가는 과정이에요. 이번 기회에 '대일 과거청산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평화 ②]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린다, 국제연대를
위한 캠페인 활동**

“한국산 무기가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시작 : ‘최루탄 바레인 수출 저지 캠페인’에 대해 알고 있나요?] 바레인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가 한창이던 2011~2013년 한국이 수출한 최루탄은 150만 발이나 되었어요. 당시 바레인 인구가 120만이었죠. 이 기간에 최루탄 사용으로 사망한 사람도 최소 39명에 이르렀어요. 한국은 바레인에 최루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였죠. ‘한국산 최루탄 수출 저지 캠페인(stop the shipment)’은 2013년 10월 바레인 활동가로부터 받은 메일 한 통으로 시작되었어요. 바레인 당국이 바레인의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 한국산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직후 최루탄 수출 반대 캠페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짧은 시간에 다양하고 입체적인 행동으로 전개되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루탄 수출 저지 캠페인은 바레인 당국이 최루탄 160만 발을 추가로 수입하겠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후 급박하게 전개되었어요. 최루탄 수입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한국산 최루탄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정부를 확인하게 된 거죠. 최대한 빨리 수출을 중단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SNS

를 이용해 탄원 서명을 받고 방위사업청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한국산 최루탄 수출 및 수출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여러 차례 문의를 이어갔죠.

[공익제보자와 연대하여 변화를 끌어내다]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공익제보자의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시위 진압장비나 무기 수출입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통의 시민들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확인할 기회는 극히 드물죠. 한국이 바레인에 지난 몇 년 동안 최루탄을 수출했고, 이것이 바레인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이 엄청난 정보는 공익제보자의 정보 없이는 알 수 없는 사실이죠.

[의미 : 다층적 행동과 긴밀한 국제연대를 토대로 한 시민사회의 동력 확인] ‘바레인 최루탄 수출 저지 공동행동’은 2014년 1월 시위 진압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개정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바레인으로의 추가 수출은 일단 막았지만, 비슷한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산 최루탄이 외국에서 또다시 인권침해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

인 법 개정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국회를 설득하고 함께해줄 국회의원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결국 법 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채 캠페인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참여 : 한국산 무기가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국은 2013년 6월 3일 무기 거래조약(ATT)에 서명했어요. 무기 거래가 국제 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한 압도적 위험이 인지되는 경우 수출을 허락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조약이에요. 최루탄의 살상 무기화를 막기 위한 총단법 개정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할 한국의 의무이기도 하죠. 바레인뿐만 아니라 한국산 무기가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단법 등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동력이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거리에서 사라진 최루탄이 지구 반대편에서 버젓이 수출되어 그곳의 민주화를 억압하는 도구로 또다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시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산 무기가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것은 결국 무고한 이들의 희생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최루탄 바레인 수출 저지

캠페인'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평화 ③]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 병역거부, 우리 모두의 문제로

“군대가 아닌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열다”

[시작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한다”고 믿는 한국 사회에 군대를 거부하고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알려진 것은 2001년 한 일간지의 보도를 통해서였어요.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의 20대 청년 5백여 명이 매년 교도소에 가고 있다”는 첫 보도 이후 같은 해에만 1,500건이 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어요. 2001년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이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묵묵히 교도소로 향했던 병역거부자들이 견뎌낸 고통의 시간,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병역거부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여러 사람의 노력은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조금씩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에 공감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만들게 되었어요.

[경과 : 유엔과 협력하여 끌어낸 병역거부권 인정] 한국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이사국이면서도 유엔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를 무시해왔어요. 한국의 활동가들은 2002년부터 병역거부권을 여러 인권 규약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엔의 문을 꾸준히 두드리고 한국 상황을 알려왔어요. 그 결과 2006년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병역거부권 인정 권고를 끌어냈고, 개인 진정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규약 위반을 확인하고 배상하도록 하는 결정이 나왔어요.

[대체복무제의 근거를 마련하다] 군사정권이 종식되었음에도 항명죄의 최고 형량을 3년으로 높여 선고하던 군사법정의 관행은,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되고 민간법정으로 재판정이 옮겨지면서 재징집 당하지 않을 최소 형량인 1년 6개월 선고로 바뀌었어요. 이후 2002년에는 첫 위헌법을 심판 제청이, 2004년에는 첫

무죄 선고가 나왔죠, 이후, 치열한 법적인 논쟁들이 쌓여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끌어냈어요.

[의미 : 군대와 병역 문제를 인권의 측면에서 진지하게 다루다]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시행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군대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틀렸다면 처벌하고 감옥에 보내던 것에서 나아가 서로 다른 가치관과 방식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분단의 특수성을 이유로 군대와 병역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고민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참여 :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 조화와 국제적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10월 26일 첫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어요.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지 15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동안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중심이었을 뿐 대안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가와 사회로부터 강요받은 선택을 해왔고 실제 본인의 양심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조차 없었던 우리 사회는 이제

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병역거부로부터 시작된 양심에 대한 고민이 군대와 전쟁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와 국가 폭력과 군사주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다양한 삶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평화에 대한 상상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평화 ④] 인도적 차원의 움직임, 북한 식량 위기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라

**“만성적 식량위기로부터 북한 영유아를
보호하라”**

**[시작 : '북한 영유아 지원 민간 활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96년부터 한국 YWCA는 전국 지부를 통해 다양한 행사와 개인 참여를 유도하며 '북한 어린이 분유 보내기 운동'을 진행했어요. 그중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 어린이와 함께' 캠페인은 적극적인 사회 호응을 불러 일으켜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995년 '최악의 식량난' 이후 심각한 영양부족에 시달려 뼈가 앙상하고 배가 볼록한 북한 아이들이 담긴 사진에 남한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세계식량계획(WFP)은 만 6세 이하 약 2백40만 명의 북한 어린이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당시 북한을 다녀온 미국 유진벨재단 스티브 린튼 이사장은 "현 상황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설사 살아남는다고 해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며 "한 세대가 정신적·육체적 불구가 돼 가는 '인간 실험장'"이라고까지 표현했죠. 북한은 결국 유엔(UN)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1996년 남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번째 가입국이었는데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정부는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을 정치적 이유로 방해하기에 이르렀죠. 그럼에도 민간단체와 종교계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1996년 한국 YWCA는 '북한 어린이 분유 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2001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내에 북한 어린이 급식 지원 본부를 구성하고 4만여 명의 어린이에게 밀가루와 양념스프로 국수, 수제비, 빵을

만들어 매일 점심 급식을 제공했어요.

[어린이와 산모를 위한 의료 기술 지원]

어린이어깨동무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의 기술지원을 받아 2004년 평양에 어깨동무 어린이병원을 개원했어요. 병원 옆에는 콩우유 공장을 지어 영양지원에 나섰죠. 이후 평양의대에서도 소아병동의 건립을 부탁해 2006년에는 착공식을 했어요. 또한 굿네이버스는 어린이와 산모에게 절실히 필요한 3대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남포시 인근에 어린이 영양 생산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생산된 물품의 일정한량을 남포산원, 남포 어린이병원 등 영유아 및 산모 영양 사업에 활용하는 등 모자 보건을 위한 활동을 펼쳤어요.

[의미 : 시민사회가 먼저 변화를 만들어가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이 공식적으로 등장, 시행된 건 2005년이예요. 고령화 및 미래 사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경향과 관련, 국가 장기 발전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남북한 인적 자원의 공동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었죠. 이에 대해 통일부 중심의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관련 사업이 기획, 추진되었어요. 그동안은 북한 어린이와 산모를 돕기 위한 민간영역의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었죠.

[참여 : 북한 영유아 지원은 지속해가야 합니다]

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남북 간 군사 긴장 상태는 대북 지원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어요. 따라서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대북 영유아 지원 사업만큼은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방이 가장 필요해요. 또한 대북 영유아 지원 사업으로 북한 영유아들의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일차적인 효과 측정에만 만족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이 어려울 때 남한이 도와주었다'는 인식 변화 등, 보이지 않는 성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어떤 상황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린이아이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일은 국가와 상황에 상관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북한 영유아 지원 민간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평화 ⑤] 흔들리지 않는 대북 인도주의로, 정부 통제로부터의 독립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에게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시작 : '대북 지원 운동'에 대해 알고 있

나요?] 1995년 여름 북한은 세 차례의 대홍수로 전 국토의 75%가 피해를 보았어요. 극심한 전력난과 누적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겹치면서 유례없는 식량난이 발생하였고 아사자가 30만에서 100만 명에 이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한은 유엔(UN)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고, 남한 시민사회는 대북 지원 민간단체를 설립하고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북한 체제를 비난해왔던 보수 단체, 보수 교회까지도 인도적 동포애 차원에서 동참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한 붕괴론'의 영향으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도 규제했어요.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김일성 사망 직후 발생한 유례없는 식량난으로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대북 지원활동에 나선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모금 활동에 잇달아 제동이 걸렸어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정부의 제재로 모금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부의 대북 지원활동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각개약진을 통해서 대북 식량 지원

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북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범국민적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어요. 이에 따라 1996년 1월, 6개 종단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범종단 북한 수재민 돕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죠. 초기 활동은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이나 약품 등을 전달하는 긴급구호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정치적 상황에 민감한 대북 지원] 긴급구호 중심으로 시작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은 2000년 김대중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 민간교류가 확대되고 지속되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했어요.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민간의 대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창구를 기존 정부 일원화에서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 다원화했어요. 또한 여러 대치 국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남북 교류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갔죠.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은 점차 위축되기 시작하여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에는 거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말았죠. 급속도로 냉각된 남북 관계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정부·민간을 포함한 대북 지원액이 2007년 4,397억 원에서 2015년 254억 원으로 급감하고,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후에는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기에 이르렀어요.

[의미 : 북한과 상호 간 신뢰와 협조 관계를 형성해나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지원 민간단체의 활동도 회복의 기미가 보였어요.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청을 북한 4차 핵 실험 이후 처음으로 승인하기 시작했죠. 기존의 긴급구호나 일회성 지원, 단순 물품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에 기술을 전수하거나, 자립 능력을 향상하는 프로젝트 사업도 도입되었어요. 지원 분야도 일반 구호부터 농축산, 보건 의료, 사회 인프라 지원 등 전문화되었죠.

[참여 : '대북 지원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은 이뤄져야 해요. 특히 긴급구호와 같은 인도주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를 통제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북 지원 민간단체의 활동은 대결과 반목으로 점철된 분단사에서 민족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어요.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사업이 남북 당국의 정치적 입장 및 국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꾸준한 소통과 전문화를 통해 점차 안정화되어가고 있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대북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더욱 커질 수 있어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북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인도적 위기는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게, 제재 당사국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대북 지원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CHAPTER
14

국제개발



[국제개발 ①] 34,900원 행방찾기 프로젝트

“나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제대로 사용되고 있을까?”

[시작 : ‘원조 투명성 캠페인’에 대해 알고 있나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를 뜻해요.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교육, 치료, 건설 등 도움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 한국 ODA의 지원을 펼치는 것이죠. 투명성 캠페인이 시작된 2013년 한국 정부는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금액을 ODA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국민 1인이 기여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34,900원 정도였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2조가 넘는 규모의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과 : 변화가 시작되다] 국제개발 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과 월드비전, 참여연대, 발전대안피다(당시 ODA Watch)가 기획한 이 캠페인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어떻게 돕는지를 국민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ODA 정보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공개해야 함을 알리는 활동이에요. ‘원조 투명성 캠페인 : 34,900원 행방 찾기’는 한국 정부에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에 중점을 두고 2013년 7월 9일부터 10월 17일, 100일간 온라인 국민 청원 서명과 광화문, 홍대 입구, 덕수궁 돌담길 등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한국 정부의 국제원조 투명성 기구 가입] 캠페인의 주요한 요구 사항은 한국 정부의 IATI 가입이었어요. 1만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성원해 준 캠페인이 종료된 후 몇 달이 지나 2014년 3월, 한국 정부는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 ‘한국 원조 IATI 가입 계획’을 발표하게 돼요. 곧바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유·무상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 외교부, 각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출입은행이 ‘IATI 가입 관계 기관 Task Force’를 구성해 IATI 가입과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 설정에 노력을 기울였어요.

[의미 :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로 변화를 만들어내다] IATI 가입 이후 한국 정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대한민국 ODA 통합 홈페이지인 ‘ODA KOREA’를 개선해 ODA 개요 및 동향과 지원 실적, 국

개위 회의 결과, IATI에 대한 설명과 통계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또한 누구나 ODA 통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통계 사이트와 연결해 실시 기관별, 원조 유형별, 지역별 지원 현황 등의 ODA 사업 정보를 공개해두고 있어요. 한국 ODA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준 여러 시민의 지지와 국민의 공감대 덕에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참여 : 알 권리를 지속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행정연구원의 ‘2017년 ODA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ODA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찬성하지만(86.3%) 한편으로는 정부의 투명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27.6%)으로 보여요. 정보 공개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달리 읽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된 통계 자료는 일반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지 못한 탓이죠. 한국 국민에게 ODA 투명성은 각자가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구촌의 빈곤 퇴치에 기여한 사례를 실제로 확인하는 장치로서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먼 타국의 일

까지 관심을 가지는가?”라는 회의적인 입장도 분명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도 과거 ODA를 통해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 지금의 모습을 이뤄냈다는 점을 기억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연대의 힘을 더해야 해요. 이번 기회에 ‘원조 투명성 캠페인’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국제개발 ②]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시민사회가 만든 변화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작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대해 알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전쟁과 분단의 상흔으로 인해 한때 최빈개발도상국에 속하였지만, 반세기 만에 이를 극복하고 다른 나라들에 도움을 주는 국가가 되었어요. 2010년에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등과 같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원조가 필요한 국가를 돕기 위한 논의를 위해 모인 공여국 중심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했어요. 2010년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

최한 데에 이어 2011년에는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부산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죠.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 국제 개발 협력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규모가 점차 증대되면서 대내외적인 도전과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투명성과 책무성 그리고 개발 협력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008년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 포럼(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죠. 시민사회단체들은 개발원조가 실제로 수혜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여국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들을 논의하는 한편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The Istanbul Principles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이행에 힘썼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된 부산총회를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BA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시민사회 포럼을 주최했어요. 선진 공여국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이전 총회와 달리 부산총회는 개발 협력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해 의견을 개진했어요. 중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신흥개도국은 물론 파트너국(원조 수혜국)의 참여가 확대되고, 기업과 재단 같은 민간 행위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마련되는 등 부산총회에서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발 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갔을까] 시민사회가 개발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보장과 같은 법적 제도적 우호적인 환경(Enabling Environment)이 조성되어야 하고 빈곤과 불평등, 소외 등의 문제와 그 원인을 다룸으로써 지속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오픈 포럼은 각 국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그 결과 이스탄불 원칙과 이행 방침이 부산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어요.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관련 시민단체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국제적인 원칙 수립 과정에 동참했어요. 부산 총회는 시민사회가 정부를 상대로 변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기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의미 : 서비스 전달자에서 더 뻗어나간

[시민사회의 역할] 부산총회는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시민사회 지형을 변화시켰어요. 국제개발 협력 시민사회가 전통적인 서비스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서 정부의 ODA에 대해 적극적인 옹호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또한 부산총회에 앞서 진행된 세계 시민사회포럼은 국내외 개발원조 단체들의 만남의 장이자, 부산총회 개최 직전 주요 개발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자리로 기능했죠.

[참여 : 시민사회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BA와 한국 시민사회는 공여국 정부의 효과적 원조에 대한 결정에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공여국 정부들이 했던 솔한 원조 개선 약속과 이미 합의한 내용을 '되돌리지 말라(Don't roll back)'는 의미를 담아 요요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선언적인 합의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부산총회는 국제개발에 있어 시민사회의 책무와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 시민사회와의 깊은 연대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번 기회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국제개발 ③] 낮은 의료접근성의 대안, 안(眼) 보건 체계 강화 사업

"당신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시작 : '안(眼) 보건 체계 강화 사업'에 대해 알고 있나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최소 22억 명의 사람들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약 10억 명의 사람들은 시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적절한 예방적, 치료적 개입을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하트-하트 재단은 지난 15년간 개발도상국의 안(眼)보건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왔어요. 초창기에는 병원을 기반으로 안과를 세우고,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 위주로 하다가, 점차 쌓인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체계 강화 접근법을 활용하여 안과 서비스의 기능을 기존 보건 체계에 통합해나가는 전략을 적용해가고 있어요.

[경과 : 거대한 수요, 잠재적 의료진] 안과 클리닉을 방문하라는 권고조차도 제대로 따를 수 없는 탄자니아 음트와라

지역, 적절한 안과 서비스를 받기란 역부족이었어요. 특히 트라코마 수술캠프를 집중적으로 수행했던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개년 사업 후 집계된 기타 안질환 군 환자는 무려 9천 명이 이르렀어요. 그들 중 다수는 세계 실명의 제 1원인 백내장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과 달리 음트와라 지역은 거의 모든 안질환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만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음트와라의 열악한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 보건 인력뿐만 아니라 안과 장비와 소모품, 적합한 안과 시설 등 보건 체계 전반에 걸친 개입이 필요했어요. 재단은 탄자니아 보건부의 제2차 국가 안 보건 전략계획에 따라 기존의 공공보건 체계 내에 안 보건 기능을 통합하여 강화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고, 그렇게 세부 활동을 수행해나갔어요.

[의미 : 지속가능한 안 보건 사업을 위해]
1. 일차 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안 보건 기반 구축 : 기초 안 검진이 불가능했던 일차 보건시설에 국가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적인 검안 도구와 매뉴얼을 배포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했어요.

2. 군(District) 및 주(Region) 기반의 안 보건 서비스 역량 및 기능 강화 : 군립병원 기반으로 활동 중인 안과 코디네이터에게 보수교육을 제공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기존 주립병원 안과 시설을 확장하여 전용 수술실, 환자 대기실, 접수실이 증축되었어요. 역시 가이드라인과 자문에 따라 각종 장비들을 지원하고 이를 병원의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2018년 3월, 음트와라 지역 안 보건 체계 강화 3개년 사업은 음트와라 지방정부에 공식 이양되었어요. 다만 사업 기간이 짧은 탓에 안과 의료인력 추가 배치 및 안과의사 추가양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어요. 이는 사업 이양을 위한 이해관계자 회의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거론되었던 사항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보건부에 안과 전문의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음트와라 지역이 자발적 역량을 충분히 활동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 나가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주인 의식(ownership)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낯설고 긴 과정이 필요하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에는 리더십과 매니지먼트를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할 책임을, 지방정부에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통해 사업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의무를 쥐어 주는 일이기도 해요.

[국제개발 ④] 몽골, 영양개선사업으로 변화가 시작됐다

“학교급식이 몽골의 미래를 위한 솔루션이라는 확신”

[시작 : ‘몽골 영양개선사업’에 대해 알고 있나요?] 경제가 발전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생겨난 영양 문제는 기존의 영양 문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동의 성장 부진과 미량영양소 결핍, 성인의 과체중이 가구 또는 지역사회 내에 함께 존재하거나, 한 사람이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성장 부진과 미량영양소 결핍, 식사와 연관된 만성질환을 함께 겪는 ‘영양불량의 이중부담’이 늘어났어요. 1993년 몽골의 모습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긴급한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할 만큼 식량부족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라 5세 미만 아동 4명 중 1명은 만성 영양불량을 겪고 있는 가난한 국가였어요.

[경과 : 영양개선사업이 몽골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몽골 대학 내 영양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제 보건 영양전문 비영리 기관인 위드는 1996년부터 3년간 몽골 과기대 식품조리학과에 한국인 교수를 파견했어요. 아동 영양, 식이요법 등의 영양학 강의와 함께 ‘어린이 영양’을 몽골어로 번역 발간하여 보급하기 위함이었죠. 이러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2000년 2월 몽골과기대 내 수양 급식과의 합자 연구소인 몽골 영양개선연구소가 설립되었어요. 덕분에 현지의 영양적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하거나 인식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책 반영 및 제도화 논의의 중심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위드는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발전과정에 직접 몸담았던 급식·영양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학교급식 사업모델을 구축했어요. 영양불량을 겪고 있는 몽골의 학령기 아동의 식생활 개선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목적이예요. 균형 있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영양 지식과 식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영양개선에 직접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양극화된 영양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했습니다. 이후, 몽골 정부가 학교 급식을 포함한 아동의 영양개선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95년부터 한국의 교수진 및 영양전문가들이 여러 차례의 학술교류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의미 :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 유도] 이후 한·몽 추진위원회는 학교급식 시범 시행을 위해 급식 전반과 관련한 법률 제정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학교급식 시행에 따른 예결산과 인사권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이로써 학교급식 시범 운영사업 단계부터 사업의 지속성과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끌어냈고 이후 몽골 정부의 주도로 전국에 학교급식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워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학교에 이양한 뒤 이들이 표준화된 매뉴얼을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기술 자문을 계속 지원한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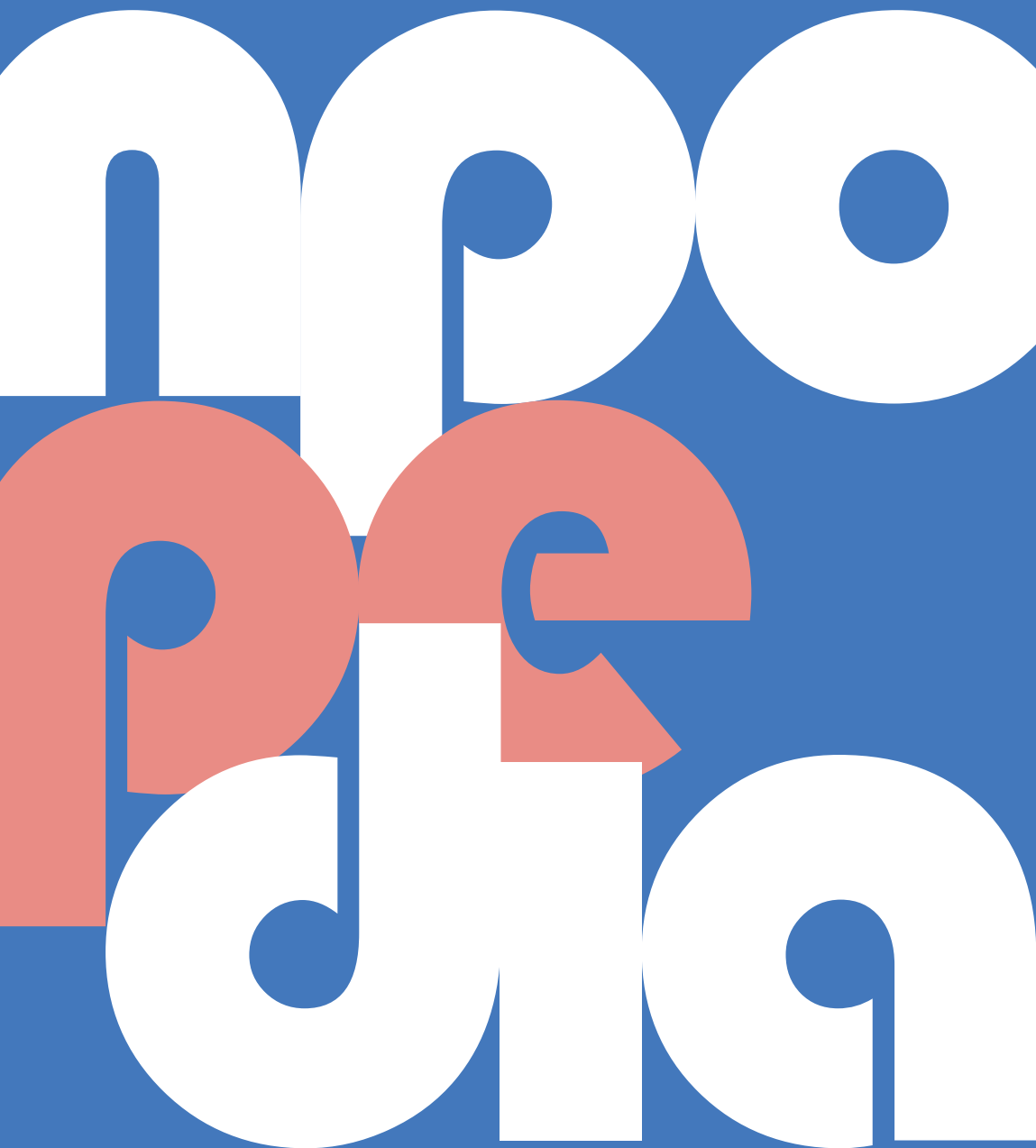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워드가 포문을 열었으니,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정부 차원에서 세부 법령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

요해요. 2023년 9월까지 고등학교 전체에 학교급식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급식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이에요. 학교급식법을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하기 위해 세부 명령, 시행 규칙 등은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보건영양 관리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일부 지역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 등의 보건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문 인력 배치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아 일시 중단 상태에 있거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2011년부터 시작한 만성질환 영양 관리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내 영양교육센터 및 영양교육실을 매년 홍보하고 적극적인 방문교육을 통해 접근성과 이용률을 개선하고자 힘썼어요. 이러한 노력이 결국에는 영양중재 사업의 수혜국이자 파트너인 몽골이 영양불량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를 위해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진정한 국제개발 협력의 파트너가 되는 것까지 나아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CHAPTER
15

지역



[지역 ①] 은어가 돌아오는 안양천, 온 시민과 함께하는 연대의 경험

“연대를 통해 전국에서 최악으로 오염되었던 안양천을 살리다”

[시작 :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과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등을 거쳐서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 서울의 6개 지자체를 유역으로 하는 하천이에요. 안양천은 한강의 제1지류로 약 350만의 시민이 사는 유역이죠. 안양천은 1400년경 대천(大川)으로 불릴 만큼 큰 하천이었기 때문에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주변으로 공업단지와 주거 밀집 지역도 증가하였죠. 그 결과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오수가 안양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1990년대까지 안양천은 전국 최악의 오염 하천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 활동의 시작]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전국에서 가장 극심하게 오염된 안양천을 되살리려는 운동이 13개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 시민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어요. 1999년에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가 결성되었죠. 해를 거

듭할수록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단체의 연대 활동 폭이 확대되면서 더욱더 안정적이고 탄탄한 조직으로 발전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의 주요 활동은 정책 제안, 토론회, 간담회 개최와 하천 조사 활동 및 하천 교육,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에요. 1999년 시민이 참가하는 안양천 전체 유역 조사를 통해 안양천 현황 지도를 발간했고, 이때의 조사 결과를 이용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제안이 가능해졌어요. 2001년에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되살아날 안양천의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안양천 탐사 지침서와 영상물을 제작하여 안양천 유역의 각 학교에 교육 자료로 전달하는 등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했어요.

[지역 공동체의 공간으로 거듭난 안양천] 최근 되살아나는 안양천을 청소년과 시민들의 환경교육 장소로 만드는 운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는 ‘은어가 돌아오는 안양천’을 꿈꾸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사람과 모임의 소통의 장이기도 하죠. 생태조사나 하천 교육 중심에서 문화적인 요소를 함께 결합해 안양천 상류부터 자전거를 타고 하류까지 가는 안양천 자전거 대행진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추진되었어요.

[의미 : 시민사회의 연대로 생태계를 되살리다]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조직을 새로이 결성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를 강화하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는 민관 협력을 통하여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안양천 유역 1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가하는 '안양천 수질개선 유역협의회'의 결성을 가능하게 했으며,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의 진행과 함께 참개와 수천 마리의 철새가 날아오는 안양천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참여 : 하천 살리기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됩니다]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천 살리기 활동과 은어가 돌아오는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 민관협력의 하천 살리기 거버넌스 사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시민들의 안양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안양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도시화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면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하천 생태계에도 큰 손해를 끼치게 돼요. 하천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활동은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그래서 지키지 못

했던 많은 생명체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기도 해요. 이번 기회에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지역 ②] 도로가 두 동강 낸 마을, 문화마을 만들기 운동이 지켜낸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 만들기, 도시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작 : '배다리 역사 문화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한국전쟁 이후에는 헌책방 거리로 유명했으나 도시의 확장에 따라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잊혀가던 인천 배다리 마을이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마을 중간을 관통하는 산업도로 공사 때문이었어요. 공사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배다리 일대가 지닌 역사와 문화는 물론 주민들 간에 살아 있는 생활 생태계가 파괴됨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리고 주민들에게 각종 소음과 공해, 분진 피해를 안겨줌은 물론 지역을 단절시키고 보행권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며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어요. 2007년 배다리 주민들은 물론 지역의 시민문화단체들이 합세하

여 배다리 산업도로 무효화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열찬 싸움으로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공사를 막으려는 쪽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강행하려는 입장 간에 갈등과 충돌로 인해 긴장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배다리 마을을 포함한 인근의 동인천역 일대를 전면 철거하고 쇼핑몰과 아파트 등을 건립하려는 이른바 재정비 촉진 사업이 수립되면서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이에 인천지역의 문화시민단체들과 지역 거주민들로 구성된 '배다리 사람들'은 달라진 상황 속에서 공사 반대와 마을을 지키자는 주장만으로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의 싸움 와중에 논의를 진전시켜 온 이야기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확장해갔을까] 배다리 '역사 문화마을 만들기'라는 대안적인 도시재생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활동과 사업을 다각도로 벌어나갔어요. 이는 "공사를 위해 파헤쳐진 구역을 포함한 이 일대를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가?", 나아가서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지닌 독특한 삶의 역사와 기억, 문화를 지속시켜나가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한편으로

는 "이러한 노력을 배다리에 국한하지 말고 명품 도시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펼쳐지는 각종 개발과 홍보성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 전역에 맞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의미 : 주민, 연대의 방식으로 마을을 지키다] '배다리지기'들은 배다리 마을을 거점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과 도시를 위한 다각적인 실험, 즉 도시 혁신을 위한 담론을 생산하며 이를 구체적인 일상과 공간 속에 접목하려 노력해왔어요. 배다리 마을 안에서 닫힌 형태로 행하지 않고 안팎을 넘나들며 다양한 주체들과 관계 맺고 연대하며 공유 및 확산시키려 노력해왔죠.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미 있는 변화 중의 하나는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예요. 처음 집회 등을 할 때는 단지 숫자를 채워주는 정도에 머물렀고 항의 자체로 끝났으나, 점차 개인 발언의 기회를 가짐에 따라 자기 논리를 펴고 저마당의 '표현'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여 : 주민이 도시를 살아가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공익적 권리를 찾는 과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배다리 마을은 주민들을 비롯한 문화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큰 위기를 어느 정도 넘기고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행정은 주민들이

엄청난 노력과 분투 속에서 지키고 가꾸어 온 마을을 뒤늦게 접수하여 관광지 조성이라는 이름하에 자신들의 콘셉트로 만들려고 다가서고 있어요. 주민들을 포함하여 '배다리지기'들이 어떤 마을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도와줄 생각보다는 '추억'이니 '낭만'이니 '시간이 멈춘 곳'이니 하며 과거 시제로 이곳을 묶어 둔 채 그럴듯한 눈요깃거리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속도와 효율, 이익과 성장만을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개발 논리, 도시 상품화 논리로부터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번 기회에 '배다리 역사 문화마을 만들기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CHAPTER
16

주택



[주택 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산다, 삶의 방식과 돌봄 문화를 함께 만든다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잘 살(live)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

[시작 : ‘대안 주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소득으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대다수 청년이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공개된 <친절한 미분양> 다큐멘터리에서는 청년 한 명이 분양되지 않고 방치된 수도권외의 모 아파트 벽을 기어올라요. “비어있는 집이 전국에 수십만 호나 된다는데 우리는 왜 좁고 비좁은 방에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진 것이죠. 이전까지의 주거 운동은 재개발 철거 대상 지역의 망루로 표상되는 투쟁과 처절함이었지만 대학생들 주축으로 결성된 민달팽이유니온의 운동 방식을 유쾌함과 해학 그리고 실천력과 젊은 에너지가 있었어요.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2011년 5월 5일 창립된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 취약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민달팽이 주거 장학금’이라는 이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어서 2012년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민자 기숙사 대신 대학 본부의 예산으로 저렴한 기숙사를 건립하도록 요구하는 ‘응답하

라 착한 기숙사’ 활동을 벌였어요. 또한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학내의 주거 문제를 넘어 전체 청년의 주거권 향상으로 활동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마포구에서 설립된 함께 주택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소유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 다시 조합원에게 임대하는 형태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그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요. 높은 부동산 가격 탓에 협동조합이 직접 주택을 소유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주거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운영구조이기 때문에, 함께 주택협동조합의 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안 주거 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함께 주택협동조합이 공급하는 ‘함께 주택’은 일반조합원과 거주 조합원의 출자금, 입주자 보증금, 공공지원금(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마련했어요. 워낙 지가가 높은 상황이라 공공지원금의 규모가 커서 이를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지만, 2014년에 공급한 1호에 이어 2016년에는 2호인 ‘무지개 주택’을 공급하였죠.



일러스트: 신주옥(LPW)

한편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비록 소유주가 별도로 있는 임대주택이지만 달팽이 집이라는 저렴한 청년주택을 7호까지 공급하였고, 부천과 서울 지역 곳곳에서 LH와 SH의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있어요.

[의미 : 세입자가 주체가 되는 임대주택]

달팽이집의 세입자들은 출자, 조합 활동에 참여하며 직간접적으로 공급의 경험과 역할을 함께 하고 있어요. 서비스의 이용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를 주체적으로 다뤄보는 경험을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주택을 지향하고 있죠. 주택 시설과 공동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 입주자들은 매월 1회 반상회에서 각 집의 고민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및 의사결정 시간을 가져요. 반상회는 집단의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인 동시에 더불어 사는 삶

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죠.

[참여 : '함께' 잘 살 수 있는 주거의 방식을 찾아가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속되면서 머무는 집에 오래도록 살며 공동체를 일구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상황이지만, 대안 주거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큰 걸림돌이 되죠. 주택이 매점매석의 대상이 아닌 그 주택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장기간 저리로 쓸 수 있는 자금을 융자해 공공이 지닌 토지에 대안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COVID-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많은 이들이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동시에 열악한 학습 환경과 근무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상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는 주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번 기회에 '대안 주거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주택 ②] 조물주 위에 건물주? 사회적 부조리에 맞서는 연대의 힘

“갑과 을은 계약상의 관계일 뿐, 힘의 우위가 아니다”

**[시작 : ‘임대차 보호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05년 3월 안종녀 씨는 동교
동에 칼국수집 두리반을 차렸어요. ‘두리
반’은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먹을 수 있게
만든 크고 둥근 상을 뜻해요. 적금을 해
약하고 대출까지 받아 겨우 마련한 식당
이었죠.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7년
12월에 가게를 비우라는 소송장이 날아
들었어요. 두리반이 있던 건물 근처에 전
철역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리더니 개
발업자가 그 일대의 땅들을 다 사들였던
거죠. 11세대 세입자들은 내용증명과 소
송장을 받고서야 건물주가 바뀐 것을 알
게 되었어요. 마포구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발표했다는 것도 뒤늦게야 알
았게 되었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2009년 동교동
칼국수집 두리반이 퇴거 강제집행을 당
하면서 두리반 살리기 투쟁이 시작되었
어요.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쳐 욕설을 내
뱉으며 집기들을 때려 부수고 가게를 철
판으로 봉쇄했고,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
을 잃었어요. 두리반을 운영하던 안종녀

씨 부부는 두렵기도 했지만 억울한 마음
에 철판을 뜯고 가게에 들어가 지나간 싸
움을 시작했어요. 이듬해 2010년에는
홍대에 기반을 둔 인디밴드와 문화예술
인을 중심으로 두리반 살리기 문화운동
이 전개되었죠.

[경과 :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리반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못하도록 전
기가 끊겼음에도, 연대는 더욱 강해졌어
요. 모임이 없는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찾
아왔고 상근 간사만 8명이었어요. 한신
대 민주동문회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당
번을 서겠다고 찾아왔어요. 용산참사 때
마무리 짓지 못한 세입자 보호법 개정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며 용산
남일당에서 활동하는 문화운동가들도
금요일마다 ‘칼국수 음악회’를 열었어요.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하는 ‘푸른 영
상’은 매주 화요일마다 다큐멘터리 영화
를 상영했고 월요일은 ‘엄보컬 김선수’가
찾아와 하늘을 지붕 삼아 바깥에서 여는
‘하늘지붕 음악회’를 격주로 진행했어요.

[상가 세입자의 연대를 결성하다] 두리
반은 투쟁을 시작한 후 531일 만에 2억
5천만 원 상당의 배상금과 인근 지역에
서의 영업 재개를 합의하였어요. 작게는
개발업자, 크게는 국가권력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시민의 연대가 승리하게 된 거
죠. 하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존재

하는 사회에서 세입자는 철저한 약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2013년 5월 변화의 흐름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을 결성했어요. 참여연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피해 사례 보고대회’를 열며 세입자 스스로가 연대를 조직해나가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의미 : 연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다] 건강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건물에서 경제활동을 직접 영위하는 세입자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계 터전을 일구기 위해 쏟은 노력은 물론이고 뚜렷이 보이는 각종 비용도 보상받기 어려웠어요. 법원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를 받으려 해도 건물주가 협조적이지 않아 힘든 경우가 많았고, 이를 하소연하면 계약을 잘못된 탓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연대의 힘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3년에는 ‘재건축 사전 고지 의무’를 두는 데 성공했어요.

[실천] 지금도 임대차 보호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권리금’을 법에 명시해 임차 상인의 분명한 ‘권리’로 인정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권리금은 가게의 영업 가치를 책정해 상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던 돈으로, 보증금과 함께 상인들의 중요 기반이 되는데 건물

주에 의해 내쫓기는 경우 가치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맘상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협력해 ‘환산보증금 폐지, 기간에 제한 없는 계약 갱신, 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로 임대료 인상 제한, 재건축 시 임차상인의 영업 가치 보상, 권리금 회수 기회 의 온전한 보장’을 주요 개정 과제로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두리반은 시민들의 연대로 원하는 결실을 보는 데 성공했지만, 모든 세입자가 두리반과 같은 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건물주의 횡포에 생계 터전을 잃는 세입자들이 많고 이에 홀로 대항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죠. 이번 기회에 ‘임대차 보호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주택 ③] 누구나 맘 편히 살고 싶다, 그래서 31년 만에 법을 바꿨다

“19전 20기 노력 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다”

[시작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1981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고 1989년 12월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세입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법이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2년 만기가 다가오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해야 할지, 임대인이 올려달라는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등의 걱정을 해야 했죠.

[경과 : 발로 뛰었던 시민사회] 참여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을 위해 국회마다 개정안을 입법 과제로 제안하고, 입법 청원과 입법 의견서 제출, 토론회 개최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침묵했던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는 참지 않아!] 2019년 10월 주거시민단체, 종교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시킵니다.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갱신제도를 포함한 임차인 보호를 통한 주거권을 보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2020년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가 포함된 주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이를 뒤인 3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31년 만에 드디어 주임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게 되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 직접거주 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도입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의미 : 서민 주거 문제 공론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드는 일인지 그때는 알았을까요? 그러나 세입자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중대하고 개선이 시급한 문제인지 지속해서 알리는 일은 중요했어요. 2012년과 2014년,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고시원에 사는 청년의 사연부터

7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사기를 당한 이의 사연까지, 절절한 사연을 받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던 오마이뉴스 '나는 세입자다'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죠.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3.2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임법 개정으로 인해 거주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건 맞지만, 평균 거주 기간보다는 사실상 10개월 정도 늘어난 것에 불과해요. 이는 상가 세입자들이 1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받는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법이 그럴 테지만, 한 번 법을 바꾼다고 모든 것이 다 나아지는 건 아닐 거예요. 참여연대는 주임법 개정 이후에도 좌담회,

토론회를 통해 법 개정의 의의와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장을 마련했어요. 장기적인 주거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어요. 맘 편히 살고 싶은 권리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죠. 많은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업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 주임법이 명시한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존재해요.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지점들을 계속 공론화하면서 거주 기간 추가 연장 및 임대료 인상률 인하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CHAPTER
17

코로나19



[코로나19, 시민사회_N개의 대응 ①] 코로나19 사회적 가이드라인

“재난 앞에서 차별 없이 평등할 수 있는 준비, 이제부터 시작해야”

[시작 : ‘팬데믹 시기의 인권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코로나19라는 이름 말고는 바이러스와 감염병에 대해서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가 있었어요. ‘신종 바이러스’라는 명명이 주는 공포심에 ‘긴급한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주는 불안감이 더해지며 강력한 방역 정책들이 시행되고 또 정당화됐어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방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확진자뿐 아니라 확진 의심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동선 추적과 공개가 진행됐어요. 또한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는 위치 추적 장치인 안심밴드 착용을 강제했으며,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기지국 수사와 같이 강력한 행정 조치도 이어지곤 했습니다.

[경과 : 코로나19가 드러낸 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하다] 문제는 방역 정책에만 있지 않았어요. 누구든 언제나 감염될 수 있다는 바이러스의 특성은 언뜻 감염병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코로나19는 기존 사회에 만연했던

차별과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코로나19와 인권을 고민하는 20여 개 인권 단체가 모였어요. 강력한 방역 정책을 통한 기본권 침해와 불평등하게 전가되는 피해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코로나19 대응을 고민하고 요구하기 위해 ‘코로나19 인권 대응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3개월여의 집필 과정을 거쳐 2020년 6월 11일,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었어요. 해당 가이드라인은 크게 3개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 존중의 원칙. 두 번째, 차별금지과 특별한 보호의 원칙. 세 번째,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원칙이 그것이에요.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는 발표회를 진행했어요. 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어요. 1부에서는 ‘국가의 책무와 유예된 권리들을 중심으로’ 격리 및 강제적 행정 조치, 평화적 집회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인권, 언론의 사회적 의무를 발표했으며, 2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수용자가 겪는 코로나19 상황을 나눴어요.

코로나 19 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1. 시작

- K-방역 뒤에 가려진 것들
‘신종 바이러스’ 명명의 공포심 + ‘긴급한 위기상황’ 인식의 불안감

↓

강력한 방역정책 시행·정확화

폭넓은 동선 추적과 공개
강력한 행정조치
확진자 정보 공개 → 상상되기 기술

↓

서로에 대한 의심·혐오 강화시키는 결과
공론화 과정, 혐의 절차 X → 기본권 침해

- 코로나 19가 드러낸 차별과 불평등

코호트 격리: 이미 격리된 사람들을
한번 더 격리

연료 정처권 '유한 폐렴, 명칭 고집:
중국인 & 밀집지역 차별

코로나 19 전파와 설정체성 연결: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이주민: 전 국민 마스크 배양에서 제외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자: 일터에서 집단감염

2. 성과

- 고민의 시작
2020. 3: 20여 개 인권단체
- 강력한 방역정책의 기본권 침해
- 불평등하게 전개되는 피해
-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코로나 19 대응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조직

인원철합해 사례 수집·분류·도론
사회적 가이드라인 작성

3대 원칙

1.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중심의 원칙
2. 차별금지과 특별한 보호의 원칙
3.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투명적

2020. 6. 11 :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진행, 라이브 중계

2020. 7. 17 : 국회토론회 진행
→ 설명/논쟁/기자회견 이어짐

거대 재난 상황 속 공동대응 경험 축적

3. 현황과 과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거론

↓

평등한 존엄을 보장하는 감염병 대응 체계의 필요성 여전히 존재

사회구조적 문제의 부상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한 수용시설
최악한 사회적 시선, 소수자에게 안전망 부재

기존 존재하던 사회구조적 문제 + 바이러스라는 위중요소 = **개대할 재난**

↓

사회를 새롭게 조직하는 일

서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 **삶의 기반을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줄 수 있는 사회**

↓

또다시 바이러스가 발생해도 극복 가능!

그래픽 서머리: 정진호

코로나 19

[의미 :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많은 인권 단체들이 코로나 시대에 인권의 언어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인권 단체들은 네트워크에서 함께 문제를 토론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어요.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고민을 하나로 모으는 난감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힘이 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1년여가 지났어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

고,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오르고 바이러스의 확산이 잦아진다고 할지라도, 권리를 침해하는 방역 정책의 문제와 코로나19가 드러낸 불평등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19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감염병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을 떠올릴 때, 평등한 존엄을 보장하는 감염병 대응 체계의 필요성은 여전히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코로나19 대응과 회복 역시 사회적 과정의 일부분

입니다. 사회적 가이드라인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고 제안한 바 있어요. 각자도생해서 안전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감염병이 확산하더라도 삶의 기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제안인 셈이에요, 설령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한 일이기도 해요.

[코로나19, 시민사회_N개의 대응 ②]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코로나19로 더 격화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시작 :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감염병이라는 재난 앞에 기존의 차별적 구조에 놓인 빈곤층,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해야 했어요. 성소수자 역시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차별과 혐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코로나19 확산 초기, 확진자들에게 번호가 붙고 일일이 동선이 공개될 때부터 성소수자 인권 활동

가들은 만날 때면 우려를 나누었어요. 성소수자 당사자가 확진되고 동선이 공개되었을 경우 이에 따라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이 원치 않게 알려지는, ‘아웃팅(outing)’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경과 : 바이러스는 거들뿐] 2020년 5월 초 연휴 직후 이태원 지역의 한 클럽에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해당 클럽의 자체적인 공지를 통해 알려졌어요. 문제는 국민일보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헤드라인을 잡은 거예요. 해당 클럽은 성소수자 전용 클럽이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굳이 기사에서 ‘게이클럽’을 강조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국민일보는 의도적으로 마치 해당 클럽 감염이 성소수자 집단의 문제인 양 이와 같이 보도했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를 비판 없이 따라 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언론의 무비판적인 보도와 더불어 지자체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불러오는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 이어졌어요.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 인권 활동가들은 긴급히 대응을 논의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회와 HIV/AIDS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활

동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고민했고, 초동모임을 한 7개 단체가 모여 2020년 5월 12일,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결성했어요. 이후 총 23개의 인권 단체가 대책본부에 결합합니다.

[의미 : 용기를 내어 서로를 지키자] 대책본부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은 당사자 및 주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렇다고 검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웃팅 등 인권침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같이 강제적인 방식을 써서 검진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올 것이며 오히려 사람들을 더 숨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대책본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대책본부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검진을 받자고 커뮤니티를 독려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이후 대책본부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성소수자들이 겪은 인권침해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태원 사건 이전부터 이미 트랜스젠더들이 신분증 검사 문제로 마스크 구입이나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거나, 동성 커플이 가족 돌봄 휴가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가정

폭력 등 여러 인권침해 문제들이 드러났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책본부의 활동을 이어받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또 다른 시민 인권 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 인권 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해 인권에 기반한 방역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대책본부는 출범 직후부터 각 지자체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자체의 잘못된 대응을 바로잡고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메시지를 낼 것을 촉구했어요. 당국과 끊임없는 논의를 거쳐, 서울시는 시장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을 이기는 힘은 배제와 혐오가 아닌 연대와 협력"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각 지자체의 인권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민사회_N개의 대응 ③] 강서 주민들의 상호 돌봄 및 연대

“시민사회-행정의 협력으로 재난을 극복하는 지역력을 구축해야”

[시작 : '강서지역 시민연대'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강서 시민 협력 플랫폼은 2020년 2월 14일 '강서'와 '공익적 가치'라는 2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활동하는 지역의 단체, 기관, 활동가 75명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존재와 연결됨을 확인하는 '강서多·방' 신년회&네트워크 파티 시간을 가졌어요. 준비과정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행사 이후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이 이어지는 바람에 곤란해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사이 행사에 함께 참여했던 단체, 기관, 활동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진 않았을지' 근황과 소식이 궁금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경과 : 지역 공동체 내부의 연대를 도모하다] 그러던 중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코로나 19로 공공기관, 유치원,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기존 주문은 취소되고, 새로운 주문은 없으며, 매출이 급감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19가 안정되더라도 기관 정상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어요. 바로 해당 시설 시설장님과 통화 후 강서 지역의 단체, 기관, 활동가들이 연결된 강서 지역 정보 소통방(이하 정보 소통방)에 시설의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2020년 3월에는 '공적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공적 마스크 공급처인 약국에서조차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서로가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 무렵 서울시와 시민사회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보건용 마스크가 꼭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감염 취약 직업군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적 마스크 구매 기회를 양보하는 캠페인이었죠. 이후 지역으로 돌아와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취했고, 더 많은 시민이 착한 마스크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의미 : 강서 시민사회,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응원 꾸러미 이후 변화된 모습, 시민사회단체 각자의 영역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나누는 '코로나 19 이후를 생각하는 강서 시민사회 집담회'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이야기를 통해 지역안전망 구축, 공론장 형성, 기금 조성, 지역 경제, 정보 수·발신, 정책 제안 및 캠페인, 지역 시민교육 등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실천으로 지역사회 연대와 네트워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재난 상황으로 지역 사회 어려움도 크지만, 정부의 역할 외에 지역 사회 네트워크 역할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재난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지역 내 관계성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상호돌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응원 꾸러미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다른 이의 수고로 내 안전이 지켜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어요. 행정과 민원인 사이를 넘어 시민사회의 응원과 지지를 기반으로 한 신뢰 관계를 형성했고, 외부 도움 없이 지역 안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중요한 사례이자 지역 사회가 보충해가야 할 가치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재난 상황 시 시민사회 네트워크, 행정과의 협력으로 지역사회가 결속되고 연결되어 지역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는지 역량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계기로 현재는 '강서동행'으로 모였고, '2021 강서동행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전체 과제를 점검하고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19, 시민사회_N개의 대응 ④] 대구 사례가 보여준 시민의 힘

“‘현장의 필요’를 발견한 대구 사례, 해답은 시민 속에 있다”

[시작 : ‘대구시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원 활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20년 2월 18일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17년이 되던 날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날 대구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2월 18일 1명이던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한 달 만에 6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구에 불어 닥친 ‘코로나19’는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재난으로 우리 일상의 문턱까지 들이닥쳤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경과 : 전국이 대구를 돕다] 시민들은 대구가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 길을 묻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료진들이 대구로 달려왔고, 광주에서는 병상 연대 제안으로 손길을 내밀었어요. 대전 부산 서울 광주 등 여러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를 돕고 싶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정성과 지원의 손길이 전국 각지에서 마스크를 보내고, 소독제를 보내고, 생필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쪽방으로, 노숙인에게, 이주민에게, 쉼터의 청소년들에게, 지역아동센터로 마스크, 손 소독제, 부대찌개, 도시락, 전라도 특산물, 직접 담

근 김치까지 각양각색의 물품들이 대구에 전달됐어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지원할 것인가)] 시스템이나 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네트워크에 일차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지역에서 활동하며 구체적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무작정 전화를 돌렸어요. 그곳 상황은 어떤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기초자료를 만들었으나 초기 자료는 빈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원 경험이 많은 대전의 사단법인 디모스가 간단히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더 자세한 데이터를 확보해 구체적인 필요 물품을 정리하여 상황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의미 : 공감에 관심이, 그리고 참여까지] 디모스가 정리한 자료는 SNS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이 정보를 접한 많은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현장에 필요한 물품 내용과 지역 내 상황이 공유되며 시민들은 '공감'과 '관심'을 보냈고, 이는 '참여'로 이어지기까지 했어요. 소통 공간 여기저기서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며 지원할 방법을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시민들에게 이런 정보는 아주 중요한 촉진제가 된 거예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지금도 코로나19에 대한 기록이 여러 측면에

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난생처음 겪는 팬데믹은 사회의 여러 단면을 한꺼번에 드러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만들지 못했고, 일 년 내내 마스크에 가려진 친구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고요. 누군가에게 선뜻 다가가기가 두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죠. 라이더와 같은 배달 업계는 호황을 누리지만, 그들의 노동 여건은 코로나19에 속수무책이었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대구를 향한 열렬한 지원은 결국 시민사회는 언제나 현장에서 물음과 답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의 상황실 운영이었지만 단체들은 지나치리만큼 현장의 필요 욕구를 파악하고 연결하고자 몰두했습니다. 한 건의 지원을 성사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하며 현장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맞추려 애를 썼어요. 대구의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이제 찬찬히 돌아보며 기록해 나가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시민사회_N개의 대응 ⑤] 재난 상황에서 정보인권을 묻다

“코로나19 위기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인권에 대한 미흡한 인식”

[시작 : ‘팬데믹 시기의 정보인권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방역 성공의 요인으로 진단 시약의 재빠른 개발 및 승인, 적극적인 진단 검사, 마스크 착용 문화와 시민들의 협조 등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감염병 환자의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의 파악, 확진자 동선을 포함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빼놓을 수 없죠.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역학조사에는 CCTV, 휴대전화 위치정보,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정보, QR코드 출입명부 등 확진자의 과거 행적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됐어요. 이러한 조치들은 팬데믹으로부터 나와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분명 개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밀한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은 분명했어요.

[경과 : 인권 원칙에 기반을 둔 감염병 대

응을 촉구하다] 정보인권 침해를 비롯하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자 인권 단체들은 코로나19 인권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권 원칙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진보네트워킹센터 등 정보인권 단체도 여러 인권 단체와 함께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의 결과로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변화하는 성과가 있었어요. 크게 1)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의 개선, 2) 기지국 정보수집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3) 얼굴 인식 체온 카메라의 개인정보 침해 규율 세 가지 이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해외에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한국처럼 다양하고 정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감시 기술을 활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은 성공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럽의 여러 국가는 또 다른 측면의 자유 통제 정책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에 진보네트워킹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한국의 방역 과정에서 정보인권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여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국영문으로 발표합니다.

[의미 :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논의하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2020년에만 여러 차례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개정의 방향은 주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법적 근거도 없이 미리 시행되었던 출입 명부 작성이나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 등에 관한 내용도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사후에 포함됐어요. 기본권 침해를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일단 실행하고 입법부가 사후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인권 단체들은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고,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도 진행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이라고 평가받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개인의 2주 동안 행적을 몇 시간 만에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물질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용카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비문화,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주요 사회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라는 식별자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고, 통신 실명제로 모바일 기기 추적

이 가능하며, 전국에 광범하게 설치된 CCTV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감시 사회의 물질적 조건이 과연 바람직한지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닥칠 마지막 감염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본권의 보호와 실효성 있는 보건 정책의 균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사례는 이를 위한 주요 사례로 거론될 수 있겠죠.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연계, 집적되는 개인 정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혹은 또 다른 재앙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깨달음을 토대로 더 평등하고 인권에 기반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19, 시민사회_N개의 대응 ⑥] 이주민 차별, 당연하게 일어나다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은 일상에서 너무 가깝게, 자주 일어났다”

[시작 : ‘팬데믹 시기의 이주민 지원활동’

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일상의 차별이 무분별하게 일어났어요. 대림동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대중 이용시설에서는 이미 한국에 사는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이 거부되는 사건도 발생했어요. 학교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확산으로 각 가정에 공적 마스크가 보급될 때,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스크 지급에서 제외됐어요. 미등록 이주 여성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에 갔지만, 그녀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은 일상에서 너무나 가깝게, 자주 일어났어요.

[경과 : 차별에 맞서 이주민과 함께 소리 치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난민 공동행동 등은 2020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민 차별, 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알리고 위기 이주민을 위한 직접 지원할 방법도 강구해나가기 위함이었어요.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2020년 7월 28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민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난 긴급소득 지원 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권고 결정을 인권위가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문제점과 지원, 대구지역 이주노동자현실과 대응 활동 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평등한 재난지원을 위한 방향 모색을 함께 토론했어요.

[의미 : 차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정부와 이주 관련 기관들과의 간담회에 참가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공론화했어요.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일부 결혼이민자나 영주권 자격을 가진 이주민에게만 지원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정부가 이주민의 ‘주민의 권리’를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류 자격에 상관

없이 이주민들은 여전히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 대응을 위한 인권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인권 관련 기관과 연계해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남지역에서는 이동상담소를 열어 이주민 사업장이나 기숙사 이주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 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한 사업은 방대하고 다양했어요. 코로나 관련 업데이트 소식 다국어 번역, 이주민 대상 방역물품을 배분, 미지원 이주민시설에 방역물품과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또,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과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 이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생필품,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 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에 이주민을 포함하고 코로나 검사나 백신 지원에서도 이주민이 고려되고 있는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작은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 시민사회_N개의 대응 ⑦]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노동의 민낯

“돌봄 위기 극복은 사회체제 변화로부터”

[시작 : ‘팬데믹 시기의 돌봄 노동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20년 코로나19 재난이 전 세계를 덮친 후 모든 집합시설이 폐쇄되기 시작했어요.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은 문을 닫고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으며,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터져 나온 집단감염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여성들이 요구하며 만들어 왔던 사회적 돌봄, 공공돌봄 시스템이 사실상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전국 11개 지부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이 상황을 분석하는 워크숍을 진행했고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견지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경과 : 재난 속 여성 노동자의 존재를 일깨우다] 이와 함께 ‘해고, 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라는 제목으로 13회 차의 시리즈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연재했어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그리고 여성노동자회 11개 지역지부가 함께 진행한 작업입니다. 지역의 여성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전국 여성노동자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어

요. 여성노동자회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 현실과 돌봄 전담자로서 여성노동자들이 호명되는 현황을 고발했어요. 본 발제에서 제안한 ‘돌봄 뉴딜’은 정부가 시행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보다 더 시급한 것으로 돌봄 분야의 전폭적, 전면적 지원과 재설계라는 의미예요.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기념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를 공표했어요. 설문조사에는 318명이 응답하여 여성 노동자들이 약조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본 설문조사 응답자 중 56.2%가 코로나 때문에 돌봄 노동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1일 6시간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이 13.8%에 육박했어요.

[의미 : 탈성장,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일깨우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20년 4월 28일 발족한 코로나19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준비모임에 참여하여 시민사회대책위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돌봄과 돌봄 노동의 문제를 상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핵심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시민사회는 돌봄을 중요하거나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백영경 교수(제주대학교)는 “지금의 돌봄 민주주의나 돌봄 뉴딜 논의에서 아쉬운 점은 코로나19의 원인을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자원에 대한 약탈 및 착취로 진단하면서도 ‘과연 현재의 자본주의 생산체제 아래에서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돌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여성 일자리의 중요성이나 성별 분업의 해체 필요성을 결론으로 한정 지으면서 돌봄의 민주화가 어떻게 체제 전환 및 생태적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돌봄 노동은 줄곧 여성이 가정에서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취급되기 일쑤였어요. 국가는 돌봄 노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통해 여성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습니다. 핵가족이 돌봄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없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현재 돌봄의 위치예요. 돌봄은 여성에게 기대되거나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데 따르는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돌봄

부재와 성차별 속에서 우리는 뒤틀린 채 살아왔던 것임이 드러났어요. 코로나19 재난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 눈앞에 전시했습니다.

[코로나19, 시민사회_N개의 대응 ⑧] 재난대응, 자원봉사가 해결한 방법

“자원봉사 활동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전환해 가야 하는가?”

[시작 : ‘팬데믹 시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면 활동이 주를 이뤘던 자원봉사 활동이 중단되기 시작했어요. 봉사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은 더 힘든 시기를 겪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일부 자원봉사는 활동 방식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했지만, 자원봉사활동 대부분이 축소되거나 중단됐습니다. 자원봉사 영역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 현장의 안전을 지키면서, 감염병 시대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과 연대, 이를 뒷받침 할 정책적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경과 : 재난 대응체계로의 전환, 추진체

계를 구축하다] 시민들의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은 코로나19 국내 전파가 시작되며 위기 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어요. 자원봉사센터들은 감염병 재난 대비 자원봉사 현장 상황을 검토하고, 의료진 지원 자원봉사활동을 준비하는 등 전면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또한 2020년 1월 30일, 재난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간 재난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5일, 중앙정부와 17개 시·도행정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가 함께하는 민관연석회의가 이루어졌으며, 중앙센터는 행정안전부의 민간협력과, 재난자원관리과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재난 대응 민관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해 나갔어요.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이러한 전국적 활동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어요. 코로나19 대응 봉사활동은 방역 및 검역 지원활동, 마스크 제작 및 배부 지원, 예방과 심리적 방역을 위한 상담 및 캠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격리자와 현장 관계자, 취약계층 지원 등 9개 분야에 주로 집중됐어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방역소독 활동’과 ‘마스크 제작·배포’ 활동에서 가장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홍보캠페인’과 ‘농촌 일손 돕기’ 등의 활

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미 : 시민 자원봉사 참여방식의 전환]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자원봉사 참여 방식과 영역에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되기는 했으나, 시민참여 방식과 영역은 확장됐어요. 이에 현장에서는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의 표준화된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게 됩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TF를 구성하고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운영가이드북'을 제작·발간해서 보급해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속에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원봉사활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 대응이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과제와 고민은 남아 있어요. 마을 단위로 위험 요인들을 조사하고 파악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재난 유형별로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피신할 것인지 미리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커뮤니티 방역체계가 갖춰진다면 재난 시기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안전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더불어,

시민사회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대응 활동을 공유하며 관련 섹터들이 연대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었어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시민의 역할이 대두되고, 재난 상황 속 시민참여를 통한 대응 사례를 만들어 냈던 시기였어요. 그중에서도 지역에 기반하여 주민들과의 연결망을 가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시민참여형 방역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행정체계에서 자원봉사센터들은 민간과 가장 빠르게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는 그 누구보다 활발히 재난과 관련된 자원 봉사체계, 현장 등 다양한 연구와 담론을 논의했고, 지금의 경험을 딛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향후 실천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시민사회_N개의 대응 ⑨] 사회적 경제, 코로나19 앞에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뭉치다

“함께 위기의 강을 건너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시작 : ‘사회적 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20년 1월 9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한 걸음으로’란 주제로 사회적 경제 신년회가 진행되었어요. 2020년 사회적 경제가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할 만했죠. 그렇게 지역·업종·유형별로 다양한 논의와 의제로 총회를 준비하던 도중, 코로나19 관련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았고, 부정적인 예측과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던 상황이죠. 그러던 중,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당시 안인숙 집행위원장) 차원에서 긴급회의가 제안되었습니다.

[경과 : 상황을 공유하고 협동을 구상하다] 생협 그룹이 나서면서 정확한 상황 인식을 통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고, 생협,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현장 주체, 연대회의 지역위원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협동조합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기관을 비롯 범 사회적 경제계가 2020년 3월 4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돌봄·가사·문화·예술·교육·서비스업과 요식업 등의 업종에서 80%까지 매출 하락이 일어나

고 있는 것 등 현장의 상황을 함께 인식하기 위함이었어요.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다양한 정부 정책과 지원에 대한 정보가 현장으로 흐르게 하는 것과 대구·경북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이 빠르게 논의·진행되었어요. 동시에 현장의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아카이빙을 진행하였고, 재단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에 대한 것 또한 바로 추진됐어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협동과 연대의 깃발을 세우고 나서야 할 때로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자조와 협동의 정신으로 ‘사회적 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이하 대응본부)’가 출범해요.

[의미 :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대응본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중장기적 복구 활동 및 사회적 경제계를 포함한 NGO계, 복지계, 노동계 등의 협동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며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조사통계반, 모금반, 사회적 소비반이었어요. 각각의 반 자체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의 협동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3개 반도 상호 협동체계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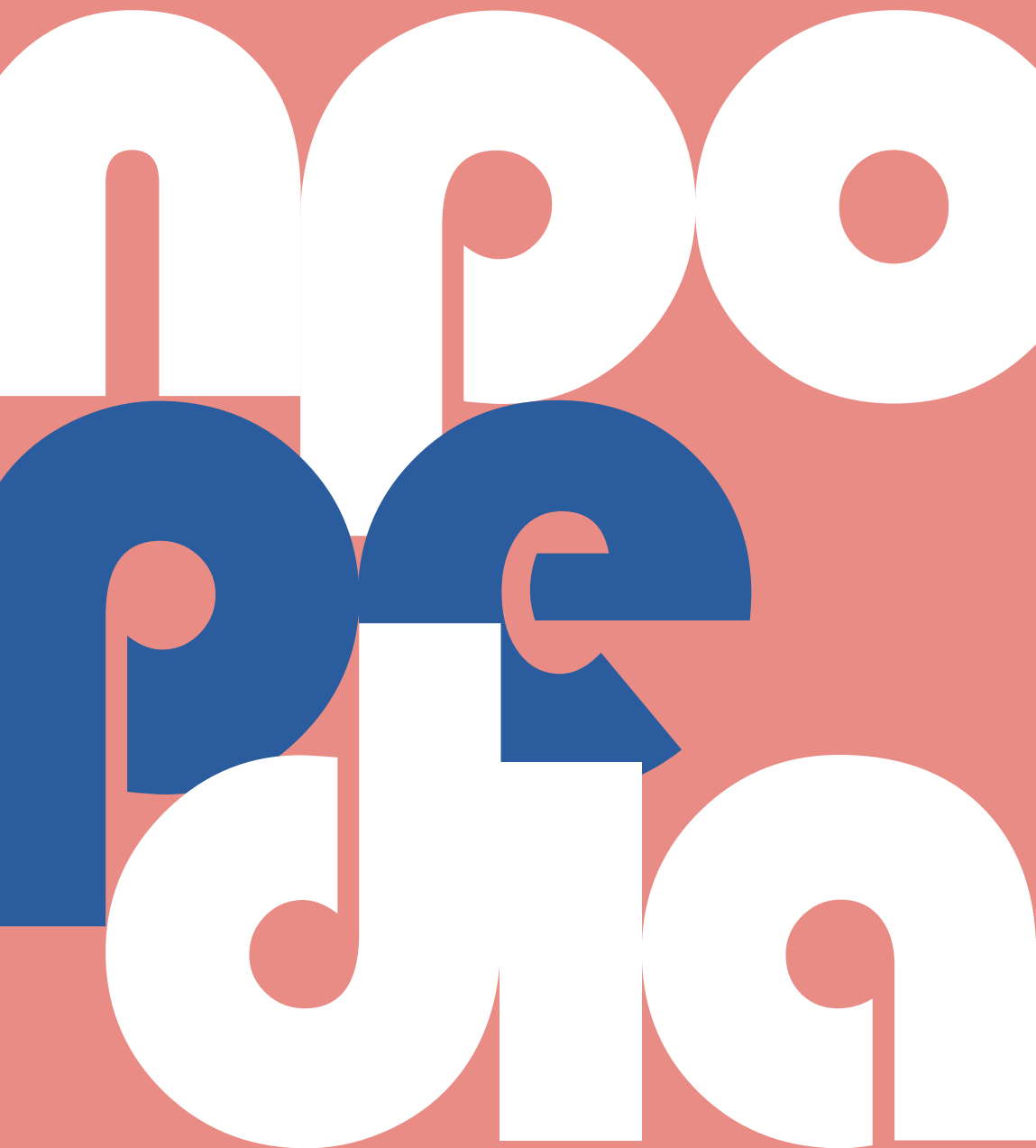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위기의 강을 건넌다] 조사통계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을 유지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현장 조직들의 노력이었어요. 고용조정이 없는 경우가 54%로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40%보다 많았어요. 사회적 경제는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우리 함께 위기의 강을 건너자며 ‘고용조정 0% 선언’을 하게 됩니다. 고용조정 Zero,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31개 기업이 선언에 동참했어요.

[참여 :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스스로 사회적 경제 핵심 가치인 연대와 협력을 증거하고 도전하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응본부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해요.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노동과 시민사회의 점점 찾기 등이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코로나19 상황에 정부는 많은 정책 자금을 정부는 풀었지만, 사회적 경제는 늘 뒷순위였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부문은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협업화와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연대와 협동’이란 구호 속에 다양한 관점과 활동을 하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운 재난 환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회적 경제의 성과를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CHAPTER
18

문화예술



[문화예술 ①] 예술가의 가난은 선택? 예술노동을 넘어 삶의 보장으로

“**예술가의 가난은 선택**”이라는 **예술인에 대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젊은 예술가의 죽음**”

[시작 :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예술인복지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복지체계는 고용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 연계형 제도’로 운용되는데, 예술인의 노동과 활동은 상시 계약의 형태가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도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여기에 예술노동의 특수성도 더해지는데, 노동 자체가 바로 부가가치 등의 이윤을 만들어내지 않는 예술노동 특성상,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근로’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아요. 더 심하게는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근로하지 않는 이’로 여겨지면서 다양한 사회보장과 복지제도에서의 배제를 당연시해왔어요.

그래서 예술인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단편적인 경제적 요인으로 한정되지 않고 예술인이 처한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개선으로 봐야 해요. 실제로 2011년 ‘예술인복지법’을 만들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그해 겨울에 한국 사회를 슬픔에 빠트

렸던 시나리오 작가이자 조연출인 최고은의 죽음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젊은 예술가의 죽음은 ‘예술가의 가난은 선택’이라는 그간 예술인에 대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어요.

[경과 :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은 전문기관 등이 만들어지고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근거들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으로의 진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수한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만들고 이에 대한 사업 진행은 당장 급한 예술인의 상황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지만,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에도 ‘예술인 사회보장’이라는 쟁점이 남았습니다.

한국 사회 초창기부터 예술노동의 관점에서 예술인 복지 문제를 다룬 몇 안 되는 단체 중 하나인 ‘예술인소셜유니온’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늦어진 데에 최초의 입법 단계에서 한계 때문이라는 관점을 제시했어요. 실제로 2011년 법안이 다뤄질 당시에 총 4가지의 입법

안이 상정되어 논의됐으며, 이 중 하나는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 의제를 명시하고 다른 두 가지 법안은 고용보험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는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정부 내 의견 차이로 인해 삭제되고 말아요.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장기화하면서 예술인들과 같이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어요. 사실상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등 떠밀리듯이 2020년 5월에 열린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이 주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었지만, 그나마 보험 적용 대상 수가 적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수정되어 통과됩니다.

[의미 : 예술노동을 넘어 삶의 보장으로]

예술인고용보험 제도의 실현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주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프랑스의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인 '엔테르미탕'이 한국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한국의 특수한 조건을 반영했고, 두 번째, 기존 특고(특수형태 고용) 논의와 분리되어 예술노동의 특수성이 고려되었으며, 세 번째로 예술계 내부의 기존 협단체 구조 외의 당사자 조직들이 '의무가입'에 대한 사항과 '사용자 부담'에 대한 논의를 돌파할 수 있었어요.

2021년 12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제도 시행 8개월이 흐른 2021년 8월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가 6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정부가 추산한 최소 인원이 7만 명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급격하게 확산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되어야 하는 노동이라고 인정한, 가장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변화를 예술인에 대한 특혜로 언급하며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술인 당사자에게가 아니라 전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고용보험 제도를 선택적으로 운용하는 정부를 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2003년 조각가 구본주와 음악가 달빛요정역전 만루홍련의 사망은 예술가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그릇된 시선이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수입도, 고정된 직업도 없으면 노동자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때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디. 구본주 작가의 죽음은 직업

으로서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쟁점을, 가수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죽음은 노동으로서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쟁점을, 최고은 조연출의 죽음은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쟁점을 드러냈어요.

[문화예술 ②]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하여, 예술인 권리보장법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마침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이끌어내다”

[시작 :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예술인복지법(2011)’은 블랙리스트, 검열, 불공정 갑질, 성폭력, 노동권 침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보호하거나 피해를 준 주체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하자 피해 예술인을 비롯하여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시민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조치 등을 요구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로서 국정과제 1호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

과제의 하나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경과 : 블랙리스트로 인한 트라우마, 그리고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2019년 9월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실시한 ‘블랙리스트 피해자 현황에 관한 설문 조사’에 응답한 블랙리스트 피해자 500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블랙리스트 피해자 절반 이상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밝혀지지 않은 피해 사례를 진상조사 해야 할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가장 힘든 점은 ‘트라우마 등 피해 기억’이라는 응답이 5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고’(18.3%), ‘본업 복귀의 어려움’(6.7%) 순이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 국정과제 1호 법이에요. 20대 국회에서 현장 문화예술인, 정책 전문가, 법학자, 행정가와 함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되었어요.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미뤄지는 사이에 성폭력과 검열, 불공정 침해, 예술노동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의미 : 예술인의 기본법이자 권리침해

구제법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률로써 예술인의 존재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 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구제 조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참여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이렇게 법이 제정되기까지 예술 현장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법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과 달리 국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어요. 소위 문화예술계 정책 전문가 집단에서도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냉소적으로 평했을 정도니까요. 그 과정에서 좌절하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여성문화예술연합, 문화예술노동연대,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대책위 등 연대하는 예술인 동료들이 없었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거예요.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5조 5항은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임원 인사권을 갖거나 재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뜻해요.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 지역문화재단, 국공립미술관, 국공립예술단 및 국립극장 등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근거해 예술인 권리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③】 안전한 공연장에서 마음 놓고 공연할 수 있도록

“결코 안전하지 않았던 공연장, 그리고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

[시작 : '공연법 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18년 9월 7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위한 무대 준비 작업(세트업)이 9월 5일부터 진행되었어요. 조연출로 참여한 피해자 故 박송희님은 9월 6일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전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작업에 동원됐어요. 본래 예정에 없었던 무대 세트 수정작업이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조연출이 무대 세트를 색칠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었죠. 결국 작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뒷걸음치다가 개구부로 빠져 6.5m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고, 대구의 병원에서 2018년 9

월 10일 오후 3시경 사망하게 됩니다.

[경과 :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 원래는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경보를 울려 리프트 하강으로 인해 생긴 개구부 주위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한 다음 리프트를 내려 달라고 요청해 추락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류 조작을 지시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박송희 님이 무대로 추락한 이후 무대감독은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며, 남은 인원들을 모아 안전 교육을 시행했다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였어요. 이는 재판 과정에서 호남오페라단 소속 무대 크루로 참여했던 인원이 법정에서 증언함으로써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해당 사건이 언론에 몇 차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되어가고 있으리라 생각하였지만, 아무런 연대 없이 유가족들이 외롭게 재판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후 연극계 동료들과 함께 이 문제를 상의하여 2020년 2월부터 ‘공공극장 안전대책 촉구연극인 모임’을 결성하여 함께 사건의 실체를 마주하고, 무대 안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세미나 하면서, 어떻게 하고 박송희 님의 사건을 알릴 것인지, 무대 안전의 중요성

을 알릴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나갔습니다.

[의미 : 법적, 제도적 성과가 나타난다]

2020년 10월에는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의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공연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이후 민사소송 역시 이루어졌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박 씨도 20% 정도의 책임이 있다며 김천시의 책임을 80%만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은 “리프트가 내려가 있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조명이 밝았다”는 김천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성을 전혀 모른 채 숨진 고인에게 일부라도 책임을 묻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100% 김천시의 책임”이라고 판결해요.

[참여 : 무대 기계 중심의 안전관리, 사람의 생명을 놓치다] 무대 안전진단 제도는 오랫동안 있었어요. 문제는 누구를 위한 안전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무대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 검사 항목에는 ‘안전 펜스’, ‘경고등’, ‘경고음’과 같은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점검항목은 부재했기 때문이죠. 무대 기계 장치의 안전 점검 대부분은 장치를 잘 작동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안전 점검인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 끝은 또 다른 시작] 여전히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이 흠뻑소 무대 철거 사망사고’ 등 공연장에서 위험한 설치·철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공연·무대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산

재 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죠. 개정안이 시행된 7월 이후에도 사고 경위 조사조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박송희법’이 공연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려면 공연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체부의 인식 변화와 관리 강화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변화사전 NPO Pedia

발행일 2022년 12월 (SNPO 2022-A-006)

발행처 서울시NPO지원센터

디자인 스튜디오 코스모스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2층 (04523)

전화 02-734-1109

팩스 02-734-1118

메일 contact@snpo.kr

홈페이지 <https://www.snpo.kr>

이 책의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결과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사)시민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